

# 남북대화 제41호

(1986. 3 ~ 1986. 8)

# < 목 차 >

제1부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에의 일관된 의지 .....	3
1. 전두환 대통령,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제2차 지역회의 치사 .....	3
2. 박동진 국토통일원장관, 분단극복을 위한 한민족의 일관된 의지표명 .....	10
제2부 남북한 관계동향 .....	14
1. 우리측의 남북대화 재개 노력 .....	14
2. 북한측의 「3자군사회담」 제의 .....	25
가. 북측의 제의 .....	25
나. 우리측의 대북 회신 .....	27
다. 국내외 주요 반응 .....	29
제3부 IOC 주재하의 남북체육회담 .....	38
1. 제3차 회담 .....	38
가. 제1일 회의 .....	39
나. 제2일 회의 .....	42
2. 그 이후의 경과 .....	44
3. 국내외 주요반응 .....	45

## 제1부 민족화합과 평화통일로의 일관된 의지

### 1. 전두환 대통령,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제2차 지역회의 치사

-남북대화 재개 및 86·88 양대 제전에서의 북한측 참가를 촉구-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는 1986년 5월 12일 상오 창설 5주년을 맞아 제2차 지역회의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3개 시·도 지역별로 개최했다.

동 자문회의 의장인 전두환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내린 치사를 통해 『선진조국을 창조하여 자손 만대에 걸쳐 민족적 자존과 번영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겨레의 의지와 역량에 의해 민족의 재통일을 이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분단의 극복과 통일은 다른 누구에도 의존할 수도 없고, 의존해서도 안되는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어 전대통령은 『오랜 역사를 통해 단일민족, 단일국가로 살아온 우리가 다시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는 우선 남과 북이 대결보다는 화합, 폭력과 무력보다는 대화, 그리고 단절보다는 교류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옳은 순서이며 지름길』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우리는 무한한 인내심을 갖고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과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 등 대화와 교류를 북한측에 대해 촉구해 왔음을 상기시키면서, 지난해 애써 심어놓은 「남북대화의 소중한 싹」을 키워 나가는데 북한측이 성의를 보일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전대통령은, 북한측이 『올가을 아시아경기대회와 88올림픽대회의 참가를 거부하여 국제사회의 고아로 남기보다는 인류평화의 대제전에 혼연히 참가함으로써 민족적 자존과 긍지를 고양하고 민족화해의 감격스런 모습을 세계 만방에 과시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북한측 선수단을 『같은 겨레로서 따듯이 맞이할 것이며 모든 참가자에 대한 신변안전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 줄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였다.

끝으로 전대통령은 우리의 평화통일노력에 대한 북한당국의 호응이 어떠한 『민족화합과 자주적 통일의 목표를 향해 무한한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의연히 추구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자문위원들에게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겨레의 의지와 노력을 결집, 선진조국창조에 앞장섬으로써 민족통일의 핵심적인 주체로서 맡은바 사명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신영 국무총리가 대독(서울 지역회의, 기타 지역회의는 지역 부의장 대독)한 전두환 대통령의 치사전문은 다음과 같다.

친애하는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여러분

그리고 육천만 동포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십여년에 걸친 조국의 분단상태를 극복하고 겨레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속히 앞당기려는 뜨거운 염원을 안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본인은 우선 민족의 통일의를 구현하는 데 남다른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아오신 자문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겨레의 기대와 격려 속에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가 역사적인 발족을 한 이래 지난 5년동안 여러분들이 기울여온 각별한 정열과 노력은 국민 각계각층의 평화통일의를 한데 모으고 더욱 굳게 다지는 소중한 결실을 거두었다고 본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실은 바로 우리의 통일역량을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인 동시에 통일을 앞당기는

촉진제가 된다는 점에서 여러분의 노력은 앞으로 더욱 폭넓은 거래의 성원과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또한 근래에 우리가 뚜렷이 실감하게 된 국운의 상승과 국민적 자신감, 그리고 우리의 평화적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확대는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염원이 우리 세대에 성취될 수 있다는 믿음을 더욱 굳게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동경에서 폐막된 서방 7개국 정상회담에서 자유진영의 지도자들이 남북대화의 촉진과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그리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희망하고 그를 위한 국제적인 지지와 협력을 약속한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통일을 촉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소중한 원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러한 지지는 지난달에 있었던 본인의 구주순방을 비롯하여 우리의 적극적인 외교노력이 거둔 중요한 성과의 하나라는 점에서, 본인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뿌듯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모임은 민족화합과 민주통일을 향한 우리의 역량과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한층 고조된 가운데, 통일의 대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한 우리의 결의를 새로이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라는 점을 본인은 강조하고자 합니다.

자문위원 여러분

우리가 선진조국을 창조하여 자손만대에 걸쳐 민족적 자존과 번영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거래의 의지와 역량에 의해 민족의 재통일을 이룩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분단의 극복과 통일은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할 수도 없고, 의존해서도 안되는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하겠습니까.

통일의 성취를 위한 국제적인 여건과 환경의 조성도 반드시 민족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민족사의 정통성과 이익을 확보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단일민족, 단일국가로 살아온 우리가 다시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는 우선 남과 북이 대결보다는 화합, 폭력과 무력보다는 대화, 그리고 단절보다는 교류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옳은 순서이며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한 인내심을 갖고 북한에 대해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과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 등 대화와 교류를 거듭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무력적화통일노선을 포기하지 않은 채 휴전선 일대에 군사력을 총집결하여 전진배치함으로써 전쟁재발위기를 고조시키는 한편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계도처에서 86 아시아경기대회와 88 서울올림픽 개최에 대한 방해책동을 가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들은 한동안 남북적십자회담과 경제회담, 그리고 국회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에 응해오다가 연례적인 팀스피리트 훈련을 트집잡아 모든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채 최근에는 우리 사회 일각의 시위사태를 틈타 극열한 대남비방과 선동을 격화시킴으로써 그들의 저의와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인은 북한이 만에 하나라도 한국내의 상황을 오판하여 무력도발을 자행할 경우 그것은 곧 그들 스스로 자멸을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중히 경고하면서, 지난 해 쌍방이 애써 심어 놓은 남북대화의 소중한 싹을 키워나가는데 성의를 보여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인은 이 기회에 북한측이 올 가을의 아시아경기대회와 88 올림픽대회의 참가를 거부하여 국제사회의 고아로 남기보다는 인류평화의 대제전에 혼연히 참가함으로써 민족적 자존과 긍지를 고양하고 민족화해의 감격스런 모습을 세계만방에 과시해 주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그들을 같은 거래로서 따듯이 맞이할 것이며 모든 참가자들에 대한 신변안전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 줄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자문위원 여러분

우리의 평화통일노력에 대한 북한당국의 호응이 어떠한지 우리는 성급한 기대를 갖거나 쉽사리 실망을 하거나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는 안정을 다지고 국력을 결집하여 국가대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민족화합과 자주적 통일의 목표를 향해 무한한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의연히 추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느때 보다도 국민적 화합과 단결을 굳게 유지해야만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자문위원 여러분은 국민화합과 사회안정의 구심적 역할을 다하는 가운데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겨레의 의지와 노력을 결집하여 선진조국의 창조에 앞장섬으로써 민족통일의 핵심적인 주체로서 맡은바 사명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자문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와 격려의 뜻을 표하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회식을 마친 후 속개된 회의에서 박동진 국토통일원장관의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동 보고에서 박동일원장관은 경제회담, 적십자회담, 국회회담 예비접촉, 「로잔느」 체육회담 등 지난해 남북간에 진행된 네갈래 회담의 추진경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남북대화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박장관은 지난해 남북간에는,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을 실현함으로써 분단 40년만에 처음으로 이산가족들이 직접 고향땅을 밟고 그리던 혈육들을 만나는 등 일부 고무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의 회담은 『아직 만족할만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박장관은 북한측이 연초에 우리측의 연례적인 군사연습을 트집잡아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이래 우리측의 거듭된 대화재개 제의를 거부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측이 진정으로 평화통일과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더 이상 대화를 외면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의있는 제의에 호응하여 하루빨리 대화의 광장에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동진 통일원장관의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보고」 전문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여러분!

우리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의 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자문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해는 조국광복 40년, 국토분단 40년이 되는 해로서 여러 분야에 걸친 남북대화가 활발히 진행됨으로써 통일문제와 남북대화에 대한 내외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한해였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지난해 남북간에는 경제회담, 적십자회담, 국회회담을 위한 예비접촉, 「로잔느」체육회담 등 네 갈래의 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적십자회담에서는 북한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교환에 합의함으로써 분단 40년만에 처음으로 이산가족들이 직접 휴전선을 넘어 고향땅을 밟고 몽매에도 그리던 혈육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남북대화에서의 이러한 실질적 성과는 평화통일에 대한 온 국민의 열망과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확고한 통일의지를 받들어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구현을 위해 우리 모두가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이같은 고무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동안 우리가 추진해 온 각 분야의 회담은 아직 만족할 만한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경제회담의 경우, 1984년 11월에 개최된 제1차 회담에서는 쌍방간에 무연탄, 철광석, 철강재, 섬유 등 물자교류 품목에서 공통점이 많았고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철도연결, 지하자원의 공동개발, 공동어로구역의 설정, 경제협력기구의 설치문제 등에 있어서 거의 비슷한 내용의 제안을 내놓음으로써 회담의 전망을 밝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작년 5월에 열린 제2차 회담때부터 물자교류, 철도연결 등 실질적인 문제토의를 회피하고 남북경제협력기구의 설치문제만을 앞세움으로써 지연전술로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측의 포용성 있는 발의에 따라 쌍방이 남북간의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 추진과 경제협력기구의 설치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자는데 합의하고 이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북한측은 이미 쌍방간에 의견의 일치를 본 교류품목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을 거부하는가 하면, 경제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통일원칙을 굳이 합의서 조항에 명기하자고 고집하는 등 불합리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회담이 원만하게 진전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측은 물자교류를 앞당기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북한산 무연탄 30만 톤을 구매하겠다는 우리측 제의에 대해서는 남북경제회담이 『무역업자들이나 하는 회담으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측이 무연탄·철강재 등 물자교류와 경제협력을 사실상 기피하고 남북경제회담의 진전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은 남북간의 물자교류와 경제협력이 결과적으로 북한경제의 취약성을 노출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 때문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남북적십자회담에서는 지난해 9월에 실시된 제1차 고향방문단 교류가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열어 놓았으나 아직 회담내용의 진전은 별로 없습니다.

남북한은 이산가족·친척들의 생사와 소재확인·상호방문·서신거래·재결합 등 의제 5개항의 사항을 일괄 토의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이산가족 당사자들의 자유왕래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합의서 작성을 위한 토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쌍방이 합의한 의제 5개항의 토의를 회피하고 자유왕래 문제를 사실상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이산가족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측이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방도 중의 하나에 불과한 자유왕래만을 거론하는 것은 1970년대에 그들의 이른바 「남한의 법률적 조건과 사회적 환경의 개선」을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우리의 반공정책과 국가보안법을 시비함으로써 회담에 장애를 조성하였던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북한측이 고향방문단의 방문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제한하고 우리측이 제의한 고향방문단의 계속 교환마저 거부한 것은 그들의 자유왕래 주장이 기만적이고 허구적인 것임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하겠습니다.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에서는 국회회담의 형식, 대표단 구성, 본회담 장소문제 등에 관해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나 가장 중요한 국회회담의 의제 등에 관해서는 견해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제토의에 있어 우리측은 국회회담 의제를 입법기관의 고유임무에 맞게 『통일헌법을 기초하기 위한 「민족통일협의회의」 기구를 구성하는 문제와 이에 따른 통일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자고 주장한데 반해, 북한측은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문제를 고집하였습니다. 비록 제2차 접촉에서 북한측이 『남북간에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조국통일을 촉진시킬데 대하여』라는 수정안을 내놓았습디만 본질적으로 변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의제문제와 관련한 의견의 접근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불가침문제를 비롯한 남북한의 긴장완화와 전쟁방지배치 등 이 땅에 항구적인 평화를 다지는 일은 남북국회가 아니라 쌍방의 책임있는 정부당국간에 협의·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측은 오래전부터 북한측에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조속히 실현하여 긴장완화와 전쟁방지 등 남북간의 시급한 당면과제를 진지하게 협의·해결할 것을 촉구해 왔으며 또한 남북한 정부 당국간에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측이 진실로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불가침문제」를 협의·해결할 의사가 있다면 구태여 국회회의에서 그 문제를 토의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측이 제의한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 등 남북한 당국간의 회담에 호응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입니다.

한편 「로잔느」 체육회담은 국제올림픽위원회 중재하에 두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측은 이 회담에서 서울올림픽 대회에 북한측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북한측이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결정과 올림픽현장을 준수한다면, 올림픽 개막식에 남북한선수들이 공동으로 입장하는 문제와 일부예선경기를 북한지역에 배정하는 문제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올림픽현장과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결정을 외면하고 제24회 올림픽대회를 서울과 평양으로 나누어 공동주최하자고 계속 고집함으로써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각하께서는 금년 1월 16일 국정연설을 통해 『지금까지의 대화를 지속해 나감은 물론, 북한측의 진실한 자세가 보장되는 한 어떤분야를 막론하고 대화의 장을 기꺼이 열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각하께서는 금년 3·1절 기념사에서 『그동안 우리측이 주장해 온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옴으로써 금년중에 회담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은 1980년대안에 기필코 평화와 통일의 새 장을 열어야 한다는 신념아래 긴장완화를 비롯한 남북한간의 제반 현안문제와 여러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 실현문제를 대화를 통해 시급히

토의·해결하려는 적극적이고도 일관된 평화통일 실천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측의 적극적인 대화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들어와서 남북대화는 또다시 시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북한측은 년초에 우리측의 연례적인 「팀스피리트」 군사연습을 트집잡아 경제회담, 적십자회담, 국회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으며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한 지난 3월 26일자 우리측 제의마저 거부하였습니다.

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측의 군사연습은 방어를 목적으로 한 평화유지 훈련이며, 이미 10여년동안 실시되어 온 연례적인 것으로서 금년 훈련만해도 남북회담에 대한 쌍방간의 일자 합의가 이루어질 때 이미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더우기 「팀스피리트」 훈련기간중에도 여러차례 회담을 했던 과거의 선례에 비추어 보아도 군사훈련을 남북대화의 진행과 결부시켜 회담을 중단시킨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남북간에 존재하는 긴장과 불신은 지난 40년간 북한측이 공공연히 추구해온 대남 폭력혁명 노선 때문에 조성되었습니다.

우리측을 위협하는 북으로 부터의 적대정책이 그대로 남아 있고 또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조건에서 우리측이 만일의 사태를 예방하고 우리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응분의 자위태세를 강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북한측이 진정으로 평화통일과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더 이상 대화를 외면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의 있는 제의에 호응하여 하루 빨리 대화의 광장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남북경제회담을 통해 물자교류와 경제협력의 길이 트여 민족공동번영의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아울러 남북적십자회담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이산가족들의 재회가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측은 인류의 제전인 88서울올림픽이 민족화합의 대제전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인내를 가지고 북한측을 설득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대화과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지속적인 국력신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자문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면서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제2차 지역회의는 끝으로 각 지역 회의별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채택된 결의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오늘 조국의 평화통일과 민족진운의 탄탄한 대로를 다지기 위하여 국민의 단합과 국력결집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함을 확인하고, 6천만 온 겨레의 염원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하며 북한당국은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 구현노력에 긍정적으로 동 참해 오기를 촉구한다.

1. 북한측은 부당한 구실을 내세워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그 재개를 거부하는 태도를 버리고, 적십자회담, 경제회담, 국회회담이 하루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86아시아 경기대회와 88서울올림픽이 민족의 진전과 번영을 이룩하고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전기가 될 것을 확신하여 이 양대제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범국민적인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데 적극 앞장선다.
1. 굳건한 국민단합과 사회안정, 적극적인 국력신장이 통일과업을 성취하는 초석이며, 영광된 선진 통일조국 창조의 원동력임을 재확인하고 민족사 개척을 위하여 각기 맡은 분야에서 헌신, 봉사할 것을 굳게 다진다.

## 2. 박동진 국토통일원장관, 분단극복을 위한 한민족의 일관된 의지표명

### -분단국 문제에 관한 한·독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

박동진 국토통일원 장관은 1986년 6월 25일 서독 「뮌헨」에서 개최된 「1980년대 후반의 국제 환경과 동·서독 및 남북한 관계의 전망」이란 주제하의 분단국 문제에 관한 제3차 국제학술회의에 참석, 「한반도문제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제하의 기조연설을 했다.

박장관은 1984년 후반이래 진행되어온 남북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여전히 남북대화를 『한반도 적화통일전략에 연결시키려는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측이 이와같이 『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망상에 집착하는 한 남북한간의 대화는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장관은 앞으로의 남북한 관계의 전개양상을, ① 현재의 불안정한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상황, ② 획기적인 타협과 합의가 이루어져 평화적인 통일방안이 채택되고 실천에 옮겨지는 상황, ③ 새로운 군사충돌이 발생할 가능성 및 ④ 경제, 외교면에서의 한국측의 대북우위와 남북한 군사력 균형을 배경으로 남북한간의 교류확대 및 주변 강대국과의 교차접촉, 교차승인에 북한이 합의해울 상황 등 크게 4가지 유형을 상정하고, 한국측에서 볼 때에는 제4의 유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가장 많으며, 또 가장 현실적인 과정이라고 지적하였다.

박장관은 그러나 이러한 가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국력면에서 한국측의 월등한 대북우위 달성」, 「북한측의 정치·사회적 변화」 및 「강대국들의 지원과 호응」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박장관은 남북간의 「관계개선이 급속히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북한측이 우리의 「현실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접근방법」에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장기적 안목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남북대화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동진 통일원장관의 기조연설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굽펠 교수, 킨더만 교수, 김달중 교수, 내독관계성의 프리스니츠박사,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사, 숙녀 여러분!

본인은 먼저, 금번 제3차 한독학술회의의 개최를 위해 준비해 오신 「뮌헨」대학 동남유럽경제 및 사회연구소와 연세대학 동서문제연구원의 노고에 대해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석학 여러분들과 회동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3차 한독학술회의는 분단된 국가로서 같은 처지에 있는 한국과 독일의 학자들간에 양국의 통일문제, 그리고 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국제환경에 대하여 그 실현과 장래를 함께 연구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논의된 귀중한 의견들은 분단문제 극복을 위한 한·독 양국의 공동노력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공교롭게도, 학술회의가 시작되는 오늘 6월 25일은 36년전 북측이 무력에 의한 남침전쟁을 도발한 바로 그 날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오늘의 이 세미나는 더욱 의의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본인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한반도 분단문제의 현실과 분단극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 그리고 한반도 문제의 장래전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엿그제 6월 23일은, 우리 정부가 지난 73년에 획기적인 「6. 23 평화통일 외교정책」을 국내외에

선포한지 꼭 13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한반도가 처해 있는 내외정세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격변하는 국제조류 속에서 민족의 위신과 긍지를 유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자주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모든 국가들에게까지도 대외문호를 개방하고, 가능하다면 북한과 함께 UN에 동시가입할 방침을 내외에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적대적 분단상황을 개선하고, 민족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대외 문호개방 노력과는 달리 북한측은 그들의 공산주의 혁명노선에 입각한 호전성과 폐쇄성을 조금도 완화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라는 망상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수시 대남무력도발을 자행하면서 남북한 관계개선과 이지역의 평화를 크게 방해하여 왔습니다.

1984년 후반이래 남북한간에는 대화가 재개되어 적십자회담, 경제회담, 그리고 「로잔느」 체육회담 등 여러갈래의 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남북한은 적십자사 주관하에 고향방문단과 예술단의 교환방문을 실현시킴으로써 40년 분단사상 최초의 인적교류를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측의 태도는 남북대화를 상호신뢰감의 조장보다는 한반도 적화통일전략에 연결시키려는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대화에 임하는 성실성과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측이 의도하는 한반도 통일이 폭력혁명을 통한 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망상에 집착하는 한 남북한간의 대화는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북한측이 우리의 연례적이며 공개적인 한미합동군사연습을 구실로 모든 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조치는 북한의 그릇된 입장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의 중단은 불가피하게 남북한 사이에 긴장된 분위기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고 있으며 군사연습이 끝난 현 시점에서조차 북한은 대화재개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남북한 관계를 보면 대내외의 정세변동에 따라 여러 가지 양상을 보여 왔는데 한반도는 독일의 경우와는 달리 앞으로는 한반도내 군사사정과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적지 않은 진퇴가 있을 것이 예상되고, 그 양상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남북한 관계가 특별한 개선없이 현재의 불안정한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북한이 종전의 폐쇄정책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정치, 경제, 외교 등 제분야에서 한국에 비해 열등한 입장을 계속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폐쇄정책을 지양하고 한국이 촉구하는 대로 대화와 교류와 개방을 추구할 것인지 정책적 선택에 단안을 내리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문호개방은 북한에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북한당국은 고뇌하고 주저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남북대화에는 소극적이며 대화의 진도를 늦출 필요가 있을 때는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 그 책임은 오히려 한국측에 전가하고 국내적 선전을 통해서 북한의 「이미지」 손상을 방지해 보려고 애쓰는 전술을 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남북대화는 북한으로서는 대남 심리전과 국제선전을 위한 정치극 역할만 하게 되고 한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실질적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남북한 관계는 이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북한간에 획기적인 타협과 합의가 이루어져서 평화적인 통일방안이 채택되고 실천에 옮겨지는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고, 이것은 물론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념과 체제, 사회조직의 양상과 발전과정이 대립적 입장에 있고, 더구나 동족상쟁의 쓰라린

상처를 안고 있는 두 개의 사회체제가 일거에 통합을 이룰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째로, 한반도는 휴전상태만 있을뿐 독일의 경우와 같은 평화공존 관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한간에 새로운 군사충돌이 발생하는 가능성을 가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국지전은 상황에 따라서는 미국과 소련의 군사개입을 초래하는 세계대전으로까지 확대될 위험마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남북한을 위해서나 세계평화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은 물론 북한측의 군사도발로 야기될 것이지만 현재와 같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토대로한 확실한 전쟁방지력을 한국이 보유하는 한, 북한의 군사도발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일대모험이기 때문에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단독으로도 무력남침할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국내의 정치, 사회의 불안이 격화되어 정부의 통치력이 약화된다면 또는 미국의 대한 안보지원정책이 후퇴하여 한국의 방위능력이 심히 약화되었다고 북한이 판단할 경우에는 대남군사도발로서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시도할 가능성을 전연 배제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련이나 중공으로부터 필요한 군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북한이 자신할 경우는 더욱 이러한 모험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북한의 오판에 의한 군사도발은 항상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북한이 한국에 비하여 경제, 외교면에서 현저하게 열세에 놓이게 되고 군사적으로도 균형을 이루게 되면, 한국과의 타협이 불가피해지고, 따라서 남북한간 교류확대 및 주변강국과의 교차접촉, 교차승인에 합의해 올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한국측이 볼 때 이러한 유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생각되며 현재 여건하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가장 현실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조성된다면 UN 동시가입문제와 남북한간의 제반 협력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직한 가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첫째로, 북한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남북한간 국력의 격차, 즉 한국측이 월등한 국력우위를 달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경제적 외교적으로 북한을 앞서서 가는 것은 물론, 정치적·사회적으로 발전과 안정을 달성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그들의 한반도 적화목표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북한측의 정치·사회적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사회가 지금과 같이 철저한 폐쇄·통제적 체제로 유지되는 한, 북한은 남북한간의 대화와 교류에 따른 북한내부사회의 노출과 외부 세계의 자유의 바람이 북한의 통제구조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정치체제가 어느 정도의 개방을 허용할 수준에 이르기 전에는 본격적인 남북교류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째로, 남북한 관계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미·소·중·일 등 강대국들의 지원과 호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70년대 후반부터 중공의 대내외적 변화에 따라 중공의 대한 인식도 다소 호전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소련은 한반도의 긴장상태 완화를 지지하면서도 세계전략의 추진속에서 한반도 정세를 자국의 군사적·정치적 목적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소

런간의 밀착현상은 이러한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으며, 일찌기 발생했던 KAL기 007호의 무참한 격추사건도 대한자세의 냉혹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한반도의 정세 즉 남북한 관계는 평화와 전쟁이라는 양극단 속에서 방황하는 상황이 국내외의 환경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는 점이 독일의 경우와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도적 평화공존의 상태가 조성되어 평화통일을 위한 협상이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이 가장 소망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과 상호불가침 협정의 체결을 제의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북한의 수락을 촉구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정부는 제2의 6·25와 같은 남북간의 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개최할 것도 제의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남북한 관계개선에 관한 장래전망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인폐지해서 공산북한당국은 종래의 폐쇄사회의 개방에서 오는 정치적 손실과 문호 개방에서 생길 수 있는 소득간에 어느쪽을 택할 것인지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관계개선이 급속히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 평가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견해로는 자주민주주의와 공산주의중 그 어느 사상과 제도가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더 많이 보장하느냐는 이념경쟁에서 이미 판정이 났다고 봅니다만 북한측은 아직 그렇게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지도층이 내외정세변화에 따라 언젠가는 공산주의적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현실적이고 인도주의적 접근방법을 선택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남북대화에 임하고 있습니다. 분단국가에서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이념과 체제가 하나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이질성이 극복되고 기본적으로 쌍방의 순수한 민족애와 합리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한 어떤 정책도 방안도 성공하기를 바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정부의 통일정책과 방안은 이념과 현실을 조화한 산물이라고 자부하며 소련·중공을 포함한 공산진영 국가와의 관계개선에도 노력중이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의 편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금번 학술회의가 한·독석학들의 학술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고, 이러한 교류를 통하여 한·독간의 이해와 협조가 더욱 증진됨은 물론 양국의 자유, 평화, 번영 그리고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데 계속 이바지하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2부 남북한 관계동향

### 1. 우리측의 남북대화 재개 노력

북한측이 적십자·경제 등 금년초에 개최될 예정이던 일련의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연기시키고 우리측의 거듭된 재개촉구에도 불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측은 1986년 3월 26일 북한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고 중단된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다시금 촉구하였다.

적십자회담, 경제회담 및 국회회담 예비접촉 등 각 회담 수석대표명의(경제회담 수석대표는 김기환 전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에서 문희갑 경제기획원 차관으로 교체되었으며, 동 사실은 1986. 3. 24 북한측에 기 통보된 바 있음)로 북한측에 전달된 전화통지문에서 우리측은, 쌍방간에 합의된 회담이 북한측의 일방적 연기로 유산되고 아직도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제6차 경제회담은 4월 30일, 국회회담 제3차 예비접촉은 5월 14일 판문점에서 개최하고 제11차 적십자회담은 5월 27일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 수석대표들이 북측 대표단장에게 보낸 전화통지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남북 경제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 이성록 귀하

나는 지난 1월 22일 판문점에서 열기로 쌍방이 합의한 제6차 남북경제회담이 귀측의 일방적 연기통보로 말미암아 유산된 후 두달이 지나도록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남북 쌍방은 이미 다섯차례의 접촉을 통해 남북간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 사업추진과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하고 곧 문안조정에 들어갈 단계에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온 거래는 남북경제회담이 좋은 열매를 맺어 하루빨리 남북간에 물자교류와 경제협력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이 화합하고 번영할 수 있는 기틀이 다져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와같은 견지에서 제6차 남북경제회담을 1986년 4월 30일(수)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갖기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귀측의 긍정적인 회담을 바랍니다.

1986년 3월 26일

대한민국 남북 경제회담 대표단  
수석대표 문희갑

북한 최고인민회의 남북 국회회담 예비접촉 대표단  
단장 전금철 귀하

나는 지난 2월 18일 갖기로 쌍방간에 합의한 남북 국회회담 제3차 예비접촉이 귀측의 일방적인 연기로 말미암아 아직껏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온 거래는 중단되고 있는 여러갈래의 남북대화가 빨리 재개되어 남북간에 인적·물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민족적 신뢰와 화합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이 우리측의 연례적인 군사훈련을 구실로 쌍방의 합의사항을 어기고 제3차 예비접촉을 무한정 연기시키고 있는 것은 누가 보아도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할 것입니다.

나는 귀측이 쌍방의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남북국회회담 제3차 예비접촉을 오는 5월 14일(수)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귀측의 긍정적인 회답을 바랍니다.

1986년 3월 26일

대한민국 국회 남북 국회회담 예비접촉 대표단  
수석대표 권정달

북한 적십자회 남북적십자회담 대표단  
단장 이종률 귀하

나는 지난 2월 26일 평양에서 개최기로 쌍방이 합의한 제11차 남북 적십자회담을 귀측이 일방적으로 무기연기시킨 이후 아직까지 회담일정에 대하여 우리측과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귀측이 제11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지난해의 역사적인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으로 조성된 남북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이산가족들의 여망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적십자회담이 시작된지 15년째가 되는 올해는 반드시 이산가족들의 숙원을 풀어주고 민족통일애의 디딤돌을 마련하는 도약의 한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은 의미에서 나는 제11차 남북적십자회담을 오는 5월 27(화)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에 대한 귀측의 긍정적인 회답을 기대합니다.

1986년 3월 26일

대한적십자사 남북적십자회담 대표단  
수석대표 이영덕

그러나 대화재개를 위한 우리측의 이러한 일관된 노력에 대해서 북한측은 또다시 이에 호응하기를 거부하였다.

3월 31일 국회회담 예비접촉 북측 대표단장 전금철에 이어 4월 1일 경제·적십자회담 북측 대표단장 명의로 우리측에 보내온 전화통지문에서 북한측은, 「팀·스피리트」 훈련이 계속되고 있음을 문제삼아 3월 26일자 우리측의 대화재개 제의를 거부하였다.

또한 북한측은 4월 24일 우리측의 「팀·스피리트」 훈련종료와 때를 같이하여 이른바 남북회담 「북측 대표단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대화중단의 책임을 또다시 우리측에 전가하고 우리측의 군사연습과 우리 국내정치상황을 결부시켜 악의적인 비난선전을 늘어놓으면서 사실상 대화의 재개를 거부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측은 6월 17일 돌연 「3자 군사회담」을 제의하고 군사회담의 진전을 남북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부당한 태도를 보였다.

1986년 1월 20일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쌍방간에 합의된 일련의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우리측의 거듭된 대화재개측구에 호응하는 대신 북한측이 또다시 「3자 군사회담」의 개최를 대화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정작 남북대화를 진전시킬 의사가 없으며, 그에 따른 대화중단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북한측의 이같은 대화거부 태도로 말미암아, 「팀·스피리트」 훈련이 끝나는 시기에 가면 남북대화가 다시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기대는 무산되고, 남북대화는 언제 재개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측은 1986년 7월 11일 또다시 북한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고, 그간 우리측의 거듭된 대화재개 제의를 계속 외면해 오고 있는 북한측의 불성실한 태도를 비난하고 북한측이 무조건 남북대화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했다.

각 회담 수석대표 명의로 북한측에 전달한 전화통지문에서 우리측은, 제6차 경제회담은 8월 6일, 국회회담 제3차 예비접촉은 8월 13일 각기 관문점에서 개최하고, 제11차 적십자회담은 8월 28일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 수석대표들의 대북 전화통지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남북 경제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 이성록 귀하

나는 지난해 11월 20일의 제5차 남북경제회담 이후 여덟 달이 다 되도록 귀측이 제6차 회담의 개최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쌍방이 남북간에 경제적 유대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민족적 화해와 통일의 여건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경제회담을 시작한지도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귀하도 잘 아는 바와같이 우리 쌍방은 그동안 다섯차례의 회담을 갖고 상품교류와 경제협력에 관해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았을 뿐 아니라 쌍방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협력 공동기구를 설치하는 데에도 합의함으로써 구체적인 합의서 문안작성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회담의 진전이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고 보며 쌍방이 좀더 성의를 기울인다면 우리들의 회담은 머지않아 상품교류와 경제협력 사업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단계로까지 발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귀측이 쌍방간에 합의된 회담을 유산시키고 우리측의 거듭된 회담재개 제의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귀측의 이러한 대화중단 조치가 우리 겨레에게 얼마나 실망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 깊이 생각해 보고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남북대화에 대한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과 기대를 고려할 때 우리의 회담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되며 귀측이 아무런 조건없이 회담재개에 호응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제6차 남북경제회담을 1986년 8월 6일(수요일) 오전 10시 관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



실에서 갖기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1986년 7월 11일

대한민국 남북 경제회담 대표단  
수석대표 문희갑

북한 최고인민회의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 대표단  
단장 전금철 귀하

나는 귀측이 쌍방간에 합의한 남북국회회담 제3차 예비접촉 일자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우리측의 거듭된 접촉재개 촉구에 대해서도 이를 외면함으로써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을 장기간 중단 상태에 빠뜨려 놓고 있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쌍방은 작년에 있었던 두 차례의 접촉을 통하여 국회회담 개최에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으며 본회담 의제 등 몇가지를 제외한 그밖의 문제들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측은 쌍방이 좀더 노력을 기울인다면 국회회담 개최를 위한 남은 문제들도 원만히 타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귀측이 진실로 국회회담의 실현을 바란다면 예비접촉 재개를 더 이상 회피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회담장으로 나와 합의를 보지 못한 본회담 의제 등 남은 문제들을 하루빨리 토의·해결하는 데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견지에서 나는 제3차 예비접촉을 오는 1986년 8월 13일(수요일) 오전 10시 관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가질 것을 제의합니다.

귀측의 긍정적인 회답을 기대합니다.

1986년 7월 11일

대한민국 국회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 대표단  
수석대표 권정달

북한적십자회 남북적십자회담 대표단  
단장 이종률 귀하

나는 우리측의 거듭된 대화재개 촉구에도 불구하고 제11차 본회담이 일곱달이 지나도록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3차에 걸친 본회담을 통해, 의제 5개항의 사업토의에 적지않은 진전을 보았을 뿐 아니라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상호교환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듭함으로써, 이산가족 재회사업의 전망을 한층 밝게하여 주었습니다.

역사적인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의 교환사업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남북이산가족들과 온 겨레는 올해에도 남북적십자회담이 큰 진전을 가져와 이산가족들이 자유롭게 고향땅을 밟고 그리운 혈육들과 재회할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적십자사들은 이러한 이산가족들과 겨레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에 겸허한 자세로 부응해야

하며 우리 적십자인들에게 맡겨진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다시한번 가슴깊이 새기면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제11차 본회담이 쌍방간에 합의된 대로 지난 2월 26일 개최되고 회담이 지속되어 의제토의에 더욱 진전을 보았다고 한다면, 의제 5개항의 사업실시방법에 관해 구체적인 의견 접근을 이룩하였을 것이며, 아울러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그만큼 앞당기고 이 회담을 지켜보는 내외 사람들에게도 커다란 기쁨을 안겨 주었을 것입니다.

이와같은 견지에서 우리측은 이산가족 재회사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귀측에게 제11차 본회담에 나올 것을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귀측도 지난 제9차 본회담과 제10차 본회담에서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의제토의를 남북적십자회담이 시작된지 15년이 되는 금년 9월전에 끝내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귀측의 주장이 말로써 끝나지 않고 행동과 실천으로 옮겨지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귀측이 회담을 무한정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무조건 회담에 호응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제11차 남북적십자회담을 오는 8월 28일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합니다.

귀측의 긍정적인 회담을 기대합니다.

1986년 7월 11일

대한적십자사 남북적십자회담 대표단  
수석대표 이영덕

## 국내 주요 반응

경제·적십자 및 국회회담 예비접촉 등의 재개와 관련, 금번 우리측이 또다시 구체적 회담일정을 제시하고 북한측의 호응을 촉구한데 대해 국내 주요언론들은 일제히 이를 환영하는 요지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특히 북한측이 기존대화에는 호응하지 않으면서 「3자 군사회담」을 제의한 데 대해서는 「3자 회담을 변형시키려는 흉계」라고 그 저의를 폭로하였다.

또한 「부질없이 새 대화창구를 늘려보려는 시도는 형식적인 선전활동에 불과」하다고 지적,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기존 남북대화통로를 성실히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측의 회담 재개촉구에 북한측이 지체없이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 남북회담 재개 거듭 촉구한다

한국일보(1986. 7. 12)

이미 트인 남북대화의 3개 통로에 걸쳐 우리측 수석대표들은 11일 북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냈다. 북측이 우리측의 연례적인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삼아 일방적으로 중단시켜온 남북대화를 8월중에 모두 재개할 것을 촉구한 내용이다.

같은 날 국방부는 북한의 인민무력부장 오진우가 이기백 국방장관에게 또 다시 서신을 전달하겠으니 판문점에 와서 찾아가라고 통보한데 대해 그같은 서신을 접수할 수 없음을 통보했다고 발표하였다.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기존 남북대화 통로를 성실히 유지, 발전시키는 일이 중요」** 하지, **부질없이 새 대화창구를 늘려보려는 시도는 형식적인 선전활동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놓은 셈이다.

그런데 북측의 남북회담 대표들은 지난 1월 21일과 22일자 대남전화통지문을 통해 우리측 팀·스피리트 훈련을 왜곡 비방하면서 대화를 중단한다고 했고 아직도 거부반응만을 고집하는 형편이다. 그대신 북측은 느닷없이 인민무력부장 오진우를 등장시켜 그의 6월 17일자 서신을 통해 3자군사회담을 제의했었고 최근에도 되풀이말을 일삼는 꼴이다.

이처럼 북측이 기존 대화통로를 외면하고 엉뚱한 군사회담을 새로 제의하게 된 연유는 그들 나름으로 꽤 복잡한 속사정과 매우 위험스럽고 음흉한 속셈이 있음을 관측케 한다. 원래 남북적십자회담은 인도적 차원의 것이고 또 작년에는 일부 이산가족의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상호교환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리고 남북경제회담은 지난해에 상품 교류와 경제협력을 위한 공동기구 설치에 원칙적 합의를 본 바 있었다.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도 상당히 좋은 분위기 속에 본회담 의제마련을 내다보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북측은 작금에 와서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개선과 상호신뢰를 통한 평화정착을 외면한채 이른바 「남조선혁명」이라는 집념이 오랜 다른 길을 점차 노골적으로 걸으려는 참이라고 관측된다. 물론 그들도 대화의 진전을 바라는 내외여망을 정면으로 거부할 입장은 못된다. 그러나 올해들어 김정일후계체제를 조속히 공고화하려는 절박한 필요성에 직면한 것 같고 대소밀착자세도 강경노선을 부추긴 셈이다. 게다가 그들은 한국(남한) 정치정세를 아전인수격으로 오관하려는 조짐을 나타내었으며 동시에 김일성의 연설을 통해 서울올림픽 개최를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공언하는데 이르렀다.

이 경우 우리가 가장 경계할 것은 북측의 모험전략에 앞선 위장평화공세라는 상투적 수법이다. 그들 나름으로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여온 듯이 분장하여 내외여론을무마하는 동시에 「방심」 조성을 노리고 있는 모양이다.

**북측은 무모한 모험의 구상에 들뜬 대신, 긴장완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실천 즉 기존 남북대화 통로의 성의있는 활성화에 호응해야 할 것임을 강조해마지 않는 바이다.**

#### 남북회담 재개하라

동아일보 (1986. 7. 12)

남북대화처럼 중단과 재개를 되풀이하면서도 실날같이 이어져오는 협상도 드물 것이다. 그때마다 회담의 진전을 지켜보는 겨레의 가슴에는 희비가 엇갈렸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곤 했다.

현재 남북한간에는 이제 얼마후면 말길이 트인지 만 15주년을 맞는 ① 적십자회담 ② 경제회담 ③ 국회회담 예비접촉과 ④ 체육회담 등 네갈래의 대화채널이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앞의 세 대화장구는 금년 1월 이래 근 7개월째 굳게 닫혀 있고 체육회담만이 국제올림픽위(IOC)의 중재로 그것도 남의 나라 땅에서 근근이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대화가 중단된 까닭인즉 북한측이 연례적인 한미합동 군사훈련인 「팀 스피리트 86」을 구실삼아 일방적으로 예정돼있던 회담일정을 모두 취소해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측의 3개 회담 수석대표들은 「팀·스피리트」가 끝난 직후인 지난 3월 하순에 이어 11일 또 다시 북한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8월중에 3개회담을 차례로 재개하자고 촉구했다.

우리측의 이같은 제의는 공교롭게도 북한인민무력부장 오진우가 2차 서신을 보내겠다고 통보해 온 날이다. 우리 국방당국은 기존 남북대화의 재개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서 군사관계회담 등 대화장구만을 늘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이유로 이 서신의 접수를 거절했다고 한다. 같은 날 한쪽에서는 회담재개를 제의하는 통지문을 보내고 다른 한편에서는 서신접수조차 거절해야하는 사정이야말로 남북관계의 단면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현재 열려 있는 통로를 따라 교류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새길을 뚫는 것보다 훨씬 손쉽고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손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실질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미 15년의 대화경험을 축적했고 지난해에는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상호방문까지 실현시켰던 적십자 회담이나 남북쌍방에서 실질적인 이득을 줄수 있는 경제교류의 지름길을 옆에 두고 엉뚱한 주장만 앞세우는 속셈이 무엇인지 답답할 뿐이다.

이제 북한은 제발 상투적인 선전공세와 속들여다 보이는 수작을 그만두었으면 한다.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접근에는 마음이 없고 기록만 남기는 식의 평화공세로는 산적한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으로 평양에서 공산권 및 비동맹국 체육장관회의가 열릴 예정이고 8월 하순에는 「짐바브웨」에서 비동맹국회의가, 9월 초순에는 평양에서 이른바 「한반도비핵지대화 국제회의」가 열릴 참이다. 이같은 일련의 국제회의에서 북한은 우리측에 이런저런 제의를 했노라고 선전을 할 모양이나 중단된 회의를 재개시킬 생각은 앓고 새 제의만 내놓았다고해서 무슨 소득이 있겠는지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게다가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부근에 탱크와 항공기등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개의 대규모 지하 병참기지를 건설했고 더 많은 땅굴을 파놓았다는 「리브시」 「유엔」군 사령관의 증언은 매우 충격적이다.

북한이 하루빨리 남북대화의 마당으로 다시 나올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남침준비보다 민족화합

을 통한 분단 문제 해결에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 북한은 왜 대화를 피하나

중앙일보(1986. 7. 12)

남북대화가 중단된지 7개월이 넘었다.

평양측은 작년 12월의 회담을 끝으로 우리 「팀 스피리트 86」 훈련을 트집잡아 일체의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무기 연기시켜 오늘에 이르렀다.

우리는 그동안 몇차례 회담재개를 공식 요구했다.

팀 스피리트가 끝난지 3개월이 되는데도 북한은 회담을 속개할 아무런 움직임도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은 새로 군사회담을 열자고 제의, 기존 대화들의 초점을 흐리려는 공작을 벌여왔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3년간의 군사적 충돌을 경험했다. 그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유혈내전이었다. 우리의 남북관계가 동·서독과는 달리 이처럼 침체화된것도 실은 그 3년간의 전쟁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간의 군사회담은 그 어떤 분야의 회담보다도 미묘하고 어렵게 돼 있다.

더구나 군사회담이 열리게 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전쟁책임 문제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국제적으로는 한때 평양이 주장하는 북침설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지금은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해 북에 의한 남침이라는 결론이 일반화돼 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북한뿐이다.

평양은 남북군사회담에서 김일성이 저야할 전쟁책임 문제 규명에 응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다. 어쨌든 우리는 군사회담은 오히려 남북관계를 긴장·악화시킬 소지가 많다는 현실을 인정하여 그것은 최후의 단계에 이루어질 성질의 것으로 믿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이미 열려있는 적십자회담·국회회담·경제회담에 전념하여 실질적 진전을 이룩, 나머지 분야의 회담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당장 열어야 할 또 하나의 회담이 있다면 그것은 군사회담이 아니라 문화회담이다.

남북은 구석기시대 이래 공유하고 있는 우리 특유의 문화가 있다. 이 문화는 지난 40여년간 서로 단절돼 왔다. 그 결과는 우리 민족문화의 동질성 상실과 이질화다.

더구나 근래에 와서는 남북에서 석기시대의 유적과 삼국시대의 고분이 많이 발굴됐다. 이제 남북은 양쪽의 발굴성과를 상호 교류하고 공동연구해야 할 필요성에 당면해 있다.

이런 현실성 있는 문화회담을 제쳐놓고 오히려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회담만 반복하여 주장하는 북측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우리측 수석대표들은 11일 다시 북한측에 대해 중단된 3개 회담을 8월중에 모두 재개하자고 제의했다. 체육회담은 IOC 중개하에 로잔에서 계속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는 적십자·국회·경제의 3개 회담 속개제외에 북한이 조속히 응해오기를 기대한다.

적십자회담은 이산의 고통문제, 국회회담은 정치문제, 체육회담은 국제대회 공동참가 및 체육교류, 경제회담은 상호 교역과 기술·자본의 협력문제를 다룰 수 있어 우리가 직면한 남북문제는 이 기존 4개의 회담에 모두 수용될 수 있다.

또 이들 회담의 진전이 없다면 다른 분야의 회담을 열어보았자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평양이 우리측 회담재개 요청에 조건없이, 그리고 즉각 응해 오기를 촉구한다.

동족간의 대화에 무슨 조건과 명분이 필요하겠는가. 대화 자체가 최대의 명분이다.

북한은 공작과 술책의 차원을 초월하여 민족적 사명감을 가지고 보다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

해주길 바란다

한반도문제는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서울신문(1986. 7. 12)

앞으로 한달 뒤인 8월 12일이 되면 최두선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한지 꼭 15주년이 된다. 최두선총재가 처음 남북회담을 제의했을 때 국민들은 하나의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6·25이후 극한적인 남북한 대립속에서 살아왔던 국민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변화였기 때문이다.

그 다음 해인 1972년 7월 4일 남북한의 요인이 서로 평양과 서울을 방문, 양쪽의 최고권력자를 만나는 사진의 공개와 함께 역사적인 7·4공동성명을 발표했을 때에는 국민들 사이에 엄청난 흥분을 자아냈다. 이제는 확실히 한반도에 화해와 해빙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겠느냐는 희망 때문이었다.

그러한 희망과 낙관론은 남북회담이 2년만에 중단되고 남북관계가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가자 허무하게 무너지면서 쓰디쓴 환멸만을 남겨 주었다. 1980년대 들어 12년 만에 다시 남북회담이 재개되었으나 1970년대의 초기처럼 감흥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 1970년대의 불행한 경험이 남북관계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가질 수 없도록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군사훈련은 구실을 위한 구실

1980년대에 재개된 남북대화에서 적십자회담의 경우처럼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을 실현시키는등 부분적으로 진전을 보이기도 했으나 남북관계의 커다란 기초위에서 보면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말 불행한 일이다. 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북한측에 그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측이 금년에 접어들어 예정되었던 적십자회담과 경제회담등 모든 남북회담을 한미 연례군사훈련인 팀 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거부하고 회담을 교착상태에 빠뜨린 것은 한낱 구실을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지난 1970년대에도 군사훈련기간중 남북대화를 한 선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그것을 구실로 삼는 것은 트집에 불과하다. 동서독의 경우에도 화해와 접근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토 조약군이나 바르샤바조약군의 군사훈련이 장애가 된 일은 없었다.

남북대화가 남북한의 진정한 화해를 촉진하고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으려면, 회담에 임하는 성실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성실성의 바탕없이 는 아무리 여러 갈래의 회담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진전도 가져오기는 힘들 것이다.

군사회담 제의는 선전공세

현재 남북간에는 적십자회담, 경제회담, 국회회담 예비접촉, 체육회담 등 여러 갈래의 대화창구가 개설되어 있다. 물론 그 설치목적은 다르다 하더라도 대화창구가 모자라서 대화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화가 진전되지 않는 것은 어디까지나 회담에 임하는 북한측의 무성의 때문이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몇 갈래의 회담은 덮어둔채, 북한측이 지난 6월부터 인민무력부장 오진우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기백 국방부장관 및 리브시유엔군 사령관과 군사회담을 갖자고 주장하고

나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우리 국방부는 어제 그들이 판문점을 통해 두 번째 서신을 보내겠다는 제의를 거부했다. 대신 우리의 적십자회담대표등 기존 3개 회담의 수석대표들은 8월중에 모두 회담을 재개할 것을 제의했다.

기존회담들을 교착상태에 빠뜨려 놓은 채 북한측이 새로이 군사회담 개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대내외적인 선전공세의 일환이라는 인상이 짙다. 그동안의 남북대화 중단에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키고 그들이 마치 한반도 평화에 진지한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술책이다.

군사문제는 실무자급 회담에서 결정될 수 없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며 그들이 제의한 일부 문제는 새삼스럽게 군사회담을 갖지 않더라도 기존의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6월 첫 번째 서신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측은 군사회담의 부당성을 충분히 밝힌바 있다. 그런데도 북한측이 또 다시 서신을 보내겠다고 나오는 것은 유엔군사령관을 끌어들여 그들이 끈질기게 요구해 오고 있는 미국과의 3자회담을 실현시키기 위해 변형된 형식이나마 이루어 보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듯하다.

#### 북한측 기본자세 수정되어야

수없이 되풀이하는 얘기지만, 남북한 문제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문제이며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문제이다. 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해서 논의하려는 행동은 자주적 자세라고 볼 수 없다. 우리는 1972년에 발표한 7·4남북공동성명에서 통일의 3대원칙을 천명하면서 자주적 통일을 약속하였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난 1970년대에 북한측은 한쪽으로는 미소를 지으면서 남북대화를 진행시키는 일방 또 한쪽으로는 군사분계선에 남침용 땅굴을 팠다. 이는 그들이 취하는 전형적인 이중적 행동이었다. 그들이 이같은 이중노선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한 회담을 아무리 여러 갈래 진행한다 하더라도 어떤 실질적인 결실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노선은 결국 대화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다른 정치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하위수단으로 회담을 전술적으로 이용하는데 그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측은 남북회담에 임하는 기본자세에 일대 수정을 가져와야 한다. 이것 저것 그때 그때 선전적 필요에 따라 회담의 종류를 늘리자고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어 온 기존의 회담을 더욱 발전시키고 축적시켜 가는데 일차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기존 3개회담의 재개를 촉구한 우리의 주장을 지체없이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 북한은 빗장을 풀라

-기존대화채널 재개하는데 적극 호응해야-

경향신문(1986. 7. 12)

속셈이 다른 북한을 상대로 우리가 재삼 대화재개를 촉구하는 것은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일념 때문이다. 우리는 오직 대화만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몰아내고 민족재결합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은 믿고 있다. 문희갑 남북경제회담수석대표를 비롯해서 적십자회담 이영덕 수석대표, 국회회담 예비접촉의 권정달 수석대표가 각기 세 번째 대화재개를 제의한데는 우리의 그런 뜻이 담겨있는 것이다.

남북분단으로 인해 우리 민족이 처르고 있는 희생은 엄청난 것이다. 그 비극을 극복하고 희생을 줄이기 위해 대화를 하자는데는 어떤 전제 조건도 있을 수 없다.

북한측이 우리의 팀 스피리트 군사훈련을 이유로 세갈래회담을 일괄 중단시킨 사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훈련이 10년 이상 계속돼온 연례행사라든지 또는 공격작전이 아닌 방어훈련이란 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측이 작년에도 그것을 구실로 회담을 중단시킨 일이 있었지만 훈련이 끝나자 바로 회담재개에 응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또 북한측의 주장대로 팀 스피리트가 그들에게 그토록 위협적인 요소라면 북한은 보다 적극적인 대화자세로 남북간에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부터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들의 더욱 모순된 행동은 소련과의 군사적 밀착이다. 그들이 소련으로부터 미그 23전투기 등 고성능 신무기를 도입하고 그 댓가로 자체항만과 영공을 소련 남진정책의 기지로 제공하면서 우리의 팀스피리트를 대화중단의 구실로 내세운다는 것은 자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지난날 북한이 새롭게 제의한 남·북한 및 미국간의 「3자 군사회담」은 더욱 가증스런 위장평화 공세로 분석된다. 이 제의를 내놓고 난 뒤 그들이 신문·방송으로 전개하는 선전공세를 보면 그 속셈을 꿰뚫어 볼 수 있다.

북한이 제기한 군사문제는 이미 설치돼 있는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자 군사회담을 거듭 제의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이미 제의한 바 있는 한·미·북한간의 「3자회담」을 변형시키려는 흥계를 꾸미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말하자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구실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우리 국방부가 북한 인민무력부장 오진우의 두 번째 서신 접수를 거부한 처사는 정당했다고 본다.

남북한 사이에는 이미 4개의 대화창구가 열려 있어 어느때 어떤 문제라도 의사전달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작년에만도 무려 13차례의 회담이 열려 상호 합의문서에 서명하고 소수이기는 하나 남북간의 인적교류가 이루어 졌던 일들을 과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상황진전은 바로 북한측의 성의있는 자세여하에 달려 있다. 대화를 위한 우리의 문호는 항상 열려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전두환 대통령이 제의한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은 언제든지 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여기서 북한이 원하는 어떤 문제라도 토의할 수 있다. 북한이 조금이라도 대화에 뜻이 있다면 먼저 이 회담부터 응해야 할 것이다.

북한당국은 이제 더 이상의 군사모험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남북대화 테이블에 나와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 2. 북한측의 「3자군사회담」 제의

### 가. 북측의 제의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적십자·경제 등 진행중인 일련의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우리측의 거듭된 대화재개 촉구에 대해서도 이를 외면해 오던 북한측은, 1986년 6월 17일 남북한 국방부 장관과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참가하는 「3자 군사회담」의 개최를 제의해 왔다.

이기백 국방부 장관앞으로 보내온 북한 인민무력부장 오진우 명의의 서한에서 북한측은, 현재 한반도의 정세는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위험한 국면』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긴장과 전쟁 위험의 직접적 요인이 되고 있는 「군사 연습과 무력증강중지문제」, 「병력과 군비축소 문제」, 「휴전협정 준수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을 7월중에 개최할 것과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예비접촉을 6월 27일 판문점에서 가질 것도 함께 제의하였다.

또한 동 서한에서 북한측은, 『군사회담이 열리고 긴장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게 된다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에 『새 전기가 마련되게 될 것이며 남북대화에도 획기적인 국면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3자 군사회담」 개최를 사실상 경제회담, 적십자회담 등 다른 대화의 전체조건으로 삼겠다는 저의를 드러냈다.

북한측의 서한요지는 다음과 같다.

- 지난해 남북간에는 여러갈래의 대화가 진행된 바 있음.
- 그러나 금년에는 남북관계가 다시 대화이전의 상태로 되돌아 가고 긴장상태는 일층 격화되어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국면에 다다르고 있음.
- 긴장완화 및 전쟁위험 제거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염원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주한 유엔군 사령관, 북한인민 무력부장이 참가하는 군사당국자 회담의 개최를 제의함.
- 동 회담에서는 긴장격화와 전쟁위험의 직접적 요인이 되고 있는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을 중지하는 문제, 병력과 군비를 축소하는 문제, 휴전협정 준수문제 등을 협의·해결할 수 있을 것임.
- 회담장소는 판문점 또는 기타 편리한 장소로 하고, 개최날자는 7월중이 좋다고 봄.
-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각기 3명 정도의 실무대표가 참가하는 예비접촉을 6월 27일 판문점에서 가질것을 제의함.
- 군사당국자 회담이 열리고 긴장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진다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에 새 전기가 마련될 것이며 남북대화에도 획기적 국면이 열리게 될 것임.
- 우리의 새로운 발기에 긍정적으로 호응할 것을 기대함.

한편 북한측은 6월 17일, 우리측에 서한을 보내온 것과 같은 시간에 주한 유엔군 사령관 앞으

로도 동일한 내용의 서한을 전달하였다.

당초 6월 7일, 북한측은 인민무력부장 명의의 서한을 주한 유엔군 총사령관이 아닌 미8군 사령관 겸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전달하겠다고 통보해 온 바 있으며, 이에 대해 UNC측에서는 동 서한의 수교는 군사정전위의 관례에 따라 유엔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측이 이러한 관례를 따른다면 북한측 서한을 접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17일 정작 북한측은 군 최고사령관이 아닌 최고사령관간 제1대리인 인민무력부장 오진우로 표기된 서한을 유엔군 총사령관 앞으로 보내옴으로써 휴전협정 서명 당사자의 격과 그간의 관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 제이의 저의

북한측의 금번 「3자 군사회담」 제의는,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실한 자세에서라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북한측이 군사훈련 중지 등 군사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한 및 미국간의 「3자 군사회담」을 제의한 것은 이를 통해 그들이 1984년 1월 이래 주장해 온 이른바 「3자 회담」으로 한발 접근해 보려는 기도가 깔려 있다고 하겠다.

둘째, 북한측이 경제, 적십자회담 등 기존의 남북대화 재개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군사문제 해결을 위한 「3자 회담」을 제의하고 「군사회담」이 잘 진전되어야 남북대화 재개가 될 수 있다고 한 것은 남북대화 재개 거부에 대한 내외의 비난을 모면하는 동시에 대화중단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려는 기만적 저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남북대화를 바라는 주변국가의 기대에 편승, 남북대화 부진의 이유가 「팀·스피리트」를 비롯한 우리측의 군사훈련에 있음을 내세워 군사훈련의 축소 내지 중단을 유도해보려는 데도 그 저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한편 시기적으로 보아 북한측의 금번 제의는 「짐바브웨」 비동맹 정상회의(1986.8.26-9.7)와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인 이른바 「한반도 평화 비핵지대화 국제회의」(9.6-9.8) 등을 겨냥하여 남북대화 및 한반도 긴장해소의 근본적인 장애요인이 「팀·스피리트」훈련 및 주한미군 등에 있다는 국제여론을 조성함으로써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측의 주장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 나. 우리측의 대북 회신

1986년 6월 24일 이기백 국방부장관은 「3자 군사회담」을 제의한 6월 17일자 북한측 서한에 대한 답신을 북한측에 전달하였다. 동 서한에서, 이기백 장관은, 북한측이 진행중이던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놓고 군사당국자 회담을 제의하는 것은 사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먼저 적십자회담과 경제회담에 북한측이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이장관은 한반도의 긴장과 전쟁위험은 북한측의 『무모한 군사력 증강과 우리에게 대한 적대정책, 그리고 휴전협정의 위반』에 그 원인이 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측이 『군사회담을 제기하여 선전활동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우리측이 이미 제의한 바 있는 「군사적 긴장완화방안」부터 토의하는데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장관은 북한측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전쟁방지에 관심이 있다면,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가장 빠른 길임을 인식』하고 하루속히 이에 호응해 나올 것도 촉구하였다.

이기백 국방부장관이 북한측 오진우 인민무력부장에게 보낸 답신 전문은 다음과 같다.

북한인민무력부장 오진우 귀하

나는 6월 17일 귀하가 보내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귀측도 아는 바와 같이 지난해 남북간에는 적십자회담과 경제회담 등 여러 갈래의 회담이 진행되었고 분단 이후 처음으로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을 상호 교환하게 되어 온 겨레를 기쁘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남북한 관계개선에 커다란 기대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 들어 귀측은 유감스럽게도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시키고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우리측의 제의마저 거부함으로써 남북한 관계를 다시금 불신과 긴장의 분위기로 몰아넣어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남북의 온 겨레를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귀측이 진행중이던 대화를 중단시켜 놓고 군사연습 중지와 군비축소 등을 내세워 남북한 국방장관과 국제연합군 사령관이 참가하는 군사당국자 회담을 하자고 제의하는 것은 사리에 어긋나는 주장입니다.

한반도의 긴장과 전쟁위험은 그 동안 우리측이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명백히 입증한 바와 같이 바로 귀측의 무모한 군사력 증강과 우리에게 대한 적대정책 그리고 휴전협정의 위반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근본원인을 덮어두고 긴장완화와 신뢰조성을 위해 아무런 성의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군사회담을 하자는 것은 누가 보아도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귀측이 중단시키고 있는 적십자회담과 경제회담부터 먼저 재개하고 이산가족 재회와 경제교류를 조속히 실현하여 남북간의 실질적인 긴장완화와 신뢰를 회복하는데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귀측은 그 어떤 형태의 군사회담을 제기하여 선전활동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우리측이 이미 제의한 바 있는 「비무장지대의 진정한 비무장화」 「주요 군사훈련의 상호통보」 「주요 군사훈련 상호참관 초청」 「공동경비 구역내에서의 상호확인제도 설치」 등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부터 토의하는데 호응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는 귀측이 진정으로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을 방지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가장 빠른 길임을 인식하고 하루속히 남북한당국 최고 책임자회담에 호응해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1986년 6월 24일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이 기 백

한편, 이에 앞서 1986년 6월 21일 주한 유엔사측도 6월 17일자 북측 서한에 대한 회신을 북한측에 전달한 바 있다.

북한군 최고사령부 앞으로 보낸 주한유엔군 총사령관 명의의 서한에서 유엔사측은 먼저, 주한 유엔군 총사령관 앞으로 보내는 서한에는 관례에 따라 북한군 최고사령관이 서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6월 17일자 서한에서 이를 무시한 사실에 대해 먼저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리고 북한측이 「3자 군사회담」에서 협의·해결하자고 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이 남북한간에 적절히 토의되어야 할 안건임을 지적하고, 다만 군사정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군사정전위원회에서 하시라도 토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히고, 아울러 유엔사측에서는 긴장완화를 위한 중대제안들을 이미 군사정전위원회에 상정해 놓고 있음도 상기시켰다.

그러나 북한측은, 그들의 「3자 군사회담」제의에 대해 한·미 양측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거부하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월 3일 군사회담과 관련 2차 서한전달 계획을 우리측에 통보해 왔으며, 우리측이 이의 접수를 거부하자 7월 11일 방송을 통해 「3자 군사회담」의 개최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면서 한·미 양국에 대한 비난선전을 격화시키고 나섰다.

이에 앞서 6월 11일 상호 우리측은, 서한을 접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북한측에 통보한 바 있으며, UNC 측에서도 북측 서한의 서명자가 최고사령관이 아님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한 바 있다.

#### 다. 국내외 주요 반응

북한측이 금번 「3자 군사회담」을 제의한데 대해 국내 주요신문들은 1984년 1월 북한측이 제의한 『3자 회담의 축소판』이라고 규정하고, 동 제의의 부당성을 비난하는 요지의 사실을 일제히 게재하였다.

북한측이 지금 열려있는 대화에서조차 실질적 진전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상황에서 새로운 회담을 제의한다는 것은 대화를 위한 제의가 아니라 금번 제의를 『남북대화 중단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겨냥한 3자 회담 실현 분위기를 조성』해 보려는 다른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 그들의 불순한 저의를 규탄하였다.

특히 군사연습중지, 군비축소, 정전협정준수 등 군사문제는 정치협상의 핵심문제로서, 그 본질이 군사실무차원을 넘는 예민하고 고도의 정치 외교적인 것인 만큼 『최고책임자회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측이 제의한 「남북한 최고책임자회담」에 호응해 올 것도 아울러 촉구했다.

한편 해외언론들은 북한측의 『3자 군사회담』 제의에 대해 『북한측의 평화 제스처 뒤에는 반드시 무력도발을 해온 사례』가 있어 왔음을 지적하고, 동의를 해온 북한측의 저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 북한측이 금년 초 이미 대화의 통로인 경제·적십자·국회회담 예비접촉 등을 취소한 상황에서 또 다른 대화제의를 해온 것은, 『수세에 몰린 김일성의 정치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하고, 한국의 수락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 국내 반응

##### 북한 무력부장의 편지 —실질대화보다 선전책동에 급급하다—

동아일보(1986. 6. 19)

6·25전쟁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때에 난데없는 편지가 북으로부터 날아들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지난 17일 북한 인민무력부장 오진우가 판문점을 통해 보내온 서신이 바로 그것이다.

북의 권력서열 제3위이며 김정일 체제를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오진우는 이 편지에서 한국의 국방장관과 주한 「유엔」군 사령관 그리고 자신이 참석한 3자간의 군사회담을 열어 남북간 군사연습 중지, 군비축소 및 정전협정 준수문제 등을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은 17일 정오 이 편지를 우리측에 전달한 후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그들의 중앙방송 평양방송과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 내용을 먼저 발표했다.

북한이 인민무력부장 명의로 된 서신을 우리 국방장관에게 보내온 것은 전에 없던 일로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이 휴전협정조인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한 「유엔」군을 주로 상대해왔던 북한이 갑자기 인민무력부장 이름으로 편지를 보낸 것은 무슨 까닭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도 한국이 6·25전쟁의 휴전에 한사코 반대한 끝에 협정에 조인하지 않은 지난날의 사정을 알 터이므로 이제 와서 국방책임의 대부분을 짊어지고 있는 한국군의 엄연한 현실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북한이 군사회담을 제의한 속셈은 몇 갈래로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다. 멀리는 주한미군의 철

수를 겨냥한 분위기 조성과 미국이 참가하는 3자 회담의 실현이 주 목적인게 분명하다.

그리고 가깝게는 오는 8월 하순 「짐바브웨」에서 열리는 비동맹회의와 9월 초순 평양에서 열릴 소위 「한반도 비핵지대화 국제회의」를 앞둔 위장평화공세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그들은 또 최근 좌경사상이 고개를 들고있는 국내정국의 미묘한 움직임을 계산에 넣고 있는지도 모른다.

북한은 금년들어 그 동안 여러 갈래로 진행돼 오던 남북대화를 거의 중단시키고 있다. 그 중단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시키자는 속셈도 숨겨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군사회담이란 고위정치외교접촉 못지 않게 합의가 어렵고 다루는 문제 또한 복잡하다. 비교적 합의에 도달하기가 손쉬운 적십자회담이나 경제회담조차도 기피하고 있는 그들이 고도의 군사회담을 제의하고 나섰다는 것은 아무래도 국제여론을 겨냥한 선전공세로 밖에는 보기 어렵다.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구조의 정착에 관심이 있다면 군사회담과 같은 허황된 제의를 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개선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북한이 근 1만 건에 달하는 휴전협정 위반사례를 제쳐놓고 군사회담을 제의한 저의는 너무도 명백하다.

더구나 북한은 6·25직전 요인교환협상을 제의했고 7·4남북공동성명 발표 후 남침용 땅굴을 뚫으며 3자 회담을 제의한 후에 「아웅산」 테러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6·25발발 36주년을 앞둔 우리에게 남다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북의 군사회담 제의와 경계점  
—위장선전공세의 속셈 보인다—

한국일보(1986. 6. 19)

남북간 군사연습 중지와 군비축소, 정전협정 준수 문제를 협의키 위해 한국 국방부장관, 주한유엔군사령관 그리고 북괴 인민무력부장간의 3자 군사회담을 열자는 17일자 북한 오진우의 서신 제의는 북한집단의 음흉한 목적과 책략을 적지 않게 내포한 것이어서 경계되는 바 매우 크다.

제안내용과 그들 저의에 관해서는 어제 이미 국방당국으로부터 상세한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다. 한데 아무리 뻔뻔스런 저들이라 하여도 근자에 이르기까지 북한사회 전체를 병영화 하다시피하고 소련으로부터 미그 23기를 비롯한 신예 장비를 계속 들여오며 10만 건 가까운 휴협 위반사건을 일으킨 북한측 처지로서 어찌 그같은 3개의 협의안건을 제시할 수 있었는지 우선 상식을 의심치 않을 수 없게 한다.

이는 그간 은밀하게 실시한 그들의 군사연습과 군비증강, 전쟁준비, 도발사건 등을 일체 은폐하고 그 때문에 야기된 긴장고조 및 전쟁위기 조성의 책임을 호도하려는 술책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또, 새 군사회담의 제의로 금년들어 그들이 일방적으로 단행한 대화중단의 책임마저 우리측에 전가하려는 속셈이 들여다 보이고 남는다.

이미 평양 측은 서신전달 불과 2시간 후부터 모든 매스컴매체와 회견채널을 동원하여 선전에 급급하고 있다 한다. 국제예의나 관례에 어긋나는 그 서두름 속에서 이번 제의가 「대화」 아닌 「선전용」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대화중단 때문에 받고 있는 국제적 비난과 고립상태를 풀고 다가오는 짐바브웨 비동맹 정상회의와 평양서 열릴 「한반도 평화 비핵지대화 국제회의」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찾으려는 것이다.

아울러 그같은 위장평화공세의 강화로 저들의 가면평화이미지를 부각시켜 안으로는 남한사회 일각의 소요사태를 격화, 교란시키고 밖으로는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연합군사유대의 약화를 겨냥하고도 있을 것 같다.

그들의 이런 저의·흉계와 연관시켜 생각할 때 오진우가 3자 군사회담 방식을 제의한 것부터 경

계를 요하게 된다. 이는 북한측이 한반도 평화문제해결을 위해 벌써부터 내는 「3자 회담안」의 허구성·비자주성과 상통하는 형태인 것이기 때문이다. 또 73년 한때 남북조절 위에서 실질문제 토의조건으로 고집하던 「군사문제 우선 해결」주장을 재연시킴으로써 다른 대화를 영영 매장시키려는 술수일지도 모른다.

더구나 이번 제안이 「6·25의 달」에 나왔다는 점을 매우 주시하게도 한다. 마치 그때 전쟁준비를 다해놓고 침공 불과 1주일 전까지 통일협상회담을 하자느니 인물교환을 하자느니 하던 남침연막 위장평화공세를 연상치 않을 수 없는데서 그렇다. 그들 스스로가 일찌감치 전쟁준비의 「완료」를 공언했고 우리측의 국제스포츠행사마저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위협을 가하고 있는 터인 만큼 오의 제안거부를 새 침략의 구실이나 명분으로 삼기 쉽다는 경각심을 잠시도 잊을 수는 없는 일이다.

만일 평양집단이 진실로 긴장완화·전쟁위기해소·군비축소 같은 평화증진책을 원한다면 먼저 그들 스스로가 기존 대화장구에 성실성을 보이고 우리측이 제시한 4개 군사신뢰 조치를 시범적으로 취함과 동시에 이번 제안된 문제는 그 본질이 군사실무차원을 넘는 예민하고 고도한 정치 외교적인 것인 만큼 남북한 최고책임자회담에 조건없이 응하여 다루게 하도록 여기 한번 더 권해 두겠다.

「군사회담」의 기만성  
—3자 회담 실현 위한 북의 책략—

조선일보(1986. 6. 19)

평양이 또 엉뚱한 국제적 음모의 책동을 기도하고 있다. 북측이 17일 우리측 국방책임자에게 보낸 서신의 기만성과 음모성에서 여지없이 그것을 읽을 수 있다. 인민무력부장 오진우의 이름으로 보내온 서신은 남·북간 군사연습 중지, 군비축소, 정전협정 준수 등의 문제를 협의하자 했고, 이를 남·북 당사자간이 아니라 유엔군 사령관을 포함한 군사회담에서 다루자고 했다.

북측의 일차적 의도는 84년 1월 랭군사건 전후해서 내놓은 「3자 회담」 축소판을 선행시키자는 데 있음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우회적 방법으로 미측이 참가한 군사회담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미·북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간에 불가침선언을 실현하여, 미군을 철수시킨다는 계산인 「3자 회담」 전략을 관철코자 하는 기도인 것이다.

다음으로 북측은 대화중단 책임이 우리측에 있다는 역선전의 계산을 담고 있다. 이른바 북침을 준비하는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으로 대화는 중단됐다고 책임전가를 일삼아온 저들은, 군사회담에서 「군사연습 중지」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다루자고 내세움으로써, 종래의 그들 주장을 뒷받침하고 더 한층 부각시키려고 기도하고 있다.

8월 하순에서 9월 초에 짐바브웨에서 비동맹정상회담이 열리고, 9월초에는 평양에서 소위 「한반도 비핵지대화 국제회의」가 열리게 돼 있다. 북측은 시기적으로 이를 겨냥했음이 분명하고, 최근 국내 일부 정치세력의 과격구호에 영합하려는 의도도 없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평양 측은 군사회담 제의와 함께 대대적인 선전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전례없이 「중대제의」 2시간만에 상대방이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제의사실을 공개하고, 방송과 내 외신 기자회견이라는 형식 등을 빌어 일방적인 선전을 요란스럽게 반복하고 있다. 목적은 뻔하다. 군사력의 65% 이상을 전진배치하고 있는 사실을 은폐하고, 군사적 긴장상태는 팀·스피리트 등으로 남측이 조성하고 있으며, 군사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다.

이와 같은 각본에서 출발한 평양 측 제의가 성실한 내용과 태도의 것일 수 없다. 남·북간에 군

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민족간에 진정한 화해를 실현하는 계기를 만드는 일을 민족성원의 그 누가 싫다 하겠는가. 그러나 그러하기 위해서는 쌍방이 민족문제는 민족끼리 푼다는 민족주체적 입장과 양심에서 출발해야 한다.

더구나 고도로 민감한 군비축소 같은 문제를 권한이 제한된 실무급 회담에서 용이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 이는 포괄적인 남·북 관계 상황을 다루는 고도의 정치 외교적 차원의 남·북 대화를 통해서만 풀어나갈 수 있는 사안의 일부이다. 우리측은 이미 남·북 정상회담을 제외함으로써 그와 같은 문호를 조건없이 열어놓고 있다.

이에 호응하지 않고 불장난을 기도한 채 선전선동을 일삼는 북측의 책략이 계속되는 한, 결코 세계여론을 그들에게로 되돌릴 수 없을 것이며, 우리 국민의 불신을 벗어날 수도 없을 것이다.

### 오진우의 서한

중앙일보(1986. 6. 19)

우리 국방장관 앞으로 북한의 인민무력부장(국방상) 오진우가 직접 서신을 보낸 것은 전례 없던 일이다.

비록 그 내용이 진부하고 의도가 계약적이어서 우리측에 의해 거부되긴 했지만 그 형식만은 새로운 대화무드에 편승한 형태임에 틀림없다.

오진우는 이 서한에서 군사훈련중지, 군비축소, 휴전협정 준수를 위한 남북군사책임자 회담을 제의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발전되어 통일에 접근하게 되면 언젠고 남북군사회담은 열려야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그런 시기가 못된다. 군사문제는 분단해결의 최종단계 사항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은 지금 열려있는 대화에서 조차 실질적 진전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주제에 새로운 회담을 제의한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북한은 이미 정권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군사문제를 제기해 왔다.

48년 3월 김일성이 한반도에 진주한 미·소 군의 철수를 제의한 이래 외국군 철수는 평양의 단골 메뉴였다.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하자 6·25직전인 50년 6월 19일 북한은 남북한 군대의 합작을 제의, 남북조선군대연합을 들고 나왔다.

이 모든 것은 결국 6·25남침을 위한 준비조치에 불과한 위장과 기만전술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휴전 이후는 군축안을 들고 나왔다. 54년 1월 제네바 회담에서 남일은 남·북한 군대를 1년 내에 10만 명 이하로 감축하자고 주장했다.

55년의 8·15에는 김일성이 무력불사용과 군비축소를 위한 회담을 제의했다.

그후 10년간의 평양 단골메뉴는 이 「10만 감군론」과 「무력불사용 협정」이었다.

65년에 와서는 남북한이 외국과 체결한 군사조약을 모두 폐기하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 시기에는 국제공산주의 연대운동의 일환으로 주월국군의 철수도 주장했다.

73년에는 남북조절위를 통해 군비경쟁의 중지, 10만 감군, 미군철수, 평화협정 체결 등 포괄적인 군사제안을 내놓았다.

이것은 우리의 폭력약화와 함께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위한 전술적 측면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군사제의를 그들의 의도를 감추고 우리 전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시종 됐다. 더구나 그런 제의는 모두 자기네가 군사력을 증가시키고 있을 때 이루어졌다. 이번 오진우의 서한



도 그런 차원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측이 군사회담에 앞서 중단된 남북대화를 속개하여 진전시키고 중요문제는 우리가 제의해 놓은 최고책임자 회담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

더구나 북한이 진심으로 민족문제의 해결을 원한다면 국내문제를 우리끼리 해결하겠다는 민족 주체적 자세를 한시바빠 정립하여 조리에도 닿지 않는 회담의 망상을 청산해야 한다.

군사문제는 정치협상의 핵심문제인 만큼 다른 하위의 기능분야의 진전으로 협상분위기를 성숙시켜 가면서 보다 고위채널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국론분열 노린 기만 제의

경향신문(1986. 6. 19)

북한 인민무력부장 오진우가 이기백 국방부장관과 존리브시 주한 유엔군사령관에게 「군사회담」을 열자고 제의해온 것은 대화를 앞세워 그 어떤 흥계를 획책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미 우리는 남·북 관계에 있어 평양정권의 기만성을 철저히 체험하고 목격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지난해 너무도 벽찬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한편으로 자제와 냉정을 다짐하면서도 여러 갈래로 전개되는 남북대화를 지켜보며 「혹시나」하는 기대를 가졌던게 사실이다. 그때 우리의 흥분은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서울-평양 교차방문으로 절정에 달했었다.

물론 그 동안 대화에 임한 북한측의 속셈이나 상투적인 술책을 우리가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바는 아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북한이 막상 대화중단 성명을 발표, 그들의 본심을 드러냈을 때 그 충격이나 실망은 대단했다. 이후 국제적 반응도 부정적으로 흘렀다.

이런 상황 가운데 북한이 들연 「군사회담」을 제의해 왔다는 것은 그 의도가 어디에 있음을 짐작케 한다.

그들이 제시한 군사회담의 내용은 「군사훈련 중지」와 「군비축소」 「정진협정 준수」 등으로서 그것들이 단순한 군사 실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것은 엉뚱하게 다른 목적을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쉽사리 간파할 수 있다.

그 속셈은 우선 진행중인 여러 갈래의 회담을 일거에 중지시켜버린 책임에서 벗어나 보자는 뜻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미 금년 초에 열기로 각기 날짜까지 받아놓았던 세 가지의 회담을 모두 중단시켜 버림으로써 내외적인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음을 모를 리가 없다.

따라서 북한은 남북대화 중단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새로운 카드를 준비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이같은 증거는 갑자기 격렬해진 선전공세에서도 엿볼 수 있다.

북한은 지난 17일 오진우의 편지를 보낸 2시간 뒤부터 전 마스크를 동원해 선전공세를 전개했다. 또 동시에 외국기자회견까지 마련했던 점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그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가히 짐작할 만하다.

특히 그들은 오는 8~9월에 열리는 「집바브웨 비동맹 정상회의」와 평양에서 열릴 소위 「한반도 평화비핵지대화 국제회의」를 앞두고 국제 여론의 분위기 조성이 절실한 입장이다. 1차적으로 주한 미군의 철수를 위한 선전책략일 가능성이 많다.

또한 시국에 편승한 대남 도발책략도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결정적인 시기」만을 노리고 있는 것이 그들의 입장일진대 요즘 우리측의 불안정한 정국을 그대로 놓쳐 버리려하지 않을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반미·반핵 주장을 부추겨 한·미간의 협력체제를 교란시키고 결국 사회혼

란을 조장하려는 기도로써 군사회담 제의는 참으로 그들다운 발상이라 할 수 있다.

더욱 불길하게 느껴지는 징후는 최근 그들이 이례적으로 소련에 밀착해서 대폭적인 군사력확장을 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MIG23기 등 신예무기 도입과 함께 그들은 대폭적인 군사개편을 단행하고 있는 마당에 갑작스런 군사회담 제의는 한층 엄청난 흉계가 숨어있음을 예감케 한다. 6·25 동란때나 남침 땅굴 굴착 때, 그리고 아웅산 만행을 저지르기 직전 그들이 취했던 음흉한 언동은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경계해야 할 일이다.

한편 그들의 제의를 다른 각도에서 분석해보면 그들이 주장해온 3자 회담의 변형이라는 해석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소위 3자 회담을 통해 미국과는 「평화협정」을, 한국과는 「불가침선언」을 체결함으로써 중국적으로는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자는 계획을 드러낸 바 있다. 이번 군사회담 제의도 따지고 보면 그런 저의 밖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

김일성이 아직도 「인민군 최고사령관」 직을 거머쥐고 『내 생전에 다시한번 제2의 조국해방전쟁…운운』 하는 소리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있는 여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안보에 관한한 털끝만큼의 빈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번 오진우의 군사회담 제의에 대해서도 한층 냉철한 분석과 현명한 대응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일고의 가치없는 오진우 제의

서울신문 (1986.6.19)

남북대화의 현황으로 보나 대화에 임하는 북측의 자세로 보나 남북한 군사문제를 협의하자는 17일의 오진우 제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북측이 협의하자고 한 의제들 중 특히 군비축소 같은 문제는 군사실무적 차원에서 논의될 수 없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문제이며, 지금까지의 대화 과정에서 북측은 군축보다 훨씬 합의가 용이한 문제에 있어서조차 합의를 이루려는 의욕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대화의 창구만 여럿 터놓고 실질적인 교섭에는 성의가 없었던 그들이 이제 유엔군 사령관을 포함한 이른바 군사회담을 열자고 제의한 의도는 무엇인가.

북측이 이번 제의에서 겨냥한 가장 큰 목적은 주한미군의 조속한 철수를 위한 국제적인 압력을 한층 증대시키려는 데 있다. 그들은 군사연습 중지, 군비축소 및 정전협정 준수 등의 문제를 제기하여 미군의 존재를 부각시킴으로써 한반도 긴장의 책임이 마치 주한미군에 있는 것처럼 국제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북측의 그와 같은 의도는 그들이 1984년 이래 줄기차게 추구해온 한국, 북한, 미국 3자회담 제의와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그들은 3자회담을 통해 미국이 한반도 통일의 장애요인이라는 국제적 여론을 유도하며 끝내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관철하려는 것이다. 미군이 물러간 후 한국의 안보 체제를 약화시키고 한국정부의 국제적 지위를 격하시킴으로써 그들의 군사적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려는데 그들 속셈이 있음은 뻔한 노릇이다.

주한미군 때문에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처럼 선전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로 그들 내부사정을 들 수 있다. 최근 북한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김일성으로부터 사실상 권력을 승계한 김정일체제의 안정성을 굳히는 일이다. 요즘 북한주민들의 사기는 전반적으로 침체해 있으며, 이러한 사기저하는 경제 사정의 악화마저 곁들여 마침내는 왕조적 세습체제에 대한 불만의 확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김정일로서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구실로 그들 내부의 결속을 꾀해야 할 필요에 몰려 있는지도 모른다. 북한이 공산화된 이래 그곳 주민들에게 한결같이 주입된 사상은 바로 「미제국주의의 위협」에 대항하는 투쟁이었다.

북측은 이번 군사회담을 제의하면서 최근 남한에서 일고있는 극소수 분자들의 반미운동에 고무되었을지도 모른다. 한미의 이간과 우리 사회의 내부교란을 끊임없이 획책해온 그들이 이런 사태를 최대한으로 이용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개방사회, 자유사회에서의 정치적 전환기에 파생하는 이 부분적 현상을 보고 우리의 민주역량을 그릇 인식한다면 이는 중대한 오판이 될 것이다.

우리는 남북간의 긴장이 완화되어 궁극적으로는 쌍방의 군사적 위협이 완전히 해소되며 그것이 평화통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 문제해결이 용이한 분야부터 해결해 나가면서 서로 신뢰를 쌓자고 했던 것이다. 그러한 목적으로 적십자·경제·국회·스포츠 등 분야에서의 회담이 마련돼 있고, 그러한 교섭을 위해 보다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자고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도 제의해 놓고 있다.

우리는 불순한 속셈이 담긴 이른바 군사회담은 그것이 아무런 성과를 가져올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반대한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루어야 할 평화통일을 위해 필요한 남북회담에는 인내를 가지고 임할 것이다.

## 해외 반응

아사히신문(1986.6.18 일본)

- 북한측이 한국 국방부에 직접 편지를 전달하는 것은 한국군을 교섭의 상대로서 인정한 것이며, 또한 군사면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수세에 몰린 올림픽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역공으로 볼 수 있다.

상계이신문(1986.6.18 일본)

- 금번 제의는 회담구성이 3자 회담이라는 점에서 「군사관 3자회담」 또는 「3자 회담의 축소판」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동경신문(1986.6.18 일본)

- 북한측의 이번 제의는 소련의 극동전략의 일환이며 김정일 후계 체계를 굳히고 올림픽으로 한국에 유리해진 주변 정세를 깨려는 김일성의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요미우리신문(1986.6.18 일본)

- 금번 제의는 수세에 몰린 김일성의 정치 계산에서 나온 것이며, 한국의 수락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1986.6.18 프랑스)

- 88올림픽 개최로 실추된 북한의 위신을 회복하고 남북대화 중단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상투적 선전술책이다.
- 또한 1986.8.26-9.7 「짐바브웨」에서 열릴 비동맹 정상회담에서 북한측의 주한 미군 철수 요구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다.

Washington Times(1986.6.18 미국)

- 북한측의 군사회담 제의가 일단 한반도 및 주변정세의 긴장 완화를 위한 「전례없는 조치」로 볼 수 있다.
- 그러나 북한측의 평화제스처 뒤에는 반드시 무력도발을 해 온 사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로이타통신(1986.6.19 영국)

- 긴장완화를 다루기 위해 모든 필요한 요원들을 갖추어 놓은 적절한 기구가 이미 30여년 동안 존속해 온 이 마당에 새로운 토론의 장을 제의한다는 것은 건설적인 것으로 믿지 않는다.

De Standaard(1986.6.19 벨기에)

○ 북한측이 제안한 군비축소, 군사훈련 중지 등 일련의 제의는 단순한 「군사 실무 차원」이 아닌 「정치외교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 제3부 IOC 주재하의 남북체육회담

### 1. 제3차 회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주재하의 제3차 남북체육회담은 1986.6.10-11 양일간에 걸쳐 1.2차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로잔느」의 IOC본부에서 열려, 비공개리에 진행되었다.

제2차회담 이후 만 5개월만에 열린 제3차회담에서 IOC측은, 1.2차회담 및 남북한과의 개별회의 결과를 토대로 IOC측 중재안을 마련·제시하고 그에 대한 수락여부를 6월말까지 회신해 줄 것을 남북 양측에 요청함으로써 회담을 조속히 타결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동 회담에서 북한측은, 종래 그들이 주장해 오던 「공동주최」 및 「단일팀 구성」 문제를 거론치 않음으로써 일견 종래의 입장에서 다소 후퇴를 보이는 듯 하였으나, 올림픽경기의 남북분산 개최문제, 대회명칭, 조직위원회 및 문화행사 등에 대한 종래의 무리한 주장을 여전히 되풀이하였다.

제3차회담도 제2차회담때와 같이 IOC와 남북한 3자합동회의 2회, IOC측과 대한올림픽위원회(KOC)간의 개별회의 2회, 그리고 IOC측과 북한올림픽위원회간 개별회의 3회 등 연속회담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가. 제1일 회의

1986년 6월 10일에 열린 제1일 회의는 오전에 IOC측과 남북한 올림픽위원회간의 합동회의 (10:00-10:20)와 IOC·북한간의 1차 개별회의를 가진데 이어, 오후에는 IOC측과 KOC, IOC측과 북한간의 개별회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오전에 진행된 합동회의에서는 「사마란치」 IOC위원장의 인사발언에 이어 남북한수석대표의 기조발언이 있었다.

「사마란치」 IOC위원장은, 그의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제3차 회담에서는 IOC와 남북한 3자가 최선을 다해 긍정적인 합의를 이룩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제1일 회의 진행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우리측 김종하 수석대표는 기조발언을 통해,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역사상 그 어느 대회보다도 훌륭히 치루며 서울시에 부여된 올림픽 주최의 영광을 우리 겨레 전체가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올림픽현장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북한올림픽위원회측의 긍정적인 참여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이미 밝힌 사실을 상기시키고 이와같은 입장에서 KOC측은 그동안 「사마란치」 위원장과 IOC측의 성의있는 중재노력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IOC측이 마련한 회담의제에 따라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북한선수들이 보다 뜻있게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김종하 수석대표는 『북한측이 올림픽현장을 존중하고 1981년 「바덴바덴」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아무런 조건없이 참가』할 것을 촉구하면서, 제2차 회담때 IOC측이 제시한 4개항 의제 즉,

○ 개회식에 남북한 선수단이 공동으로 입장하는 문제,

○ 일부 예선경기의 북한지역 배정문제,

○ 단체 도로사이클경기를 남북한으로 연결해서 실시하는 문제,

○ 북한이 서울올림픽 문화행사에 참가하는 문제

를 토의·해결하는데 성의있는 노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김종하수석대표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통해서 남북한의 상호개방이 이루어지고 신뢰와 평화적 관계를 마련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고, 이번 회담의 성공여부는 우리 모두가 『올림픽현장과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의 결정을 존중』하는데 있다는 점을 지적, IOC와 북한측의 협조를 촉구하였다.

한편 북한측은 이날 회의의 첫발언을 통해 종래 그들이 주장해 온 「공동주최」 및 「단일팀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일부 경기종목의 북한지역 개최권 확보에만 주력하였다.

북한측 김유순 단장은, 지난 3월 IOC·북한간의 개별접촉에서 남과 북이 경기를 나누어 개최하는 문제와 대회명칭, 조직위원회, 문화행사, 기타 올림픽행사 등에 관해 그들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지적하고, 『제24회 올림픽대회를 조직함에 있어 파생되는 기본문제』, 즉 북한지역에 배정할 경기종목문제가 해결되면 기타 부수적인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북한측의 이러한 태도는 종래 공동주최를 주장해 온 그들의 기본입장에 대한 변화라기 보다 일

부 경기종목의 북한지역 개최권 확보와 이와 관련된 여타문제를 분리, 단계적으로 이를 관철시켜 나가겠다는 전술상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오전의 합동회의와 IOC·북한측간의 개별회의에 이어, 오후에는 IOC와 KOC 및 북한측간의 개별회의가 각각 진행되었다. IOC측과 KOC간의 개별회담에서 쌍방은 북한지역에 몇몇 경기 종목을 배정하는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의를 진행하였다. 북한지역에 경기종목을 배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IOC측은 KOC측에 대하여 결승전을 포함한 몇 개 경기종목을 북한지역에 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고, 우리측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대해 KOC측은, 북한측이 올림픽현장과 「바덴바덴」 IOC총회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무조건 참가할 것을 확실히 밝힌다면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결승전을 포함하는 2개종목의 경기를 북한지역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배정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KOC측은 개회식 입장문제, 남북한연결경기실시문제, 북한의 문화행사 참가문제, 올림픽대회 주최권문제 및 기구구성문제 등 주요현안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설명했다.

김종하수석대표가 밝힌 주요문제에 대한 KOC측 입장은 다음과 같다.

#### (1) 올림픽대회 개회식 입장문제

○ 올림픽대회 개회식때 우측에는 우리측 선수가 3열로 우리의 유니폼을 입고 우리의 국기를 들고 입장하며, 좌측에는 북한측 선수가 3열로 그들의 깃발아래 그들 유니폼을 입고 행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IOC측도 이에 찬동한 바 있음.

#### (2) 결승전포함 특정경기 북한배정문제

○ 1.2차 회담시에 제시한 바 있는 남자 배구, 남자 핸드볼, 일부 축구 예선경기의 북한지역 배정은 아직 북한측으로부터 회답을 받지 못했으므로 북측이 이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겠음.

○ 북측이 올림픽현장과 IOC총회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무조건 참가하겠다는 태도를 확실히 밝힌다면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SLOOC)주관으로 결승전을 포함하는 2개종목의 경기를 북측에 배정할 용의가 있음.

○ 북한측에 배정할 수 있는 경기종목은 결승전을 포함하는 탁구와 펜싱임.

○ 우리측의 제안에 북측이 호응한다면 경기장시설 확인문제, 인원왕래문제 및 왕래인원의 신변보장문제, 경기운영에 필요한 물품수송 및 통신문제 등을 협의·해결해야 할 것임.

#### (3) 남북한지역 연결 경기실시문제

○ 남북한지역 연결경기로서 사이클 단체도로경기를 북한지역에서 출발하여 서울에 도착토록하는 방안을 1·2차회담에서 제의한 바 있음.

#### (4) 문화행사 참가문제



○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기간중에 실시되는 각종 문화행사에 북측의 참가를 환영함.

(5) 제24회 서울올림픽 호칭문제

○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의 호칭문제는 논의할 가치조차 없음.

(6) 경기종목 북한배정시 기구구성문제

○ 특정경기의 북한 배정과 관련하여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는 별도로 다른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올림픽현장에 위배되며, 고려될 수 없음.

## 나. 제2일 회의

6월 11일 오전에 속개된 제2일 회의는 IOC와 남·북한과의 개별회의에 이어 25분간의 3자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제3차회담을 모두 종결했다.

KOC측과의 개별회의에서 「사마란치」 IOC위원장은 제1일 회의에서 IOC측이 제의한 바 있는 결승전을 포함한 탁구, 양궁 등 2개 종목의 북한지역 개최문제, 도로 사이클경기의 남북한 지역 연결실시문제, 축구 예선경기 1개조의 북한지역 추가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IOC측 중재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6월말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아울러 IOC측은, 6월말까지 남북한 양측이 IOC측 중재안에 동의하여 북한 배정 경기종목에 대해 원칙적이고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1-2개월후 25,000여 올림픽가족(기자 9,000명, 선수 및 임원 12,000명, 국제경기연맹 및 IOC관련위원 4,000명)을 위해 북한이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와 물자수급문제 등 제반 관련사항이 토의될 것임을 알려왔다.

이에 대해 KOC측은 북한측이 먼저 우리의 제24회 올림픽대회주최권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IOC측이 새로이 제기한 축구 예선경기 일부의 북한지역 추가배정문제도 우리측이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개최된 3자합동회의에서 「사마란치」 IOC위원장은, KOC측과의 개별회의에서 제안한 바 있는 이른바 IOC측 중재안을 서신을 통해 남북양측에 공식제의하겠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6월말까지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사마란치」 위원장은 남북한이 동 중재안에 동의할 경우 실무접촉을 통해 제반관련 사항을 협의한 후 제4차 회담을 소집하겠다고 밝히고, 10월로 예정된 IOC총회 이전에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만 IOC총회의 승인을 얻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IOC측 제안에 남북한이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사마란치」 IOC위원장은 이틀간의 회의가 끝난 6월 11일 하오 남북한 취재진을 포함 50명의 각국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제3차 회담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IOC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및 질의응답요지는 다음과 같다.

### [사마란치 IOC위원장 기자회견문]

IOC주재하에 김종하·김유순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남·북한 NOC대표단이 1986.6.10-11간 IOC본부에서 제3차 회담을 가졌다.

1988년 제24회 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진심으로 희망하는 쌍방 NOC측은 협조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폭넓은 토의를 갖고 상호이견을 상당히 좁혔다.

IOC측은 올림픽정신 및 1981년 「바덴바덴」 IOC총회 결정사항을 존중한다는 기본정신으로 제24회 올림픽대회에서 예정된 몇몇 경기종목을 북한측에 배정토록 제의하였는 바, 특히 결승전 포함 2개 종목을 북한지역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제의하였다. 또한 IOC측은 추가종목의 부분적인 북한지역배정과 올림픽관련 문화행사의 북한측 참여를 제의하였다.

남북한 NOC측은 이러한 IOC측 제안을 검토, 1986.6.30 한 원칙적인 수락여부를 IOC측에 통보할 것이며, 양측은 남북한지역의 경기개최 장소에 대한 모든 올림픽 가족의 자유왕래보장을 이미 IOC측에 약속하였다.

양측 통보접수후 IOC측은 대회개최에 필요한 조직 및 운영상의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4차 회담을 개최할 것이다.

[질의응답요지]

(1) 경기종목 배정문제

- IOC측은 탁구·양궁 2개종목의 북한지역 배정이외에 1개 축구 예선 경기의 북한배정, 사이클 단체도로경기 남북연결실시 및 문화행사 등 부분적 행사개최를 제의했음.
- 이번 IOC측의 제안은 최종적인 것으로 이를 수락치 않으면 마지막이 될 것이며, IOC제안이 수락된 이후 북한에서의 경기조직, 자유왕래, TV중계, 선수촌 등의 문제를 토의할 것임.

(2) 개·폐회식 개최문제

- 개·폐회식은 서울에서만 열림. 24회 대회는 서울에 주어졌고 일부 경기만 북한에서 개최된다는 뜻임.

(3) 일부 종목 북한배정에 따른 문제

- 일부 경기종목을 북측에 배정할 경우에는 올림픽현장의 개정은 필요치 않으며 IOC총회의 승인만 있으면 됨.
- 양측 NOC가 자유왕래를 수락했다는 것은 북한측이 올림픽 가족 25,000명에게 그들의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뜻임.
- 올림픽가족이란 올림픽대회 기간 중 등록카드를 받는 사람만을 의미하며 기자 9,000명, 선수임원 12,000명, 국제경기연맹·IOC관리위원 4,000명 등임.
- 남북한 문호개방기간은 대회 2주전부터 대회 종료시까지임.
- TV중계 등 문제는 IOC 제안이 수락된 연후에 토의될 것임.

## 2. 그 이후의 경과

1986년 6월 12일 「사마란치」 IOC위원장은 제3차 회담에서 제시한바 있는 IOC측 중재안을 담은 서한을 남북한 양측에 공식전달하였다.

김종하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 앞으로 보내온 서한에서 IOC 측은

- 제24회 올림픽대회 경기종목 중 결승전을 포함한 탁구와 양궁을 북한지역에서 개최할 것과
- 사이클 도로경기 및 축구 1개조 경기 등 약간의 추가종목을 북한 지역에 배정하며
- 올림픽대회와 관련된 문화행사를 남북한 양지역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해 왔다.

또한 IOC측은 남북한이 동 제안을 수락하는 즉시 조직 및 운영상의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OC 주재하에 남북한 대표들이 참가하는 공식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히고, 1986년 6월 30일까지 수락여부를 통보해 줄 것을 다시금 요청하여 왔다.

이같은 IOC측 제의에 대해 KOC측은 1986년 6월 30일 북한 올림픽위원회측이 올림픽헌장과 1981년 「바덴바덴」 IOC총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아무런 조건없이 참가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에서 IOC측 중재안을 수락하였다.

한편 같은 날 북한측도 IOC측의 제의에 동의하여 탁구와 양궁을 북한지역에서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동 서한에서 북한측은 올림픽 경기종목이 24개임에 비추어 탁구와 양궁 등 2종목만을 북한지역에 배정하는 것은 너무 적은 숫자라고 지적, 그들이 요청한 종목이 할애되도록 IOC측이 계속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제4차 회담에서는 대회명칭, 기구, 운영 등의 문제와 경기종목 수에 대한 협의가 계속되기를 희망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한편 IOC측은 7월 3일 남북한 양측이 모두 IOC측 중재안에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미셸·베르디에」 IOC공보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측의 답신에는 몇가지 「단서」가 있다고 지적하고 IOC측은 「그 단서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요구하는 공식서한을 북한측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 3. 국내의 주요반응

IOC주제하의 제3차 남북체육회담에서 「사마란치」위원장이 IOC측 중재안을 제시하고 남북 양측에 대해 이의 수락을 촉구한데 대해 국내 주요언론들은 이를 위해 IOC측과 한국측이 그간 경주해온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88 서울올림픽에의 북한 참여문제가 진전을 이룩하게 되기를 기대하였다.

특히 북한측의 계속되는 서울올림픽 방해책동 속에서도 남북체육회담이 이만큼 진전을 가져오게 된 것은 북한측의 올림픽 참여문제를 『단순한 체육행사나 이해의 차원』을 넘어 이를 계기로 남북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한국측의 『끈질긴 인내와 양보』의 결과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북한측에 대해서는, 『더이상 무리를 거듭할 것이 아니라 호혜와 화해의 정신으로 돌아와』 금번 IOC측 제안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주요 해외언론들도 88 서울올림픽대회의 일부 경기종목이 북한지역에서 개최하게 된다면, 이는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며, 또한 동 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궁극적으로 『남북한간의 평화통일에 더욱 유리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IOC측이 제안한 중재안에 남북한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88올림픽의 명칭문제를 비롯, 취재기자 입국허용문제, 경기장 및 호텔에 대한 시설조사 등 실무적 문제가 산적해 있음을 들어 『모든 것이 순조롭고 평화롭게만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 국내 반응

##### 남북체육회담의 진전

-우리측 인내와 양보에 북측은 무리 거두기를-

동아일보(1986.6.12)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던 제3차 남북체육회담이 이틀간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끝났다. 이번 회담은 마침 전국민의 시선이 「멕시코」 월드컵 축구에 쏠려있는 시기에 열려 커다란 주의를 끌지 못했지만 전국민적 중요 관심사임에 틀림없다.

「로잔」 남북체육회담은 북한도 88서울올림픽에 참가시켜 올림픽이 더이상 정치적 보이콧으로 분열되지 않고 원만히 치르기위해 열린 것이다. 이번 회담이 남북한간에 시원스런 타결을 본 것은 아니지만 「사마란치」 IOC위원장의 일괄제안과 이에 대한 남북한 쌍방의 반응, 회담분위기 그리고 「양쪽의 의견차이가 상당히 좁혀졌다」고 한 신문발표문을 보아도 얼마간 진전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당초 3차 회담을 최종회담으로 하고 여기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더이상 회담을 하지 않기로 했으나 6월말 이전까지 IOC제안에 대한 쌍방의 서면절차와 제4차회담을 예정한 것부터 발전을 뜻하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측의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마란치」 위원장과 한국측이 88서울올림픽만은 과거의 올림픽처럼 정치적으로 오염되는 일없이 원만히 치러야 한다는 신념아래 거듭 인내하고 대폭 양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마란치」 IOC위원장의 제안내용은 북한 NOC주관아래 결승전까지 포함한 탁구와 양궁의 전체경기, 4개조 축구예선중 한국이 포함되지 않은 1개조의 예선경기를 북한에서 개최할 것과 사이클 단체도로경기의 북한출발 서울도착 등이다. 「사마란치」 위원장은 이 제안이 「마지막제안」이며 만약 양측이 이를 수락치 않을 경우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이

번 제안이 「최후통첩」임을 강조했다.

결승전까지 포함한 탁구와 양궁의 전체게임을 북한지역에서 북한 NOC가 치르게 한다는 것은 매우 대담한 제안이며 한국측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서울올림픽 개최권은 어디까지나 IOC가 한도시인 서울에 준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경기를 서울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주관해서 개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포함한 일부종목의 분산개최문제가 10월 IOC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겠지만 만일 한국측이 이 문제를 받아들인다면 대폭 양보가 될 것이다.

북한측의 서울올림픽 방해 전술이나 공동 개최요구등은 모두 올림픽 현장과 81년 「바덴바덴」 원칙에 맞지 않는 터무니 없는 것이었다. 이만큼이라도 남북체육회담에서 진전을 가져온데는 한국측의 끈질긴 인내와 양보가 커다란 기여를 했다. 북한측은 더이상 무리를 거듭할 것이 아니라 호혜와 화해의 정신으로 돌아가 이번 IOC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88서울올림픽에 북한측도 참가하고 모든 IOC회원국이 빠짐없이 참가할 때 해방후 남북한 관계에도 일대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북한측은 남북체육회담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은 비단 우리 민족 뿐 아니라 전세계인의 염원임을 인식해 주기 바란다.

#### 사마란치의 중재안

중앙일보(1986.6.12)

북한의 서울올림픽 참여를 협의하기 위해 10일 로잔에서 재개된 이틀간의 남북체육회담이 아무런 실질적 합의없이 끝났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회담에 나타난 몇가지 변화를 긍정적으로 주목코자 한다.

우선 남북 당사자의 접촉을 알선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등 주선(good officers)에 그쳤던 IOC가 논의의 내용에까지 개입하여 타협안을 내는 등 중개(mediation)의 자세로 적극화했다는 점이 다. 「사마란치」 위원장이 축구의 4개조 예선중 1개와 탁구등의 전과정 평양개최 및 사이클경기의 북한출발 서울 끝인을 제의한 것이 그것이다.

다음은 평양측의 자세변화이다. 북한은 23개 종목중 11개 종목의 평양 개최 주장에서 일보후퇴, 8개 종목으로 축소시켰다.

또 하나의 긍정적 변화는 남북한이 올림픽기간동안 기자단을 포함한 올림픽 임직원 2만 5천명의 서울~평양 자유왕래에 합의했다는 「사마란치」의 발표다.

이것은 북한 참여문제의 해결을 낙관케하는 징후일 뿐 아니라 그것이 실현되면 남북장벽이 국제적으로 그만큼 낮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측의 제의는 한층 폭 넓고 유연하다. 대한 체육회는 일부 경기종목 분할개최외에도 올림픽기간동안 남한에서 개최되는 문화행사와 올림픽 개·폐회식에 남북한이 함께 참여할 것도 제의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측에 있다. 그들은 서울올림픽을 남북한 공동개최로 하여 그 명칭을 「조선올림픽(평양·서울)대회」로 하고 TV 중계료를 반반씩 분배하며 개·폐회식도 서울과 평양에서 갖자는 역시 주장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많은 모순과 무리를 안고 있다.

IOC규정상 올림픽은 단일도시 단위로 개최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국가단위 또는 복수도시 단위로 열거나 명칭을 바꿀수는 없다.

따라서 개·폐회식을 나눠서 하거나 여러차례 반복해서 할수도 없는 문제다.

TV중계료 문제는 북한이 전종목의 절반을 요구하던때의 주장이므로 바뀔 가능성은 있다.

아 물론 이 문제는 할당받는 경기종목이나 시간의 분량 등에 따른 비례원칙위에서 협의돼야 할 것이다.

북한의 참여문제가 「사마란치」 중재안을 토대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이 안이 반드시 타당한 것은 아닐지라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이번 회담의 개선된 분위기를 바탕으로 88올림픽에 북한이 무슨 형태로든지 반드시 참여하게 되기를 바라는것은 온 겨레의 소망임을 확신한다.

북한의 올림픽 참여는 단순한 체육행사나 이해의 차원을 넘어 남북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해 나간다는 보다 높은 민족문제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 체육회담과 IOC제의 -북측의 합리적 참여를 촉구한다-

조선일보(1986.6.13)

로잔 남북체육회담 귀추가 막바지에 이른 느낌이다. 이번으로 3차인 로잔회담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제의와 주재하에 작년 10월 제1차 회담을 가졌고, 가부간 3차 회담으로 결말을 내게 돼 있었다.

3차 회담을 마친 사마란치 IOC위원장은 우리측 대표단의 표현을 빌면, 「새로운 진전의 계기를 찾게 된」 제의를 남·북 양측에 제시했다. 4개 경기종목 개최장소를 북한에 제공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탁구와 양궁 2개 종목의 예선 및 결선경기를 북한올림픽위원회 주관아래 북한에서 개최하고, 4개조의 축구예선경기중 한국이 포함되지 않은 1개조의 예선경기를 역시 평양에서 개최하며, 1백 Km 도로사이클 경기를 북한에서 출발, 서울에 도착케 한다는 것이 사마란치위원장이 제시한 IOC측 방안이다.

사마란치위원장은 이에 대한 남북한 양측의 수락여부를 6월 30일까지 서면통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최종 확정은 10월 IOC 정기총회에서 보게될 것이나, 필요한 경우 총회에 앞서 7월중에 4번째로 또 한차례 남북체육회담이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같은 제의에 대해 우리측은 일단 IOC측의 성의있는 노력으로 평가는 했으나, 수락여부는 귀국후 최종 결정할 문제라는 태도를 표명했다.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는 당연히 예의검토할 사항이지만, 그동안 우리측은 북측이 IOC헌장과 81년 바덴바덴 IOC총회에서의 서울올림픽 결정사항을 존중해야 한다는 전제아래, 북한의 서울올림픽 참가 실현을 위해 아량있는 태도로 임해왔음을 국제사회는 알고 있다.

문제는 북한측에 있다. 이른바 공동주최를 고집해온 북측은 IOC헌장과 바덴바덴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명칭을 「조선 평양·서울올림픽대회」로 하여, 모든 경기종목을 남과 북이 50대 50으로 반분해서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뿐만 아니라 서울올림픽을 「수수방관하지 않겠다」고 위협을 일삼기까지 했다.

이번 3차회담에서는 「공동 주최론」 대신 「남북한이 나누어 진행」하자고 용어를 바꾸는 변화를 보였다고 하지만 그 진의는 아직 불투명하다. 또 반분하자던 종전의 그들 주장으로 보아 IOC측이 내놓은 4개 종목 개최 제의에 어느정도 만족을 표시할 것인지도 미지수이다.

IOC측 제의내용에도 의문점이 있다. 탁구 및 양궁경기를 「북한올림픽위원회 주관」아래 개최한다는 대목이다. 모든 경기종목을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이름과 관장으로 개최할 원칙과 이는 어떤 관계가 되느냐는 것이다. 우리측이 지혜롭게 대응해야 할 미묘한 사항이다.

그렇다하더라도 모처럼 한반도에서 펼쳐지는 인류의 평화제전에 북한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안으로 밖으로 민족 화해의 기운을 과시하게 되기를 우리 국민은 절실히 바라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고립과 수치를 자초하는 것보다는, 이와같은 민족적 열망에 호응할 수 있는 합리적 태도와 이성의 길을 택할 것을 북측에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해외 반응

아사히 신문(1986.6.12 일본)

- IOC 측의 제안에 북한이 어떻게 응할 것인가에 따라 88올림픽의 남북분산 개최 실현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 최후 통고였던 IOC측 제안에 대해 북한은 중대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마이니찌 신문(1986.6.14. 일본)

- 북한이 2만 5천명의 올림픽 관계자의 자유입국을 약속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은 올림픽을 계기로 개방국가가 될 것이다.
- 남북체육회담을 통한 남북의 해빙무드가 기타의 대화에도 좋은 영향이 미치게 되기를 기대한다.

Svensk Dagbladet(1986.6.10 스웨덴)

- IOC측의 중재안에 남북한이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순조롭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경기장, 호텔 등 시설에 대한 조사도 해야하며 북한에서 언론인이 취재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올림픽 북한개최는 대단히 회의적이다.

South China Morning Post(1986.6.12. 홍콩)

- 88올림픽의 남북분산 개최는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 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궁극적으로 남북한간의 평화통일에 더욱 유리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Hindustan Times(1986.6.23. 인도)

- 북한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서울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저지하는데 있으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은 한국에 대한 악의에 찬 선전에 광분하고 있다.

West Australian(1986.6.10. 호주)



- 서방투자유치를 원하는 평양은 이에 상응하는 정치적 대가를 치루어야할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88올림픽은 북한의 유인책이 될 것이다.

Corriera Della Sera(1986.6.20. 이태리)

- 서울이 올림픽 개최로 정치 및 선전상의 성공을 거둬에 따라 오늘날까지 불확실한 균형을 유지해 온 한국 정세를 변화시킬 것이다.

# 남북대화 제42호

(1986. 8. ~ 1987. 4)

# < 목 차 >

제1부 통일·대화에의 일관된 의지 .....	3
1. 전두환 대통령 1987년도 국정연설 .....	3
제2부 남북 총리회담 제의 .....	5
1. 제의의 배경 .....	5
2. 남북총리회담의 제의 .....	11
3. 남북총리회담제의와 우리의 입장 .....	14
4. 주요반응 .....	17
제3부 북한의 금강산댐건설 관련동향 .....	25
1. 관련동향 .....	25
2. 북한측 태도의 부당성 .....	30
3. 주요 반응 .....	33

## 제1부 통일·대화에의 일관된 의지

### 1. 전두환 대통령 1987년도 국정연설

-북한측에 남북대화 호응을 거듭 촉구-

1987년 1월 12일 오전 전두환대통령은 대국민 방송을 통해 행한 국정연설에서 새해 국정에 임하는 영도자로서의 구상을 소상하게 밝혔다.

이번 연설은 사실상 임기만료를 1년여 앞둔 전대통령의 마지막 국정연설이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감회속에 국가지도자로서 지난 6년 동안의 국정운영을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원대하고 확고한 통치철학을 다시금 국민 앞에 뚜렷하게 표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전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구체적인 시책을 새로이 제시하기 보다 차원높고 넓은 시각에서 국정전반에 대해 언급하면서, 역사적 전환기를 걸어가는 우리 세대의 시대적 사명을 강조하였다.

즉, 전대통령은 최고의 국가목표이자 민족의 이상인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발전』을 위해 지난 6년간 우리 정부가 기울여온 노력을 되돌아보고, 이를 위한 당면 국가적 과제로서 ●평화적 정부이양의 확고한 신념과 방법론 ●자율과 개방의 확대를 위한 지속적 노력 ●안정 속의 민주발전 지향의지 ●평화와 통일에 대한 집념 등을 분명하게 밝히고 이러한 4대 당면과제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러한 신념에 입각, 통일·대화문제에 대해, 전대통령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선진민주국가의 구현은 바로 민족의 통일을 통해서만 비로소 온전히 성취』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의 실현을 위해 남북 대화와 민족화합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재천명하였다.

또한 전대통령은, 제5공화국 정부의 노력에 의해 통일성업이 더이상 머나먼 꿈이 아니라 현실적인 국가목표로 되었다고 상기시키는 한편, 이제 올림픽을 계기로 한 선진도약의 궤도에서 통일을 향한 거래의 진진은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고 국민적 자신감을 북돋아 주었다.

이와함께 전대통령은 북한측에 대해 ●금강산담의 축조중지 및 남북수자원당국회담에의 호응 ●중단된 남북대화의 재개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과 관련하여 전대통령은 자신의 재임기간중에 동 회담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동 회담이 열리게 되면 최근 북한측이 제의한 정치·군사회담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에 관한 민족지도자의 일관된 집념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

전두환 대통령의 1987년도 국정연설중 통일 및 남북대화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세기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선진민주국가의 구현』은 바로 민족의 통일을 통해서만 비로소 온전히 성취된다고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단일민족에 있어 분단은 참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그것은 생존과 번영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전쟁위협을 근원이며 민족적 정력을 낭비하고 우리 한 민족의 응비를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분단의 제약을 극복하고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는 과업은 우리 민족역량의 시험대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40년간 계속된 분단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실상 통일이 가까운 장래에 실현되기 어렵고, 더욱이 우리 힘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아득한 목표로 인식해 온 느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국력신장이 가속화함에 따라 이 성업을 완수하기 위한 우리

의 노력은 줄기차게 추진되어 왔으며, 제5공화국은 그것을 더 이상 머나먼 꿈이 아니라 현실적인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주체적 노력에 박차를 가해 온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올림픽을 계기로 한 선진 도약의 궤도에서 통일을 향한 겨레의 전진은 새로운 출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민족적 염원은 폭력과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화합을 통하여 실현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버마 랑군사건의 분노와 슬픔 속에서도 한결 같이 평화와 대화의 길을 고수한 것은 대결과 분단이 아니라 화합과 통일의 문을 열어야겠다는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의 증대를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고 마침내 민족 재결합에 이르고자 하는 우리의 대화의지를 북한측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간에도 하천의 개발과 이용을 위해서는 당사국끼리 서로의 이익을 존중하여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국제법규와 국제관례를 무시하면서 오히려 무력적화의 망상 속에서 같은 겨레의 생활 터전을 물바다로 만들 금강산댐의 축조를 시작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 측의 자세는 쌍방간의 불신과 긴장을 조장하고, 겨레의 화합과 통일에 역행하는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북간의 모든 문제가 민족자결원칙에 입각하여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겨레의 요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북한은 우선 금강산댐의 축조를 중지하고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공유하천의 수자원 이용과 개발에 관한 남북대화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금강산 댐의 축조가 순수한 경제적 이유에서라면 북한이 그러한 대화를 기피하거나 우리측 전문가의 현장 답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담에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남북간에 신뢰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북간의 대화를 지속시키는 일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남북적십자회담과 경제회담 등 중단된 남북 대화가 하루 속히 재개되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본인의 재임 기간 중에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이 실현되어 평화와 화합과 통일의 새로운 활로가 열리기를 기대 하면서 북한 측이 이에 호응해 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이 열리게 되면, 이 자리에서는 본인이 이미 제시한 바 있는 통일 실현의 근본 문제를 비롯하여 현실적인 긴장완화 조치에 이르기까지 원칙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며, 그러한 관점에서 최근 북한 측이 제의한 정치·군사회담 문제를 포함하여 남북한간의 모든 문제에 관해서 허심탄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제2부 남북 총리회담 제의

### 1. 제의의 배경

적십자·경제회담등 진행 중이던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이와 다른 「3자 군사회담」을 제의하고 동 회담의 개최 및 진전을 기존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 온 북한 측은, 1986년 12월 30일 돌연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의 개최를 제의하였다.

최고 인민회의 제8기 제1차 회의에서의 김일성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간에 『정치적 대결상태를 완화하며 민족 내부의 진정한 신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한 북한측은, 1987년 1월 11일에는 동 제안을 담은 그들의 서한을 방송을 통해 공개 제의하였다.

즉, 노신영 국무총리와 이기백 국방부 장관 앞으로 보내온 북한 정무원 총리 이근모와 인민무력부장 오진우 공동 명의의 공개 서한에서 북한 측은 「정치·군사회담」의 개최를 정식으로 제의해왔다.

동 제안에서 북한측은 「정치·군사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나날이 격화되고 있는 정치적 대결상태와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평화와 평화통일의 돌파구를 열어 나갈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구국대책』이라고 주장하면서 회담의 대표단은 부총리급을 단장으로 하고 군총참모장급을 부단장으로 하는 7-9명 정도의 당국자들과 군사 실권자로 구성할 것을 제의하였다.

특히 「정치·군사회담」의 의제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측은, 당면한 정치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서는 상호비방·중상의 중지 및 남북간의 다방면적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는 문제들을 토의할 수 있을 것이며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당면한 조치로서는 무력축소, 군비 경쟁중지, 비무장 지대의 평화지대화 및 대규모 군사연습 중지 등을 토의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함께 중립국 감독위원회 성원국인 체코, 폴란드, 스웨덴, 스위스의 군사인원들로 중립국 감시군을 조직하는 문제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측은 「정치·군사회담」이 훌륭한 결실을 가져와야 중단시킨 남북대화들을 재개할 수 있으며, 이같은 「정치·군사회담」과 기존대화가 성과적으로 추진되어야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정치·군사회담」의 개최를 기존대화 재개를 비롯한 모든 남북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부당한 태도를 보였다.

동 제의와 관련, 북한측은 1987년 1월 9일 우리측에 보내온 전화통지문에서 우리측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 앞으로 보내는 북측 정무원 총리와 인민무력부장 명의의 서한을 1월 10일 우리측에 전달하겠다고 통보해온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측은 동 서한의 접수 일시를 가까운 시일 내에 알려주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11일 북한측은 우리측에 전달하려 했던 서한을 방송을 통해 서둘러 공개 제의 함으로써, 그간의 남북간의 관례를 무시하고 대화 상대방에 대한 초보적인 신의마저 저버리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북한측의 태도를 감안해 볼 때, 북한측은 금번 「정치·군사회담」 제의 역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대화를 통해 민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있다기 보다, 동 제의를 통해 기존대화 중단에 따른 책임을 모면하고 대내외적으로 그들의 평화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한편, 금강산담 건설 등과 관련, 우리 내부에서 점고되고 있는 반공의식과 대공경각심을 이완시켜 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금번 제의를 통해 북한측이 무력축소·군비경쟁중지를 협의하자고 한 것은 그들이 진정한

로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미군철수를 실현시키고 한국군의 무력증강을 억제하여 그들의 군사적 우위를 계속 확보하려는데 그 진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중립국 감시군의 조직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것은 그들이 남침할 의사가 없음을 내외에 과시하는 동시에 동 감시군 창설을 구실로 주한미군철수 주장의 명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북한측의 「정치·군사회담」 개최 제의에 대해 우리측은 1987년 1월 12일, 전두환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동 연설에서 전대통령은, 북한측에 대해 적십자·경제회담 등 그들이 중단시킨 기존대화의 재개와 함께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의 개최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고,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이 열리게 되면 북한측이 제의한 「정치·군사회담」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측은 적십자회담, 경제회담 및 국회회담 예비접촉 등 남북회담 우리측 수석대표들의 1월 14일자 합동성명을 통해서도 북한측의 「정치·군사회담」 개최 주장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을 거듭 확인하였다.

동 성명에서 우리측은 적십자·경제회담 등 기존대화를 중단시킨 북한측이 이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3자군사회담이나 「정치·군사회담」 등과 연관시켜 『그것이 열려, 진전되지 않고서는 기존대화를 진행할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남북대화를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보다 기존대화를 잘 진행시켜 남북한간에 인적·물적 교류를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신뢰의 바탕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측은 『북한측이 진정으로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화합과 통일을 원한다면 비현실적인 주장을 앞세워 기존대화를 거부하는 그릇된 태도에서 벗어나 중단된 대화를 다시 잇는데』 무조건 호응해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남북회담 우리측 수석대표들의 합동성명 전문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남북회담 대표단 수석대표 합동성명

우리는 작년초 북한측이 연례적인 군사훈련을 트집잡아 이미 쌍방간에 합의한 제11차 남북적십자 회담과 제6차 남북경제회담, 남북국회회담 제3차 예비접촉 등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후 1년이 다 되도록 아직 회담재개에 응해 나오지 않고 있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희망찬 1987년 새해를 맞아 온 겨레는 올해야 말로 반드시 남북대화가 재개되어 좋은 열매를 맺고 남북한간에 다각적 교류와 협력이 실시되어 민족적 신뢰와 화합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우리는 그 동안 중단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온갖 성의있고 인내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는 작년 1월 20일 남북간에 진행되어 오던 모든 회담을 예정대로 개최할 것을 촉구한데 이어 3월 26일과 7월 11일 두차례에 걸쳐 회담 날짜를 다시 잡아 북한측에 각각 제의하기도 하였다. 우리의 이같은 거듭된 대화 재개 촉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대화 중단의 책임 전가에 급급하는 한편 엉뚱한 전제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기존대화의 재개를 기피하는 온당치 못한 태도로 일관하여 왔다.

북한측은 기존 남북대화의 재개에는 불응하면서 소위 「3자군사회담」을 제의하고 이 회담의 개최와 진전을 중단된 남북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가 하면, 최근에는 또 다시 이른바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내놓고 그것이 결실을 가져와야 중단된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고 주

장하는 등 부당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북한측이 인도적인 적십자 회담과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회담 그리고 통일헌법 제정을 위한 국회회담 예비접촉 등을 외면하면서 그 성격이 전혀 다른 3자 군사회담이나, 정치·군사회담 등과 연동시켜 그것이 열려, 진전되지 않고서는 기존대화를 진행 할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남북대화를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짙게 자아내게 하고 있다.

더우기 북한측이 지난 10일 우리측에 전달하겠다고 한 대남 서한에 대해 우리측에서 그 접수 일시를 가까운 시일 내에 알려 주겠다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11일 방송을 통해 서둘러 서한내용을 공개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취한 것은 그들의 정치·군사회담 제의가 남북 현안 문제의 해결에 있다기 보다는 다른 어떤 정치 선전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이미 진행되어 오던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른 대화를 먼저 하자고 주장하는 북한측의 대화 논리는 그 누구의 지지도 받을 수 없고 그 누구에게 물어봐도 통할 리 없는 억지요 궤변에 불과하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기존 대화를 잘 진행시켜 남북한간에 인적·물적 교류를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신뢰의 바탕을 구축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 동안 남북적십자 회담에서는 의제 5개항 사업의 토의에 적지 않은 진전을 보았을 뿐 아니라 「이산 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상호교환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리고 남북 경제회담에서 쌍방은 상품교류와 경제협력에 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았을 뿐 아니라 쌍방 부총리 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협력 공동기구를 설치하는 데에도 원칙적인 합의를 본바 있다.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에서도 좋은 분위기 속에 국회회담 개최에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으며, 본회담 의제등 몇 가지를 제외한 그 밖의 문제들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한 바 있다.

우리는 남북쌍방이 이들 회담에서 이룩한 성과와 실속을 토대로 좀더 노력하고 발전시켜 나아가간다면, 좋은 결과를 생산하여 온 겨레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북한측이 진정으로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화합과 통일을 원한다면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주장을 앞세워 기존대화를 거부하는 그릇된 태도에서 벗어나 중단된 대화를 다시 잇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하루 속히 응해 나오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는 진두환 대통령이 1월 12일 국정 연설에서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이 열리게 되면 북한측이 제의한 정치·군사회담 문제를 포함하여 남북한간의 모든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천명한 바 있는 만큼, 북한측이 진실로 남북한간의 화해와 긴장완화를 바란다면 하루 속히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에 나와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같은 우리들의 요구에 대해서 북한측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한다.

1987년 1월 14일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 수석대표 권 정 달  
남 북 경 제 회 담 수석대표 문 희 갑  
남 북 적 십 자 회 담 수석대표 이 영 덕

우리측이 이렇듯 북한측의 제의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을 거듭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7년 1월 30일 북한측은 「정치·군사회담」의 개최를 촉구하는 서한을 또 다시 우리측에 보내



왔다.

1987년 1월 11일자 공개서한에서와 같이 북측 정무원 총리와 인민무력부장 명의로 우리측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 앞으로 보내온 서한에서, 북한측은 『기존대화의 재개나 최고책임자회담과 같은 비현실적인 문제를 되풀이 하는 것으로서는 우리의 평화제의에 대한 대답으로 되지 않는다』고 강변하면서, 「정치·군사회담」의 개최를 또 다시 주장하였다.

진행중이던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 시키고 이의 재개를 촉구한 우리측의 제의에 호응하는 대신 이를 『비현실적』이라고 강변하면서, 「정치·군사회담」의 개최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북한측의 태도야말로 비현실적이며, 실로 적반하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1987년 2월 14일, 노신영 국무총리와 이기백 국방부장관은 북한정무원 총리와 인민무력부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고, 「정치·군사회담」의 개최를 제의한 1월 30일자 북한 서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밝혔다.

동 서한에서 우리측은 「정치·군사회담」의 개최를 주장하는 북측 논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중단된 기존대화의 재개는 물론 수자원 공동 이용 및 공동조사, 그리고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의 개최에 북한측이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특히 우리측은, 전두환 대통령이 지난 1월 12일 국정 연설에서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이 열리게 되면 북한측이 제의한 「정치·군사회담」문제를 포함하여 남북한간의 모든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천명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북한측이 진실로 남북간의 긴장 완화와 관계개선을 원한다면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에 조속히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당초 우리측은 동 서한을 2월 13일 북한측에 전달한 계획이었으나, 북한측이 동 서한 접수 일자의 연기를 요청해 옴에 따라 2월 14일에 전달하게 되었다.

노신영 국무총리와 이기백 국방부장관 공동명의로의 대북 서한 전문은 다음과 같다.

북한 정무원 총리 이근모 귀하  
인민무력부장 오진우 귀하

지난 1월 30일 귀측에서 보내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온 겨레와 세계 사람들은 남북대화가 다시 열려 훌륭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남북한 관계개선에 새로운 장이 열리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외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하여 최근에 들어서만도 남북대화의 재개를 위해 온갖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지난 1월 12일 국정연설에서 기존대화의 재개와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의 개최를 강조하면서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이 열리게 되면 귀측이 제의한 정치·군사회담 문제를 포함하여 남북한간의 모든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서 1월 14일에는 우리측 남북회담대표단 수석대표들이 합동성명을 발표하고 중단된 남북 적십자회담과 남북경제회담 그리고 남북국회 회담 예비접촉의 무조건 재개를 거듭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측은 영똥하게도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먼저 열것을 주장하면서 그것이 결실을 가져와야 중단된 대화를 재개할 수 있고 이 회담들이 성과를 거두어야 최고위급회담을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정치·군사회담을 모든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우리의 일관된 대화 노력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귀측이 이번 편지에서 기존 대화의 재개와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을 비현실적인 문제라고까지 한데 대하여 우리는 커다란 놀라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남북 쌍방이 그 동안 추진하여 온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경제회담, 남북국회 회담을 위한 예비접촉 등에서는 몇 가지 문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문제에 의견의 접근을 보았으며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를 생산할 단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남북 쌍방은 적십자회담을 통해 남북이산 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단의 상호 교환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거둬으로써 1천만 이산가족은 물론 온 겨레에게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북간에 조성된 긴장을 완화하고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창구만을 늘릴 것이 아니라 이미 마련된 통로를 성실히 유지·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대화를 통해 쌍방간에 합의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화재개를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치·군사회담을 먼저 열자고 고집하고 중단된 대화의 재개를 거부하는 것은 그동안 회담에서 이룩한 성과와 실적을 스스로 부정하려는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야말로 비현실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귀측도 아는 바와 같이 오랜 대결관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는데 있어서 최고책임자회담이 효과적인 대화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분단국이나 외국의 예에서도 이미 입증된 역사적 교훈인 것입니다.

남북한간에도 최고책임자가 직접 만나서 신뢰회복과 긴장완화 문제와 민족의 장래문제 등에 관해서 허심탄회하게 협의한다면 평화와 통일을 위해 그 보다 더 효과적이고 빠른 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더우기 우리측이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에서 정치·군사회담 문제까지도 협의할 수 있다고 한 만큼 귀측이 진실로 대화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 제의를 받아들이지 못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귀측은 남북한간에 반목과 불신을 조장하는 일을 그만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귀측의 금강산댐 축조는 남북한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고 엄청난 민족의 재난을 초래하게 될 위해적 공사로서, 우리는 그동안 이 공사의 중지를 여러 차례 요구하면서 심지어 발전소 건설중지에 따른 보상 용의까지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귀측은 아직까지도 우리측의 정당한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남북한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귀측은 우선 금강산댐의 축조를 중지하고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공유하천의 수자원 이용과 개발에 관한 남북대화에 하루속히 응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담외적 문제를 가지고 남북대화과 연관시키려는 부당한 태도는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우리측의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으로 말하면,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평화유지 훈련임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은 우리측을 위협하는 귀측의 적대정책이 중지되고 남북간의 접촉과 교류가 실시됨으로써 상호신뢰가 조성되면 그 훈련실시의 필요성은 그만큼 줄어들 것임을 귀측은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이 회담외적인 군사훈련에 대해 시비하면서 온갖 중상·비방을 늘어놓는 것은 심히 온당치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측이 진정으로 민족의 화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할 생각이라면 정치·군사회담의 개최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기존의 각종회담들을 외면하지 말고 귀측이 일방적으로 중단시

킨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경제회담 및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부터 재개하여 착실히 발전시키는 성실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합당한 순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귀측이 진실로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을 원한다면 귀측이 제기한 정치·군사문제까지도 함께 토의할 수 있는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이 하루빨리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중단된 남북대화의 재개는 물론 수자원 공동이용 및 공동조사 그리고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의 개최에 귀측이 조속히 호응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1987년 2월 13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노신영

국방부장관 이기백

한편 북한측은, 그들 제의에 대해 우리측이 거부 의사를 거듭 분명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 정치·군사회담 개최, 후 기존대화재개』라는 그들 주장이 대내외적으로 설득력을 결여하고 있음을 인식, 종래의 『선 정치·군사회담 개최』 주장에서 다소 후퇴하는 듯한 태도변화를 보여왔다.

즉 북한측은 3월 4일 우리측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 앞으로 보내온 편지에서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의 개최 주장을 되풀이하면서도, 동 회담이 열리게 되면 우리측이 제기한 금강산 발전소 건설문제를 토의하고, 기존대화 재개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2. 남북총리회담의 제의

노신영 국무총리와 이기백 국방부장관은 1987년 3월 17일 북한 정부원총리와 인민무력부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고 남북총리회담의 개최를 제의하였다.

동 서신에서 우리측은, 「남북한 관계개선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 평화통일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길」임을 다시한번 상기시키고, 그러나 「지금까지와 같은 불신과 대결로 점철된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더 이상 방치해 둘 경우 민족의 불행과 고통만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여 「쌍방이 제기하고 있는 남북간의 관계개선과 긴장완화에 필요한 제반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하였다.

다만 우리측은 「불신과 대결을 지양하고 대화로서 문제를 풀어가려면 우선 신뢰의 바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남북총리회담에 앞서 3월중에 금강산댐 건설과 관련한 수자원회담을, 4월중에 적십자회담과 경제회담을 각각 개최하여 상호신뢰를 위한 최소한의 여건조성에 성의를 다하고 북한측이 행동을 통해 그들의 대화의지를 입증해야 함으로 촉구하고 이들 회담의 구체적인 날짜에 대해서는 북한측에 일임하였다.

이와함께 우리측은, 「이렇게 해서 남북총리회담이 열리게 되면, 이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될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조속히 실현시키는데 보다 발전되고 성숙한 분위기의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란 점도 아울러 강조하였다.

노신영 국무총리와 이기백 국방부장관의 대북서한 전문은 다음과 같다.

북한 정부원총리 이근모 귀하  
인민무력부장 오진우 귀하

지난 3월 3일 귀측에서 보내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남북이 처해 있는 현실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신뢰관계의 회복과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남북간 관계개선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 평화통일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귀측은 이번 편지에서 정치·군사회담이 열려야만 기존 남북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고 했을 뿐 아니라, 정치·군사문제까지도 토의할 수 있다고 한 우리측의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 제의에 대해서 마저도 정치·군사회담이 열려 성과적으로 진행되어야 개최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회피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는 지금까지와 같은 불신과 대결로 점철된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더 이상 방치해 둘 경우 민족의 불행과 고통만이 더욱 가중되리라고 우려하면서 이를 타개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신과 대결을 지양하고 대화로써 문제를 풀어 가려면 우선 신뢰의 바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귀측은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경제회담 등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쌍방이 서로 약속한 합의사항을 파기하였으며 회담과 무관한 군사훈련 문제를 회담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회담 앞에 난관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상대방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금강산댐 건설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남북간에 긴장을 더욱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귀측의 태도는 남북간에 불신과 반목을 심화시켜 왔고 이로 인해 오늘의 현실은 쌍방간에 우선 신뢰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북간에 초보적이고 실질적인 신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새로운 긴장과 불신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귀측의 금강산댐 건설문제와 관련하여 남북수자원회담을 지체없이 개최하고 남북공유하천의 수자원 이용과 개발에 관한 문제를 협의·해결하는 한편 중단된 기존대화를 무조건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는 남북수자원회담과 중단된 기존대화가 열려 상호신뢰를 위한 최소한의 여건이 조성된 바탕위에서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여 쌍방이 제기하고 있는 남북간의 관계개선과 긴장완화에 필요한 제반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할 것을 귀측에 정중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하여 남북총리회담이 열리면 이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될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조속히 실현시키는데 보다 발전되고 성숙된 분위기의 조성에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귀측이 진정으로 남북간에 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을 바라는 거래의 염원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이같은 우리측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데 따라 우리는 우선 남북수자원회담을 3월중으로 판문점에서 개최하고, 4월중에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경제회담을 평양과 판문점에서 각각 열 것을 제의합니다.

회담은 빠를수록 좋으며 이들 회담의 구체적인 날짜에 관해서는 귀측에 일임하는 바입니다.

1987년 3월 14일

대한민국 국 무 총 리 노신영  
국방부장관 이기백

우리측의 금번 서한도 당초에는 3월 14일 북한측에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북한측이 2월 13일자 서한전달 때와 마찬가지로 서한 접수 일자의 연기를 요청해 옴에 따라 3월 17일에 북한측에 절하게 된 것이다.

### 3. 남북총리회담제의와 우리의 입장

가. 금번 제의는 민족적 불행과 고통을 해소하려는 우리측의 일관되고 포용적인 대화 자세에서 비롯된 것임

남북간 관계개선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고 평화통일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길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정부는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의 개최를 위해 일관된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북한측이 우리의 이러한 제의에 호응하는 대신 「남북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제의하고, 이의 개최 및 진전을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우리측이 또다시 남북총리회담의 개최를 제의한 것은, 지금과 같이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필연적으로 초래될 민족적 불행과 고통을 어떻게해서든 해소해야겠다는 일관되고 포용적인 대화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다.

남북총리회담이 열리게 되면 현재 남북 쌍방이 제기하고 있는 관계개선과 긴장완화에 필요한 제반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 개최 분위기 조성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나. 대화로서 남북간의 현안문제를 풀어가려면 우선 상호신뢰 관계의 회복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그간 북한측이 취해 온 불성실한 대화자세로 말미암아 남북간에는 반목과 불신이 심화되어 왔다. 따라서 남북총리회담이 성과적으로 추진되려면 상호신뢰의 바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측이 남북수자원회담 개최 및 기존대화의 재개를 촉구한 우리측의 제의에 우선 성실히 호응해 나옴으로써 행동으로 그들의 대화의지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우리측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 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줄 금강산댐 건설공사를 강행해 온 북한측이, 금강산댐의 즉각 중지 및 남북수자원회담의 개최를 촉구한 우리측의 제의에 호응하는 대신 「정치·군사회담」을 열어 이 문제도 토의하자는 것은 댐건설에 따른 그들의 기도를 은폐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호도하려는 것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성실한 자세라고 할 수 없다.

북한측이 그들이 운위하는 것처럼 진실로 민족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금강산댐 건설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측의 남북수자원회담 제의에 호응해 나옴으로써 신뢰조성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진행 중이던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북한측이 기존대화의 재개와 「정치·군사회담」 개최를 연계시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부당하다고 하겠는바, 북한측은 기존대화 재개에도 무조건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다.

다. 남북간의 직접대화를 통해 관계개선과 긴장완화 문제를 협의·해결하는 것이 주변 정세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임.

최근 미국의 대북한 외교관 접촉허용조치, 미·소 외무차관회의(1987.3.16~3.17:모스크바)에서의

한반도 긴장완화 논의 등에서 보여주듯 소련의 신아시아 정책과 미국의 동북아 균형유지 정책이 맞물려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미·소는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를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제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북한측은 우리의 금번 제의에 호응해 나옴으로써 남북간의 관계개선과 긴장완화에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라. 북한측은 불성실한 대화자세를 지양해야 할 것임

진행중이던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북한측이 기존대화의 재개를 새 제의인 「정치·군사 회담」 개최와 연계시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부당하다고 하겠다.

70년대이래 진행되어온 남북대화가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의 상호교환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함으로써 겨레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던 것도 그 근본원인은 바로 북한측의 불성실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북한측은 일단 대화의 테이블에 나왔다가도 그들의 목적달성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하시라도 진행중이던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그 책임을 대화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 사례가 70년대의 남북대화 이래 번번히 있어 왔는 바, 따라서 북한측은 대화에의 의지는 새로운 형태의 제의를 하기보다는 진지성과 신뢰성으로 표현, 민족 앞에 입증해야 할 것이다.

#### 북한측의 대화중단 및 책임전가 사례

- 우리의 6·23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에 대한 국내외의 평가와 지지확산에 당황, 1973년 8월 28일 북한측은 우리내부의 「민주인사강압」을 구실로 진행중이던 남북조절위원회 회의 및 남북적십자회담의 일방적 중단을 선언
-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1979. 4.25-5. 6: 평양)에의 한국팀 참가저지를 목적으로 북한측은 동 대회 개막을 불과 2개월 앞둔 1979년 2월 20일, 남북한 단일팀 구성·출전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의, 남북간에 네차례에 걸쳐 탁구회담을 가진 바 있음.  
그러나 시기적으로나 기술상으로 도저히 단일팀 구성·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동 대회 참가에 대한 우리측의 기득권 요구를 「단일팀 구성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선 단일팀 참가합의」만을 주장, 회의를 결렬시킴으로써 우리팀의 평양대회 참가를 봉쇄한 바 있음.
- 남북총리회담 개최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980년 2월 6일 이래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실무대표 접촉에서도 북한측은, 총리회담을 통해 제4공화국 당시 우리내부 정치정세의 소요를 획책해 보려던 당초 그들의 기대가 무망한 것임이 판단되자 우리 총리(서리)의 자격문제 등을 구실로 동 접촉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음.
- 제23회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대회 참가선수 명단제출 마감일을 불과 2개월 앞둔 1984년 3월 30일, 북한측은 또 다시 동 대회에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출전할 것을 제의해 옴으로써, 남북간에는 3차례에 걸쳐 체육회담을 개최한 바 있음.



동 회담에서 북한측은 「버마」 사건을 자작극 이라고 주장하는 등 우리 내부에 대한 중상·비방을 거듭하다가 일방적으로 퇴장하는가 하면 1984년 5월 24일, 체코 「프라하」에서 공산권 국가들이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불참을 결정한데 동조하여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불참하고, 남북체육회담을 중단시키는 부당한 태도를 보였음.

- 최근에는 1985년 1월에 이어 1986년 1월 22일 남북대화과 무관한 우리측의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남북적십자회담, 경제회담 및 국회회담 예비접촉 등 진행중이던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바 있음.

#### 4. 주요반응

금번 우리측의 남북총리회담 개최 제의에 대해 국내 주요언론들은 다시 한번 북한측에 『포용성있는 새로운 대화제의』를 내놓았다고 평가하고, 우리측 제의의 수락을 촉구하는 요지의 사설을 일제히 게재하였다.

특히 금번 제의가 그 동안 북한측이 주장하고 제기해 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거부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계기로 통일을 향한 이정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민족대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원했다.

또한 주변정세가 화해와 공존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때에, 이러한 전환기적 흐름을 남북은 겨레의 안전과 평화 그리고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능동적 기회로 활용』할 것도 당부했다.

아울러 북한측이 지난 70년대 이래 그들이 일단 대화의 테이블에 나왔다가 소기의 목적달성이 여의치 못하면 번번히 생트집을 잡아 대화를 중지시켰던 전력을 상기시키면서, 남북대화가 남북한의 진정한 화해를 촉진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으려면 북한측이 무엇보다도 『진지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대화에 임할 것』과 남북간에 누적된 불신과 대결의 분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신뢰구축』에 성의를 보여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해외언론들도 우리측의 남북총리회담 제의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번 제의가 『건설적이고 포괄적인 역제안』이라고 평가하고, 이 제안이 『자주적인 방법으로 남북대화를 재개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한국측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금번 제의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대화중지 및 정치·군사회담 제의 등 남북대화에 임하는 북한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미루어 보아 금번 제의에 북한측이 『적극적 반응을 보일지는 의문시』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 국내반응

##### 총리회담 제의와 기대

- 대동강 풀리듯, 평양측 마음 열어라 -

조선일보(1987. 3. 18)

말 상대가 아무리 까다롭고 변덕이 심하고, 그리고 늘 엉뚱한 암수로 남쪽 혁명이나 획책하고 있는 무리들이라 해도, 그것이 동족이라는 데서, 그리고 통일은 반드시 이룩해야 한다는 민족적 숙명성에서, 우리측은 다시 한번 북한에 대해 포용성 있는 새로운 대화제안을 내놓았다.

노신영 국무총리와 이기백 국방부장관은 17일 북한측에 보내진 서한을 통해, 남북간에 가장 큰 쟁점으로 불거진 금강산담 문제와 관련한 남-북수질원회담을 지체없이 열고, 북이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기존회담을 무조건 재개하여 상호신뢰를 위한 최소한의 여건이 조성된 바탕 위에서,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여 「쌍방이 제기한 제반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하자고 촉구했다.

그리하여 「남북총리회담」이 열리면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한 당국최고책임자회담, 곧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실현시키는데 보다 발전되고 성열된 분위기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남북간의 근본문제를 푸는데 있어서는 「남북정상회담」이 필수불가결한 첩경임을 천명했다. 이와 같은 생산적이고도 건설적 제안에 대해, 평양측은 이번에도 소위 「정치·군사회담」 개최를 최우선적 해결 과제라고 우기면서, 거듭해서 우리와 온 겨레와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주변의 눈들을 실망시키는 웅고집의 태도로 나올 것인가.

하기는 3월 3일 우리측에 보내온 서신에서 북은 기존회담도 함께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다소 신축성있는 태도를 보이는데 하면서, 그래도 여전히 「정치-군사」 회담이 우선적 과제임을 역설하는 강변을 잊지 않았다.

1971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남북대화는 올해로서 16년의 세월을 기록하게 됐다. 이 16년 대화사에서 언제나 이를 일방적으로 끊어, 전진을 방해하는 상태적 버릇을 북측은 식은 죽먹듯이 범하고 일삼아왔다. 날날이 열거할 것도 없이 잠깐 쏘아보아도 1975년 조절위부위원장회의 중단, 1978년 남북적실무회의 중단등까지를 포함해서, 1986년의 1980년대 대화돌연 중단에 이르기까지 북측의 자의적 대화중단작태는 열손가락을 다 꼽기에 족하다. 지난해 6월 이후 「정치-군사」 회담을 우선시켜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는 평양측은 생산적이고도 포용적인 이번 우리측 제안에마저도 등을 돌림으로써 1980년대 대화중단상태를 끝없이 더 끌고 갈 작정의 반응을 보일 것인가. 거듭 이르노니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의 눈들이 주시하고 있다.

때마침 미-소간에 새로운 아시아 평화질서 모색을 위한 접촉 움직임이 일고 있고, 그 핵점이 한반도 긴장해소와 평화정착에 두어지고 있음은 다들 여지가 없고 이는 주변국가들의 최대관심사이자 숙제이기도 하다. 주변정세의 이러한 전환기적 흐름을, 남-북은 겨레의 안전과 평화, 그리고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능동적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는 주변정세에의 단순한 편승을 뜻함이 아니라, 민족자결원칙을 살려 민족에 의한 해결의 호기로서 남북이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앞세워, 통일을 향한 이정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민족대화합의 장을 기록하자는 절실한 기구에서의 주변정세 관찰이고 소망의 피력이다. 힘을 합쳐 그렇게 해야 하고 하기 위한 성의 있고도 정중한 초청장으로, 우리측의 「3·17제안」은 북으로 보내졌다.

#### 남북 총리회담 성사되어야

한국일보(1987. 3. 18)

오늘의 남북한관계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다름아닌 상호신뢰이다. 불신과 반목을 방치한채 긴장완화나 평화통일 접근을 백번 논의해 봤자 아무런 진전도 기대되지 않는다.

나아가서 그 신뢰회복의 정도로는 불신요인의 해소와 성의있는 대화재개가 있을 뿐이다. 이점 북측이 한강유역 우리측 1천 5백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금강산댐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긴장을 고조시켰다든지 또는 이에 앞서 1986년 1월부터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경제회담 등 기존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는 사실은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겨레의 염원을 거역한 처사로서 당연히 지탄되어야 했던 것이다.

하나 우리는 해동의 봄을 맞이하면서 어제 일보다도 내일에 관하여 더 많이 얘기하고 싶은 심정이다. 때마침 남북대화재개 기운이 조심스럽게 싹트기 시작했음을 본다. 17일 우리측 노신영 국무총리와 이기백 국방장관 공동명의로 서한이 북측 정무원총리 이근모와 인민무력부장 오진우 앞으로 전달되었다고 한다. 지난 3일 북측이 보내온 서한에 대한 회신이며, 남북대화재개에 관한 적극적 자세를 표명한 내용이다.

북측의 지난번 서한은 「고위급 정치군사회담」 개최를 제의하면서 그것이 수락되면 동시에 기존 대화통로도 다시 열 수 있을 것이라고 했었다.

이번 우리측 서한은 우선 남북수자원회담을 3월중으로 개최하고, 4월중에 남북적십자회담과 경제회담을 재개하자고 제의하였다. 이로써 상호 신뢰를 위한 최소한의 여건이 조성된 바탕위에 남북총리회담을 열어 관계개선과 긴장완화에 필요한 제반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하자고 제의한

것이다. 나아가서 총리회담이 진전되는 연장선에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내다보게한 내용이다.

총체적으로 지체없는 대화재개를 촉구하면서, 상호신뢰의 분위기 성숙에 따라 회담의 수준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자는 제의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것이라는 내외여론의 즉각적, 긍정적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당면한 불신요인으로 금강산탐 축조문제가 부각된 이상 수자원회담의 선행은 분위기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 틀림없겠다. 북측도 지난번 서한에서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에 언급했는가 하면 수자원문제를 토의할 용의를 표명했던 만큼 아무런 주저도 필요 없다고 본다. 기존대화의 재개는 너무나 당연하다. 한편 북측의 「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제의는 격을 높인 총리회담 내지 최고책임자회담으로 포용될 전망이 서기 때문에 평양측이 마다할 이유는 전혀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비록 약간의 우여곡절이 부수된다 해도 적극적 호응을 기대할 수 있겠다.

지금 남북대화의 재개는 나라 안팎에 걸친 온 겨레의 일치된 염원일 뿐더러, 주변국제정세 또한 북방의 두 인국을 포함하여 거둬 중용해 마지않는 바라고 관측된다. 한반도의 어깨너머로 외국인들이 걱정하거나 거론하기 전에, 남북한에 걸쳐 민족내부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차원 높은 실천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남북대화의 재개와 불신요인의 해소에 무슨 조건이나 주저가 따라야 한단 말인가. 그리고 상호간의 문제제기는 협의되는데 그치지 않고 해결되어야 한다는 논리전개에서, 최고책임자회담에 이르는 단계적 대화격상은 당연시되고도 남음이 있다. 북측의 성실한 호응있기를 지켜보고자 한다.

#### 북은 이래도 대화를 거부할 것인가

서울신문(1987. 3. 18)

최근 한반도주변의 국제정세는 전후 한민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요된 남북분단의 대치상태를 완화시키는데 전례없이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듯하다. 솔츠 미국무장관의 중공·한국·일본순방, 중공당대외연락부장 주량의 북한방문, 미·소 외무차관의 모스크바 회동 등이 한반도 문제와 유관한 국제정세의 단면들이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외교정책수정과 이와 무관하지 않은 중공·소련에 의한 대북한 설득노력 또한 우리로서 주목되는 상황전개가 아닐 수 없다.

한반도 유관국가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남북대화재개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북한의 공식적인 반응이 없는 한 당장 예측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그 같은 관심과 움직임의 과녁이 88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대화재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이상 북한으로부터도 이에 상응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여겨진다. 우리정부가 17일 남북적십자회담과 경제회담의 즉시 재개와 함께 이보다 격상된 남북총리회담을 제의한 것도 국제환경의 유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당사자간의 주체적인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자결원칙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최근 유럽에서도 핵군축의 분위기를 타고 동서독관계의 개선이 쌍방에 의해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주목하게 된다. 그 동안 동서독간의 경제·문화·스포츠 등에 걸친 비정치적인 교류증진은 유럽의 긴장완화에 크게 기여했으며 오늘의 새로운 국제분위기 속에서 금년 중에는 동서독정상회담도 열릴 전망이다. 남북한과 같은 1970년대 초에 대화를 시작한 동서독은 이제 무역거래만 왕복 90억 달러, 사람의 왕래는 연간 수십만 명에 이르고 있다.

전후 같은 처지의 분단상황에서 양독 관계가 이러한데 한민족간에 전개되어온 한반도에서의 대화는 북의 무력적화 전략과 폐쇄성 때문에 개선은 커녕 날이 갈수록 냉각되어 왔다. 우리측은 이번에 새롭게 제의한 남북총리회담에 앞서 우선 남북수자원회담을 3월중에, 그리고 기존의 대화창구인 적십자회담과 경제회담을 4월중에 열도록 촉구했다. 회담은 빠를수록 좋다는 점을 충고도 했고 회담의 구체적인 날짜를 북측에 일임하기까지 했다. 수자원회담은 수공전위협 이전에 조국의 자연을 보존하고 서로가 비생산적인 댐분규를 피해보자는 우리의 충정에서 나온 것이다. 또 적십자회담과 경제회담은 분단상황이 종식되기 전에라도 한민족끼리의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최소한 민족의 동질성만이라도 회복하자는 민족적 양심에서이다. 보다 현실적으로는 북한이 기존의 대화마저 일방적으로 중단시킨채 정치군사회담만을 되풀이 주장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의 대화를 새로운 차원에서 정상궤도에 올려놓자는 데에 있다. 이제 북한이 응답할 차례이다.

우리의 남북대화는 인내와 관용과 끈기의 길이다. 한편으로는 또 다른 전화를 막고 민족전체의 역사적 사명감으로 관철해야 할 고뇌와 부담의 길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대화가 남북한의 진정한 화해를 촉진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진지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 북한은 더 이상 폐쇄와 긴장고조의 외길만을 추구해서는 그 자신의 존립마저 위태로우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 남북대화재개의 기운

- 북한은 폐쇄의 문 열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 -

동아일보(1987. 3. 18)

그 동안 딱 막혀있던 남북한관계에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은 조짐이 보인다. 최근 남북한이 주고 받은 편지왕래에서,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의 흐름에서 그런 분위기가 어렴풋이 감지되고 있다.

노신영 국무총리와 이기백 국방장관은 1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의 정무원총리 이근모와 인민무력부장 오진우에게 서한을 보내 남북간의 관계개선과 긴장완화에 필요한 제반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남북총리회담을 열자고 제의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3월중에 판문점에서 금강산담건설과 관련한 남북수자원회담을, 4월중에 적십자회담과 경제회담을 평양과 판문점에서 각각 열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대북서한은 지난 3일 북한측이 정무원총리와 인민무력부장 명의로 이른바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의 개최를 촉구하기 위해 우리측에 보낸 서한에 대한 답장인 셈이다. 그 동안 우리측은 북한의 정치-군사회담 제의를 놓고 신중한 검토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몇 가지의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다. 그 첫째는 작년 1월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기존의 남북대화를 모두 중단시킨 북한이 바로 대화중단의 구실로 삼았던 그 훈련이 진행중인 시기에 회담개최를 제의했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그 동안 한국은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군사문제 협의를 기피하고 미국만 상대하겠다는 방침을 바꾸어 우리측과의 정치-군사회담을 제의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북한의 태도변화는 국내적으로는 개혁정치를 추진하고 대외적으로 신 「아시아」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의 소련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는 88서울올림픽에 동구권국가들과 함께 참가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 소련으로서는 북한의 올림픽방해책동을 탐탁하게 생각할리가 없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소련, 중공과의 빈번한 접촉을 통해 88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원격지원해 온 미국도 남북대화를 통한 화해분위기의 조성에 깊은 관심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와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북한의 최근 경제사정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자면 투자여건의 조성책으로 대화재개에 응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이다.

결국 이번 남북대화의 재개기운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강대국의 대외정책과 남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우리와 똑같은 운명의 분단국인 동서독이 소련의 개방정책을 틈타 양독관계를 급속히 개선시키고 있는 사실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들을 부러워만 할게 아니라 독일로부터 무엇인가 배워야 한다는 말이다. 경제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서독은 동독에 경제협력을 아끼지 않으면서 평화공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주변정세가 화해와 공존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때에 북한은 하루빨리 폐쇄의 문을 열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바란다. 그래서 남북총리회담을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앞선 수자원회담과 기존의 대화채널을 모두 가동시켜 남북간에 가로놓인 모든 문제를 동족끼리 터놓고 얘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남북 총리회담

중앙일보(1987. 3. 18)

북한의 「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제의에 정부는 「총리회담」 제의로 응답했다.

평양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면서도 기대를 걸게 된다. 그것은 한반도주변의 국제상황이나 북한의 내부상황으로 보아 북한이 우리의 제의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한반도문제에 중요 영향력을 가져온 미·중·소 3강은 지금 평화지향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남북 대화 재개를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열강들의 노력은 「슐츠」미 국무의 북경, 서울방문 이후 고위관리들의 상호방문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한편, 북한은 이 같은 외부의 압력을 받는 한편 그 스스로가 서울 올림픽참가와 내부의 경제문제 타결을 위해서도 대화를 계속 외면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소련과 동구 공산국가들을 상대로 서울올림픽 불참운동을 펴온 북한의 노력은 실패로 끝났다.

동독을 비롯한 대부분의 동구국가들이 올림픽참가를 결정해 놓았고 소련관리들도 참가할 것을 예상케하는 언행을 보여왔다.

따라서 북한은 지금 서울 올림픽의 유산확책 보다는 일부 종목이라도 떠맡아 대내적으로 공동 개최한다는 선전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만족할 수 밖에 없게 돼 있다. 우리 정부는 총리회담을 제의하면서 「쌍방이 제기하는 제반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 할 것을 밝혔다.

총리회담의 조건으로 북한의 금강산담 건설문제와 관련된 수자원회담과 중단상태에 있는 기존 회담(적십자·경제·국회회담)의 재개를 제시했다.

이 같은 제의는 그 동안 북한이 주장하고 제기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거부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양측 제안에 차이가 있다면 평양의 제의가 토의될 문제를 중심으로하여 「정치·군사회담」을 제의한 반면 우리는 그 문제를 논의할 회담기구로 「총리회담」을 제의하고 거기서 모든 문제를 토의하자고 한 점이다.

따라서 총리회담에서는 어느 한쪽이 제기만 한다면 군사문제까지도 토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제의가 한층 진전되고 구체적이며 개방적이라 할 수 있다.

총리회담은 과거의 조절위처럼 하위회담인 기존 회담들을 진전시키는 기능도 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1970년대초 적십자회담과 총리급의 조절위회의가 병행하여 개최됐을 때 적십자회담이 정체를 띠기까지 조절위가 개입, 타개해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

과거의 예로 볼 때, 남북대화의 접근에 있어서 남한이 상향식 전략이었다면 북한은 하향식방법을 채택해왔다.

우리가 생활에 관련된 기능적 문제부터 풀어가자고 하는 반면 북한은 고위층의 정치회담에서 통일문제 등 큰 문제들을 일괄 타결하자고 주장했었다.

1980년대 들어 우리가 북한측 주장을 수용하여 기능문제회담과 함께 남북정상회담을 함께 열자고 제의하자 북한은 이를 거부하면서 그 중간 수준인 「정치·군사회담」을 제의해왔다. 총리회담은 북한의 그런 방식에도 일치되는 수준의 회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평양이 총리회담에 반드시 응하도록 촉구하며 또 기대한다.

그것은 북한자신을 위해서나 우리 민족공동체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만나고 보자

- 진일보한 남북총리회담제의 -

경향신문(1987. 3. 18)

서로 팽팽하게 맞서는 상대가 대화의 통로를 열기 위해 상호 제약요인을 제거하고 그 폭을 넓혀나간다는 것은 펍 고무적인 현상이다. 17일 우리정부가 제의한 「남북총리회담」은 이미 북한이 들고나온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폭넓게 수용한 우리측의 결단으로 풀이된다.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민족의 염원을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신념의 일단으로 광범위한 대화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우리 입장은 이미 지난 1월 12일 전두환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통해 명료하게 천명된 바 있다. 북한은 우선 금강산댐 건설을 즉각 중지하고 남북수자원회담에 응해야 하며 또 중단된 기존의 대화창구를 무조건 재개해야 할 것이다.

또 한 걸음 진전시켜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열게되면 북한이 주장하는 정치·군사회담을 포함하여 남북한간의 모든 문제를 협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것은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족통일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일관된 우리의 확신이다. 어떤 대화를 막론하고 상대방을 서로 믿지 못할 때, 그 대화는 이미 대화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우리가 굳이 기존의 남북대화재개와 수자원회담을 우선 요구하는데는 그 동안 남북한 사이에 누적된 불신과 대결의 분위기를 다소나마 누그러뜨려서 최소한의 신뢰를 구축하자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다. 동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금강산댐 건설과 이산가족재회 등 인도적인 문제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처지에 무엇을 믿고 정치·군사회담을 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북한이 오로지 정치·군사회담만을 고집하는데 그 속셈이 따로 있음을 우리는 똑바로 알아두어야만 할 줄 안다. 기존대화의 중단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고 금강산댐 건설로 우리내부에서 끓어오르는 반공의식과 대공경각심을 흐리게 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이미지를 평화적으로 위장해 보겠다는 흥계가 숨어있음이 분명하다. 그것은 지난 1970년대이래 그들이 일단 대화의 테이블에 나왔다가 소기의 목적달성이 여의치 못하면 번번이 생트집을 잡아 대화를 중단시켰던 전

력으로 미루어 충분히 간파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에 그들의 제의에 포용력을 보인다는 그런대로의 이유가 있다. 그들이 제시한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최고책임자회담에 긍정적으로 호응해야 할 것이며 특히 기존의 모든 대화도 「병행하겠다」는 뜻이 비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여기에는 남북한간에 고조된 긴장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필연적으로 초래될 민족적 불행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소시켜보겠다는 우리의 일관된 의지와 대화자세도 담겨있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한반도문제를 둘러싸고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은 우리의 주체의식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이른바 소련의 신아시아 정책과 미국의 동북아 균형유지정책은 서로 이해가 얽혀 급기야 그들의 협상태이블에까지 오르게 됐다. 그들이 남북한 사이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은 우리로서 대단히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당사자인 우리로서는 한 민족으로서의 자결원칙과 주체의식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술츠 미국무장관의 중공 방문을 필두로 중공당 대외연락부장 주광의 평양 방문과 16·17일에 있었던 미·소외무차관회담 등에서 남북한문제가 거론됐다는 사실은 국제환경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와 같이 성숙된 주변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포착하는 일은 남북한 당사자들이 해야할 일이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특히 이점을 강조하면서 양측 당사자간의 직접대화 재개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그런 뜻에서 이번 노신영 총리와 이기백 국방장관이 보낸 대북회신은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서 믿으며 북한의 성의있는 대응자세를 기대한다.

#### 해외 반응

일본 외무성 관리 (1987. 3. 17)

- 한국정부의 총리회담 제의를 높이 평가하며 이를 지지함.
- 한국이 남북 대화에 「이니시어티브」를 쥐고 회담에 나서 실질적인 남북대화가 재개될 것이라는 강력한 기대를 갖게 되었음.

아사히 신문 (1987. 3. 18 : 일본)

- 한국측은 남북총리회담이 열리면 (1) 남북간의 관계개선 (2) 긴장완화에 필요한 제문제 포괄적으로 토의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북측의 제안 내용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음.

마이니찌 신문 (1987. 3. 18 : 일본)

- 한국측의 금번 제의는 남북회담 재개에 「전향적 회담」을 보낸 것임.

니혼 께이자이 신문 (1987. 3. 18 : 일본)

- 과거보다 북측 제안에 다가선 면이 강함.



AFP 통신 (1987. 3. 17 : 프랑스)

- 한반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양당사자간의 문제이지만 한국측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금번 제안을 환영함.
- 동 제의가 별도로 기존대화 재개에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함.

로이타 통신 (1987. 3. 17 : 영국)

- 한국측의 남북총리회담 제의는 매우 건설적이고 포괄적인 「역제안」이라 할 수 있음.

The New York Times (1987. 3. 18 : 미국)

- 금번 한국측의 제의는 세 가지 회담을 열자는 것으로서 북한제의에 대한 광범위한 대응 조치로 볼 수 있음.

VOA (1987. 3. 18 : 미국)

- 한국측 제의의 사실 보도와 함께 동 제의를 계기로 주변국가들이 남북한에 대해 대화재개를 종용하고 있는 사실을 보도.

유엔사무총장 (1987. 3. 19)

- 북한이 남북대화의 명칭과 의제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제, 명칭 등의 결정을 포함, 모든 문제를 토의할 수 있는 준비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좋을 것임.

오스트리아 외무성 관리 (1987. 3. 18)

- 한국측의 금번 제의는 남북간 신뢰조성 노력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임.
- 북측의 대화 중단 이유 및 정치·군사회담 제의 등 태도로 미루어 보아 한국측 제의에 적극적 반응을 보일지는 의문시 됨.

Asian Wall Street Journal (1987. 3. 18 : 홍콩)

- 한국이 북한의 제의에 동의하고 대안을 제시했다고 해서, 북한측의 선의에 기대를 걸면 나중에 『큰 문제거리』가 될 수도 있음.

### 제3부 북한의 금강산댐건설 관련동향

#### 1. 관련동향

북한은 1986년 10월 21일 보도매체를 통해, 강원도 이북 지역 일원에 이른바 「대자연개조」라는 미명하에 금강산발전소 건설에 착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측의 이러한 금강산댐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동 발전소 건설에 따른 댐 건설이 기상·생태 및 경제·군사적 측면에서 우리측에 미칠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동 공사의 즉각 중단을 북한측에 촉구하였다.

우리측은 1986년 10월 30일 이규호 건설부장관 명의의 북한성명을 통해, 북한측의 금강산댐 건설에 따라 야기될 우리측 농·공·생활용수의 부족현상 및 자연생태계 파괴 가능성 등을 들어 동 계획이 『하천이용에 관한 국제관례를 무시하고 국토의 평화적 이용』에 역행하는 것이라 단정하고 이의 즉각적인 중지를 북한측에 촉구하였다.

특히 우리측은 방대한 양의 물을 저장하게 될 동 댐이 파괴될 경우, 우리의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지적하고, 북한측이 동 계획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건설부장관의 대북성명 전문은 다음과 같다.

북한측은 최근 강원도 이북일원에 이른바 금강산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대규모의 군병력을 투입, 공사를 착수했으며 이를 단기간 내에 완공하겠다고 보도기관을 통하여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측의 이와 같은 발전소 건설계획은 그들의 발표와는 달리 우리측에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

북한측이 공개한 계획에 따르면 이 발전소는 북한에서 가장 큰 발전소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로 미루어 발전소 규모는 최소 80만Kw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원래 수력발전소 건설의 입지조건은 풍부한 수자원과 낙차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금강산발전소는 설계상 북한지역을 흐르는 북한강의 수자원을 최대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휴전선 바로 북쪽에 북한강 본류와 금강천이 만나는 합류지점 하류에 댐을 건설하고 또 회양지역에서 30~60km구간의 터널수로를 굴착, 이를 통해 저수한 물을 원산지방으로 역류시켜 이 지역에 생길 300m 이상의 자연낙차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려는 계획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발전소 건설계획에 대해 우리가 크게 우려하는 문제는 먼저 북한강 상류의 수자원을 남에서 동북방향으로 역류시키게 됨으로써 북한강 수계로부터 남쪽 화천방면에 유입되어온 연간 18억톤 정도의 공업, 농업, 생활용수 손실을 가져오게 되고 아울러 화천 이남 5개댐의 발전량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시된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볼 때 한강의 중요한 발원지인 북한강 상류를 역류시킴으로써 금강산, 설악산 등 한반도 동부지역의 자연생태계 파괴라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더우기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북한강의 수자원을 원산쪽으로 역류시켜 300m 정도의 자연낙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댐 수위가 350m 이상을 유지해야 하므로 이 댐의 높이는 적어도 200m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렇게 될 때 이 댐의 최대 저수능력은 무려 200억톤에 달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방대한 양의 물을 담고 있는 댐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 파괴 등으로 인한 안전문제는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 댐이 우리측에 잠재적 위협을 주게 되는 시기는 9억톤 내외의 물을 저수할 때부터이며 이 댐이 붕괴될 경우를 가상한다면 초당 30만톤의

급류가 방류되어 화천 이남 우리측 5개댐의 보호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이 경우 엄청난 수량이 일시에 팔당을 거쳐 한강하류로 유입됨으로써 지난 1984년 9월 한강 홍수 때의 10배에 달하는 물이 한강 제방을 넘쳐 수도권 일원을 포함한 한강 전 유역을 가공할 수마가 뒤덮게 될 것임은 자명한 것이다.

9억톤의 물이 주는 피해가 이렇진대 200억톤의 물을 담은 거대한 댐이 무너질 경우 물이 급류를 형성하여 화천으로 유입되고 화천 이남 5개댐을 순식간에 차례로 파괴하면서 한강하류 전역을 엄습, 강원, 경기, 서울을 포함한 한반도의 허리부분을 완전히 황폐화하는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재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북한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발전소 건설계획이 하천이용에 관한 국제관례를 무시하고 국토의 평화적 이용에 역행하는 것으로 단정하면서, 특히 이 댐의 안전문제는 바로 우리의 사활이 걸린 최대 관심사임을 분명히 지적하며 남북으로 관류하고 있는 수원의 이용문제가 북한 당국의 일방적인 목적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 아님을 명백히 밝혀둔다.

따라서 우리는 금강산발전소 건설계획은 당장 중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며 북한 당국이 우리의 이러한 정당한 입장에 동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북한측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적절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울러 밝히는 바이다.

우리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북한측은 1986년 11월 4일 이른바 전력공업위원회 자원개발국장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고, 이를 일축하였다.

동 담화에서 북한측은, 금강산발전소 건설계획은 『금강산 일대의 수자원을 개발하여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평화적 건설사업』이라고 강변하면서, 이는 홍수피해의 방지 등 남측에도 『유익한 점들이 많다』는 억지주장을 늘어놓았다.

또한 북한측은, 금강산댐 건설은 북한의 『내부문제이지 제3자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함으로써, 금강산댐 건설이 남북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북한측이 이와 같이 우리의 제의를 거부하고, 남북간의 협상 가능성마저 배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측은 북한측에 대해 동 댐 건설공사의 중단을 계속 종용하는 한편 대화를 통한 분쟁해결 노력을 일관되게 경주해 왔다.

우리측은 1986년 11월 6일자 국방부장관 성명과 11월 21일자 문공부장관 성명을 통해, 북한측의 금강산댐 건설에는 분명히 「군사전략적 저의」가 있음을 지적하고, 북한측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끝내 외면하거나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11월 26일에는 국방부, 건설부, 문화공보부 및 국토통일원 등 관계 4부장관의 합동담화를 발표하고, 금강산댐에 대한 대응댐을 건설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동 4부장관 담화에서 우리측은, 금강산댐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자위조치로서 북한강 수계의 남쪽에 대응댐(「평화의 댐」)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아울러 북한측이 『민족적 양심으로 돌아와 무모한 국력소모전을 포기하고 민족화해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민족공동번영의 인도』에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만약 북한측이 댐 건설을 중지한다면 남북한 공유하천의 수자원 이용에 따른 모든 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아울러 천명하였다.

관계 4부장관의 합동담화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 정부는 최근 북한측이 금강산발전소를 위한 대규모 댐 건설을 통해 가공할 대남 수공무력을 확보하려는데 대해 그들의 군사적 저의를 명백히 지적하고 민족공동번영의 차원에서 동 건설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수 차례에 걸쳐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북한측의 이 같은 일방적 댐 건설계획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열화 같은 규탄여론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비등하고 있으며 해외언론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여론도 북한측의 무모한 침공 계획을 낱알이 폭로하면서 분노하는 세계의 표정을 연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러한 내외의 규탄여론에 아랑곳없이, 오늘 이 시각에도 댐 건설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동 공사에 대한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이 도리어 뻔뻔스럽게도 우리측의 「모함운운」이라고 날조선전을 자행하면서 민족파멸의 죄과를 어떻게 해서든지 모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측의 긍정적 반응을 기다리면서 국민생존 수호의 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응책을 신중하게 검토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심도 깊은 연구 분석과 국민전체의 한결 같은 여망 및 안보위기 극복의 지혜를 최대한 수렴하여 거국적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아왔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측이 강행하고 있는 금강산댐 축조의 가공할 위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는 정당한 국가보위적 자위조치로서 북한강 수계의 남쪽에 그들의 수공을 예방할 수 있는 대응댐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방대한 투자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는 이에 따른 대응댐 건설의 기술적 검토, 소요예산의 확보 등 그 준비에 이미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응조치가 국민 모두의 한결같은 굳건한 안보 의지에서 시발되고 있다는 데 대해 크나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며 북한측의 수공에 의한 또 하나의 적화야욕을 무실화시키는 「평화의 댐」 건설에 온 국민의 성원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북한측이 민족적 양심으로 돌아와 무모한 국력소모전을 포기하고 민족화해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민족 공동번영의 대도에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만약 북한측이 금강산댐 건설사업을 중지한다면 남북한 공유하천의 수자원 이용에 따른 모든 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민족애의 애정에 대해 북한당국이 긍정적으로 호응해 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측의 평화파괴 음모와 민족자해책동 앞에서 더욱 굳건한 단합의 자세로 이를 분쇄하고 우리의 생존과 국가안보를 지켜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처해 있습니다. 이 같은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은 한 덩어리가 되어 슬기와 용기를 발휘하여 북한공산집단의 대남 도발에 직면한 난국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국 방 부 장 관 이 기 백  
건 설 부 장 관 이 규 효  
문 화 공 보 부 장 관 이 용 희  
국 토 통 일 원 장 관 허 문 도

한편 북한측은 1986년 12월 25일, 금강산댐 건설과 관련하여 이른바 「전력공업위원회 백서」를 발표하고, 동 댐의 건설이 남측에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강원도 일원의 홍수피해를 없애주는 등 오히려 유익한 점이 많다는 종래의 주장으로, 우리측의 노력을 외면하였다.

북한측이 이와 같이 우리의 거듭된 제시를 묵살하고 금강산댐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측은 1986년 11월 28일 이규효 건설부장관 명의의 서한을 북한 정무원 전력공업위원장 앞으로 보내고, 남북수자원 당국회담을 열어 공유하천의 합리적 개발·이용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1987년 1월 16일에는 건설부장관 명의의 대북 성명을 통해 남북수자원 당국회담의 개최를 거듭 촉구하고, 북한측이 금강산댐 건설을 포기한다면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동 성명에서 우리측은 1986년 12월 25일 북한측이 발표한 금강산댐 건설관련 백서는 수공위협을 은폐하기 위한 날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동 댐 건설과 관련한 『입지조건, 안전성, 규모 등 기술·실무적 현안문제의 명확한 규명을 위해 남북한 관계전문가들로 공동조사단을 편성, 공동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의했다.

또한 우리측은 북한측이 『수자원의 공동이용과 공동조사를 위한 대화에 성의를 보이고 그 결과에 따라 북한강 수자원의 역류계획을 포기한다면』, 그로 인해 북한측이 감수하게 되는 전력 손실량에 대해 충분히 보상·공급해 줄 용의가 있음도 아울러 천명하였다.

우리측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댐 건설에 따라 필연적으로 고조될 남북간의 긴장상태와 무모한 국력소모전을 어떻게 해서든지 미연에 방지하고, 민족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해 보려는 일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그들의 금강산발전소 건설이 『남측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종래의 상투적인 주장으로 우리측 제의에 호응하기를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남북수자원 당국회담 개최를 제의한 1986년 11월 28일자 우리측 서한에 대해서는 접수자체를 거부, 우리측의 「평화의 댐」 착공을 불가피하게 함으로써, 남북한관계를 긴장과 장기적인 국력소모전의 양상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규호 건설부장관의 1월 16일자 대북성명 전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측은 최근 북한측이 강행하고 있는 금강산댐 건설이 초래할 가공할 파괴적 재앙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북한측이 댐 건설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남북공유하천의 수자원문제를 협의키 위한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북한측은 우리의 제의에 대해 어떠한 성의를 보이기는 커녕 국내외 여론의 지탄에도 아랑곳없이 갖가지 꾀변과 기만술로 사실을 왜곡, 민족 파괴의 수공위협을 은폐하면서 공사를 계속 강행하고 있다.

다시 한번 분명히 지적하거나 비록 한반도의 남북분단이 오늘의 현실이라 하더라도 언젠가 통일的那一天을 맞을 민족적 대비가 지상과제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금강산댐 건설을 강행함으로써 조국강토의 인위적인 형질변경으로 국토의 분단과 민족적 대립을 영구화시킨다면 이는 민족통일을 거부하는 민족사적 죄악을 범하게 될 것이다.

북한측은 그들의 금강산댐 건설에 대한 국내외의 빗발치는 비난여론을 의식, 지난해 12월 25일 소위 전력공업위원회 백서를 날조 발표하면서 대남 억지 비방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측의 주장은 전문적인 분석 결과 대남수공 위협을 숨기고 국내외 여론을 호도하려는 간악한 기도임이 드러나고 있다.

북한측 주장의 허구성을 예로 든다면 북한측은 금강산댐의 높이가 121.5m라고 하지만 댐의 저폭이 700m라는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기술상 하자가 없는 한 높이 200m 이상의 댐 축조가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막대한 저수량의 확보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북한측 4개댐의 물이 각기 다른 수로를 통함으로써 금강산(임남)댐과 무관하다고 애써 변명하고 있으나 기술상 검토에 의하면 여러 댐의 물이 금강산댐으로 자연유하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측의 주장 속에는 수공전의 위협요소를 교묘히 은폐시키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금강산댐 건설지역은 기반암이 석회암 지질 구조로 댐의 공사중이나 또는 완공 후에도 만수 자연붕괴, 그리고 유발지진까지도 예상되는 위험성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댐의 안전문제는 인위적 파괴든 자연적 사고든 우리 국민의 생활이 심각하게 걸린 중대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북한측이 금강산댐 건설계획을 즉각 중단하지 않는 한 우리는 자위적 조치로 「평화의 댐」 건설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서로 다른 민족이나 국가 사이에도 공유하천의 개발과 이용을 위해 이해당사국끼리 서로의 권익을 존중하며 서로 협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있음을 볼 때 같은 민족끼리 이런 문제를 남북이 대화를 통해 협의·해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것이 4천만 우리 국민의 한결같은 의지임을 「평화의 댐」 건설성급이 증명하고 있다. 남북간 공유하천의 수자원 공동이용 문제는 오늘날 민족과괴의 화근을 미리 막는 초미의 관심사로 그 원만한 타결이 시급하며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남북간의 화해와 신뢰를 조성하는 가장 현실적인 본보기가 될 것이다.

만약 북한측이 수자원 공동이용 문제에 대한 진지한 협의에 응해 온다면 남과 북은 상호 막대한 국력의 소모전을 피하면서 오히려 민족장래에 유익한 보람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확신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북한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의한다.

북한측은 금강산댐 건설공사를 즉각 중지하고 남북한 공유하천의 수자원 공동이용에 따른 모든 문제의 협의를 위한 남북간 대화에 진지한 자세로 호응해 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금강산댐 건설과 관련한 입지조건, 안전성, 규모 등 기술·실무적 현안문제의 명확한 구명을 위해 남북한 관계전문가들로 공동조사단을 편성, 공동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의한다.

이 경우 북한측이 동의한다면 국토개발의 효율성 제고와 국제적 공신력의 보장을 위해 국제전문기구의 공동조사 참여도 환영한다.

북한측이 수자원의 공동이용과 공동조사를 위한 대화에 성의를 보이고 그 결과에 따라 북한강 수자원의 역류계획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그로 인해 북한측이 감수하게 되는 전력손실량에 대해 충분히 보상 공급해 줄 용의가 있음을 천명한다.

이 같은 수자원 공동이용에 관한 우리의 현실적이고도 성의있는 제의와 진지한 노력에 대해 북한측이 지체없이 호응해 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2. 북한측 태도의 부당성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측은 자연개조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금강산댐 건설계획을 발표한 이래, 우리측의 거듭된 중단촉구에도 불구하고 동 공사를 계속 강행하고 있다.

북한측의 이러한 태도는 국토의 평화적 이용·개발에 역행할 뿐 아니라, 공유하천의 개발·이용에 관한 일반 국제관례에도 배치되는 것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하겠다.

특히, 제반상황을 감안해 볼 때, 동 댐이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개연성이 남북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측은 댐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와 공유하천의 개발·이용문제를 우리측과 협의해야 할 것이다.

### 가. 국토의 평화적 이용·개발에 역행하는 처사임.

북한측은 금강산댐 건설이 우리측에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측의 해당분야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그간 조사·연구한 바에 의하면, 금강산댐의 건설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측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첫째, 유하량 감소로 인해 한강유역의 농·공 및 생활용수의 부족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한강 수량을 현재 86억 톤 중 21%에 해당하는 18억 톤이나 감소시키게 되어 화천댐 등 5개 댐에서 발전하는 전력량을 24%나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둘째, 토양과 지질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지질적인 측면에서는 화학적인 작용으로 암석성분의 분해는 물론이고 일광의 일사량에 의한 화학분해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장기적으로 볼 때 지질토양의 분해풍화가 심화될 것이다. 또한 지표수 및 지하수의 감소로 토양의 질이 저하하고 생물의 서식이 어려워지며 지반침하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축수의 범람 시에는 토사가 산야를 뒤덮어 황폐화됨은 물론 유로까지도 변경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셋째,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유하량 감소로 하천수위면이 낮아지고 건화현상이 발생하며 수온의 저하 등 기상변화로 인해 내륙은 물론 동해안까지 동식물과 어족의 서식을 어렵게 하여 생태계의 조화와 균형을 파괴하는 등 생태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넷째, 기상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다한 축수로 인해 댐 남북의 기상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특히 축수지로부터의 연간 2억여 톤에 이르는 수분의 증발로 인하여 언제나 안개가 발생하며, 여름에는 습기가 과다하여 뇌우와 우박이 빈번하고 겨울에는 혹한과 폭설이 심하게 될 것이며 하곡과 연안지대가 건화되어 온도의 일교차가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다섯째, 댐 파괴시 우리의 생존과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금강산은 그 위치, 규모, 경제성의 면에서 볼 때, 발전이나 치수효과보다는 군사적 목적이 도사리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동 댐건설이 순수한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원자력 발전소나 비용이 훨씬 덜 드는 압록강 등에 수력발전소를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며 농·공업용수 공급이 목적이라면 하루 1백만 톤의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영흥의 용흥강을 이용하는 편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하겠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입지조건이 불리한 휴전선 인접지역에 경제성을 무시한 채 방대한 규모의 댐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유사시 군사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

금강산댐의 경우 연간 유입량이 약 18억 톤인데 비해 총저수량은 그것의 10배에 달하는 2백억 톤이나 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50억 톤의 용수를 제외하면 나머지 150억 톤은 비생산 사수, 즉 수공전을 위한 무기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금강산댐의 저수량이 9억 톤에 이르면 대남 안보위협 단계로 발전하게 되며, 이 단계에서 수문을 완전개방·방류할 경우에도 화천댐을 비롯한 하류의 의암·춘천·청평·팔당 등 4개 댐이 파손·유실될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나. 공유하천의 개발·이용에 관한 일반 국제관례에도 배치됨.

하천은 인류문명의 근원이며, 생존의 필수적인 자원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따라서 하천의 자유항행 및 이용·개발문제 등에 따른 분쟁은 최근 이란·이라크 전쟁의 예에서 보여 주듯이 동일한 수계에 있는 나라들을 전쟁상태에까지 몰아넣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간의 사례가 보여 주듯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국제관행과 협약에 따라 이해 당사국들이 이를 평화적으로 협의·해결해 왔다.

이민족간에도 공유하천의 이용·개발문제를 대화를 통해 협의·해결하는 것이 관례일진대 하물며 동족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될 금강산댐 건설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우리측의 협상제의를 묵살하는 북한측의 태도는 반민족적 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할 것이다.

특히 우리와 같은 분단국인 동·서독은 1972년 12월에 체결된 기본조약에 의해 [동·서독 국경위원회]를 발족시켜 오래 전부터 양독간의 하천의 공동이용 문제 뿐 아니라 홍수 등 제반 수재방지를 위해서도 긴밀히 협조해 오고 있는 바, 북한측은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동·서독간의 협조사례

- 하천 및 그에 부속된 수리시설 보수공사의 제 원칙에 관한 협정 (1973. 9. 20)
- 국경선상의 수재·홍수·산사태 등 재해방지에 관한 협정 (1973. 9. 20)
- 류백(L beck)만 공동어로에 관한 협정 (1974. 6. 29)
- 에커(Ecker)강 계곡수문 및 수로 규제협정 (1978. 5. 3)
- 상수도 공급시설 운영·관리 및 보수에 관한 협정 (1976. 2. 3)



○ 홍수방지용 저수지 건설·운영에 관한 협정 (1978. 11. 29)

다. 북한측은 댐건설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측의 회담제외에 호응해 나와야 할 것임

따라서 국제적 관례로 보거나 국토의 평화적 개발·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북한측에 대한 우리측의 금강산댐 건설공사 중단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북한측은 우리측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에 대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지는 커녕 댐 건설이 우리측에 아무런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자원의 이용·개발문제는 {내부문제가 아니라 제3자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변하면서 댐 건설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과거에도 북한측은 6·25 동란을 앞두고 우리측에 공급해 오던 전력과 수자원을 일방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생업에 고통을 준 선례가 있다.

그러하던 북한측이 이번에는 그들의 군사적 목적을 위해 또다시 남북으로 흐르는 수맥까지 끊고 삼천리 금수강산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으려 한다면 이는 반민족적 행위로 규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남북한 수자원의 공동개발·이용문제를 북한측과 협의·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해 왔다.

1982년 2월 1일 [20개 시범실천사업]의 제15항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1984년 11월 15일 제1차 남북경제회담에서는 남북간의 공동사업으로서 제기한 바 있다.

북한측은 민족적 양심을 회복하여 금강산댐 건설사업을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하고 우리측의 회담제외에 호응해 나오므로써 동 댐건설로 야기될 남북간의 무모한 국력소모전을 사전에 방지하고 민족의 공동번영 문제에 대해 함께 협의·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 3. 주요 반응

북한측이 지난해, 발전소건설을 구실로 북한강 수계에 금강산댐 건설공사에 착공한데 대해, 도하 각 신문들은 이를 {6·25 후 최대의 전쟁책동}으로 규정하고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을 안겨 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북한측에 대해 금강산댐 건설공사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논지의 사실을 일제히 실었다.

우리측의 거듭된 공사 중단촉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동 댐 건설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이로인한 남북간의 긴장고조와 [위기발생]에 대해서 전적으로 북한측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우리 정부에 대해 상응한 [자위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북한측의 금강산댐 건설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우리가 대응댐을 건설할 경우에는, 남북관계가 필연적으로 긴장과 장기적인 국력소모전의 양상으로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북한측이 상호무익한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유하천 수자원공동이용]을 위한 남북대화에 호응하는 것만이 문제를 푸는 순리이며 [최선의 길]이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금강수전」 공사 즉각 중단하라  
-안보상의 음모 도사려있다-

경향신문(1986. 10. 30)

북한이 최근 북한강수계에 착공한 금강산발전소건설 공사는 장차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을 안겨 줄 잠재적 위험이 있다는 관점에서 이 공사의 즉각적인 중단을 우리는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측의 발표로는 새로 건설되는 금강산발전소는 북한내에서 가장 큰 발전소가 될 것이라고 한다. 원칙적으로는 북한이 북한내에 어떤 종류의 발전소를 세우든 그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다.

하지만 이번에 착공한 금강산수력발전소는 남한을 관류하는 북한강 상류의 물줄기를 이용하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게다가 이 공사는 남으로 흐르는 유로를 변경하지 않고 자연낙차를 이용하는 발전소가 아니라 북한의 회양지역에서 30~60km나 되는 구간에서 수로를 뚫어 물줄기를 반대방향인 원산쪽으로 역류시키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변칙 공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렇게 될 경우 북한강 유역에 살고 있는 우리쪽 주민들은 갑작스런 유량의 감소로 인해 당장 심각한 물기근 사태와 수질오염·생태계변화·발전량격감 등의 타격을 입게될 것이 뻔하다. 북한강 수계로 흐르는 물은 연간 86억t이나 되는데 북한에서 물줄기를 돌릴 경우 18억t가량 줄어들어 하류쪽 농업용수에 큰 타격을 주고 화천이남 5개 댐의 발전량도 24%나 격감된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금강수전의 정확한 위치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북한 최대의 발전소라면 우선 수량이 풍부해야 하므로 북한강과 금강천이 합류하는 지점인 창도군 임남리 부근의 협곡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한강대홍수 10배 위협

우리는 북한의 이 같은 대규모 발전소건설을 액면 그대로 [발전량의 증가]필요성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될 줄 안다. 북한은 정상인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상천외의 짓을 예사로 저지르는 비이성적 집단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저질러 온 기만적인 북의 행동을 토대로 이번에 필요 이상으로 큰 규모의 수력발전소를 휴전선북방 10km지점에 만들고 있는 그들의 속셈을 진단해본

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안보상의 음모가 도사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정까지도 가능해진다.

북한강의 물줄기를 인위적으로 동해쪽으로 역류시켜 3백m정도의 낙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댐의 높이가 2백m 이상은 돼야 하며 최대저수능력은 자그마치 2백억 t에 달하게 된다는 계산이다. 이처럼 방대한 양의 물을 담은 댐이 만약에 자연적 재해로나 인위적인 파괴로 일시에 무너져 내릴 경우 우리가 입을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건설부당국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댐이 우리에게 잠재적 위협을 주게되는 시기는 대략 9억t의 물이 담길 때부터이며 이때 붕괴되면 초당 30만t의 급류를 쏟아 84년 9월 한강대홍수 때의 10배에 달하는 수마가 수도권일원을 휩쓸게 된다는 것이다.

9억t의 재앙이 이렇진대 만일 2백억t의 물을 다 채운 거대한 댐이 터진다면 화천이남의 5개 댐이 순식간에 연쇄적으로 파괴되면서 합쳐진 대홍수가 강원 경기 서울을 덮쳐 한반도의 허리부분은 완전히 수몰되는 중대한 국면을 맞게된다.

#### 명백한 국제관계 무시

북한의 일개 발전소건설공사를 놓고 우리가 너무 확대 해석하는게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른다. 북한도 인간집단인데 설마 댐까지 고의로 파괴해 남쪽을 못살게 굴 것이냐고 회의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날의 무수한 경험을 통해 북한이 종잡을 수 없는 위험집단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들이 인간적인 양심과 동족의식을 지녔다면 2백만 명을 때죽음시키고 1천만 명의 이산가족과 전 국토를 초토화시킨 6·25 남침은 안했을 것이다. 그들이 정상적인 머리를 가졌다면 7·4 공동성명을 낭독하던 땅 밑으로 남침용 땅굴을 파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에게 일말의 이성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도끼로 사람을 쳐죽이는 8·18 만행이나 우리의 국가원수와 외교사절을 멀리 버마까지 쫓아가서 집단 살해할 음모는 꾸미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이 휴전선 근접지역에 필요이상으로 거대한 수력발전소를 세우는 것을 우리의 안보문제와 결부시켜 보려는 것도 그들이 언제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광적 집단이기 때문이다. 단지 발전목적만을 위한 것이라면 수로까지 변경할 이유는 없으며 발전용량은 계획보다 축소시켜도 충분하다.

굳이 그만한 규모가 필요하다면 물줄기의 역류로 인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우리쪽 주민들의 처지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정부와 사전협의를 했어야 했다.

금강산발전소공사로 남쪽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는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일언반구 사전통보도 없이 물줄기를 돌려버리는 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는 것은 국토의 평화적 이용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하천에 관한 국제관례도 무시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 위기발생은 북한책임

하천을 둘러싼 분쟁은 종종 국가간의 정면충돌로 발전된 예가 적지 않았다. 나일강 갠지스강 파라나강 등 국제공유하천의 경우는 이해당사국간의 분쟁이 있을 후 하천공동협력위를 만들어 평화적인 공동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6·25전에도 남쪽으로 이어진 송전선을 예고도 없이 단전했는가 하면 연백평야의 관개용수를 차단, 우리 농민들의 생업에 치명타를 안긴 가증스런 전력이 있다.

그런데 남으로 흐르는 물까지 반대방향으로 돌리는 이번 금강산발전소 건설계획은 그 어떤 경우보다도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중대한 위협이 될 문제의 금강산발전소공사를 즉각 중단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물의 유로를 딴 방향으로 돌리려는 계획만은 변경시켜 줄 것을 북한측에 강력히 요구한다. 만일 북한측이 우리의 이와 같은 이유 있는 항의와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위해요인이 되는 공사를 그대로 강행한다면, 그로 인해 빚어질지도 모르는 일체의 분쟁위기는 전적으로 북한측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엄중 경고 해둔다.

#### 수공전음모에 자위권발동 당언

서울신문(1986. 11. 7)

이기백국방장관은 어제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 수력발전소 댐건설공사와 관련, 그들의 수공전음모를 거듭 폭로하면서 [북한측이 공사를 강행할 경우 우리는 자위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결과는 전적으로 북한이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북한 공산집단은 과연 금강산 댐 건설 속에 숨긴 검은 음모대로 남침적화를 위한 수공전을 감행할 속셈인가. 북의 김일성은 많은 내외의 군사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듯이 한반도 무력강점을 위해 [최후의 도박]을 획책하려는가. 북한이 은밀하게 추진하며 건설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금강산 댐 건설은 이러한 우려와 물음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소련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일성은 생전에 한반도 무력적화통일을 위해 [최후의 한차례 도박]을 할지 모르며 전면무력침공은 아니더라도 테러행위의 자행, 한국에서의 학생난동 배후조종 등을 그 도박의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일찌된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 김일성은 1970년대 이후 1980년대에 들어 현격하게 우열을 드러낸 남북한 경제력과 군사력의 균형으로 해서 갈수록 대남적화의 길이 멀어지자 초조한 나머지 또다시 언제 제2의 6·25와 같은 전면기습남침을 벌일지 모른다.

북한은 댐 건설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이해당사국인 우리와 사전에 단 한 마디의 협의나 통보도 없었다. 그들은 이 엄청난 흉계가 폭로되고 난 후에도 한동안 침묵하다가 이에 대한 국제적 여론이 비등하고 국민적 규탄이 나오자 댐의 안전성과 견고성에 각별한 주목을 돌리고 있다고 변명했다. 또한 {민족 내부문제이므로 부질없이 국제기구들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금강산댐 건설이 명백히 목적하는 바 우리 안보에 미치는 위해요소와 민족생존에 관계되는 잠재적 위험은 결코 그들이 주장하는 댐의 안전성과 견고성에 대한 [주목]만으로 해결되거나 호도될 수는 없다. 특히 그것이 갖는 군사전략 면에서의 수공전에 상도할때 실로 가공할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 무모한 파괴적 댐건설은 근본적으로 중단돼야 마땅한 것이다. 2백억t의 물을 저수하게 되는 댐의 안전문제는 여차할 경우 그 피해지역인 한강유역에 거주하는 1천5백만 명의 우리 국민 생존을 위협하게 된다. 우리의 군사전략면에서 한수 이북의 우리 군이 배수의 진을 강요당하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북한은 계산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노린 수공전술이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북한이 댐 건설을 위해 별도의 공사부대를 투입하고 있으면서도 정규군을 빼내 투입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건설이라는 미명아래 댐공사에는 물론 전후방 군사관련공사에 공사부대를 투입하고 있는 것은 북의 병력이 그 숫자만큼 사실상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들이 모두 일단 유사시에 현대화된 장비를 갖춘 전투요원이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북한은 댐건설과 때를 같이해서 미그 23기와 휴즈 500계열 헬리콥터부대를 전력화했고 전방지역에 2개 비행장과 병력장비 은닉용 갱도를 거의 완공했다. 남쪽과 비슷한 지형에서 전군남침훈련을 끝냈다.

북한은 댐건설로 위장된 수공전음모 뿐 아니라 휴전선일대의 소상한 군사정세분석을 우리가 끝내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무익한 민족 자해행위  
-이문공의 대북제의에 공감하며-

조선일보(1986. 11.22)

세계 곳곳에 명산이 있지만 이름난 산일수록 그 아름다운 원형에 손상이 갈 공사를 하는 법은 없다. 알프스산을 끼고 있는 스위스나 이탈리아·프랑스 등의 나라들이 그곳에 거대한 댐을 만든다는 소리는 없다. 일본의 부사산도 그 경관을 해칠 어떠한 공사를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금강산은 예부터 우리의 명산이다. 우리 국토는 비록 41년간이나 양분된 상태에 있지만 길고도 먼 역사의 안목으로 보면, 한민족 공유의 땅임에 틀림없다.

옛 중국사람도 [고려에 태어나 금강산을 한 번 보고 싶다(願生高麗國 一見金剛山)]고 했을 정도로 우리 금강산은 민족과 국토의 자랑스러운 명산이다.

그 명산에 북한당국자들이 거대한 댐을 건설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명산의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국토를 황폐화 할 우려가 있으며, 가장 긴박한 문제로는 북한이 매우 비경제적인 그 댐을 군사적으로 악용할 위험이 있을 것으로 직감했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북한이 공식으로 댐 건설기공식을 가진 이래 21일까지 세 차례나 그 공사의 부당성과 위험성을 지적, 경고하였다.

이규효건설부장관이 금강산댐의 구조와 한강유역에 대한 위험한 영향 등을 지적했고, 이기백국방장관이 그 군사적 악용에 대한 경고를 한데 이어, 21일 이웅희문공장관이 또다시 경고와 대응책을 밝혔다. 이장관이 특히 {북측이 성의를 보이면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위험한 장난을 일삼는 문제아에겐 무모한 장난이 어떤 위험한 결과를 빚을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그 장난을 스스로 멈출 수 있게 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문공의 협상제의는 환영할만 하다. 이장관의 지적대로 {금강산 댐 공사를 계속 감행한다는 것은 남북간의 무모한 소모전을 강요하게 되는 것}이다.

남북을 막론하고 천연자원이나 민족자본이 가뜩이나 부실한 우리 나라가 그 동안 상호간의 군사적 대결로 소모한 국력을 수량화해서 생각해 볼 때, 한민족이라면 누구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분단국가라도 독일은 우리처럼 피를 흘리지 않았으며, 지금도 혁명 또는 전쟁을 위한 소모나 낭비를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미 3년여의 전쟁을 겪었음에도 또 다른 전쟁위험 앞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나간 전쟁이나 앞으로의 전쟁위험이 누구 탓이었는지는 김일성을 포함한 몇몇 유력한 북한당국자들도 이미 시인한 바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 민족을 전쟁의 위협으로 전전긍긍하게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어쩌면 세계가 공인하는 한강의 기적 위에 올림픽까지 치르게될 남쪽 동포들의 열성과 피땀어린 성공을 시기(猜忌)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한강변에 만들어놓은 올림픽시설물들을 수몰시키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북녘 동포들에게 이 나라와 민족을 것처럼 근시안으로 보지 않기를 권하고 싶다.

인간의 지혜에 불과한 이데올로기는 짧고 민족역사는 유구하다는 것을 깨달아주기 바란다. 그대들과 이웃한 중국대륙에서는 10억의 국리민복을 위해, 마르크스 레닌의 혁명유일노선을 이미 포기

한지 오래이다. 무리하고 무모한 금강산댐공사는 민족의 가슴과 역사의 눈으로 재고하길 바란다. 북한은 이제 더 이상 무익한 국력소모경쟁일랑 지양하고, 민족공동의 역사발전을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라.

금강산댐 중단하라  
-북한은 민족적 양심 되찾아 대화에 응해야-

동아일보(1986. 11. 27)

우리 나라 역사를 배운 사람이면 살수대첩을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고구려 수나라의 침략군을 물리친 빛나는 일전이었다.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은 수군 30만 대군을 평양부근까지 유인했다가 북으로 몰아치면서 살수(지금의 청천강으로 추정)를 반쯤 건널 때 일제공격을 가해 완전 섬멸한 것이다. 말하자면 수공작전을 써서 대승을 거둔 셈이다.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과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화천북방 대응댐 건설 계획을 지켜보면서 살수대첩을 상기하는 뜻은 자명하다. 우리의 옛 조상들은 외적의 침략군을 물리치기 위해 수공작전을 썼는데, 오늘의 후손들은 동족을 해치기 위해 한강물을 이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강력한 중국세력에 당당히 맞섰던 고구려인의 기상에 비기면 오늘의 모습이 초라하고 서글프게 느껴질 따름이다.

더구나 경제적 실효가 별로 없는 금강산댐을 건설하여 서울 시민의 머리 위에 물세례를 퍼붓고 한강유역의 국토를 수몰시키겠다는 의도라면 말문이 막히지 않을 수 없다.

온 국민이 반대를 하고 국제적인 여론을 통한 압력을 가해도 북한이 공사를 중단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우리 정부는 화천 북쪽에 6천억원을 들여 대응댐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북의 수공작전에 속수무책으로 있을 수는 없어 수도권 방위를 위한 대응댐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 애당초 북의 금강산댐 계획이 없었다면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대응댐 건설계획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토의 훼손과 생태계의 변화도 초래되지 않을 것이다.

6천억원이면 농촌부채의 상당부분을 탕감해줄 수도 있고 도시빈민의 주택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거액이다. 이밖에도 유익한 사업에 돈을 쓸 곳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국가재정 형편과 주민의 생활난을 돌보지 않고 멈출 줄 모르는 군비경쟁에 골몰하고 있는 북한 때문에 적지않은 국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터에, 또 대응댐 건설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다.

경제적 실리도 없는 대응댐 건설에 돈과 땀을 쏟아붓는 것은 국력의 소모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명백하게 현존하고 예상되는 재난을 뚫히 보면서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도 없는게 우리의 입장이다. 그렇지 않아도 금강산댐, 김일성 사망설 등으로 해서 안보에 대한 위기 의식이 높아가고 있는 때에 적절한 대응책마저 내놓지 못한다면 국민의 불안감은 건잡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응댐 계획을 밝힌 4부장관의 담화문은 『북한이 댐공사를 중지하면 남북한 공유하천의 수자원 이용에 관한 문제들을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북한은 제발 이 같은 제의를 받아들여 대응댐 건설로 쓸모없게 된 무익한 공사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말고 동족과의 대화의 광장에 나와 주기를 바란다.

한강물은 북녘땅에 흐른다고 해서 북한의 것만은 아니다. 우리 조상이 마시고 지켜온 한민족 공동의 자산이다. 우리는 금강산 댐건설을 둘러싼 남북한의 소모전을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도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루빨리 북한이 민족적 양심을 되찾아 댐공사를 중단하고 이에 따라 대응댐 건설계획도 백지화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국력소모 원인 제거돼야

조선일보 (1986. 11. 27)

정부는 지난달 22일 이래 온 국민이 불안하고 궁금해 하던 문제에 하나의 흔쾌한 해답을 분명히 해주었다. 26일 관계 4부장관이 북한측의 대남수공댐에 대응할 새로운 댐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이 그것이다.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국민된 입장에서 곰곰 생각해 볼 때, 이런 딱하고도 바보스러운 일이 어디 또 있는가도 싫어진다. 북한측이 방류할 수량을 최대한으로 받아 저수할 수 있을만하다는 이 대응댐의 공사비만도 6천억원이나 들 것이라고 하니 말이다. 조사에서 설계-축조까지는 8~9년이 걸린다고 한다.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같은 규모의 대역사라면 동원해야 할 인력도 수만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만약에 온 나라와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공사라면 다소 무리가 가는 공사비라도 참을 수 있을 것이며, 인력은 많이 동원될수록 그만큼 고용확대에도 연결될 것이니 얼마나 좋을 것인가.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공사는 안할 수만 있다면 안할수록 좋을 것이며, 6천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쓰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러자면 이 무익한 공사를 손대지 않아도 좋을만큼 그 원인도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마치 북한당국자들이 6·25 남침전쟁을 도발했기 때문에 일단 철수했던 미군을 다시 오게 한거나 다름없는 이치에서이다. 그때 만약 북한이나 소련이 무력으로 적화통일을 시도하지 않았던들 주한미군을 정당화 시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같은 의미에서 북한이 만약 지금이라도 백해무익한 국력소모경쟁을 유발케한 금강산댐 공사를 중지시킨다면 우리도 그 대응댐건설의 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 민족 전체를 위해 득이 될 것이며, 늦을수록 손이 될 것이다.

북한측은 「전력문제를 우리식대로 해결해 나가며 주체공업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투쟁」으로 굳이 금강산댐을 건설하려 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휴전선에 불과 10km 미만의 험준한 산악지대에 물을 역류시켜야 하는 난공사를 벌여야 하는가. 흐르는 물을 역류시키려 함은 자연에의 반역일뿐만 아니라 대남적화 통일을 실현시키기 위한 4대군사노선의 일환의 「전국토의 요새화」 작업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 발전용도 아닌 대응댐을 만들어야 하는것은 오로지 우리를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멸망케 하려는 북한측의 악의적인 군사작전에 대한 자위책으로서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왜 그 엄청난 재력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가.

현재 건설중인 중부고속도로의 건설비는 3천8백억원이며 획기적인 시흥-화성 지역 간척사업비는 7천 9백억원 규모라고 한다. 북한당국이 만약 이 무모하고도 무익한 댐공사를 중지한다면, 그들이 써야 할 1조원 이상의 자금과 우리가 투자 할 6천억원으로, 같은 국토의 남북을 흐르는 하천의 공동이용을 위한 역사적인 국토개발사업을 벌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밖에도 세계의 갈채를 받고 후손들이 숭양할만한 민족공동의 평화적 사업은 얼마든지 생각해 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서로 못난짓을 세계와 후손들에게 굳이 보이고 남기려 하는가. 북한당국자들의 민족적 자각과 양심에 다시 한번 호소하고자 한다. 휴전선을 사이에 둔 남북간의 무익한 댐건설 경쟁만은 하지 않도록 협조함으로써 한민족의 대화합을 세계에 과시하도록 하자.



# 남북대화 제43호

(1987. 4. ~ 1987. 9)

# < 목 차 >

제1부 평화통일예의 일괄된 의지 재확인 .....	3
1. 전두환대통령,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 수락 재촉구 .....	3
제2부 남북외무장관 회담제의 .....	11
1. 제의의 배경 .....	11
2. 남북외무장관회담 제의 .....	15
3. 남북외교장관회담 제의와 우리의 입장 .....	18
4. 국내외 주요반응 .....	20
제3부 IOC 주재하의 남북체육회담 .....	28
1. 제4차 회담 .....	28
2. 그 이후의 경과 .....	32
3. 국내외 주요반응 .....	33

## 제1부 평화통일예의 일괄된 의지 재확인

### 1. 전두환대통령,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 수락 재촉구

-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제4차 전체회의 개회사 -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는 1987년 6월 3일 상오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국내외 자문위원 9,56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동 자문회의 의장인 전두환대통령은 개회사에서, 남북한 간의 『모든 핵심적인 문제들을 보다 책임있게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이 하루속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이 열릴 경우 『이미 제시한 의제 등은 물론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거두어 온 경제·기술을 비롯 제반분야의 결실을 북한겨레와 함께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하였다.

이어 전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평화적인 방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성취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런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여·야의 구별이 있을 수 없고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반세기에 걸쳐 『무력적화 통일노선을 추구해 온 이단세력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적어도 통일에 관해서만은 초당적인 인식과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전대통령은 서울올림픽 문제에 언급, 『서울올림픽이 동서화해의 대제전이기에 앞서 분단된 우리 민족의 대화합을 이루는 커다란 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온 겨레의 간절한 소망』임을 지적하고, 북한측은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일체의 민족자해행위를 포기하고 겨레의 영광과 번영을 가꾸는 길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전대통령은 북한당국에 대해 겨레의 통일열망에 부응, 기존대화의 재개에 지체없이 호응해 옴과 동시에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 제의에 대해서도 성의있게 호응해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전두환대통령의 제4차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개회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애하는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여러분과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6천만 동포 여러분.

우리는 오늘 솟아오르는 민족의 저력과 자신감 속에 조국의 선진과 통일을 향한 힘찬 전진을 새롭게 다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본인은 먼저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가 지난 6년 동안 범국민적 통일의지를 결집하는 구심체로서 훌륭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남다른 정열과 신념으로 봉사해 오신 자문위원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제5공화국 출범이래 통일과 번영을 향한 온 국민의 강렬한 의지를 바탕으로 세계가 놀라고 부러워하는 국력의 신장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의 각 분야에서 자율과 개방이 확대된 결과 우리 사회 전체에 새로운 활력이 넘치고 있으며, 성장과 발전의 추세가 거대한 새 역사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적 정부이양을 위한 정치일정과 절차를 착실히 밟아감으로써 이 땅의 민주발전사에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간 이룩해 왔고 또 이제 이룩해 나가고 있는 성취와 발전에 따라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주체적인 역량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통일은 우리의 국력과 의지와 노력으로 반드시 달성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가능

성이 온 국민의 마음 속에 튼튼히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욱 굳건한 단합과 결연한 의지로 국운도약의 호기를 기필코 살려서 번영된 통일 민주국가의 길로 확실하게 들어서야만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고 또 다시 혼란과 빈곤의 과거로 되돌아 가게 된다면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민족통일의 길은 우리에게서 멀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대한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는 지금, 우리 사회일각에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급진적인 좌경논리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자유와 민주 그리고 복지의 이상을 실현하는 통일민주공화국의 건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통일은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평화적인 방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성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여·야의 구별이 있을 수 없으며,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반세기에 걸쳐 무력적화통일노선을 추구해 온 이단세력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적어도 통일에 관해서만은 초당적인 인식과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PI>

동포 여러분.

분단과 전쟁으로 얼룩진 불행한 민족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 역사를 여는 길은 무엇보다 동족간의 대결과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와 화합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데 있습니다.

본인은 그러한 신념에 따라 겨레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합리적인 조치로서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과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을 제의하고, 북한측의 호응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남북대화로 쌍방간에 개방과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 등 일련의 남북대화를 주도했으며, 나아가서 이산가족 및 예술공연단의 상호 교환방문을 성사시켰던 것입니다.

비록 제한적이거나 이러한 남북간의 개방과 교류는 민족화합의 가능성을 보여준 소중한 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북한측은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향한 겨레의 여망을 외면하고 모든 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안겨 주었습니다.

더구나 우리 겨레를 파괴로 이끌 수공목적의 금강산담을 축조하고 군사적 대결과 도발태세를 강화함으로써 생존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족의 통일염원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아울러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은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일체의 민족 자해행위를 포기하고, 겨레의 영광과 번영을 가꾸는 길에 하루빨리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북한당국이 겨레의 통일열망에 부응하여 기존대화의 재개에 지체없이 호응해 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북한측은 본인의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 제의에 대해서도 성의있는 반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남북한간의 모든 핵심적 문제들을 보다 책임있게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회담이 하루 속히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본인은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이 회담이 열릴 경우 이미 제시한 의제들은 물론,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거두어 온 경제·기술을 비롯한 제반분야의 결실을 북한의 거래와 함께 나누는 문제도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북한측은 우리의 이러한 포용력 있는 제의를 진지한 자세로 받아들여 회담의 개최에 선뜻 다가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같은 민족으로서 최대한의 아량과 인내를 가지고 북한의 서울올림픽 참가를 간곡히 권유하고 있습니다.

88 서울올림픽에는 세계의 모든 회원국들이 이념과 정치체제의 차이에 관계없이 참가하여, 올림픽사상 가장 성대한 친선과 화합의 축전을 이룰 것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올림픽이 동서화해의 제전이기에 앞서 분단된 우리 민족의 대화합을 이루는 커다란 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온 거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남북의 온 거래가 세계 만방에 한민족의 자존을 더욱 높이고, 조국의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북한측은 이 자랑스러운 인류 평화의 축전에 혼연히 참가해야 할 것입니다.

자문위원 여러분.

우리가 통일기반을 더욱 굳게 다져 나가는데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정치와 사회의 안정과 국민간의 단합, 그리고 통일에 대한 투철한 신념이라고 하겠습니다.

본인은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자문위원 여러분께서 안정과 화합의 구심점으로서, 또한 확고한 통일국론을 다지는 향도로서, 더욱 헌신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합니다.

선진조국을 창조하고 평화통일을 이루려는 우리의 전진에는 잠시의 중단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는 본인의 정부이양 이래에도 범국민적 통일의지를 결집하는 구심체로서 그 조직과 기능을 부단히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무궁한 발전과 자문위원 여러분의 알찬 보람 속에, 우리 손으로 선진과 통일의 날을 앞당겨 실현할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합니다.

위대한 민족사를 앞장서 개척하고 계시는 자문위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1987년 6월 3일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의장  
대통령 전두환

개회식이 끝난 후 속개된 회의에서 허문도 국토통일원장관의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허문도 통일원장관은 동 보고에서 남북대화화 교류·협력의 길을 트기 위해 그간 우리 정부가 경주해 온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우리의 연례적인 군사훈련을 문제삼아 진행중이던 대화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의 남북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족의 번영과 재결합을 이룩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인내와 아량으로 북한측을 대화의 탁자에 앉히는 사랑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허장관은 우리의 국제적 지위향상과 이에 따른 주변상황의 변화로 조만간 본격적인 대화

와 실질적인 교류·협력의 시대가 닥쳐올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첫째, 북한이 남북대화를 선전적 차원에서 이용하는 그릇된 자세를 버리고 생산적 대화에 나오도록 계속 유도해 나갈 것이며,

둘째, 북한의 모험주의에로의 질주를 견제하면서 『형다운 입장』에서 남북대화를 포용적으로 주도해 나갈 것이며

셋째, 본격적인 대화에 대비하는 만반의 태세를 아울러 갖추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문도 통일원장관의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족통일사를 주도하고 있는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여러분!

민족의 성업인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투철한 신념과 사명감으로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에 헌신해 온 자문위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작년 한해 민족사 전진에서 빛나는 이정표를 세움으로써 국민적 자존과 자신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양되고 있습니다.

국제수지흑자의 원년을 이룩하고 외채를 감소시킴으로써 민족이 주체적으로 발전해 나갈 바탕을 굳건하게 다졌을 뿐만 아니라, 1986 아시아 경기대회와 성공적 개최를 통해 국가적 활력과 민족적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 민족간 총력의 겨룸에 있어 우리의 저력이 언젠가는 일본을 덮고 뺏어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뜻깊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민족이 웅비를 가로막던 역사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동아시아의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서 우뚝 선 오늘의 우리 모습은, 뼈를 깎는 고통과 인내가 가져다준 당연한 결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민족이 흥룡기적 대운세를 타고 있음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숙원인 『잘사는 나라』, 『복된 나라』를 이 땅 위에 건설하는 실로 영광된 주역으로 점지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민족의 최대 정치과제인 평화통일 또한 먼 꿈이 아니라 눈 앞의 실현가능한 대상으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통일은 우리의 생존과 자유와 번영이라는 하나의 연장선 위에 있는 것이며 우리가 못살기 위해서, 헐벗기 위해서 기구하는 것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민족사의 정통을 이어받는 정도가 민족전체의 안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있음을 믿고, 자유와 평화와 복지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가꾸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분단 40년간에 걸친 『민족 잘살게 하기 경쟁』에서 이미 확연하게 저울대가 남쪽으로 기울어 버린 사실, 이것이야말로 남과 북 어느 체제가 우월한 것이냐의 판가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민족에 뿌리하지 않은 붉은 이단사상을 접목해서 세운 저 북쪽의 허구의 가건물 속에서, 그들은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일구는 동안 반자유와 빈곤을 향한 역사적 후진만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들은 선진화의 철저한 패배를 날조된 역사와 개인 우상화, 그리고 빈곤의 평등화로 가리우고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폐쇄와 압제의 수렁 속으로 더욱 깊이 몰아넣고 있습니다.

최근 김만철씨 일가의 탈출이 보여주듯이 이미 그들은 자멸의 길을 밟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통일의 명분과 대의를 북의 압제와 빈곤과 공포, 거짓과 어거지의 족쇄로부터 우리의 형제 동포들을 구출·해방한다는 보다 강력한 인류적 측면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북과 경쟁하기 위해 우리의 부를 축적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민족의 이익을 넓히고 민족의 자존을 높이는 일념으로 풍요의 씨를 뿌려 왔으며, 지금이야말로 한맺힌 북녘의 형제들을 행복의 대로로 함께 인도해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동포애의 발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제대로 『사람구실』을 할 수 있다 하겠습니까.

따라서 오늘에 당면한 평화통일의 실천적 과제 또한 우리가 만형의 의연한 자세로 북을 좀더 폭넓게 포용하면서 자유와 개방의 물결로 포위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국제정세의 변화와 시대의 조류에만 맡겨놓을 수 없으며, 북의 사회에 자유와 풍요의 훈훈한 바람을 끊임없이 불어 넣어줌으로써 얼어붙은 땅을 녹이고 닫힌 가슴을 열어 제쳐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절벽 끝으로 줄달음치는 이단아를 포용하고 타이르는 그러한 우리의 정성은, 통일에의 대행진을 가속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정부는 북의 이단적 만행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교류와 협력의 길을 트기 위해 그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작년초 우리의 연례적인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을 문제삼고, 진행 중이던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경제회담 등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이래, 1년 반이 지난 오늘까지 대화의 마당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더우기 북한측은 그동안 대화재개를 위한 우리측의 아량과 성의를 외면하고 금강산댐 공사를 강행하는 등 오히려 남·북한 사이에 새로운 불씨를 만들어 긴장을 고조시켜 왔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는 금년초 국정연설에서 북한측에 대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남북간에 불신을 조장하는 무모한 금강산댐 공사의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남북간의 신뢰회복과 긴장완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남북한수자원 공동이용에 관한 회담개최와 함께 중단된 적십자회담과 경제회담 등에 조속히 호응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북한측의 반응은 이른바 3자회담과 정치·군사회담 등을 전제조건으로 한 실질적 대화의 거부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비록 북한측이 지금은 우리가 요구하는 대화재개를 거부하고 있지만 남북관계의 개선과 긴장완화, 그리고 평화통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는 역사의 흐름과 겨레의 열망을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금의 남북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족의 번영과 재결합을 이룩하기 위하여 앞으로 인도와 아량으로 북한측을 대화의 탁자에 앉히는 사랑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첫째, 북한이 남북대화를 선전적 차원에서 이용하는 그릇된 자세를 버리고 생산적 대화에 나오도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북한의 모험주의에로의 질주를 견제하면서 『형다운 입장』에서 남북대화를 포용적으로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세계, 앞으로 남북간 국력격차는 더욱 심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제적 지위향상에 따른 안보 환경도 크게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도 실질적인 대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같은 본격적인 대화에 대비하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남쪽의 4천만은 이제 후진과 침체의 허물을 벗어 던지고 선진을 향한 마지막 용틀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이 땅위에서 세계의 기운들이 다 모여 평화의 큰 마당을 벌이게 됩니다.

이는 바로 우리가 선진나라됨을 세계에 고하는 북소리요, 우리 민족사가 세계사와 맥을 잇는 성스러운 제전이며, 우리 한민족이 새로이 하나됨을 밝히는 횃불인 것입니다.

따라서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야말로 우리가 소망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할 징검다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쪽 올림픽』을 외치거나 올림픽을 훼방 놓으려는 자들을 우리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올림픽의 성공을 겁내 하거나 시기하는 무리들, 북의 붉은 집단과 남쪽에서 『민중』을 외치는 분자들, 이들이야말로 반통일론자이며 나아가 반민족주의자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호기 속에 위기요소를 숨겨두고 있습니다.

모험주의, 불장난에 틈을 엿보는 저쪽 북의 집단은 남은 악을 다 써가며 우리 사회내부에서 좌경의 악성곰팡이가 피어나도록 부추기는데, 우리가 서있는 오늘 여기의 터와 때를 외면하고 남북간에, 혹은 세계적인 규모에서 입증돼버린 자유체제의 우월이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좌경 관념 속에서 허우적 댄다면 그것은 북의 장단에 춤을 추고 민족을 망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열이 아니라 화합이며 혼란이 아니라 안정인 것입니다.

민주화와 통일의 가면을 쓰고 폭력과 선동으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엮으려는 세력이 우리 안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고통스런 여정에 종지부를 찍고 흥룡의 대도로 나아가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얼마가지 않아 북의 압제집단이 나가떨어지고 통일조국의 영광스런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마당에, 우리 내부의 갈등과 반목으로 지금까지의 성취물을 무산시키고 주변정세의 객체로 다시 전락하고 만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안보환경마저 주변강대국간의 이해관계 변화로 불안정한 양상을 띠고 있는 이때, 우리 사회 내부에서 사상의 무장해체를 간교하게 시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마당을 내어준다는 것은 호기를 버리고 위기를 택하는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여러분!

본격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와 교류와 협력의 시대는 이제 곧 닥쳐오고야 말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우연의 소산이 아니라 인간의지의 결실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때를 대비한 실천역량을 배양하는데 함께 떨쳐나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동포 해방의 대업은 그 어느 누가 대신할 수 없으며, 오늘의 흥룡을 일구어낸 우리 자신이 바로 그 담당자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국민 모두의 가슴속에 평화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확산시켜 나가는 동시에, 국민적 합의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여 국민적 대단합을 도모해 나가는 데 여러분이 앞장서 줄 것을 진심으로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자문위원 여러분이 새통일사를 이루는 주역으로서, 달리 묘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와 같이



국가 발전의 가속화가 곧 평화통일의 길로 이어진다는 자명한 이치를 터득하여, 전국민의 기를 진작시키고 단결을 꾀해 나간다면, 그 누구도 역사 변혁의 기치를 높이는 우리의 힘찬 전진을 침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문위원 모두가 스스로 우리 사회를 엮어매는 그물의 눈이 되어 국민의 마음을 『민족애』와 『긍정의 정신』으로 짜서 이어나갈 때, 우리는 이 『분단시대』를 『민족 흥룡의 시대』로 가꾸어낸 향도로서 후세에 길이 평가될 것임을 믿어마지 않습니다.

자문위원 여러분이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형제자매인 북의 동포들을 위해서 열정과 의리와 정성을 다 쏟아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87년 6월 3일

국토통일원장관 허문도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제4차 회의는 끝으로 ◎무분별한 통일논의와 급진좌경사상을 절대배격하며 올바른 통일국론 형성에 적극 동참 촉구,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과 민족화합 민주통일실현에 동참 촉구, ◎북한당국은 무력적화야육과 민족 자해적인 방해책동을 포기하고 성스러운 88서울올림픽에 무조건 동참 촉구, ◎평화 지향적인 통일실천의지의 범세계적 확산 다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시점은 민족의 진운과 국운상승을 가속화하고 영광된 선진·통일조국 창조를 향한 국민역량결집에 총력을 경주할 때다.

이에 우리는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창설 6주년을 맞아 국민대단합과 정치·사회의 안정을 이룩하여 국기를 튼튼히 하며, 평화적 정부 이양과 88서울올림픽 등 당면한 국가적 과제와 조국의 통일성업을 기필코 완수해야 할 시대적 소명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조국의 통일은 민족·민주·자유·복지의 이념이 구현되는 바탕 위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존중돼야 할 것임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대남 전략에 말려들 우려가 있는 무분별한 통일논의와 급진좌경 사상을 절대 배격, 올바른 통일국론 형성에 적극 앞장선다.

1. 남북한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관계개선을 위하여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며, 북한은 민족화합 민주통일을 구현하려는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에 긍정적인 자세로 호응해 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1988서울올림픽이 전인류의 축제임은 물론, 민족의 영원한 진진과 번영, 평화통일의 결정적 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북한당국은 무력적화야육과 민족 자해적인 방해책동을 즉각 포기하고 이 성스러운 대제전에 무조건 동참해 올 것을 거듭 촉구한다.

1.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평화 지향적인 우리의 확고한 통일실천의지를 범세계적으로 심화·확산시켜 평화통일지지기반을 더욱 굳게 다지는 데 적극 헌신한다.

1987년 6월 3일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자문위원 일동

## 제2부 남북외무장관 회담제의

### 1. 제의의 배경

진행 중이던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북한측이 이들 회담의 재개에는 불응하면서, 「3자 군사회담」과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제의하고, 「남북고급 정치군사회담」의 개최와 진전을 기존 대화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측은 1987년 3월 14일자 대북 서한을 통해 『지금까지와 같은 불신과 대결로 점철된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더 이상 방치해 둘 경우 민족의 불행과 고통만이 가중』 될 것을 우려하면서 북한측에 대해 남북총리회담의 개최를 제의하고, 동 회담에서 『쌍방이 제기하고 있는 남북간의 관계개선과 긴장완화에 필요한 제반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 할 것을 제의하였다.

다만 동 서한에서 우리측은, 최근 북한측이 보인 일련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남북간에 불신과 반목이 심화』 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간의 관계개선과 긴장완화에 필요한 제반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새로운 긴장과 불신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북측의 금강산댐 건설과 관련하여 남북수자원회담을 지체없이 개최하고 남북공유하천의 수자원 이용과 개발에 관한 문제를 협의 해결하는 한편 중단된 기존대화를 무조건 재개』 함으로써 남북간에 상호신뢰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1987년 3월 30일 대남편지에서 남북총리회담개최에 동의하면서 장관급 예비회담을 1987년 4월 23일 판문점에서 개최하자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회담형식면에서는 총리회담을 수용하면서도 내용면에서는 총리회담에서 협의할 사항을 긴장완화에 필요한 제반문제로 한정함으로써 종래 정치·군사회담에서는 논의하자고 한 상호비방중상 중지, 다각적인 교류와 합작문제 등 정치적 대결상태 해소문제는 배제하였다.

뿐만 아니라 1987년 3월 3일자 편지에서 표명한 바 있는 정치·군사회담과 기존대화의 병행 개최, 금강산 발전소 문제 토의가능 입장을 후퇴시켜, 「선 총리회담 개최」, 「후 기존대화 재개」의 입장으로 바꾸었다. 이외에 북한측은 정치·군사회담 제의 때와는 달리 총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을 제의하였다.

이것은 예비회담 과정에서 그들이 정치·군사회담에서 거론하려던 군비축소, 「팀 스피리트」 훈련중지 등 군사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총리회담의 실현 여부는 우리 국내정국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조정해 보려는 속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측은 1987년 4월 10일 노신영 국무총리의 대북 서한을 통해 남북수자원회담을 1987년 5월 6일 판문점에서, 제6차 남북경제회담을 1987년 5월 12일 판문점에서 개최하고 제11차 남북적십자회담을 1987년 5월 19일 평양에서 각각 개최할 것을 제의하는 등 3개회담의 구체적 개최날자를 명시·제의하고, 이들 회담이 개최되어 진전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총리회담 예비회담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노신영 국무총리 대북 서한 전문은 다음과 같다.

북한 정무원총리 이 근 모 귀하

나는 귀하의 3월 30일자 편지를 받았습니다.

나는 귀하가 우리측의 남북총리회담 제의에 호응해 올 뜻을 보인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측이 남북총리회담의 개최를 제의한 것은 남북간의 관계개선과 긴장완화를 통해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려는 염원에서였습니다.

남북총리회담이 열려 성과적으로 추진되려면 귀측도 지난 3월 3일 보내온 편지에서 인정했듯이 쌍방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측은 지난번 편지에서 남북수자원회담과 중단된 남북적십자, 경제회담 등을 우선 개최하여 상호 신뢰를 위한 최소한의 여건이 조성된 바탕 위에서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는 이번 회답편지에서 남북총리회담에 앞서야 할 남북수자원회담의 개최와 기존대화의 재개에 대해 외면함으로써 사실상 남북총리회담의 실현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남북간에 긴장과 대결이 심화되어 있는 것은 누적된 불신과 오랜 단절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과 단절을 해소하고 신뢰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경험으로 보나 또 1980년대에 와서 거둔 모처럼의 회담의 성과로 보아서도 남북 서로가 성실히 그리고 중단 없이 회담을 진행시키고 이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 최선의 방도임을 나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지금처럼 모든 남북대화가 중단된 상황에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은 이미 진행되어 오다가 귀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된 기존대화의 맥을 활발히 이어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귀하도 이미 지난 3월 3일 보내온 편지에서 『중단된 여러 갈래의 남북회담을 다시 열고 남북최고위급회담을 개최하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하면서 중단된 남북대화재개의 뜻을 밝힌 바 있음을 유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남북간 긴장격화의 원천이며 서로간에 부질없는 소모만을 강요하게 될 금강산담 건설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그 토의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이 문제가 지니고 있는 심각성과 절박성으로 보아 남북수자원회담을 하루빨리 개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남북수자원회담과 중단된 기존대화가 열려 상호신뢰를 위한 최소한의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총리회담의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측은 남북수자원회담을 5월 6일 판문점에서 개최하고, 제6차 남북경제회담을 5월 12일 판문점에서 열며, 제11차 남북적십자회담을 5월 19일 평양에서 가질 것을 귀측에게 정중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회담들이 개최되어 진전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남북총리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예비회담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1987년 4월 10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노신영

한편 북한측은 4월 10일자 우리측의 대북 서한과 관련하여 4월 24일, 이른바 「정무원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남북대화를 전면 거부하면서 대화중단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였다.

동 성명에서 북한측은, 『비정치적 회담으로서는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로부터 오는 불신

과 반목을 해소할 수 없다』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우리측의 대화제의를 남북간의 모든 대화를 거부하기 위한 『시한장치에 불과』한 것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북한측은, 『이제 남한 당국자들은 남북대화과 긴장완화에 대하여 더 이상 운운할 자격도 없게』 되었으며, 『남북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마저 막아버린 반민족적 행위의 후과에 대하여 원칙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대화중단의 책임을 전가하는 과립치한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이 우리의 합리적인 대화제의를 거부하고 대화중단의 책임을 전가시키는데 급급해 온 북한측은, 1987년 7월 23일 또다시 「정부성명」이란 것을 발표하고 한반도에서의 『단계별 군축 실현문제』를 논의하자는 이른바 『다국적 군축협상』을 제의해 왔다.

즉, 동 성명에서 북한측은, 한반도의 『침예한 군사적 대치상태는 오직 완전한 군축을 실현함으로써만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남북한의 무력을 1988년부터 1991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축소하여 1992년부터는 각각 10만 이하의 병력을 유지하고, 남북한의 병력이 축소되는데 따라 주한미군도 단계적으로 철수하여 남북한의 병력이 10만으로 축소되면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력을 철수하고 주한 미군사기지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해 남·북한과 미국의 회담에 중감위 성원국 대표들이 방청으로 참가하는 다국적 군축협상을 1988년 3월 제네바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측의 성명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반도에서의 침예한 군사적 대치상태는 오직 완전한 군축을 실현함으로써만 해소할 수 있음.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 놓기 위해 남북간에 단계적인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다국적 군축협상을 제의함.

군축협상의 의제는 다음과 같음.

- 남북의 무력을 1988-1991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축소하고 1992년부터는 각각 10만 이하의 병력을 유지하는 문제

- 주한미군도 단계적으로 철수하며 남북무력이 10만으로 축소되면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력을 철수하고 군사기지를 철폐하는 문제

- 자기측 무력축소 정형을 상대측에 통지, 공시하는 문제

-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중립국 감시군을 주둔시키는 문제

○ 군축협상에는 남북한 및 미국이 참가하고 현 중립국 감독위원회 성원국 대표들이 방청으로 참가하며 1988년 3월 제네바에서 개최함.

○ 우리는 금년말까지 인민군 10만을 일방적으로 축소할 것임.

북한측의 금번 「다국적 군축협상」 제의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직접 대화를 통해 민족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실한 자세에서라기 보다는 다음과 같은 불순한 저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금번 북한의 이른바 「다국적 군축협상」 제의는 그간 그들이 주장해 온 「3자회담」(1984. 1), 「3자군사당국자회담」(1986. 6)의 용어를 각색하면서 토의내용을 구체화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전혀 새로운 제안이라고 할 수 없다.

북한은 「3자군사당국자회담」을 제의하면서 군사연습중지, 무력증강중지, 병력 및 군비축소, 휴전협정준수 등을 토의의제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회담형식면에서 볼 때 작년 12월 김일성이 남북한간의 직접회담 방식으로 제의한 이른바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에서 3자회담 형식으로 다시 후퇴한 것이라고 하겠으며, 무엇보다도 「다국적 군축협상」을 제의하면서도 중단된 기존대화의 재개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은 것은 남북한간의 대화에는 관심이 없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둘째, 더욱이 금번 제의에서 회담개최 시기를 우리의 정부 이양시기 이후인 내년 3월로 제의하면서도 이를 현 시점에서 공개제의하고 있는 것은 대화나 긴장완화 또는 군축 자체에 뜻이 있다기 보다는 우리 사회내에 군축, 주한미군철수 등의 여론을 조성, 국론분열을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민주화여로의 순항을 방해하고 오도해 보려는 데 저의가 있다고 하겠다.

북한은 1960년 「4·19」 직후에는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의하였으며 1979년 「10·26」 직후에는 남북총리회담을 비롯한 남북정치인간의 쌍무적·다무적 접촉을 제의하는 등 우리측이 정치적 전환기에 처할 때마다 한국의 국론분열을 겨냥한 위장평화공세를 전개해왔다.

따라서 금번 북한측의 제의도 최근 미국의 대북한 정책과 관련, 대미접촉을 실현하며 우리가 북한의 군축제안을 거부할 경우 한국이 호전국가라는 역선전의 구실을 마련해 19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분위기를 방해해 보려는 데 속셈이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셋째, 또한 이례적으로 「제네바」를 회담장소로 제의하고 중립국 성원국의 참여를 내세운 것은 최근 미·소간의 「제네바」 군축협상 진행과 소련의 평화공세에 편승하여 국제적으로 선전효과를 극대화해 보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이라고 하겠다.

넷째, 북한이 금번 제의에서 금년말까지 10만병력 축소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북한의 심각한 경제부진에 따른 군사비 부담의 고통을 드러낸 일면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해 9월 이미 경제건설에 투입한 15만 병력중 일부를 제대시켜 계속 군사적 조직 하에 건설공사에 종사도록 조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군축차원에서 평가할 만한 의의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 2. 남북외무장관회담 제의

1987년 8월 3일 우리 정부는 외무부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측에 대해 금년 유엔총회 개최 시기인 9월중 뉴욕 또는 편리한 장소에서 남북외무장관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동 성명에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 문제는 어디까지나 민족자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한 당사자간의 회담을 통해 협의·해결』해 나가야 하며 북한측이 『남북한 관계개선과 긴장완화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그 토대가 되는 신뢰구축에 성실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남북외무장관회담을 열어 남북한 불가침협정 체결과 유엔가입 및 교차승인문제를 비롯, 기존대화 재개·발전과 수자원문제의 협의·해결 등을 통한 신뢰구축문제,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 정착에 필요한 군축을 포함한 제반문제, 그리고 남북총리회담을 성사시켜 궁극적으로는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실현시키는 문제 등 양측의 모든 관심사를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특히 동 성명에서 우리측은, 남북한간의 현안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경제회담 등 그동안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기존대화를 재개, 성실히 발전시켜 나가면서 수자원회담을 하루속히 열어 상호 신뢰의 기반을 다져 나가는데 있음』을 거듭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북한측이 주장하는 남북간의 군축문제의 협의는 남북한 유엔가입 및 주변 4강에 의한 교차승인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남북한 교류협력의 실현을 통한 신뢰회복과 평화 정착이 이룩되어야 그 실효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 강조하였다.

외무부 대북성명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한국 정부는 민족화합의 정신에 입각하여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온 겨레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왔으며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는 어디까지나 민족자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한 당사자간의 회담을 통해 협의·해결해 나가는 것이 겨레의 염원에 부응하는 올바른 길이라고 믿고 있다.

평화와 통일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의 문제이며 그 주체는 당연히 우리 민족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측이 남북한 관계개선과 긴장완화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그 토대가 되는 신뢰구축에 성실성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동안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신뢰회복을 위해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경제회담,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을 진행해 왔으며 1985년 가을에는 분단 40년만에 처음으로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까지 상호 교환함으로써 흩어진 혈육간에 재회의 눈물을 흘리는 감격의 순간도 맛보았다.

더욱이 이 가운데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경제회담은 이제 쌍방이 조금만 양보하고 협력한다면 구체적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북한측이 1986. 1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삼아 일방적으로 모든 회담을 중단시킨 채 3자 군사당국자회담을 제의한 데 이어 또다시 미국을 포함한 3자 군축협상을 제네바에서 갖자고 들고 나온 것은 남북한 당사자 해결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제차 강조하지만 남북한간의 현안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경제회담 등 그동안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기존대화를 재개하여 성실히 발전시켜 나가면서 수자원회담을 하루속히 열어 상호 신뢰의 기반을 다져 나가는데 있다.

또한 남북한간의 군축문제 협의는 남북한 UN 가입 및 주변 4강에 의한 교차승인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남북한 교류협력의 실현을 통한 신뢰회복과 평화정착이 이룩되어야 그 실효성

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북한의 군축문제는 한반도가 당면한 현실상황 하에서 군사충돌 방지는 물론 평화유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남북한불가침협정 체결과 UN 가입 및 교차승인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한 외무장관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한다.

이 회담에서는 기존대화의 재개·발전과 수자원문제의 협의·해결 등 신뢰구축문제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및 평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군축을 포함한 제반문제 그리고 남북총리회담을 성사시켜 궁극적으로는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실현시키는 문제 등 양측의 모든 관심사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동 회담은 남북한 외무장관이 금년 UN 총회에 참석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총회 개최 직후부터 9월말 사이에 뉴욕에서 개최하던가 또는 같은 시기에 상호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측이 남북간의 신뢰회복과 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충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

한편 북한측은 우리측의 남북외무장관회담 제의에 대해 1987년 8월 6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미 국무장관도 함께 참가하는 남북외무장관회담을 개최하여 군축문제 등을 우선 협의할 것을 주장, 종래 그들의 3자회담을 되풀이함으로써 사실상 이를 거부하고 나섰다.

동 성명에서 북한측은, 우리측이 남북외무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유엔가입과 교차승인문제 등을 논의하자는 것은 남북대화를 『나라와 민족의 분열을 영구화하려는데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군축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북한측은 군축문제의 해결에는 『주한미군문제가 불가피하게 관련』되므로 『군축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협상에는 반드시 미국이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도 함께 참가하는 남북한 외무장관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제네바 또는 그밖의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할 것과 이를 준비하기 위한 차관급 예비회담을 1987년 8월말이나 서로 합의하는 날자에 판문점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특히 북한측은 동 예비회담과 관련하여, 한·미 양국이 『불편하다고 생각한다면, 미·북한 및 남북한간의 쌍무적 예비접촉도 무방하다고 주장함으로써 동 제의를 통해 대미 공식 접촉통로를 마련해 보려는 그들의 저의를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측은 1987년 8월 13일 외무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북한 및 미국이 참가하는 3자 외무장관회담의 개최를 주장하는 북한측 태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북한측에 대해 남북 외무장관회담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동 성명에서 우리측은 『남북한간의 모든 문제는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간에 협의·해결되어야 하며』 북한측이 주장하는 『군축문제 협의는 남북한불가침협정 체결, UN 가입, 주변 4강에 의한 교차승인 등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측은 남북외무장관회담에서 『중단된 기존대화의 재개발전, 수자원문제의 협의·해결 등 신뢰구축 문제와 한반도에서 긴장완화 및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군축을 포함한 제반문제, 그리고 남북총리회담을 성사시켜 궁극적으로는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실현시키는 문제 등 양측의 모든 관심사를 협의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동 회담은 『남북한 외무장관이 금년 UN 총회에 참석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총회 개최직후부터 9월말 사이에 뉴욕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북한측이 불편하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상호 편리



한 장소』에서 개최해도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무부 대변인 성명 전문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8월 3일 발표한 성명에서 남북한간에 신뢰를 구축하고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외무장관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동 성명에서 우리는 민족자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한 당사자가 군사문제를 포함한 쌍방의 모든 관심사를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토의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북한측의 긍정적 호응을 촉구한 바 있다.

우리는 북한측이 8월 6일 발표한 외무부 대변인 성명에서 우리의 남북외무장관회담 개최제에 타당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은 점을 우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측은 민족자결 원칙을 견지한다는 스스로의 주장과는 달리 남북외무장관회담에 미국무장관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하면서 회담의제를 군축문제로 제한한데 대해 우리는 이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남북한간의 모든 문제는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간에 협의·해결되어야 하며 여기에 제3자를 개입시켜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본다.

또한 우리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군축문제 협의는 남북한불가침협정, UN가입, 주변 4강에 의한 교차승인 등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남북외무장관회담에서 중단된 기존대화의 재개·발전, 수자원 문제의 협의·해결 등 신뢰구축문제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및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군축을 포함한 제반문제, 그리고 남북총리회담을 성사시켜 궁극적으로는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실현시키는 문제 등 양측의 모든 관심사를 협의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바이다.

남북외무장관회담은 남북한 외무장관이 금년 UN총회에 참석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총회개최 직후부터 9월 말 사이에 뉴욕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북한측이 불편하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상호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하여도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북한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촉구하는 바이다.

### 3. 남북외교장관회담 제의와 우리의 입장

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직접 대화를 통해 협의·해결되어야 함.

우리 정부는 통일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어디까지나 남북한 당사자간에 협의·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는 비록 한반도 분단의 책임은 민족외부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해야 할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3자회담」(1984. 1)과 「3자군사당국자회담」(1986. 6) 주장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남북한과 미국이 협상의 주체가 되는 「다국적 군축협정」과 「3자외무장관회담」을 제의한 것은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합리적 제안이라고 볼 수 없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민족자결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한 당사자간의 회담을 통해 협의·해결에 나가는 것이 민족의 염원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하겠다.

나. 군사문제를 포함하여 남북한간의 제반문제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정신에 입각하여 상호 신뢰조성의 토대 위에서 해결되어야 함.

상이한 이념과 체제하에서 40년 이상이나 불신과 적대관계를 유지해 온 남북한간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정치적 화해나 신뢰구축의 선행없이 남북한 관계를 개선한다는 것은 한낱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겠다.

그간 우리 정부는 1981년 북한측에 대해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의 개최를 제의한 데 이어 1982년 1월 22일에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천명하고 민족화합을 위한 실천적 조치로서 남북간의 교류·협력 등을 포함하는 7개항의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의 체결을 제의하는 등 남북간의 신뢰구축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우리는 북한의 직접적인 무력도발에 대해서도 평화적 자세로 일관해 왔으며, 1983년 버마사건 등으로 남북간 불신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된 정세하에서도 1984년 1월 17일 대통령 국정연설을 통해 『통일을 성취하는 길은 남북대화 밖에 없다』고 강조하면서 남북한간의 직접 대화를 북한측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북한측이 우리측의 「팀·스피리트」훈련을 구실로 적십자·경제회담 등 진행중인 남북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이와는 다른 정치·군사회담을 새로이 제의하고, 동 회담의 개최 및 진전을 기존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데 대해서도 1987년 1월 12일 대통령 국정연설을 통해 기존대화의 재개를 촉구하는 한편,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이 열리게 되면 우리측이 이미 제시한 바 있는 『평화정착과 민족통일의 방안은 물론, 북한측이 제의한 정치·군사 회담을 포함한 남북한간의 모든 문제』에 관해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하는 등 대화를 통한 긴장완화 노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

따라서 북한측이 남북한 관계개선과 긴장완화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토대가 되는 신뢰구축에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측은 그들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남북적십자·경제회담 등 기존대화의 재개와 진전에 호응해 나옴은 물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금강산댐 건설공사를 즉각 중단하여야 하며 남북간 관계개선과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총리회담과 더 나아가 남북간 관계개선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게 될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에 하루속히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측이 우선 해결을 주장하는 군사문제가 협의·해결되기 위해서는 남북간에 상호신뢰가 조성된 바탕 위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장장치가 먼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 주한미군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미간의 쌍무적인 문제이며, 남북한간의 협의대상이 아님.

북한측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긴장의 근원인양 선전하면서 이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으나, 기실 한반도 정세에 불확실성을 조성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북한의 무모한 군사력 증강과 대남도발책동에 기인하는 것이며, 미군의 한국주둔도 북한의 6·25 남침에서 비롯된 것이다.

1945년 9월 8일 전후처리 및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 진주한 미군은 소기의 임무를 끝내고 1949년 6월 29일, 한반도에서 1차 철수한 바 있다.

그러한 미군이 다시 진주(1950. 7. 1)하게 된 것은 북한의 6·25 남침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그 이후에도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한·미 쌍방이 서명한 상호 방위 조약에 근거하여 계속 이 땅에 주둔하고 있다.

따라서 미군의 한국주둔 문제는 한·미간의 쌍무문제로서, 여하한 경우에도 제3자인 북한이 이 문제를 거론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하겠다.

북한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진실로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하기에 앞서 우리측이 제기한 남북간의 신뢰구축과 한반도 평화의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데 필요한 제반조치의 협의에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 4. 국내의 주요반응

금번 우리측의 남북외무장관회담개최 제의에 대해 국내 주요언론들은, 북한측이 지난 7월 23일 제의한 이른바 「다국적 군축협상」 주장까지도 수용한 {포괄적인 제의}라고 평가하고, 북한측에 동 제의의 수락을 촉구하는 요지의 사실을 일제히 게재하였다.

특히, 개헌 등 국내적으로 복잡한 정치일정 속에서도 우리측이 남북외무장관회담을 제의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은 민족의 최우선 과제이며, 남북간의 문제를 당사자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우리정부의 진지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측에 대해서는 우리내부의 정치발전에 편승, 내부교란을 획책하는 동시에 우리의 안보논리를 퇴색시키며 서울올림픽 공동주최의 {조작된} 명분을 만들기 위해 또 다른 역제이나 수정제안을 내놓는 {평화선전공세의 책략}을 꾀려하지 말고 우리측의 합리적인 제안을 수용하여 {민족 대화합의 기적}을 창조하는데 성의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주요 해외언론들은 우리측의 남북회담제의를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적극적이고도 건설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동 제의를 계기로 남북한간의 대화가 {실질적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했다.

또한 그동안의 남북대화에 임하는 북한측의 태도와 이른바 「7.23」 군축협상제의를 저의로 미루어보아 금번 우리측의 제의에 북한측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지는 의문시』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 국내반응

##### 남북 외무장관회담 옹하라

- 포괄적으로 현안을 다룰 첩경이다.

한국일보(1987.8.4)

정부는 3일 북한측에 대해 남북한 불가침협정 체결과 유엔동시가입 및 교차승인문제 등 모든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외무장관 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했다. 이번 우리측 제의는 지난 7월 23일 북한이 제의한 이른바 군축협상까지도 포함하여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그에 뒤따르는 상호신뢰회복, 평화정착을 위한 포괄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동안 남북한 간의 접촉에서 가장 근본적인 장애가 된 문제점은 북한측이 회담도중에 일방적으로 대화를 거부, 중단시켜 버린다는 데 있다. 또한 개중에는 비정치적인 적십자회담, 경제회담 등을 정치선전장으로 오도하려는 시도도 우리는 지켜보았다. 또한 실행보다는 대내외 선전을 위한 제의도 있었다.

이런 상황의 누적은 결과적으로 불신을 조장하여 진정한 발전적 제의나 접촉을 보다 어렵게 만든게 사실이다.

분단된 동족끼리의 접촉이라면 우선 원칙적인 문제를 서로 털어놓고 논의해야 하며 그것도 지속적으로 성의껏 진행시켰어야 했다는 아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10여일전 북측이 불쑥 다국간 군축문제를 내년 3월 제네바에서 열자고 했고 그에 대해 우리측이 그 군축문제까지 포함하여 불가침협정 등 모든 긴장완화방안도 함께 협의하자고 전향적인 제의를 한만큼 북측도 호응하여 지속적으로 상호간 솔직한 대화를 나누게 되기를 바란다.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는 쌍방이 대규모적인 군사대치 국면을 벌이고 있는 반면 남북조절위, 적십자 회담, 경제회담, 국교회담 예비접촉 등 채널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화는 북측에 의해 일방적 비합리적으로 중단돼 있는 상태가 아닌가.

어찌보면 「보다 좁은 지역에서 보다 복잡한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동족간이란 점에서, 또 서로 대화 못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남북한 문제는 세계 다른 어떤 지역의 갈등에 비해 「알기 쉽게 협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알기 어렵게 뒤꼬인 인상」을 외부에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북측이 지금 한창 진행중인 우리의 민주발전 과정을 저해하거나 우리의 기초적 안보에 도전하는 저의를 버리고 「남북외무장관회담」에 나선다면 양측은 남북대화사상 첫 각료급회담을 통해 아무 전제조건 없이 현안의 문제들을 발전적으로 타결해 나갈 수 있을 줄 믿는다.

남북한간엔 대화접근 방식에 어떤 제한도 없으며 교류통로에 아무런 제약도 없는 여건에 있음을 재인식하고 북한은 대화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유엔총회 후의 뉴욕 또는 그밖의 어떤 장소에서든 외무장관끼리 만나 모든 현안을 협의하자는 우리측 제의는 누가 보아도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북측이 공연한 생트짐을 잡지 말고 이를 받아들여도록 거듭 촉구한다.

#### 남북외무장관회담 제의

- 북한은 역제의 할 생각 말고 즉시 응하라

동아일보(1987.8.3)

근래의 남북한 관계는 제의와 역제의가 되풀이되는 가운데 관계개선을 향한 실질적인 진전이라곤 거의 엿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체육회담을 제외한 모든 남북대화는 몇년째 단절되고 있고 새로운 제안을 담은 성명만 공허하게 왕래하고 있을 뿐이다.

그야말로 제의를 위한 제의를 내놓음으로써 실질적인 진전보다는 대외적인 선전효과만을 노리는 인상이 짙다. 대개의 경우 그러한 선전공세의 선수를 치고 나오는 것은 북한이다. 우리측으로서는 아무 대답을 않고 있으면 평화를 외면한다고 몰아붙일 게 뻔하므로 어떤 형태로든 응답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7월 23일에 내놓은 북한의 「제네바」 군축협상도 그런 제안의 하나다. 1988년 3월에 남북한과 미국 등 3자가 마주앉아 군축회담을 열자는 북한측의 제의는 이른바 「정부성명」이란 형식으로 제안되었다. 얼른 보기에 그 제의가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이 평화지향적인 것처럼 비칠 수도 있으나 자세히 뜯어보면 허구와 위장된 내부교란의 저의가 드러난다.

오는 1988년 3월에 군축협상을 열고 그에 앞서 금년말까지 10만 병력을 감축하겠다는 북한측 제의는 1988년 2월에 있을 우리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겨냥한 게 분명하다. 아마도 북한은 우리가 획기적인 민주 발전을 이룩하고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다면 남북관계의 판세가 완전히 달라질 것을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민주화의 순항에 돌맹이를 던지고 싶을지도 모른다.

그런 의도를 간파하고 대응책으로 내놓은 것이 우리측의 「남북외무장관회담」 제의라고 하겠다. 북한의 「정부성명」이 나온지 10여일만에 「외무부성명」 형식을 띠고 나온 이 제안은 오는 9월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기회에 남북외무장관이 회담을 갖고 전반적인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방안을 협의하자는 것이다. 이 회담에서는 남북한의 군축문제는 물론이고 기존대화의 재개, 「유엔」 가입, 교차승인문제, 국무총리 또는 정치 군사회담 개최문제 등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한다.

우리측의 이같은 제안은 실현성이 희박한 북한의 군축협상 제의와는 달리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제시라고 하겠다. 북한측의 제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면서도 회담개최가 매우 수월하게 성사될 수 있는 제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회담장소와 시기에 있어서도 우리측은 양측 외무장관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계기를 자연스럽게 이용하자는 것이지만 북한측의 사정상 필요하다면 판문점이나 그밖의 제삼국에서 만날 수도 있다는 신축성을 보이고 있다.

결국 우리측의 이번 제안은 북한의 군축협상 제의에 대한 대응책이다. 또 우리측 제의는 개헌 협상으로 급진전되고 있는 민주화조치와 같은 맥락에서 남북한간의 민족적 화합을 실현하자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남북문제의 해결에 있어 「미국을 포함한 3자협약」을 강조하는데 대해 우리측은 어디까지나 「민족자결의 원칙」을 앞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은 또다시 어떤 역제의나 수정제안을 내놓아 선전공세를 펴려 하지 말고 우리측의 합리적인 제안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 손쉬운 외무장관회담부터 성사시켜 나갈 것을 동족의 이름으로 간곡히 권고하는 바이다.

#### 남북대화 재개의 지름길

- 북은 「외무장관회담」부터 응해야

경향신문(1987.8.3)

국내정치 전환기에도 남북관계개선을 꾸준히 모색해 온 정부는 실현가능하고 현실적인 새로운 대북제안을 내놓았다.

최광수 외무부장은 3일 남북불가침협정 체결과 유엔가입·교차승인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남북한외무장관회담」을 열자고 제의했다.

우리 정부의 이번 남북외무장관회담제의는 때마침 북한측이 소위 「다국적 군축협상」을 제의해온 직후의 대응제의라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주목되며 평양측 반응이 궁금하다.

정부는 이미 북한측의 다국적 군축협상제의에 대해 그 진의를 의심하고 「한반도 긴장완화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인바 있다.

이번에 정부가 남북외무장관회담을 제의한 것은 한반도 문제는 어디까지나 민족내부의 문제이므로 외세의 개입없이 민족자결원칙에 입각하여 남북한 당사자간에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자는 대의명분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 회담을 통해 기존대화의 전면재개를 비롯해 수자원문제, 남북평화정착문제 등을 포함한 신뢰구축문제, 그리고 나아가 회담의 진전에 따라 북한측이 제의한 군축문제까지도 토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적으로 복잡한 정치일정에 얽매인 가운데에도 이번에 우리정부가 이처럼 외무장관회담을 제의하게 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은 민족의 최우선 과제이며 남북간의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 정부의 진지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남북외무장관 회담에는 우리측이 아무런 전제조건을 달지 않고 모든 문제를 자유스럽고 폭넓게 다룰 수 있다고 한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북한측은 군축문제까지도 협의할 수 있다는 신축성이 내포된 이 회담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만일 이 회담이 북한측의 동의로 실현된다면 이는 남북간의 최초의 각료급 회담이 되는 셈이다. 우리가 누차 강조했지만 무릇 남북한관계와 같은 이질체제간의 대화가 성숙해서 어떤 합의점을 찾자면 처음부터 「큰 흥정」은 실현불가능하며 작은 문제부터 풀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큰 현안으로 접근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신뢰회복을 위한 환경조성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측은 그동안 남북대화분위기 조성과 신뢰회복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었던 기존의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경제회담, 남북국회회담예비접촉 등을 팀스피리트훈련 등을 트집으로 일방 중단해 버렸다. 그리고 그런 훌륭한 기존 회담에 대해서는 아예 눈을 감아버린채 이제 와서 느닷없이 군축회담부터 하자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가 그 뻔한 정치적 속셈을 간파하면서도 그 제의를 응낙할 수 없는 노릇이다.

북한이 제의한 이른바 「다국적 군축협상」은 두말할 것도 없이 현재 진행중인 우리내부의 정치 발전에 편승, 북의 남침위험을 희석시키는 동시에 미군의 계속 주둔, 한국군현대화의 필요성 등 우리의 안보논리를 퇴색시키고 반공의지를 약화시키자는 책략에 불과한 것이다.

군축문제와 같은 중대사안은 남북한간의 신뢰회복의 선행을 전제로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과 주변4강에 의한 교차승인 등 안전장치가 먼저 마련된 후라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토의될 성질의 문제다.

따라서 결론을 내리자면 남북간의 모든 현안을 기탄없이 토의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능률적인 「남북외무장관회담」에 북한측이 무조건 응하고 협상테이블로 나와 주어야겠다는 것이다.

북은 대화장으로 나오라

- 남북 외무장관회담 제의

중앙일보(1987.8.4)

정부가 제안한 「남북 외무장관 회담」은 정체상태에 있는 남북관계를 타개해 보려는 우리측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것은 북한이 제의한 지난 7월 23일의 군축회담에 대한 대안일 뿐 아니라 지금 남북간에 걸쳐 있는 모든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제시다.

서울올림픽을 1년 남짓 남겨 놓은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때 보다도 남북대화와 통일을 위한 평화노력이 요구되는 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OC중재로 열리고 있는 체육회담은 북한측 요구가 무리하게 증폭되어 한발짝도 진전을 못보고 있다.

이미 구체적 협의가 끝나 최종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적십자회담과 경제회담도 평양측이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삼아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오늘에 이르렀다. 국회회담도 똑같은 이유로 장기휴회 상태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기존 회담들을 하나하나 매듭지을 생각은 않고 남북한과 미국의 3자회담, 남북 국방상회담, 군축회담을 무차별 제의하고 있다.

북한의 그같은 산만하고 난잡한 접근태도에 제동을 걸고 이미 벌여놓은 것을 하나라도 수습해 나가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제의한 남북 총리회담과 이번의 외상회담이다.

이 두개의 회담은 그 성격의 포괄성으로 보아 지금 남북간에 걸쳐 있는 모든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대화방식이다.

이런 회담에서는 중단상태에 있는 기존회담의 재개와 진전을 포함하여 북한이 제의한 불가침협정과 군축문제, 평화협정, 그리고 우리가 제의한 수자원 문제도 협의할 수 있다.

정부는 외무장관 회담을 제의하면서 남북한의 유엔가입과 교차승인 문제도 협의하자고 밝혔다. 더구나 이 회담은 남북대화를 촉진시키고 기본문제들의 원칙적 타결에 결정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최고당국자 회담과 총리회담의 실현을 위한 예비회담적 기능도 수행해 낼 수 있다.

정부는 남북문제의 접근에 있어 민족자결주의에 입각한 당사자 해결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 이것은 북한이 항상 「주체」를 외치면서도 남북대화에 미국이나 중립국 등 외세를 끌어들이려는 비주체적 태도에 대한 제동이다.

남북은 이미 「7·4공동성명」에서 「통일은 외부의 의존과 간섭을 배제하고 한민족에 의해 자주적으로 달성한다」고 합의한바 있다. 북한은 이미 합의된 원칙들을 존중해야 한다.

그런 자세 정립이 없다면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평양은 남북간의 모든 문제를 제한없이 논의할 수 있는 외상회담에 응하여 대화테이블에 다시 나오기를 촉구한다.

#### 불가침협정 체결촉구

##### - 남북외무장관회담 제안과 평화의지

조선일보(1987.8.4)

정부는 3일 외무부성명을 통해 민족자결의 원칙과 당사자 주의에 바탕해서, 오는 9월 유엔총회 개최(9월15일) 직후부터 9월말까지의 사이에, 뉴욕 또는 상호 편리한 장소에서 「남북 외무장관 회담」을 갖자고 평양측에 제의했다.

평양측은 지난 7월 23일 1988년 3월 제네바에서 다국적 군축협상을 열자는 이른바 「정부성명」이란 것을 내놓았다. 미국을 포함한 남-북한의 병력을 10만 이하로 줄이고,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력의 철수와 군사기지를 철폐하는 문제 등을 협의하자는 것이 그 골자였다.

기존대화를 일체 끊어버리고, 우리측 민주화과정의 혼란을 부채질하자는 속셈으로 밖에는 여겨지지 않는, 느닷없는 북의 「정부성명」이라는 것의 줄거리는, 휴전직후인 1954년이래의 미군 철수를 포함한 군비경쟁 중지, 병력감축 운운에서 시작해서, 1974년 대미평화협정 제의, 1986년의 3자군사당국자회담 주장 등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달라진 것이라고는 별무하다.

3일의 우리 외무당국 성명은 그 조리에 있어서나, 북한측을 포함한 제3자에 대한 설득력에 있어서나, 포화보다는 평화를, 대결보다는 대화를 원하는 국제흐름과 소망에 비추어서도, 결코 어느 일방의 탐욕만을 채우려는 이부진한 강변이 아니라, 상호주의 원칙에 선, 서로에게 이로운 극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외무부 성명은 민족의 문제는 민족끼리 풀어야 한다는 원칙에 서서 「남-북한 불가침협정」 체결과 「남-북유엔가입」 및 주변 4강에 의한 「교차승인」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들을 남-북 외무장관회담에서 협의하자고 했다.

뿐만 아니라 이 회담에서 기존회담의 재개-발전과, 수자원문제의 협의-해결 등 신뢰구축 문제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및 군축을 포함한 평화정책의 제반문제, 그리고 남-북총리회담을 성사시켜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정상회담을 실현시키는 문제 등, 쌍방의 모든 관심사를 협의할 수 있음도 밝혔다.

평양측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환히 들여다보고 있다. 신뢰와



평화와는 거리가 먼, 상대방의 치부를 헐뜯는다는 것 자체가 더할데 없는 민족의 불행이지만, 저들은 지금 우리 내부의 최대과제인 민주화의 길에 휘방을 놓겠다는 것이고, 아울러 이젠 약 1년 앞으로 다가온 서울올림픽에 「공동주최」의 명분이라도 따내 보자는 계산에서 세계적인 소위 「평화선전전」을 나름대로 안간힘을 다해 벌이는 처지에 있다.

그 위에 한반도 주변 세력의 균형을 저들에게만 유리하게 전변시키기 위해 한사코 까닭을 걸고 물고 늘어지면서, 이른바 「대미접촉」 또는 「대미교섭」을 염불외듯 되뇌고 있다. 청맹과니같은 저들의 맹목성을 깨우치기 위해 우리는 그래도 인내와 성의를 다해서 타이르고 타일러, 대화의 탁자에 저들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는 도리밖에 없다.

기존대화재개추구는 두말할 것 없고 정상회담에, 총리회담에, 이번으로 외무장관회담까지 내놓고 있는 우리이다.

외무장관회담으로 대화 재개하자

서울신문(1987. 8. 4)

북한은 지난달 23일 느닷없이 남북한과 미국이 참가하는 군축협상을 내년 3월에 제네바에서 열자고 제의했었다. 우리는 그 제의와 함께 요란하게 과장된 평화제스처를 지켜보면서 군비확충에 골몰해온 그들의 이중성에 주목하여 일고의 가치조차 없음을 밝힌바 있다. 북이 군축제의를 통해 노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국내 정치정세와 국제환경의 변화에 편승해보려는 심리전적인 공세라는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정부의 이양 등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할 내년 3월로 회담시기를 제의해온 데서도 충분히 입증된다.

그러나 정부는 3일 북이 제의한 군축문제까지 포함하여 금년 유엔총회 직후부터 9월말까지 사이에 남북외무장관회담을 열어 협의하자고 제의했다. 비합리적인 군축문제를 포괄해서라도 남북대화를 재개해보려는 전향적자세로 평가할 수 있을 듯하다.

북한은 지금 어느 때보다 심도있게 군비를 증강하고 있다. 두루 알려진 사실이지만 최근 미국 무성이 발표한 세계 군비지출현황을 보면 북한은 78만명의 병력으로 세계 제8위의 군비를 쓰고 있다. 방대한 군사력유지에 경제력이 기진한 때문이라 해도 어느 때든 총만 들리면 동원할 수 있는 북의 체제하에 군사력 감축은 의미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군축문제협의를 남북한 교류협력의 실현을 통한 신뢰회복과 긴장완화가 전제되는 가운데 남북한 유엔가입, 주변 4강에 의한 교차승인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그 실효성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외면하고 있다. 또한 그에 앞서 지금 남북한간에 열려 있는 몇갈래 협상창구를 활용해서 남북한 당사자가 이땅의 평화정착에 주체가 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남북한불가침협정체결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북한측이 1986년 1월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삼아 일방적으로 모든 대화를 중단시킨채 3자회담이나 다국적 군축협상을 들고나온 것은 남북문제 당사자해결 원칙에도 어긋난다.

북한이 진정으로 긴장완화에 관심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남북한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본다. 또 88올림픽을 방해하려들기 보다는 세계인의 제전에 함께 참가함으로써 민족적 화해에 기여할 수 있다. 서울올림픽을 한반도 평화구조정착의 전환점으로 삼는데 북한도 동의해야 할 것이다.

북한외무부장관회담은 이런 점에서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주변환경을 능동적으로 조성해나가야 한다는 또 한차례 획기적인 계기부여의 의미를 갖는다. 당면한 군사적 대치상황 아래에서 서로가 신축성 있게 군축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도 우선 가능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외무장관 회담은 필요하다.

양쪽 외무장관회담으로부터 대화의 실마리가 풀려 담보상태에 있는 몇개의 대화창구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남북한총리회담, 정상회담까지 차례로 실현되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북한은 한국내정의 혼란을 노리는 기만적인 평화공세를 거둬들여야 한다. 「변형된 3자 회담」과 같은 군축협상 따위의 공허한 주장을 되풀이해서도 안된다. 북한당국이 정치선전용의 군축회담보다는 기존의 남북회담을 발전시켜 교류협력을 도모하고 문제해결 당사자로서, 또 민족자결의 한쪽 주체로서 외무장관회담에 나서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 해외반응

일본 외무성(1987. 8. 3)

- 금번 한국측 제의는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적극적이고도 건설적인 자세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높이 평가하며 환영함.
- 동 제의를 계기로 남북한간의 대화가 실질적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함.

아사히, 요미우리 등 일본 중앙 6대지 공통(1987. 7. 26, 7. 27)

- 북한의 다국적 군축협상제의는 4년전의 3자회담 제안 등과 별로 차이점이 없음.
- 이번 북한측의 제의는 한국의 정치·사회적 혼란조성, 서울올림픽의 남북한 공동개최를 위한 국제여론 정비 도모 등의 의도에 기인된 것이며, 주한미군철수 실현을 위한 일관된 전략임.
- 특히 남북한간 10만명 이하 병력 삭감제안은 현실감이 결여된 낭만적인 것으로 상호 신뢰가 전무한 현재로서는 깊은 의미가 없음.

요미우리신문(1987. 8. 3 일본)

- 금번 한국의 제의는 남북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재천명한 것임.

아사히 신문 (1987. 8. 4 일본)

- 한국의 남북한 외무장관회담 제의는 북한이 주장한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 군축회담에 대한 효과적이며 건설적인 역제의임.

상케이신문 (1987. 8. 4 일본)

- 한국의 제의는 북한의 다국적 군축회담 제의에 대한 회답을 포함한, 남북간 현안을 일거에 해소시키려는 포괄적 역제의임.

미국 국무성 대변인(1987. 8. 3)

- 동 제의는 18개월 전에 중단된 회담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광범위하고도 융통성 있는 이니셔티브로서, 미국은 동 제의를 전적으로 지지함.
- 북한이 동 제의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일 것을 촉구함.

Washington Post (1987. 7. 23 미국)

○ 이번 북한측의 군축협상 제의는 한국내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조바심이 난 북한의 선전적 전술에 기인된 것임.

Washington Post (1987. 8. 4 미국)

○ 한국측이 제의한 이번 남북한 외무장관회담은 북한의 다국적 군축협상 제의보다 훨씬 전향적인 평화회담 제의임.

New York Times(1987. 7. 23 미국)

○ 금번 북한측의 군축협상 제의는 종래 그들 주장의 재판에 불과함.

AP(1987. 8. 3 미국)

○ 이번 한국측의 제의는 북한측 군축제안 논의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향적임.

SUDDEUTSCHE ZEITUNG(1987. 7. 24 서독)

○ 북한은 과거에도 여러차례 군축협상을 제안했으며, 항상 주한 미군의 철수를 요구했는데 이번에도 예외가 아님.

HELSINGIN SANOMAT(1987. 7. 24 핀란드)

○ 금번 북한 제의의 동기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북한이 88올림픽을 앞두고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려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선전적 전술로 보여짐.

### 제3부 IOC 주재하의 남북체육회담

#### 1. 제4차 회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주재하의 제4차 남북체육회담이 제3차 회담이 개최된지 13개월만인 1987.7.14-15양일간에 걸쳐 「로잔느」의 IOC 본부에서 열렸다.

그간 제4차 회담이 1년이상이나 지연되어 온 것은, IOC측 중재안에 대해 북한측이 『원칙적으로는 수락한다』고 하면서도 종목의 추가 배정 및 경기의 조직궐운영 등과 관련, 일련의 요구조건을 제시해 옴으로써 사실상 이의를 제기해 왔기 때문이다.

1986년 6월12일 IOC측은, 북한을 서울올림픽에 참가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결승전을 포함한 탁구와 양궁경기를 북한지역에서 개최하고, 남북연결 도로 싸이클경기 및 축구 1개조 예선경기를 북한지역에 배정하며, 올림픽 관련 문화행사를 남북한 양지역에서 개최한다는 이른바 중재안을 제시하고, 남북쌍방이 이를 수락할 경우, 제4차 회담을 열어 이에 따른 조직 및 운영상의 제반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IOC측 중재안에 대해 북한측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IOC측은 제4차 회담개최여부에 대한 북한의 진의를 타진하기 위해 4차례에 걸친 서신교환과 한차례의 접촉(1987.2:로잔느)을 가진 바 있으며, 이러한 접촉을 토대로 1987년 4월 KOC와 가진 개별 접촉에서 제4차 회담을 열어 『현안문제를 실질적으로 토의』할 것을 제의해 옴으로써 제4차 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제4차 회담에서도 북한측은 올림픽경기의 남북한 공동주최 등 종래 그들의 주장을 되풀이 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남북의 인구 비례에 따라 올림픽 경기종목의 1/3인 8개종목을 북한지역에 배정해야 한다는 억지주장을 늘어놓는 등, 종전보다 경색된 입장을 보임으로써 실질적인 현안문제의 토의에는 들어가지도 못한 채 IOC측이 기존 중재안을 일부 수정·제시하고 그에 대한 수락여부를 1987년 8월말까지 남북한이 회신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는 것으로 회담을 끝마쳤다.

1987년 7월14일에 열린 제1일회의는 「사마란치」 IOC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남북한 수석대표들의 기조발언 순으로 진행되었다.

동회담에서 우리측 김종하 수석대표는 기조발언을 통해, 먼저 IOC측이 제시한 중재안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제4차 회담이 열리게 된 것을 환영하면서, 대한올림픽위원회(KOC)는 지난 3차례의 회담에서 서울올림픽대회를 역사상 어느 대회보다도 훌륭히 치르기 위해 『아량과 인내심을 발휘하여 대화의 결실을 거두어 보려는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상기시켰다.

이어 김수석대표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IOC중재안을 토대로 일부 경기종목의 평양개최에 따른 올림픽 가족의 자유로운 남북한 왕래보장문제를 비롯하여 조직궐운영등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를 조속히 협의궐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회담에서 북한측이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참가할 것과 전 세계올림픽 가족에게 남북간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고, 서울에서의 공식 개궐폐회식에 기꺼이 참가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회담의 원만한 타결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김수석대표는 IOC중재안의 조속한 타결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협의궐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림픽 현장과 제반궐약을 준수한다』는 기본정신에 부합되는 방향에서 진지한 협의를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임을 다시한번 분명히 했다.

김종하 KOC위원장이 3차 합동회의시 밝힌 기조발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먼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과 협조를 다하고

있는 「사마란치」 위원장과 국제올림픽 위원회측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또한 본인은 「사마란치」 위원장의 발기와 주재하에 진행되어 온 이 회담이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측이 제시한 중재안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1년여만에 다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지난 3차례의 회담에서 서울올림픽대회를 역사상 어느 대회보다도 훌륭히 치르기 위해 아량과 인내심을 발휘하여 대화의 결실을 거두어 보려고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제3차 회담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측이 제시한 2개의 Full Sports와 2개 종목의 Events를 북한측에 할애할 것을 주요 골자로한 중재안이 우리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여 우리는 이를 조건없이 수락했던 것이다.

본인은 시기적으로 좀 늦은감은 있으나 북한측이 IOC중재안을 원칙적으로 수락하겠다고 한 것은 이 회담의 진전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IOC중재안을 토대로 일부 경기종목의 평양개최에 따른 올림픽가족의 자유로운 남북한 왕래 보장문제를 비롯하여 조직합운영 등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를 조속히 협의합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인은 북한측이 이번 회담에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참가할 것과 전 세계 올림픽 가족에게 남북간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고, 서울에서의 공식 개황폐회식에 기꺼이 참가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회담의 원만한 타결에 협조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며, 북한지역에서 진행되는 경기에 우리측 선수단을 기꺼이 참가시킬 것임을 거듭 밝혀두는 바이다.

본인은 이미 지난 6월 국제올림픽위원회 대표단의 서울 방문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IOC중재안의 조속한 타결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에 대한 우리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

IOC중재안의 실현에 필요한 조직합운영문제는 남북한이 올림픽 현장과 제반규약을 준수하는 가운데 토의를 진행한다면 별 어려움없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다.

IOC중재안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측과 남북한 쌍방은 동 중재안의 기본정신과 내용에 부합되는 방향에서 진지한 협의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의 개막식은 앞으로 14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본인은 이번 제4차 회담에서 IOC중재안을 구체화하고 보다 발전시키는 문제가 원만히 타결될 것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날 회의 첫 발언을 통해 IOC측 중재안을 무시한 채 올림픽 경기의 남북한 공동주최, 대회명칭, 조직위 구성문제 및 개황폐회식문제 등에 대한 그들의 종래주장을 되풀이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인구비례」 운운하면서 『올림픽 경기종목의 1/3인 8개종목을 북한지역에 배정해야 한다』는 억지주장을 늘어 놓음으로써 종전보다 경색된 입장을 보였다.

북한측은 IOC중재안을 토대로한 올림픽 가족의 자유로운 남북한 왕래보장문제를 비롯, 경기종목의 조직합운영 등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협의는 외면한 채, 축구 완전경기를 포함하여 8개의 완전경기를 북한지역에 배정해야 하며 평양에 따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황폐회식을 서울과 평양에서 균등하게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였다.

이날 회담에서의 북한측 발언요지는 다음과 같다.

○ 이번 회담에서는 공동주최 실현이라는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제안에 대한 합의를 이

록해야 함.

○ 제4차 회담을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북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 경기종목은 축구를 포함하여 인구비례에 따라 8개의 완전경기를 배정해야 하고
- 대회명칭은 『제24회 올림픽 경개대회, 평양』으로 하고 평양에 별도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며
- 개·폐회식은 서울과 평양에서 균등하게 실시해야 함.

한편 IOC측은 이날 오후에 가진 KOC와의 제1차 개별회담에서, 제3차 회담에서 그들이 제시했던 중재안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여자배구와 사이클 남자 개인도로경기를 북한지역에서만 개최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KOC측의 의견을 타진해 왔다.

KOC측은 이에 대한 답변에 앞서 이번 제4차 회담이 기존 중재안의 구체적착실무적착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또다시 공동주최 문제를 거론하고 「인구비례」 운운한 것은 『IOC중재안을 무시하고 본회의를 원점으로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만약 북한측이 공동주최 주장을 철회하고, 서울에서의 공식 개·폐회식에 참가하며, 모든 올림픽 가족의 남북간 자유왕래를 보장한다면, 「사마란치」 IOC위원장의 제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월 15일에 속개된 제2일회의는 IOC측과 남북한 올림픽위원회 대표단간의 개별회의에 이어 남북한과 IOC간의 3자 합동회의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3자 합동회의에서 「사마란치」 IOC위원장이 이틀간의 회담결과를 공동성명 형식으로 발표함으로써 제4차 회담을 모두 끝마쳤다.

KOC측과의 제2차 개별회의에서 「사마란치」 IOC위원장은 제1일회의에서 제시한 바 있는 IOC측의 수정 중재안 즉, 기존 IOC중재안에 여자배구를 추가하고, 남북연결 도로 사이클 경기 대신 북한지역에서만 사이클 남자 개인도로경기를 개최한다는 수정안에 대한 KOC측의 수락여부를 8월말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에대해 KOC측은 북한측이 공동주최 주장을 철회하고 자유왕래를 보장하며 서울올림픽대회의 개궐폐회식 참가를 보장한다면, IOC측 수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전날의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한번 분명히 했다.

이어 개최된 3자 합동회의에서 「사마란치」 IOC위원장은, 제4차 회담에서 북한 배정경기종목에 『약간의 개선』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남북한에 대해 이 「개선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1987년 8월말까지 IOC측에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한 후 IOC측이 준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사마란치」 IOC위원장이 발표한 IOC측 성명요지는 다음과 같다.

○ IOC는 올림픽헌장에 따라 1981년 9월 30일 「바덴바덴」에서 제24회 올림픽대회 개최지를 서울로 결정한 사실을 재확인함.

○ 제24회 올림픽대회의 성공과 모든 NOC의 참가를 보장하기 위한 IOC의 꾸준한 노력에 대해 모든 관련자들은 주목하기 바람.

○ IOC는 4차에 걸친 회담, IOC대표단의 평양방문 결과, 최근 국제경기연맹(IF)과 각국 NOC들과의 협의에 근거, 기존 중재안을 수정하여 다음 경기종목의 조직을 북한 NOC에게 부여함.

- 탁구 · 양궁(남 · 여), 여자 배구
- 축구 예선 1개조
- 사이클 남자 개인 도로경기

○ IOC제안에 대해 양 당사자는 제24회 올림픽대회 초청장이 1987년9월17일까지 IOC가 각 NOC에게 발송해야 하는 사실을 고려해서 가능한한 빨리 「로잔느」 IOC본부에 발송해야 함.

○ IOC는 IOC의 제안이 올림픽 운동 역사상 예외적이고 전례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함.

## 2. 그 이후의 경과

1987년 7월 16일 「사마란치」 IOC위원장은 제4차 회담에서 제시한바 있는 IOC측의 새로운 중재안을 담은 서한을 남북한 양측에 공식전달했다.

김종하 대한올림픽위원회(KOC)위원장 앞으로 보내온 서한에서 IOC측은 1981년 9월 30일 「바덴바덴」에서 올림픽 헌장에 따라 제24회 올림픽대회를 개최하는 영광은 「서울시」에 부여되었음을 다시한번 상기시키면서 종전의 IOC측 제안을 수정하여 다음의 경기종목을 북한측에 배정할 것을 요청해 왔다.

- 결승전을 포함한 양궁 및 탁구경기와 여자 배구경기
- 축구 1개조 예선경기
- 북한지역에서만 개최하는 사이클 남자 개인도로 경기

또한 IOC측은 1987년 9월17일에는 세계 모든 NOC에 제24회 올림픽대회 참가 초청장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히고, 남북한이 금번 IOC측의 최종 제안을 검토,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와같은 IOC측의 수정 중재안에 대해 KOC측은 1987년 8월 17일 IOC측에 회신을 보내고, 북한측이 그들의 공동주최 주장을 철회하고 남북자유왕래를 보장하며 서울 개황폐회식에 무조건 참가할 것을 약속한다면 IOC측 수정안을 수락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북한측은 1987년 8월4일 김득준 북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이 발표한 담화에서, IOC측이 제4차 회담에서 제시한 조절안은 『종래의 제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우리의 공동주최 요구와는 아직도 거리가 멀다』고 함으로써 IOC측 수정안에 대해 1차 부정적 반응을 보인데 이어, 8월 11일에는 진중국 북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IOC측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한 그들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측은

- 올림픽 경기종목중 5개의 완전경기종목과 1개의 불완전경기를 북한지역에서 개최할 것과
- 제5차 회담에서는 북한지역에 배정할 종목문제 뿐만 아니라 경기 대회의 명칭문제, 조직위원회 구성문제, 개막식과 폐막식문제, TV방영권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토론하며
- 8월중에 제5차 회담을 개최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특히 북한 배정 경기종목과 관련하여 북한측은, 결승전까지 포함한 탁구, 양궁, 여자배구 및 축구종목의 전경기와 사이클 도로경기 대신 다른 종목의 전경기를 요구한 것외에도 또다른 1개종목의 경기를 북한지역에 할당할 것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요구를 해 옴으로써 제5차 회담의 개최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다.



### 3. 국내의 주요반응

국내주요언론들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재한 제4차 남북체육회담에서, 북한측이 IOC의 중재노력을 철저히 외면한 채 또다시 「공동주최」, 「인구비례」 운운하면서 그들의 종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은 그들이 『88서울올림픽에 동참할 뜻이 없으면서 「판 깨기 작전」이나 끝까지 해보겠다』는 불순한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하고, 이는 『몰염치한 작태』라고 혹평했다.

특히 동 회담에서 IOC측이 북한측의 이러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중재안」을 내놓은데 대해 『파격적인 절충안』이라고 평가하고, 북한측이 끝내 이를 외면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세계의 외톨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IOC측의 포용력 있는 노력과 우리측의 『끈질긴 인내와 양보』에도 불구하고, 동 회담에서 이렇다할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한 북한측에 대해 『88올림픽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가질 의향이 있다면 좀더 진실성을 갖고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해외 주요언론들도 이번 제4차 「로잔느」 회담에서 북한측이 IOC헌장을 무시하고 「인구비례」 운운하면서 더 많은 종목을 요구한 것은 지난 2년간 협상때 보다도 『더욱 공격적이고 정치적』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측의 이러한 태도는 다른 공산권 국가들로부터도 동정을 받지 못하는 『과도한 요구』라고 평가했다.

또한 IOC측의 이번 새로운 제의는 『또 하나의 올림픽 보이콧 가능성을 들고나온 북한과 타협하는데 있어서 IOC측의 새로운 노력의 일환』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문제의 해결까지에는 우여곡절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 국내반응

### 로잔회의 결실있게

한국일보(1987. 7. 14)

서울올림픽에 대한 불안감은 말끔히 가셨다. 국내외로 교차한 우려를 우리 스스로가 해소했고 세계가 두루 인정하게 되었다. 순항의 닳은 높이 올려졌고 전도는 밝다. 남은 과제는 만전준비의 가속화 뿐이다.

1988년 올림픽의 중요한 의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의 하나는 정치갈등에 의해 양분된 올림픽의 복원이다. IOC전회원국인 1백 67개 국가가 참여하리라는 기대가 넘친다.

여기에 장애요소가 있다면 오로지 북한의 집요한 방해공작이라 할 수 있다.

서울올림픽을 무산시키려고 북한은 갖은 위협과 술수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든다.

북한의 책략은 파괴적인 위협과 분산개최라는 양날을 번뜩인다. 저들은 공동개최라는 역지가 안 통하자, IOC의 중재안인 분산개최를 받아들이는 체 하며 계속 생트집을 부려왔다.

우리가 허락한 IOC중재안인 4개종목의 분산개최를 원칙적으로 동의하고도 종목확대를 뒷구멍에서 요구하며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부터 이틀동안 로잔에서 남북체육회담이 열린다. IOC중재안을 판가름 낼 사실상의 최종담판이나 다름없다.

4개종목의 분산개최라는 IOC의 중재안은 IOC현장을 위배하고까지 내놓은 최대의 성의다.

우리는 서울올림픽이 명실 상부한 세계인의 올림픽이 되도록 아량과 관용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런 남북체육회담은 이런 범위 안에서 협상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젠 그 이상의 역지와 트집을 받아들일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다. 분산개최안이 좋게 타결된다 하여도 준비과정이 첩첩산중이기 때문이다.

북한측은 이미 결판난 국제적인 대세를 빨리 판단해야 옳을 것이다. 시간을 끌면서 어떻게든 방해책동을 관철하겠다는 자세면 영원한 「세계의 외톨이」로 전락하고 말것이라는 사실을 속히 깨닫기 바란다.

서울올림픽을 북한이 흔들면 흔들린다는 망상은 번번이 산산조각이 난 것을 기억해 두기 바란다. 개최는 확고하고 성공은 보장받고 있다. 더 이상 어리석은 주장을 내세우면 냉소와 혐오의 대상 밖에 될 것이 없다는 현실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이젠 더 이상의 양보없다.

-북은 IOC 새 중재안 받아들여야-

경향신문(1987. 7. 16)

북한의 88서울올림픽참가를 실현시키려는 IOC(국제올림픽위)의 중재노력은 북한측의 거듭된 무리한 요구로 번번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

서울올림픽경기 종목의 일부를 북한에서 분산개최하는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제4차 남북체육회담에서 IOC는 이번에도 파격적인 절충안을 내놓고 북한측의 수락을 촉구했

다.

IOC의 새로운 절충안은 기왕에 북한에 배정키로 한 4개 종목(탁구, 양궁전종목, 사이클 평양~서울간 1백km도로경기, 축구예선 1개조)외에 여자배구를 추가하고 사이클 도로 단체도 북한에서만 실시한다는 것 등이다.

사마란치 IOC위원장은 새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한국과 북한은 가능한한 이른 시일내에 이에 대한 공식답변을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종하 한국측 단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IOC현장을 준수, 공동개최 주장을 철회한다면 『IOC의 새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북한올림픽위원회의 진중국부위원장은 여자배구 대신 축구의 전경기를 포함한 8개종목 배정,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명칭에 「평양」삽입, 개·폐회식의 서울·평양분리, 북한측에도 별도로 올림픽조직위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 부여, TV중계권료의 배당 등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종래의 억지주장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IOC의 이번 절충안은 우리측으로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중대 양보」이며 올림픽현장정신을 뛰어넘는 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IOC의 중재노력을 철저히 외면한채 사실상의 공동주최를 고집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88대회에 동참할 뜻이 없으면서 「판개기 작전」이나 끝까지 해보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측이 이번 IOC의 파격적 절충안도 끝내 외면한채 그들의 억지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이제 북한을 상대로 한 남북체육회담은 더 이상 계속할 필요가 없으며 IOC측도 무의미한 거중조정노력을 포기하는 편이 현명한 길이라고 본다.

거듭 강조하지만 원칙적으로 IOC현장은 올림픽개최권을 국가단위가 아닌 하나의 도시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그 「장소의 제한」 규정이 약간 완화되는 방향으로 손질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개 종목을 남북한으로 나누어 개최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억지요 생떼다. 만일 IOC가 그런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올림픽사에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결과가 될 것이다.

우리가 북한의 진의를 의심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설사 그들의 주장인 사실상의 공동개최 요구를 들어준다해도 북한에 과연 올림픽대회를 무리없이 치러낼만한 관리능력과 수용태세, 그리고 기술적인 테크놀로지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다. 듣자하니 북한은 모란봉 근처에 10여 만명 수용능력을 과시하는 대형메인스타디움을 건설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올림픽은 경기장만으로 치를 수 있는 대회가 아니다. 국제감각의 대회관리 능력을 비롯해 각국 참가선수와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 관람객들의 여행자유보장, TV우주중계에 필요한 고도의 방송시설, 신속한 경기결과 및 정보전달체계를 위한 전산망 등이 두루 갖추어져야 한다.

또 북한과 같은 폐쇄사회가 5천여 외국기자들의 자유분방한 취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와 같은 기본조건에 대한 준비와 청사진도 없이 우리가 애써 따낸 올림픽의 기득권을 무조건 분배하자는 것은 몰염치하기 짝이 없는 작태다. 북한이 88올림픽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가질 의향이 있다면 좀더 진실성을 갖고 대화에 임해주기 바란다.

#### 해외반응

아사히신문(1987. 7. 16 일본)

○ 북한은 IOC 신제안을 그들의 요구에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회답내용에 대해서는 금후 검토하여 8월에 5차 회담개최의 제안을 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어 문제의 해결까지에는 아직도

우여곡절을 남기고 있음.

마이니찌 신문(1987. 7. 25 일본)

○ 내년 서울올림픽은 전세계의 가맹국이 참가하여 완전한 평화적 올림픽을 부활시키고 싶은 것이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재 그 전망은 밝지 않음.

○ 이번 회담에서 북한측이 인구비례에 따라 8개 경기종목의 개최권을 요구하는 「과대한 요구」로 말미암아 타협점을 이루지 못했음.

○ 남북에 거주하는 같은 민족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공적인 올림픽이 개최될 수 있기를 기대함.

New York Times(1987. 7. 15 미국)

○ 북한측이 23개 올림픽 경기 종목 중 8개 종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담의 성공 여부는 의문시되고 있음.

○ IOC측의 이번 새로운 제의는 또 하나의 올림픽 보이콧 가능성을 들고 나온 북한과 타협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노력의 일환임.

Washington Post(1987. 7. 16 미국)

○ 북한측은 IOC의 이번 제안이 매우 중대한 것임을 깨달아야 하며,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할 수 없는 일임. 북한과 타협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들이 올림픽을 보이콧하지 않을 것이며, 어떻게 하든 올림픽은 개최될 것임.

○ IOC측의 새로운 제안은 IOC가 대외적으로 북한에게 화해와 협상의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고, 기타 공산국가들에게 IOC가 최선을 다했음을 알린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

The Times(1987. 7. 15 및 7. 16 영국)

○ 「사마란치」 IOC위원장은 이번 남북한 협상에서 노련하게도 북한이 거절하기 힘든 제의를 했음.

○ IOC측의 새로운 제안에 여자배구를 추가한 것은 여자배구가 공산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스포츠 종목이어서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서울대회 참가를 촉진할 것임.

○ 북한측이 서울올림픽과 마찬가지로 평양올림픽을 거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환상이며, 그것은 불가능한 일임.

○ 북한측은 합법적 또는 도덕적 권리도 없는 문제를 놓고 고의적인 계산하에 IOC의 호의를 이용하고 있음.

○ IOC측의 새로운 제안을 받고도 더 많은 종목을 요구하는 북한측의 태도는 지난 2년간 협상

때보다도 더욱 공격적이고 정치적이었음.

○ 북한측의 목표는 또 다른 평양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이며, 그것은 당연히 올림픽 개최권을 부여받은 한국에서는 모욕이 될 것이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임.

Daily Telegraph(1987. 7. 16 영국)

○ 올림픽 현장대로 한다면 북한이 88올림픽에 요구할 것은 아무 것도 없고, IOC제안 자체도 관대한 것 같음.

○ 대화의 문을 잠그려고 하는 쪽은 북한으로 보였으며, 이번 회담에서도 북한은 해결책 대신 문제점을 찾아내는 능력을 보여준 셈임.

○ 북한측의 이러한 태도는 다른 공산권국가들로 부터도 동정을 받기 어려울 것임.

The Province(1987. 7. 15 캐나다)

○ 1988년 올림픽 개최 도시가 이미 서울로 결정되었음에도 북한이 난데없이 나타나 몇가지 경기종목을 달라고 하다가 이제는 더 많은 종목을 요구하고, 평양에서 별도의 개·폐회식을 갖겠다고 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임.

○ 이러한 북한측과 타협점을 찾는다는 것은 시간낭비일 뿐이고 일만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임.

# 남북대화 제44호

(1987. 9. ~ 1988. 7)

# < 목 차 >

제1부 민족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 .....	3
1. 남북협력시대 선언과 실천의지 표명 .....	3
2. 통일문제에 대한 정부입장 천명 .....	4
제2부 남북고위당국자 회담 제의 .....	15
1. 제의내용 .....	15
2. 제의 배경 및 취지 .....	17
3. 북한반응 및 평가 .....	19
□ 자료편 .....	27
한국의 통일정책 .....	27
1980년대 주요 대북 제의 일지 .....	39

## 제1부 민족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

### 1. 남북협력시대 선언과 실천의지 표명

제6공화국 출범 후 새 정부는 남북이 서로를 경쟁이나 대결의 상대로 보아왔던 시각을 탈피, 같은 민족으로서 협력하고 함께 번영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 정부는 민족자존과 화합의 토대 위에서 통일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기본인식을 토대로 평화정착, 평화적 교류, 평화통일의 정책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북한측으로 하여금 한반도 공산화라는 혁명노선을 포기하고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더불어 잘 사는 통일된 선진복지국가 건설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통일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새 정부의 통일에 관한 기본 입장은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사와 제69주년 3·1절 기념사, 그리고 4월21일의 기자회견 등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1988년 2월 25일 제6공화국의 출범을 알리는 제13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재결합을 위한 길이 보인다면 세계 어느 곳이든 개의치 않고 방문해 어느 누구와도 진지하게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면서 폭력이 아니라 대화가 분단을 해소시키고 민족의 재결합을 가져오는 지름길임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대화의 문은 언제나 어느 곳이나 열려 있음』을 역설했다.

이와같이 새 정부는 민족자존의 새 시대에 부응하여 『대화하며 공존하고, 공존하며 협력』함으로써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통일의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다는 실천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제69주년 3·1절 기념행사를 통해 노태우 대통령은 『우리가 문을 연 민족자존의 시대는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을 향해 전진하는 시대』라고 규정하고, 조국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만날 것이며 그것이 아무리 험난하다 해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터 나갈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와 집념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또한 우리와 외교관계가 없는 북방의 대륙국가들과의 폭넓은 교류의 길을 트는 것은 『통일을 향한 우리들의 전진에 한 관문을 여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새 정부의 대외 문화개방정책이 가지는 의미를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88년 4월 21일, 취임후 첫번째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통일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시기가 다가오는 것에 대비하여 앞으로의 임기를 남북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을 열어 나가는 시대로 삼겠다고 선언하면서 『북한이 무력으로 남한을 적화통일하지 않겠다는 노선변화가 생길때 우리는 과감하게 대결상황을 청산하고 생산적인 신뢰관계를 맺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는 제6공화국의 통일정책이 우리 민족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민족공동체」 형성을 지향하면서 이를 위해 남북한간의 소모적 정치선전전을 지양하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통일을 향한 새롭고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을 뜻한다.

한편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5월 28일 야당총재들과의 회담에서도 남북한이 서로가 번영을 이룩하는 동포애적 차원으로 인식을 전환하여 『민족이 함께 잘사는 공동체를 이룩한다는 입장에서 통일정책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하고, 통일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야당의 입장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밝혔다.

이와같이 새 정부는 민족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의견을 수렴, 범국민적인 합의기반을 바탕으로 통일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통일역량의 강화를 위해 적극적이고도 전향적인 자세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 2. 통일문제에 대한 정부입장 천명

### -통일논의 개방과 대북접촉창구의 일원화-

1988년 6월 2일 정부는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열망의 고조에 부응하여 통일논의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대북제외와 접촉창구는 정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또 남북간의 대결관계를 청산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져 나가기 위해 남북한간의 인적·물적 교류의 실현을 강조하는 등 통일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천명했다.

정부 대변인은 동 발표문에서 앞으로 『통일문제에 관한 논의를 적극 개방하고 통일논의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이나 공산권 관계자료의 개방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정부내에 『관계 법규 개정과 자료 분류 기준의 완화를 위한 특별기구를 구성·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통일논의의 개방과 관련하여 『통일논의는 헌정질서에 기초를 두고 실정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정책의 수행과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지금 남과 북은 상호단절 속에서 침예한 대치상태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교섭 상대방인 북한이 통제된 일원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대북제외나 접촉의 창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로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견지에서 최근 우리 사회 일부에서 『정부를 제쳐놓고 직접 북한측을 상대로 대북제외나 접촉을 하려는 것은 통일논의와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마땅히 자제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남북한간의 신뢰회복과 민족통일로 향한 전진을 위해 남북간에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 등 각계인사들의 인적교류와 함께 물적교류도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정한모 정부 대변인 발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6.29선언과 제6공화국의 출범과정에서 밝힌 민주화 추진 기본방침에 따라 앞으로 통일문제에 관한 논의를 적극 개방하고 건전한 통일논의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이나 공산권 관계자료의 개방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내에 관련법규의 개정과 자료분류 기준의 완화를 위한 특별기구를 구성·운영할 것이며, 여기에는 각계 전문가와 권위있는 민간단체 인사들의 의견도 반영할 방침입니다.

통일논의는 헌정질서에 기초를 두고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정책의 수행과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지금 남과 북은 상호 단절 속에서 침예한 대치상태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교섭 상대방인 북한이 통제된 일원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대북제외나 접촉의 창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로 일원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최근 우리 사회 일부에서 정부를 제쳐놓고 직접 북한측을 상대로 대북제외나 접촉을 하려는 것은 건전한 통일논의와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마땅히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올림픽이 동서화해의 장이 되어야 하고 민족화합의 대제전으로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서울올림픽대회가 남북이 함께 참가하는 민족적 대제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 올림

픽 개최 확정 이후 지금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남북간의 대결관계를 청산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져 나가기 위한 성의있는 노력 또한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민족통일로 향한 전진을 위해서는 남북간에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 등 각계 인사들의 인적 교류와 함께 물적 교류도 실현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정부의 통일의지가 민족전체의 염원 아래 실현되어 질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함께 협조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금번 정부가 통일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게 된 것은 제6공화국의 민주화 추진 기본입장에 따라 통일논의를 적극 개방하고 건전한 통일논의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 및 공산권 자료 개방의 폭을 넓혀 나감으로써, 민족의 절실한 과제인 통일문제에 대한 범 국민적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통일정책 수행에 반영하려는 포용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통일논의가 개방된다고 해서 현정질서를 무시하거나 실정법을 부정하는 논의는 지양되어야 하며, 또한 통일논의와 통일정책 수행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남과 북이 상호 단절속에서 침예한 대치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교섭상대방인 북한이 통제된 일원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대북 제의나 접촉의 창구를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로 일원화하는 것은 북한의 그릇된 책략을 저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북한을 생산적인 남북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또한 제6공화국의 출범과정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천명된 「남북간 교류와 협력시대의 개막」을 위해서는 1988서울올림픽대회에 남북의 선수단이 함께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나아가서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청년학생, 학자 등 각계 인사들의 인적교류와 물적 교류가 폭넓게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실천노력은 국민적 합의기반을 토대로 대북창구를 정부로 일원화하여 정부당국의 주선과 보장하에 추진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현실적인 길인 것이다.

## 국내반응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우리사회의 민주화가 추진되어 감에 따라 통일논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주요언론은 통일논의가 전체 국민에게 열려짐으로써 국민의 참여의식을 높이는 한편, 『추진기폭력이 될 합의가 이룩될 것』이라고 통일논의 개방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아울러 통일논의에 있어서 그 과정은 『모든 국민에게 제도적으로 널리 개방』되어야 하되, 일단 토론이 끝난 다음 그 여과된 결론은 『정부당국이라는 단일창구가 대표성을 위임받아 질서있게 집행』하도록 해야 하며 제각기 『즉흥적인 통일방안이나 대북제안들을 중구난방으로 터뜨리는 것은 건전한 통일논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난 6월 2일 발표된 정부 대변인 성명에 대한 논평에서 활발한 통일논의와 북한관계 자료를 적극 개방하되 대북접촉 창구는 정부로 일원화한다는 정부방침은 『중구난방식 통일논의와 대북접근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통일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그 논의의 실현성과 실효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현실을 외면한 『공리공론과 과격한 행동주의』에 우려를 표명했다.

## 남북대화 기운의 성숙

한국일보 (1988. 5. 11)

고착된 분단시대를 흔드는 변화의 징조인가. 아직은 막연하나 여러 갈래로 「움직이는 실체」를 감지케 한다. 최근 빈번한 남북한 관계 보도는 어떤 맥락의 일치점을 드러내고 있다.

변화의 조짐은 긍정적이다. 우리 나라의 북방정책이 적극적으로 표출되며 발상의 전환이 조심스럽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전쟁위협과 대결에서 경쟁시대를 거쳐, 공동체로서의 상호복지를 고려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남북한의 의사전달에 별다른 장애가 없음이 공인되고 있는 현실이다.

우선 시기가 매우 절묘하다는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새 정부가 들어서고 얼마 안되었으 며, 서울올림픽은 불과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한반도의 주변환경도 달라졌다.

중·소의 개방정책은 경쟁하듯 박차를 가하고 있는 참이다. KAL기 폭파사건의 제재 이후 일본의 대북한 유화책도 관심거리이다.

이런 시점에서 남북관계의 접촉신호는 매우 활발하다. 노태우 대통령은 지난번 취임 후 첫 회견에서 불가침협정, 유엔동시가입, 평화통일 달성 등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안보」가 정권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천명하였다.

한편 이홍구 통일원장관은 남북한 고위접촉의 현실성을 지적하고 적십자회담의 실현가능성을 강조하며, 유엔 시한부 동시가입과 통일논의의 개방을 밝혔다. 남북관계에 관한 일련의 발언은 종래의 희망적 제의와 그 궤도를 달리함을 추단케 한다. 현실에 근거를 둔 움직이는 실체가 있음을 분명히 알려준다.

남북간의 소모적인 대결과 경쟁의 시대가 이제 서서히 끝나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공존을 발판으로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성숙한 의식이 착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가장 관심을 기울일 것은 통일논의의 개방이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중구난방 뿐 아니라 대혼란을 야기할 위험이 깔려 있다. 과거와 달리, 정부가 야당과도 상의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는 적절하고 현명한 판단이란 생각이 든다.

통일논의는 예민한 과제이다. 일부 정보의 안보 필요성을 무조건 배격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렇다고 안보를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듯, 남북관계의 정보를 정부가 독점하면서 독단적인 처사를 감행하는 지난날의 과행성만은 꼭 청산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은 민족의 숙제이지 정권차원으로 다룰 문제가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통일논의가 전체 국민에게 열려짐으로써 국민은 참여의식을 높이고 추진의 기폭력이 될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믿는다. 물론 통일논의는 국제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주체는 어디까지나 우리 자신이다. 통일의 정보가 제3국을 거쳐 돌아오는 보도의 사대주의도 억제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남북한관계가 상호 제압의 경쟁·대결에서 한 동포로서 복지를 고려할 만큼 성숙성을 발휘하면 통일의 가능성은 결코 허상이 아닌 실체를 붙잡는 실마리가 잡히리라 믿는다.

필리핀에 경제원조를 할 수 있다면 같은 우리 동포끼리 돕지 못할 까닭이 없다. 당장은 그 동안 분단으로 인한 체면이 떠오르겠지만, 이것도 시일이 흐르면 협력관계는 꼭 구축되리라는 예측이 가능해 진다.

서울과 평양은 지척지간이다. 성급한 희망에 들뜨지 말고 화해의 신호를 세차게 주고받아야 한다. 동서와 남북의 화해가 국제사회의 추세다. 우리만 예외로 고립될 수는 없지 않은가. 평양측에 거듭 당부한다. 문을 두드리고 문을 활짝 열어 보자. 이것만이 살길이다.

## 통일논의의 개방

-통일정책, 새 국면 맞고 있다-

경향신문(1988. 5. 16)

정부·여당이 통일논의 및 이와 관련된 자료를 개방하고 국가안전법·사회안전법 등 관계법의 개정도 적극 검토키로 함에 따라 각계의 통일논의는 이제 널리 확산될 전망이다. 정부의 이러한 개방방침이 최근 학원·재야·종교계 등에서 일면서 민간차원의 통일논의가 국민적 관심을 크게 끌고 있는 가운데 취해지고 있다는 데서 우리는 그 귀추를 주목한다.

비교적 진보적인 야당인사의 대거 원내 진출과 그로 인한 새로운 정국운영방식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정부와 민정당이 이 같은 능동적 통일정책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시의 적절하며 종래 정부주도의 배타적 통일정책에 과감한 변화를 추구한 점도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개방조치로 통일논의의 저변과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폭이 확대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기반 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었다는 것은 높이 살만한 점이다. 통일논의가 정부에 의해 독점되고 일반국민은 불가촉의 영역이 되어 온 데서 벗어난 폐단은 적지 않았다.

국민적 참여와 지지 속에 추진돼야 할 통일정책이 그 동안 대다수 국민을 수동적이고 객체적인 입장에 서게 한 상황에서 정권유지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오해를 배제하기는 어려웠다. 1980년대 들어와 민간차원에서 통일논의가 점차 활기를 더해간 것은 결국 민주화운동의 한 가닥 도화선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안보문제가 결코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노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상기코자 한다. 통일논의의 개방은 곧 안보문제의 정치적 이용을 차단하는 것이며 나아가 한국의 정치발전과 민주화를 가속화시킬 역동적인 계기를 함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랜 냉전논리와 안보의식으로 인해 통일논의 자체가 금지시됐던 사회분위기를 청산하는 데는 몇 가지 과도기적인 제약이 불가피하게 따르게 마련이다. 통일논의는 순수한 국내문제와

는 달리 북한이라는 상대를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통일논의의 내용과 방향이 합헌적이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겠다.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논의로까지 개방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에 대한 정부의 정보독점이 민간차원의 연구나 논의수준을 제약하고, 국민여론 형성을 저해해 왔다는 점에서 통일논의의 수준과 영역을 넓혀줄 정보와 자료의 개방에는 과감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연구활동에는 「완전개방」이 필수적이다.

다만 「인민민주주의혁명」 선동과 같은 공공연한 정치선전물의 경우 일반 국민에의 개방은 선택적일 수밖에 없다. 재야와 대학가의 통일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의 경우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전개는 용납될 수 없다.

셋째, 「남북한간의 대화창구는 정부로 일원화한다」는 원칙과 관련, 현재 남북적십자회담이나 체육회담이 민간단체 주도의 회담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정부는 회담을 측면지원, 협조하는 입장에 있음을 고려한다면 정부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전제될 경우 민간차원의 대북대화도 개방되어야 한다고 본다.

요컨대 이번 통일논의 개방조치는 국민여론의 성숙과 표출, 그리고 정부와의 사전협의를 전제로 민간 레벨의 남북접촉의 창구도 마련하는 매우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안이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남북쌍방의 통일정책을 민족공동체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국민 각자의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제안들을 정부안에 여하히 반영, 수렴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로 남는다. 민간차원의 내부적인 통일논의 못지 않게 국민과 정부간의 통일대화도 활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

통일논의 이렇게

-제도적으론 개방, 중구난방은 무익-

조선일보(1988. 5. 17)

우리는 지금 통일논의의 질서 있는 개방과 대북 교섭의 단일창구화라는 두 개의 필요성을 접합시켜야 할 시점에 처해 있다. 통일논의는 한 정파나 한 정권의 전유물일 수 없다. 모든 정파와 모든 국민이 통일논의 과정에 제도적으로 참여할 길이 반드시 개방돼야 한다.

그러나 일단 토론이 끝난 다음에는 그 여과된 결론은 정부라는 단일창구가 전담해서 대북 교섭에 임해야 한다. 남북한 당국이 협상을 해서 어떤 행사나 작업을 벌이기로 했을 때, 거기에는 물론 각계 각층의 국민대표들이 또 동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쨌든 통일논의의 과정은 제도적으로 널리 개방돼야 하되, 그 결론만은 정부당국이라는 단일창구가 국민 대표성을 위임받아 질서있게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원칙은 반드시 양립돼야 한다. 통일논의의 제도적 수용이 막혀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제도나 대북 단일창구를 벗어난 중구난방식의 혼선도 절대로 있어선 안된다. 제1공화국 이래의 통일논의에 대한 금기는 오히려 그 금기를 뛰어넘고 싶어하는 욕구를 촉발시킨 흠이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제3공화국 이래의 남북대화 노력은 또 너무 특정 정권의 전유물처럼 돼버려서, 그것 나름으로의 문제점을 제기한 점도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통일논의에 대한 이런 금기와 정부독점 방식은 흔히 야권과 청년학생들의 반발적인 통일논의를 수렴해 들이지 못한 채, 국민적 합의의 부재 속에서 자기 혼자 굴러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독점 방식은 자연히 대북 교섭에 필요한 국민 에너지의 동원과 결집이라는 중요한 조건

을 결여하게 했던 것이다.

이런 반성에서 우리는 정부가 하루속히 평통과 같은 유명무실한 조직 대신에, 각 정당-정파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통일협의기구 같은 것을 마련해서, 명실공히 모든 주장과 의견들을 거르고 종합하는 제도적 절차를 설치하기 바란다.

그러나 그 대신 그러한 합의창출의 제도를 떠나서 너도나도 제각기 즉흥적인 통일방안이나 대북 제안들을 중구난방으로 탕탕 터뜨리는 식의 불협화 소음은 대한민국을 위해 백해무익할 뿐이다.

4.19후 일부 학생들의 판문점 학생회담 주장은 그 감성적 동기야 여하튼, 결과적으로 5.16쿠데타의 구실로 이용당했음을 오늘의 학생들은 뼈저리게 통찰하기 바란다. 반면에 정부는 하루속히 야권과 청년세대의 통일논의 참여욕구를 건설적으로 수렴하여, 그것을 국민적 합의절차 속에서 다듬는 제도적 안전판을 마련하기 바란다.

요컨대 우리는 통일논의의 정부독점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반면에 통일논의가 특정운동그룹의 투쟁무기화가 되거나 대한민국의 대북 단일창구역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방식으로 제기되는 양상에도 단호히 반대하고자 한다.

#### 통일논의의 개방

한국일보 (1988. 5. 17)

요즈음 정치를 바라보는 관심의 초점이 민주화에서 점차 통일문제로 선회하는 느낌이 짙어 가는데, 특히 운동권학생들과 순수재야의 경우가 그런 것 같다. 야권의 주요 정당들도 통일논의의 확산을 당연시하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입장에 선 것으로 관측된다.

예컨대 평민당의 김대중 총재는 14일 통일논의에 대한 국민과 야당의 참여증폭 그리고 정보공개를 주장했다. 민주당의 김영삼 총재도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한 데 붙여, 자신의 중소방문 용의와 김일성과의 회담 용의를 밝힌 바 있다. 다른 한편 운동권과 재야의 「민중론자들」은 반외세 민중해방투쟁의 연장선에서 통일을 쟁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 중 일부 인사들은 남북의 위정자들을 동일한 수준에 놓고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하며, 또 남북대학생 체육대회 개최를 추진하기도 한다는 소식이다.

이에 대한 정부·여당측의 대응 또한 종전의 방식과는 판이한 진취적 자세를 헤아리게 한다. 한편으로 통일논의 개방요구를 수용하여 단계적으로 실현하되 필요하면 국가보안법 등도 개정하여 법률적 제약을 터놓겠다는 것이다. 다만 남북간의 대화 내지 접촉의 창구는 내다볼 수 있는 장래에 걸쳐 정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조심성을 보였다. 작금 심심찮게 나돌던 남북한 비밀접촉설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했으나, 상식적으로도 접근노력이 전혀 없었다면 오히려 더 이상할 일이다.

생각컨데 민주화시대에 통일논의가 집권세력의 독점물로 된다가나 정권안보에 이용된다는 것은 국민의 이름으로 결코 용납될 바 아니다. 한편 통일접근이나 북방외교는 아직껏 미묘하고 착잡한 문제점이 적지 않기 때문에 안이하게 중구난방식의 개방만을 앞세워 나간다면 될 일도 그르칠 경우가 드물지 않을지도 모른다. 요컨대 민족사적 비원인 남북통일은 과거처럼 일부 권위주의 야심가들의 정치적 이용에 내맡길 수 없는 동시에, 일부 경조부박한 사람들의 무책임한 자아현시에 번롱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통일논의의 참여폭은 확대하되, 남북대화 내지 북방외교의 창구는 최소한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당분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의 적화통일노선은 지금껏 그 헌법과 당규약에 못 박혀 있어 평양 당국자들의 운신의 폭은 매우 좁은 형편인데다가, 권력세습체제에 의한 테러 획책의 가능성은 무단히 상존하는 실정이고, 그들의 배경국관계도 딱 유동적인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우리의 경우 일부논자들은 국력의 격차라는 역학관계, 세칭 「만형자세」라는 도의적 우월성을 근거로 자신만만하다지만 사태진행은 결코 간단화될 바 아니고 희망적 관측으로 좌우되기도 않는다. 안으로 국민적 합의, 밖으로 국제적 이해를 가일층 진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통일의 조건형성에서 으뜸가는 것으로 체제차의 완화를 위한 양 지역의 민주화를 들어야 하는데, 아직은 당위성만으로 부각되었음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는 형세이다.

정부의 「창구일원화」 해명은 한시적으로 긍정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독주」인상을 수반하게 되면 국민적 합의의 기반 자체가 무너질까 걱정된다. 그렇다고 전면 개방추구는 상대방의 「폐쇄의 벽」 앞에 여의의 허점을 노출하게 될는지 모른다. 올림픽 이후를 바라보는 진취적 수용과 슬기로운 한계인식 간에 총체적인 조화선을 설정하면 좋겠다.

통일논의의 개방과 책임

-국민염원이 국내정치 인질되어서는 안 된다-

동아일보 (1988. 5. 23)

올림픽공동개최를 위한 남북한정당회담에 관한 김대중 평민당 총재의 발언은 비록 실행의지가 아닌 개인발상이라는 해명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올림픽 「공동」개최가 이제는 법률적, 외교적, 현실적, 기술적 그 어느 모로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안팎으로 충분히 알려져 있다. 올림픽이 분단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통일의 날을 하루라도 앞당기는데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으며 그래서 북한의 참가를 모두가 애타게 바라온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 모두 참가하는 올림픽이라는 민족적 염원을 오히려 역이용하여 국제관례와 상식에 벗어난 비현실적 요구를 내놓는 불성실한 자세를 견지해왔다.

올림픽경기의 주관기관이 국제올림픽위원회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받아줄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계속함으로써 결국 분단올림픽의 책임을 남쪽에 전가시키고 나아가서 분단고착의 선진공세를 가속시키려는 것이 바로 북한의 저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은 남한에서 정부와 국민, 여와 야, 야와 재야, 진보와 보수세력간의 사이를 벌려놓고 거기에 불신과 환란의 씨앗을 심으려 하는 것이다. 이미 실현가능성이 없어져버린 올림픽 공동개최문제를 갖고 남북정당회담을 열자는 구상은 북의 함정에 빠지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에 마치 우리측과 같은 야당, 재야 또는 교회, 절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국민을 착각시키는 결과 밖에 나올 것이 더 있겠는가. 북한은 분명히 일당독재요, 김일성 40년의 일족지배 폐쇄사회이다.

또 하나 남북정당회담 그 자체가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를 떠나 김총재의 발언은 통일논의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야 하느냐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민주화와 함께 우리는 지금 통일논의의 백화제방시대를 맞고 있다. 그 동안 권위체제 밑에서 억눌려 온 실로 다양한 통일에 대한 시각과 이론들이 마치 막혔던 봇물이 터지듯 걸잡기 힘들 정도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아마도 제6공화국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과제는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기반의 창출이라 할 정도로 통일문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통일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고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를 지나지 않고서는 통일정책이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정통성을 결여하게 될 것이다. 지난날의 통일정책수립이 광범위한 여론수렴의 과정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통일논의는 당분간 기존정책에 대한 조건 반사적 저항이나 정부주도의 정책결정에 대한 감정적 불신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치적 게임으로만 보면 통일논의의 주도권을 잡는 세력이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통일문제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유혹은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통일이 국내정치의 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통일논의의 개방에 과감성을 보이며 책임 있는 정당이나 사회단체와 긴밀한 공감대를 형성하려 해야 할 것이며 정치인들이나 지식인들은 그들대로 통일정책에 관한 정부의 고유한 역할과 권능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지난날 정권 측의 반공단색에 박수만 치거나 오늘 급진낭만세력의 이상에 아첨하는 따위의 시류를 타는 일시적 반동적 논의가 되기에는 통일은 너무 중요한 문제이다. 모든 정당 사회세력들은 크게는 외교, 국방, 산업, 무역의 차원에서 작게는 매일의 일상의 생활가치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체계적, 합리적 연구와 정책 대안검토의 노력있기 바란다.

급진적 통일론은 금물

경향신문(1988. 6. 3)

통일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그 논의가 어디까지나 실현성과 실효성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반대로 통일논의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그것이 현실을 외면한 공리공론으로 흐른다거나 위험한 급진논리에 빠져 도리어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 소지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그 동안 각계 각층에서 무성했던 통일논의가 통일문제를 보는 다양한 시각과 발상, 그리고 논의 영역의 확대 등 긍정적인 측면이 인정되면서도 한편으론 급진적, 환상적 주장들이 대거 분출되고 있는데 대해 국민들이 적지 않은 의문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통일문제는 민족의 장래와 생존권을 좌우하는 중대사인만큼 어떤 선부른 실험도 용납될 수 없다. 다각적인 연구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책임 있는 정부차원의 통일 정책과 발상의 전환을 제기한 민간차원의 통일논의가 서로 그 특성과 한계를 인식하고 상호보완적인 협조체계와 역할분담위에서 범국민적 통일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작업이다.

활발한 통일논의와 북한관계자료를 적극 개방하되 대북접촉창구는 정부로 일원화한다는 정부방침은 중구난방식 통일논의와 대북접근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대북 접촉창구의 정부로의 「일원화」는, 「독점」과는 개념이 다르다. 『남북간 각계 인사들의 인적교류를 위해 정부는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한 정부의 공식발표가 그것을 입증한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자유로운 통일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보장할 실효성 있는 통일방안이 도출되기까지 환경과 여건이 먼저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통일논의의 활성화를 뒷받침할 자료개방과 관계되는 관련법규의 개정과 자료분류기준의 완화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6.25 세대의 고정관념을 젊은 세대에 강요하는 식의 구각에서 벗어나, 통일논의의 자유분위기를 보장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남북통일을 진척시키자면 평화공존 무드를 성숙시켜야 한다.

긴장상태의 고조로 대화가 중단되는 상황하에서는 어떤 통일논의도 무의미하며 통일논의 자체가 상호비방의 구실이 된 것은 지난 남북대화 과정이 이를 잘 실증해주고 있다.



통일논의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은 과격한 행동주의이다. 정부를 따돌린 남북한 학생 간의 직접회담과 같은 제의는 그 실효성이 극히 희박하며 북의 정치선전장으로 이용될 우려마저 다분한 것이다.

6월 10일 판문점에서 남북한학생회담을 갖겠다는 일부 대학가의 움직임은 결과적으로 북한에 의해 그들의 위기적 상황탈출을 위한 돌파구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대화상대가 될 북한의 학생 뒤에는 북한권력의 실제인 「노동당」이라는 거대한 배후가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통일문제연구 수준이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고 이제 겨우 논의의 활성화 조치가 취해지는 마당에 현실을 앞지른 과격행동은 자제되어 마땅하다.

북한은 정치적 통제가 극단화하고 일종의 영구혁명으로 체제가 지탱되는 특수사회이다. 기본적으로 남한적화를 전제로 한 소위 「고려연방제」의 수정이 없는 한 민간차원의 독자적인 대북 접촉과 대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통일과 관련된 대북행동을 취하기 전에 정부 또는 관계전문기관과의 토론과 대화에 먼저 관심 갖기를 권하고 싶다.

#### 해외반응

세계의 주요언론들은 한국의 새 대통령이 북한측의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표명하고 나선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북한도 올림픽 개최에 대한 전반적인 국제사회의 합의가 이미 한국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전환을 추구하도록 촉구하였다.

Die Welt (1988. 2. 22)

○ 한국의 새 정부는 서울에 대한 여러 테러 공격에 북한이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Hong Kong Standard (1988. 2. 25)

○ 남한의 지혜로운 방식대로 북한을 감복시키기 위해서는 집합적인 노력으로 매우 높은 목표들을 종합할 필요가 있다.

말레이시아 중국보(1988. 2. 29)

○ 북경측은 노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외무성 대변인의 반응을 통해 한국과의 직접 무역, 남북한 통일문제 해결에의 지원 등의 가능성을 보였다.

AFP, UPI, Reuter, AP(1988. 3. 1)

○ 노태우 대통령은 조국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하면서 북한이 정치적 주장들을 접어 두고 서울 올림픽에 참가할 것을 촉구했다.

Washington Times(1988. 3. 2)

○ 노태우대통령은 『북한이 모든 정치적 요구를 접어두고 서울올림픽에 참가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북한과는 공식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한국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중공 및 북한과도 관계개선을 추구할 것을 표명했다.

산케이 신문(1988. 3. 3)

○ 한국의 북방외교는 북한의 고립화를 깨게하여 북한의 비김일성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한국은 「만형 정책」에 따라 북한에 대해 유연 대응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한다.

The Times(1988. 3. 4)

○ 올림픽개최는 국제사회에 한국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필요하며 북한과의 대화재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 북한은 올림픽참가를 거부했지만 동구권과 아시아 사회주의국가들은 서울올림픽 참가를 결정했으며, 노대통령은 이런 기회를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는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다.

Die Welt(1988. 3. 8)

○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해 북한측과 어느 때라도 회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 다만 노대통령이 올림픽 후 대중·소 외교관계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소 어느쪽도 남한과의 관계정상화로 인해 북한측과의 긴밀한 유대를 위협에 빠뜨리고 싶어하지 않고 있다.

인도 Statesman(1988. 3. 10)

○ 북한은 작년에 서방과의 교역 노력을 해보았지만 장래에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 남북관계개선을 반대하는 강경파들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김일성이 직접 이 문제에 관여하는지는 불분명하다.

AP(1988. 3. 11)

○ 노태우대통령은 이제 북한과의 「외교소모전」을 지양하고 외교정책을 보다 실리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한편, 서방진영 등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려는 국가들이 있더라도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LA. Times(1988. 3. 12)

○ 한국은 북한의 극한적인 도발 앞에서도 놀라운 자제력을 보이고 있으며

○ 최광수외무장관은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이 아직 열려 있으며 한국은 대화와 평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Finanz and Wirtschaft(1988. 3. 12)

○ 북한은 개발도상국에 머무르고 있으나, 한국은 목표추구가 뚜렷한 정치적 지도와 근면한 국민의 덕분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다이내믹한 경제 국가로 성장하였다.

○ 한국이 올림픽으로 평가절상되고 있는 점이 북한의 눈에 가시가 되고 있어 북한의 방해공작이

예상된다.

Reuter(1988. 3. 14)

○ 노태우대통령은 『서울올림픽이 끝나면 한반도의 통일문제가 우리의 당면과제로 부상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보다 유연하면서도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UPI, AFP, Reuter, AP(1988. 4. 21)

○ 노태우대통령은 취임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남북한 정상회담을 요구했으며 남북한 관계에 언급, 북한이 무력 적화 통일 정책을 포기한다면 한국은 「대결 정책」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평화통일을 위해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The New York Times(1988. 5. 4)

○ 한국측은 더 이상 북한의 고립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우리는 그들을 국제사회에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들이 코너에 몰려 움썅달썅 못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한국측은 인적교류, 우편물 교환 협정 등 상호 교류를 추구하는 한편, 일방적인 대북비방 중지 등의 일련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LA Press Telegram(1988. 5. 5)

○ 한국인들은 동포애를 보여 남북 대화를 시도할 것이며, 대화가 결실을 맺으면 한국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AFP, UPI, AP, Reuter(1988. 6. 2)

○ 한국은 북한과의 통일에 관한 자유로운 논의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으나 대북한 접촉의 유일한 창구는 여전히 정부여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 이 발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공개적인 통일논의를 억제해 오던 정부의 정책이 크게 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 제2부 남북고위당국자 회담 제의

### 1. 제의내용

이현재 국무총리는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대화재개 노력의 일환으로서 1988년 6월 3일 북한 정무원 총리에게 보내는 서한문을 통해 쌍방의 각료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을 6월중 서울 또는 평양에서 개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남북이 함께 참가하는 문제 등을 협의하자고 제의했다.

동 서한에서 우리측은, 지난 기간동안 우리 겨레가 남북으로 단절되어 반목과 대립으로 점철된 통한의 시대를 살아온 것은 『남과 북이 서로를 불신하고 있고 하나의 뿌리를 지닌 민족공동체라는 의식을 확고히 발전시키지 못한데 있음』을 상기시키고, 지금과 같은 남북간에 쌓인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가 같은 민족으로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증진시켜 나가는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측은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을 통해 『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에 남북이 함께 참가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남북의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 등의 인적교류를 실현하는 문제』, 온 민족의 기대 속에 추진되었던 『적십자회담, 경제회담, 국회회담 등 기존 대화의 재개를 주선하는 문제』 그리고 『그밖에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제의했다.

이와 함께 우리측은 우리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에서 열리게 되는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앞두고 우리 겨레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이 대회가 『동서화해의 장은 물론 남북간 화합의 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번 대회에 남북이 함께 참가함으로써 『민족적 경사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강조했다.

이 서한은 지난 5월 31일 남북직통전화를 통해 6월 3일 판문점에서 북한측에 전달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북한측이 서한접수를 거부함으로써 우리측 정부 대변인이 방송을 통해 서한내용을 발표했다.

이현재 국무총리의 대북서한 전문은 다음과 같다.

북한 정무원 총리 이근모 귀하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진지 반세기가 가까이 다가오도록 아직도 분단의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평화적인 통일을 하루속히 실현해야 하는 민족사적 과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기간동안 우리 겨레는 남북으로 단절되어 반목과 대립으로 점철된 통한의 시대를 살아왔으며, 이러한 분단역사는 반만년 우리 민족사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같은 불행한 과거를 하루빨리 청산하고 통일된 민족으로서의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노력을 더 이상 뒤로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남과 북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형태의 대화를 가져왔고 또 부분적인 결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이유가 남과 북이 서로를 불신하고 있고 하나의 뿌리를 지닌 민족공동체라는 의식을 확고히 발전시키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간에 쌓인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가 같은 민족으로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증진시켜 나가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상호신뢰가 증진되어 가면 남북간의 긴장이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민족적 유대가 회복될 것이며 평화통일의 길도 가까워지리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더욱이 우리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에서 열리게 되는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앞두고 지금 우리 겨레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이 대회가 동서화해의 장은 물론 남북간 화합의 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외의 기대와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대회에 남북이 함께 참가함으로써 민족적 경사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나는 평화통일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불신을 조속히 제거하면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져 나가기 위해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의 개최를 정중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남북고위당국자회담에서는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남북이 함께 참가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남북의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 등의 인적교류를 실현하는 문제, 온 민족의 기대 속에 추진되었던 적십자회담, 경제회담, 국회회담 등 기존 대화의 재개를 주선하는 문제, 그밖에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남북이 서로가 같은 민족이라는 입장에만 선다면 이 같은 문제들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으며, 나아가 통일로 향한 새 역사를 창조하는 디딤돌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회담이 빠른 시일내에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가능한 한 금년 6월중 서울 또는 평양에서 첫 회담이 개최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쌍방의 대표단은 각료급을 수석대표로 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나는 이상과 같은 나의 제의에 대해 귀하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988년 6월 3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현재

## 2. 제의 배경 및 취지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진지 반세기가 다가오도록 아직도 분단의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 시대가 요구하는 민족의 자존과 화합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분단구조를 해소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그 어느 때 보다도 본격적인 노력을 경주할 시기에 와 있다.

더욱이 우리는 88서울올림픽을 민족화합의 대제전으로 승화시키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길을 터 나가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동안 추진해 온 경제발전과 민주화 노력의 결실을 토대로 인식과 발상을 대전환, 민족적 숙원인 평화통일의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노태우 대통령이 그동안 대결적인 남북관계의 과감한 청산과 생산적인 신뢰관계 구축을 통한 화해구조로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통일대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민족사적 흐름에 부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금번 대북제의는 노태우 대통령이 밝힌 평화통일을 향한 「남북협력시대의 개막」 선언을 뒷받침하고 가시화하기 위한 조치의 첫걸음이라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 사회일각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고조되는 것과 함께 북한의 88서울올림픽 참가문제와 학생교류를 포함하여 남북간에 인적·물적교류를 주장하는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정당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통일정책의 추진의견을 제시하고, 88서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지난 5·28 청와대 회담에서 3야당총재들도 공통적으로 88서울올림픽대회에 북한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같이 점증하고 있는 국민들의 통일열망에 부응하고 각 정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통일문제에 대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킨다는 입장에서 볼 때, 금번 제의는 제6공화국의 적극적인 통일대화의 의지구현이라 하겠다.

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가 동서화해의 장이 되어야 함은 물론 민족화합의 대제전으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간 우리측은 일부 경기종목의 북한지역 배정문제를 놓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주재하에 남북체육회담을 진행해 왔으나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중재안을 북한측이 수락하지 않음으로써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올림픽 헌장상 올림픽대회와 관련된 제반문제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주관하에 있으며 또한 서울올림픽대회가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주최 문제나 단일팀 구성문제는 시기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측은 금번 대북제의를 통해 북한측이 올림픽 경기종목 중 일부종목을 평양에서 분산 개최토록 하는 내용의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중재안을 수락하거나, 또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초청장을 수락하여 다른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88서울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우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확실히 하고 있다.

그동안 남북간에 진행되었던 적십자회담, 경제회담, 국회회담 등은 지난 1986년 1월 북한측의 일방적인 거부로 아직까지 중단상태에 있으나 그간의 접촉 경위로 보아 북한측이 조금만 성의를 기울인다면 당장이라도 남북간에 합의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우리측은 남북간에 청년학생 등 각계 인사의 남북 상호 친선방문을 통한 신뢰회복과 민족화합을 추구하기 위해 지난 1982년 2월 1일, 「20개 시범실천사업」 제10항을 통해 각계 인사간의 상호

친선방문을 북한측에 제의한 바 있다.

평화통일로 향한 남북간 교류와 협력시대의 개막을 위해서는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 등의 인적 교류를 통해 민족적 유대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 같은 인적 교류는 세계적인 개방화 추세에 부응될 뿐만 아니라 최근 대만·중공 또는 동서독간과 같은 다른 분단국의 교류 추세와도 걸맞는 것으로서 남북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인 것이다.

남북의 각계 인사들의 상호방문이 실현되고 광범한 인적·물적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남북간에 불신감을 해소하고 나아가서 단절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따라서 북한측이 진정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고 민족통일을 바라는 의사가 있다면 적십자·경제·국회회담 등 기존 대화에 즉각 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금번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을 수락함으로써 민족적 신뢰회복과 화합을 이루는데 동참해야 할 것이다.

우리측에서 제시한 회담의제는 남북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들일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문제들은 현실적으로 그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 쌍방 당국간 직접협의를 통해 조정, 타결되어야 마땅하다.

더우기 우리측이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의를 통해 『그밖에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들도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북한측이 주장하는 문제도 토의할 수 있을 것이므로 사실상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은 폭넓은 대화의 장이 될 것이 분명하다.

### 3. 북한반응 및 평가

#### 가. 북한반응 요지

북한은 우리측의 「남북고위당국자회담」에 대해 6월 6일 이른바 「남북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의 성명을 통해 『남북연석회의준비를 위한 예비회담 형식으로 남북당국자회담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우리측의 제의를 거부하였다.

우리측 국무총리의 서한접수 대상자인 정무원 총리 대신에 「남북연석회의 준비위원회」라는 위장단체를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모든 문제를 당국간의 대화보다는 각당·각파·각계·각층 인사가 참여하는 「연석회의」형식의 정치협상무대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여 우리 사회내의 정당회담, 학생회담 등의 통일논의 확산에 편승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북한의 「남북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성명요지는 다음과 같다.

#### 성명요지

-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안은 대화와 통일논의를 독점하려는 좋지 못한 발상에서 나온 것임. 남북사이에 당국자회담이 열린다고 하여도 각료급이 마주 앉아서는 근본문제들이 해결될 것이 없음.
- 남과 북이 명실공히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화를 하려면 당국과 함께 각당·각파·각계·각층 인사들이 참가하는 연석회의와 같은 폭넓은 협상무대를 선택하여야 함.
- 남북연석회의가 소집되면 중단된 여러 갈래의 회담들을 재개하는 문제들도 해결될 것이며, 인적교류 문제도 평양과 서울에서 연석회의가 번갈아 열리기만 하면 저절로 실현되게 될 것임. 남한 당국자들의 제의가 비록 불합리한 것이기는 하지만 남북연석회의의 준비를 위한 예비회의 형식으로 고려할 용의가 있으며, 여기서는 연석회의 개최에 따른 제반 절차문제들과 기타 회의의 보장을 위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할 수 있을 것임.
- 남한당국자들이 남북연석회의에 당장 응할 수 없다면 그 이전이라도 남과 북의 각당·각파·각계·각층의 대표들이 쌍무적·다무적 접촉과 회담을 가지는 것을 방해하는 행동이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임.



## 나. 북한의 대화기피 저의 분석

금번 북한측이 우리측 제의에 대해 『남북연석회의 준비를 위한 예비회담』으로 고려한다거나 『남북연석회의가 소집되면 여기서 올림픽공동주최를 비롯한 중단된 회담의 재개문제, 인적 교류 문제가 실현될 수 있다』는 등 우리측이 제시한 당국간 회담형식 및 의제 등에 일견 신축성을 보이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북한측이 남북간에 가장 초보적인 대화, 이미 합의단계에 도달해 있는 대화를 기피하면서 이른바 「남북연석회의」, 「학생회담」과 같은 다른대화를 하자는 것은 그들이 대화에 성실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사실 그간의 남북대화 추진상황을 보면 북한측이 1986년 1월 20일 우리측의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하여 진행중이던 남북경제회담, 적십자회담, 국회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시킨 이후 중단상태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금년에 들어와서 우리 내부의 정국변화에 편승, 이른바 「남북연석회의」, 「남북학생회담」등을 제의하여 대한항공기 만행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모면·회색시키는 한편, 우리의 국론을 분열하고 사회혼란을 조장하려는 위장평화공세를 전개하고 있다.

북한측의 불성실한 대화태도를 그들의 제의내용 등을 통해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그 저의를 쉽사리 헤아릴 수 있다.

그간 우리측의 거듭된 대화재개 촉구에 대해 북한측은 「3자군사회담」(1986. 6. 17),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1986. 12. 30) 개최 등 군사문제 우선 해결을 주장하면서 경제·적십자·국회회담 등의 제반 회담 개최를 계속 외면해 왔다.

뿐만 아니라 북한측은 1987년 4월 24일 이른바 정무원 대변인 성명을 통해 기존대화의 전면 중단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대미 직접협상을 노려 남북한과 미국이 참가하는 「다국적 군축협상」(1987. 7. 23)을 제의하면서 그들의 군사문제 우선 해결의 입장만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1987년 8월 3일 우리측이 「남북외무장관회담」을 열어 기존 대화 재개문제를 포함하여 남북한 불가침문제 등 남북간의 현안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하자고 제의한데 대해서도 이를 기피하면서 남북한과 미국의 3자 회담 방식만을 고집해 왔다.

우리측의 이 같은 대화재개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이를 계속 거부해 오다가 마침내는 1987년 11월 대한항공기 폭파만행사건을 저질렀다.

북한이 버마암살폭발사건 등으로 「국제적 테러집단」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터에 또 다시 대한항공기 폭파만행을 자행한 것은 1988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 한반도 긴장고조 조성에 집착해 왔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이는 곧 북한이 남북대화 재개 추진에는 관심이 없는 반면에 우리 내부의 혼란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금년 들어 북한측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대남편지 공세도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1988년에 들어와 북한측은 김일성 신년사를 통해 「남북연석회담」를 제의한 후, 1월 14일과 3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우리측 국무총리 및 각 정당총재와 그들이 일방적으로 선택한 종교, 사회단체장, 개별인사 등 50명 앞으로 보내는 대남편지를 통해 동 회담소집을 위한 예비회의 개최를 제의해 왔다.

이러한 북한측 제의는 기본적으로 승공통일전선을 겨냥하여 종래부터 주장해 온 「남북정치협상회의」(1973. 4. 16), 「대민족회의」(1973. 6. 23), 「남북 정치인 연합회의」(1982. 2. 10) 등의 군중집회식 회의의 분석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측의 통일대화와 관련된 국론분열과 정치, 사회적 혼란을 조성하기 위한 위장평화공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전모발표(1988. 1. 15)를 앞두고 대남편지공세 등 선전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그들이 저지른 대한항공기 폭파만행으로 인한 폭력·테러집단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국제적 규탄과 비난을 모면·회색시키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서울올림픽 참가신청 마감일(1988. 1. 17)을 불과 보름 앞두고 「올림픽 공동추최」와 「대규모 군사연습중지」등을 의제로 하는 「남북연석회의」를 제의하고, 그들의 올림픽 불참발표(1988. 1. 12)와 때를 같이하여 대남편지공세를 전개한 것은 한반도의 긴장고조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면서 그들의 서울올림픽 불참명분을 확보하려는 저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측의 불순한 대화제의에 대해 정부는 1988년 1월 15일, 정부 대변인의 대한항공기 폭파만행 규탄성명을 통해, 북한측의 「남북연석회의」 제의는 반민족적 대한항공기 폭파만행을 호도하기 위한 위장대화제의를 규탄하면서 북한당국에 대해 대한항공기 폭파만행에 대한 공개 사죄와 관련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등 선대화 분위기의 조성을 촉구하였다.

정부 대변인의 성명 전문은 다음과 같다.

대한항공 858여객기를 공중폭파, 115명의 고귀한 인명을 희생시킨 북한의 야만적 행위에 대하여 정부는 온 국민과 함께 격심한 충격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북한에 의해 저질러진 지난 83년의 아웅산 테러사건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6.25동란 이래 수없이 저질러진 이 같은 북한의 만행이 또 다시 자행된 데 대하여 억제할 수 없는 민족적 울분과 비애를 절감하는 바입니다.

이 엄청난 만행을 저지른 북한당국에 대하여 정부는 그들이 이번 테러행위를 즉각 솔직히 시인하고 공개사죄해야 하며, 아울러 이 행위를 계획하고 지시하고 방조한 모든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들끓는 국민적 분노와 충격에 비추어 보아 이 같은 요구는 최소한의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야만적 테러행위를 저지른 북한이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포함하여 응징을 받지 않고는 결코 그대로 넘어갈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북한당국은 14일 이른바 다국적 군축문제등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연석회의 개최를 제의하고 나섰으나, 그와 같은 위장된 대화제의로 그들이 저지른 반민족적 살인행위가 결코 호도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만행을 저질러 놓고도 긴장완화 운운하는 이 제의야말로 실로 비수를 감춘 채 내놓은 악랄한 기만행위에 불과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이 진실로 남북대화를 원한다면, 민족적 양심으로 되돌아와 이번 사건의 잘못을 시인하고 공개사과하는 한편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대화분위기의 조성에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특별히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인명을 존중하는 세계의 모든 국가들과 관련 국제기관들은 명백히 드러난 북한의 야만적이고 비인도적인 테러행위에 대하여 공정하게 판별하고 준엄하게 규탄함으로써 이러한 반문명적 테러행위를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추방하여야 하겠습니까.

한편 정부는 다시 한번 대한항공 858여객기 폭파사건 희생자 유족들과 친지들에 대하여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모든 국민의 한층 높은 대북경계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또한 북한측은 지난 2월 4일 대남선전기관인 소위 「한국민족민주전선중앙위」 명의로 「반미투쟁」, 「남북연석회의 소집」, 「서울올림픽 반대」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107개항의 「1988년도 대남투쟁구호」를 제시하여 각계각층의 반미·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나선 데 이어 최근 「남북학생회담」과 관련하여 우리측 일부 학생들의 주장에 동조하여 적극적인 대남선전·선동

을 전개하고 있다.

그들은 5월 18일 소위 「남한 대학생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투쟁의 깃발을 높이들자』, 『투쟁속에서 우리의 관문점 상봉도 오고 투쟁속에서 우리 회담의 성공도 온다』, 『투쟁으로 우리의 만남을 성취하고 투쟁으로 통일의 여명을 마중가자』면서 학생회담을 대남혁명투쟁의 논리와 연결시키는 태도를 노골화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측의 부당한 태도는 우리의 민주화 정국에 편승하여 통일논의를 명분으로 88서울올림픽을 파탄시키고 반정부·반미투쟁을 조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북한측이 「4·19」 직후 당시 서울 대학생들의 「남북학생회담」 제의를 즉각 수락(1961. 5. 13)하고 「6·3데모」(한일 회담 반대)시에는 「남북학생관광교류」를 제의(1966. 8. 19)하는 등 학생운동을 통일전선 구축 책동에 상투적으로 이용해 온 사례를 상기케 한다.

결국 북한이 그들의 대한항공기 폭파만행에 대한 우리측의 시인, 사과 및 관련책임자 처벌 등 선 남북대화 분위기 조성촉구에는 하등의 상응한 조치 없이 묵살한 채, 「남북연석회의」와 「남북학생회담」등을 내세워 일련의 대남편지공세와 반정부·반미투쟁 선전·선동을 계속 전개하고 있는 것은 일부 정당·종교단체·학원가의 통일논의를 유발시켜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조성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방해하려는 통일전선 술책의 일환이라 하겠다.

북한의 「남북고위당국자회담」거부도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지만, 우리측이 지속적으로 대북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올림픽의 공동참가, 교류확대, 인적왕래등을 통해 새 시대에 걸맞는 평화통일여건을 구축해 나가려는 대화의지의 구현이라 하겠다.

#### 국내반응

우리측의 「남북고위당국자회담」개최 제의에 대해 국내 주요언론들은 『과거의 방식과는 다른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제의』라고 평가하고, 북한측에 동 제의의 수락을 촉구하는 요지의 사실을 일제히 게재하였다.

특히 이번 「남북고위당국자회담」제의는 제6공화국 출범후 우리측의 「첫번째 공식 대화제 의」라는 점과 『통일논의의 개방 등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한창 고조된 때에 나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면서 「민족대화합의 장」을 마련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측에 대해서는 『북한측이 진정으로 통일문제에 접근하려한다면 지금 우리 사회 저변에서 일고 있는 재야활동에 편승하며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려 할 것이 아니라 『불신의 벽을 깨고 남북신뢰 구축의 새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측의 합리적인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했다.

#### 남북대화의 문 왜 닫나

한국일보(1988. 6. 4)

우리의 통일문제와 남북접촉에 걸쳐 참신한 「발상의 전환」부터 촉구해야 할 커다란 역사적 계기가 조성되는 느낌이다. 우선 바깥세계 사람들은 앞으로 100일 남짓한 서울 올림픽을 가리켜 「동서화해의 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있다. 거래의 입장에서는 그것에 선행하여 「남북화합」의 전기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는 식으로 아직껏 낡은 발상방식에 집착해 있는 사

람들이 적지 않은 모양이다. 혹자는 민족화합의 당위성을 슬그머니 「인민해방」의 사상성으로 바꿔치기 하면서 실패한 「과거의 재연」을 노리는 것 같다. 한편 순진한 감정과 꾸밈새 있는 선전이 혼합된 동기에서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쓸데없는 시비를 일삼는 경우도 산견된다.

최근 일부 대학생들은 소수 재야세력의 부추김을 받으면서 오는 10일 판문점에서 「남북대학생 실무 대표자회담」을 열자고 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감상적이고 현실성이 없는 주장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는 보도이다. 2일의 국무회의는 그같은 지적과 함께 ① 통일논의와 자료의 개방 ② 대북접촉창구의 일원화 ③ 남북간에 각계인사와 학생들의 교류를 추진하되 ④ 실정법내로의 수용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이어 3일에는 이현재 국무총리가 북한의 이근모 정무원총리에게 보낸 서한이 발표되었다. 그 골자는 6월중에 「남북고위당국자 회담」을 열어 ① 서울 올림픽에 남북이 함께 참가하는 문제 ② 각계인사 및 학생들의 인적교류 ③ 적십자·경제·국회회담의 재개 주선 ④ 기타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를 다루자는 제의라고 간추려진다. 그리고 이 제의는 2일 국무회의의 연장선에서 보완된 것은 아니라고 알려졌다. 노태우 대통령이 지난 4·21 기자회견에서 『대결상황을 청산하고 생산적인 신뢰관계를 맺어야한다』고 밝힌 제6공화국의 북방정책기조와 또 5·28청와대회담에서 야권 3당총재들이 서울 올림픽에의 북한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요청한 취지를 살리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는 풀이이다.

그러나 북한측은 그들이 학생회담과 관련해 보낸 편지의 전달 요청을 우리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등을 시비하면서 3일자 서한의 접수를 사실상 거부했다고 한다.

하나 공정히 관찰해서 정부의 공한접수와 학생들에 대한 선동문의 전달을 어떻게 동열에 놓고 시비거리로 만들 수 있겠는가. 하기가 두 가지 경우를 통틀어서 그 배경과 지향에 드리워진 상호 「불신」의 그림자가 얼마나 짙은가를 되짚게 되는 가운데 바깥 세계에 비치게 될 남북한관계의 영상이 안타깝다. 통일접근에 앞서 우리 내부의 신·구세대간의 불신풜조도 심각한 문제제기이다. 이점 일부 학생들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최근에 거론되는 「제5공화국 비리」에서 보듯이 지난날 집권층 언저리에서 산견되던 권위주의와 특권의식도 마땅히 불식되어야 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한다.

그렇더라도 중·소와 동구권도 참가하는 서울올림픽은 목척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그 평화의 축전으로 하여금 동서화해의 광장으로 되게 할 책임은 우리겨레에게 있다. 협소한 당파성이라든지 부질없는 감정적 대응으로 전세계가 빈축내지 규탄하게 될 평지풍파식 혼란이나 방해책동을 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대국적 견지에서 선후완금을 가리고 국사상 처음 보는 세계적 성전을 주최한다는 거래의 공지를 살려 민족화합을 위해 최선의 기여를 다짐할 때라고 믿는다. 어차피 한반도의 남북관계는 모든 의미에 걸쳐 세계 속에서 위치 부여되게 마련이다.

#### 「통일」 논의와 창구

중앙일보(1988. 6. 3)

통일문제가 국내 또는 남북간의 중요문제로 등장돼 있으나 아직 질서를 잡지 못해 난항하고 있는 느낌이다.

정부가 통일논의의 개방화, 대북 접촉 창구의 일원화를 제시했음에도 대학생들은 6월10일 판문점까지 행진하여 북한학생들과 만나겠다고 나섰다.

한편 북한은 우리 정부의 남북한고위당국자회담 제의서한의 접수를 거부하고 우리 쪽 대학생들

을 선동하고 있다.

정부는 각료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당국자회담을 6월중에 열어 올림픽 공동참가, 인적교류, 대화 재개 등 남북 현안문제를 토의하자는 내용의 국무총리 서신을 3일 판문점을 통해 북에 보내려 했으나 평양측은 접수하기를 거부한 것이다.

북한은 최근 우리 정부와의 접촉을 회피하면서 재야와 운동권의 통일논의에는 적극 호응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의 통일방안을 즉각 지지하고 대학생들의 판문점회담에 호응한 것으로도 명백해졌다.

그것은 통일문제를 진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지연시키며 나아가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려는 행위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가 통일문제에서 당면한 1차적 과제는 내부질서의 정립이다. 정부는 논의의 개방화를 공식화함으로써 과거보다 진보된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 질서가 없다면 개방은 오히려 혼란을 불러올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통일논의의 체계를 세워 국내 모든 세력과 계층과 함께 참여하여 통일논의를 펼 수 있는 광장을 마련해야 한다. 통일논의는 활발히 하되 어디까지나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북접촉의 창구를 일원화한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라 볼 수 있다. 앞으로 남북대화가 활발해지면 그 접촉은 적십자, 경제, 문화 등 사회 각계각층별로 다원화 될 것이다. 그러나 창구만은 정부로 일원화할 때 비로소 질서가 잡혀 능률화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학생들의 판문점 행진이나 일부 재야 종교단체의 성급한 통일제의를 신중해야 한다. 통일문제는 그 내용에 못지 않게 절차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판문점행진의 경우 그것은 결코 보통의 일이 아니다. 대학생들이 그런 행동을 하려면 먼저 국민적 합의를 거치고 정부라는 창구를 통해 평양과 합의돼야 한다.

만일 이런 절차가 생략된 채 일부 대학생의 주동으로 판문점으로 향한다면 현실적으로 목적지도 도달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문제만 제기하여 오히려 통일논의를 지연시키고 진행중인 민주화마저 방해할지 모른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의 성실성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통일문제에 접근하려 한다면 지금 우리 사회 저변에서 일고 있는 재야활동에 편승하여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제시한 「남북고위당국자회담」에 응해야 한다. 그것이 민족공동체를 온전시키며 분단문제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길임을 확신한다.

「남-북 학생회담」안된다

조선일보(1988. 6. 4)

학생 일부의 「남북학생 판문점 회담」주장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요컨대 우리는 학생들의 그러한 움직임에 명백히 반대한다. 그것은 우리가 통일을 바라지 않아서도 아니요,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상호교류를 바라지 않아서도 아니다. 한 마디로 통일문제나 교류문제가 이런 식으로 제기되어서는 안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북한은 다 아다시피 남한에서의 혁명을 주장하고 획책하고 고무하는 기본노선에서 한걸음도 후퇴한 적이 없다. 「미제」를 축출하고 남한에 인민민주주의 혁명정권이 들어서야 한다는 주장에도 추호의 변함이 없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의 통일론은 북한의 「남조선혁명론」에 대응하는 공존론적 통일노선일 수

밖에 없다. 우리의 자유민주체제와 북한의 공산체제가 상호불가침적으로 공존하는 전제하에서 교류를 확대하면서 궁극적인 정치적 결합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는 어제 아침의 「각료회담」과 적십자회담 등 여러 가지 활발한 남북교류를 제의했으나, 북한은 이에 불응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남한 학생 일부의 「학생회담」 주장에는 맞장구를 치고 나섰다. 왜? 그들은 이것이 「미제축출」과 「민중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남한의 일부 학생 그룹과 기존사회 사이의 일대 충돌의 불씨를 던지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북한 권력과 그 장악하에 있는 북한학생, 그리고 남한의 반체제 학생 그룹을 꿰뚫는 일종의 통로를 형성하고, 남한의 쟁점을 정치적 민주화라는 단계에서 이른바 「반미 민족해방 민중 민주주의 혁명」 단계로 전환시키려는 전략-전술인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학생들이 북의 이런 전략과 본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지, 아니면 그런 점을 모르고서 순전히 열정주의적인 동기에서 그러는 지를 묻고 싶다. 만약 모르고서 그런다면 지금이라도 성급한 독주를 멈추고서, 그런 문제를 충분한 국민적 토의와 합의절차에 먼저 회부하는 순서를 밟을 것을 요청한다.

학생들은 정부·여당의 통일논의 독점을 매도한다. 그렇다면 학생 일부 역시 통일작업을 중단할 권리가 없다. 학생 일부는 언제 어떤 국민적 합의 절차를 거쳐 남북 학생회담의 남쪽 당사자가 될 자격을 부여받았는가.

그리고 만약 북의 전략을 알고서도 그런다면 그것은, 극좌적인 혁명을 반대하고 자유민주 단체를 수호하려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대응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의 학원에는, 보수는 아니더라도 극좌는 아닌 학생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더 많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이런 다수의 균형감각 있는 학생들이 학생운동의 극좌화를 막는데 건설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

도대체 일부 시각은 어째서 모든 통일-평화-민주-인권의 장애요인이 남에만 있고 북에는 없다는 양 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북측이야말로 양심수를 잡아가두고 수용소를 만들고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며 올림픽 참가를 거부하고 KAL기를 폭파하고 아웅산 테러를 자행하며 적십자 회담 조차 거부하는 비상식-반상식의 소스탈린주의 집단이 아닌가. 학생제군의 편견없는 사실인식을 당부한다.

예컨대 미군만 해도, 그들의 주둔을 부른 것은 6·25의 남침과 북의 변함없는 자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불신의 벽부터 깨자

-북한은 남북고위회담에 응하라-

경향신문(1988. 6. 4)

남북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대화뿐이다. 이현재 국무총리는 북한의 이근모 정무원총리에게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을 이달 안에 열자고 3일 제의했다. 이 총리의 이번 제의는 6공화국 출범 후 우리정부의 첫 번째 공식 대화제의라는 점과 통일논의의 개방 등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한창 고조된 때에 나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우선 통일논의는 적극개방하되 대북 제의나 접촉의 창구는 정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천명과 관련, 이번 제의는 그러한 의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총리가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의 의제로 제시한 남북한 올림픽 공동참여 문제와 인적교류, 기타 문제들은 정부가 북한측의 제의까지도 대국적으로 수용, 논의할 수 있다는 전향적자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올림픽을 불과 1백여일 앞둔 시점에서 북한의 참가를 정부의 공식 창구를 통해 거듭 설득하고 나선 것은 12년만에 재개될 동서화합의 제전에 같은 동족인 북한이 빠질 수 없다는 대형적 야량과 민족 대화합의 장을 마련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대북제의에 대한 창구일원화 문제는 특히 청와대 4자회담에서 3야당지도자들도 공감한 바가 있다. 이번 정부의 대북제의를 3야당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돼야 한다. 이는 남북대화에 임하는 초당적 입장과 국민적 합의의 성숙이라는 차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다.

이총리의 제의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북한측이 제기하는 문제도 고위당국자회담에서 얼마든지 토의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의제로 제시된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가 그것인데 이는 바로 북한의 「연석회의」 주장까지도 대국적으로 수용,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남북의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학자, 학생 등 사회 각계각층의 교류까지도 실현하는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기존의 대북 제의방식을 뛰어넘은 과격으로 받아들여진다.

이것이야말로 남북한 신뢰회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한 것이다.

지금 남북관계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상호 「불신의 벽」부터 깨는 일이다. 불신의 벽은 같은 민족으로서 동질의식을 느끼고 서로 협력하고 교류를 증진시킴으로써 무너뜨릴 수 있다. 대화로 풀면 막혔던 「이산」의 벽도 쉽게 허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지난 적십자회담을 통해 똑똑히 확인하지 않았던가. 과거의 방식처럼 서로간에 평풍식으로 제의를 위한 제의만 하고 편지전달마저도 「받아라」 「못받겠다」 하는 식으로는 실질적인 대화의 진전은 기대할 수 없다.

이제 더 이상의 형식적인 제의나 그저 제스처로 한번 해보는 식의 전략·전술적 차원의 선전전은 쌍방이 다같이 철저히 배격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충고이다. 이총리의 이번 대북제의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정중한 호칭까지 쓴 것을 주목하며 이러한 대북한관이 앞으로 전개될 남북관계의 진전에 전향적으로 반향되기를 바란다.

남북관계의 성급한 개선을 바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제의」의 범주를 넘지 못한 현실에 실망을 느끼는 국민들도 없지 않을 법하다. 그러나 남북대화는 뜨거운 감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며 차가운 이성과 인내와 성의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하는 대북설득 노력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본다. 이총리의 대북제의가 남북신뢰구축의 새 전기가 되도록 북한측으로부터 긍정적 호응이 있기를 바란다.

□ 자료편

한국의 통일정책

- 이홍구 국토통일원장관 국방대학원 강연 전문 -

제6공화국의 출범이후 통일문제가 상당히 많은 각광을 받으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바로 6공화국이 통일문제를 긍정적인 자세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 긍정적이란 뜻은 습관화된 소극적 자세로부터 탈피하는 발상과 인식의 대전환을 뜻합니다. 통일이란 대단히 실현되기 어렵다고 하는 현실적인 감각이 지난 40년간 체질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으며, 또한 이것은 대단히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결과로 통일이 되겠느냐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소극적이고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일상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번에 제6공화국이 통일문제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겠다고 하는 것은 -며칠전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도 다시 역점을 두어 거론하신 내용입니다만-단순히 수사학적인 목적으로 적극적인 표현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적어도 3가지 측면에서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양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여망을 대단히 강력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대통령 선거때 그 어느 때보다도 남북관계, 통일에 대한 깊은 관심과 기대를 국민들이 표명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통일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정책결정의 결과가 아니고 제일 먼저 우리 국민들의 꿈, 국민들의 희망을 토대로 해서 통일문제를 새로운 자세에서 펼쳐 나가겠다 하는 의지를 개진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둘째로 이런 국민의 뜻에 긍정적인 자세로 호응하고 또 그 뜻을 꼭 실현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밝힌 새 정부와 새 대통령을 뽑을 수 있습니다. 즉 이 정부는 국민의 여망을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역행하는 정치는 절대로 안한다는 기본적인 자세, 특히 통일문제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여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대단히 적극적인 자세로 한번 남북관계를 개선해 보자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고, 이것을 실행에 옮기려 하는 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셋째로, 아무리 우리 국민이 원하고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해도 만약 국제환경이 이러한 긍정적인 움직임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가 적극적인 정책을 펴 나간다고 해도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국제적인 환경의 흐름을 볼 때 남북관계 개선에 대단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추세라고 생각할 여지가 많습니다.

바로 우리 한반도를 양분한 미국과 소련의 관계가 상당히 호전되어 가는 기미가 있고, 다음 달에 있을 레이건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이 이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중



거리미사일 폐기협정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두 초강대국 사이의 관계가 호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북방의 거대한 나라인 소련과 중국이 다 같이 자기들의 내부적인 필요 때문에 가급적 전쟁보다는 전쟁이 없는 소강상태를 희망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외교정책을 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국제환경이 우리의 통일노력에 대단히 유리한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 측면인 국민의 여망, 새 정부, 새 대통령의 의지, 그리고 국제적인 흐름을 감안할 때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예측입니다.

여기서 물론 가장 큰 변수로 남게 되는 것은 북한의 태도입니다.

남북관계라는 것은 바로 그 관계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북한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관건이 될텐데, 아시다시피 북한의 미래에 대해서 간단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북한 자체도 올림픽 이후에는 적잖게 변화할 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도 가능해집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통일문제, 남북관계의 변화 가능성은 과거에 보지 못할 정도로 관심의 초점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통일이란 개념 자체를 완전히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공간적 개념이란 공간적으로 한반도가 두 동강이 났기 때문에 두 동강이 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자는-말하자면 원상복귀적인 개념으로서의 통일을 논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큰 한계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원상복귀란 역사 속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외형적으로는 원상복귀에 가깝다하더라도 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압록강, 두만강 이남의 한반도의 국토가 한 체제안에서 존재한다는 뜻에서 원상복귀를 일반적으로 논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상복귀는 국토통일이라는 개념으로는 정의될 수 있겠습니다. 통일원의 공식명칭이 「국토통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주로 생각해 오던 관점의 틀이 무엇이었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1945년 38선으로 나뉘어지고 1948년에 대한민국이 수립되어 남북에 두 체제가 생겨서 40년 이상 분단을 계속해 오는 동안에 남쪽도 변했고 북쪽도 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40년 전의 한국이 아니며 북한도 역시 40년 전의 북한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듯 완전히 달라진 두 체제가 통일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어려운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국토분단 문제가 국토통일로 해결되어서 원상복귀한다는 것은 하나의 공간적인 개념인데 비해서, 40여년 동안 많이 변화한 두 체제가 앞으로 5년 또는 10년 안에 어떤 식으로 새로운 남북관계를 형성하느냐는 뜻에서의 통일은 단순한 공간적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적 차원에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통일을 말할 때 공간적 차원, 시간적 차원을 합친 2차원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개입됩니다.

시간적 차원에서의 남북관계의 변화가 통일이란 종착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예상하는 그리고 희망하는 사회의 모양, 사회의 틀, 사회의 내용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하는 미래상의 문제가 나

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간단치 않은 것은 바로 우리 사회안에서도 그 미래상에 대해 통일된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다른 미래상을 많은 사람들이 그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와 북한과는 대단히 상반되는 미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다원화된, 다양한 미래상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말하는 통일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간단히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이 이미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한국내에서는 이러한 미래상에 대한 공통분모를 찾아내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미래상을 그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한 미래상을 가진 우리와 전혀 다른 미래상을 가진 북한이 어떻게 해서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가 하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것이 통일문제에 임하는 적절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요약하자면 「통일하자」고 말하기는 쉬우나 거기에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이번 달에 나온 「월간중앙」에 실린 대담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통일논의에 있어서 누가 더 애국자인가를 시험하는 자세에서 논의하는 것은 제일 위험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서양의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애국심에 호소한다는 것은 무죄한의 최후의 도피처다』 이것은 『내가 누구보다도 더 애국자다』라고 하는 자세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내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나라를 사랑한다하는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해야 합리적으로 어떤 방안이 과연 더 좋은 방안이냐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나라를 사랑하는 데 다른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하는 유아독존적이고 교조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대화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통일문제도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다고 하는 교조적인 입장에서 출발한다면 대화가 진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조적인 입장을 버리고 과연 우리가 이룩하려는 통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논의하면서 그 미래상을 그릴 때 통일에 대한 실마리가 풀릴 것입니다.

『통일을 하자』하고 부르짖는 것은 좋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통일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즉 앞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룩하려고 하는 통일의 내용이나 모양은 어떤 것인가 하는 분명한 청사진 없이 그냥 통일을 부르짖는 것은 일견 대단히 애국적인 입장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대단히 무책임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이란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중심과제로 남게 되는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통일문제를 둘러싼 역사적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날의 우리 통일정책의 역사를 회고하는 것은 하나의 정책이 어떤 경위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과연 우리가 생각한 통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어떤 것을 우리가 원했나 하는 것도 분석해 보는데 있어 적지않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없이 우리가 분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단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잠깐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의 분단 문제는 1945년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945년에 미국과 소련이 북위 38°

선을 경계로 해서 한반도를 둘로 나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단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적어도 20~30년전의 역사를 잠깐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느 나라나 근대화 과정을 겪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근대국가를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봉건적인 군주체에서 탈피해서 근대사회를 만들고 또 근대적인 국가체제를 만드는 것이 어느 나라에서나 공통된 경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불행히도 이러한 근대화 과정의 시발점에서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식민지의 시련을 겪게 됐습니다. 따라서 식민지 시대에는 우리의 지상의 목표가 「독립」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독립운동의 전개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와같은 독립운동의 전개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첫째 일본을 몰아내는 것이고, 다음으로 과연 우리가 건설하려고 하는 근대적인 국가는 어떤 국가냐 하는 근대국가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였습니다. 즉 일본의 축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근대국가의 창건,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근대국가를 만들 것이냐를 생각해 보는 것은 일견 쉬운 일인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애국심의 예도 들었고 통일의 예도 들었습니다만, 『독립을 하자, 일본 사람을 내쫓자』 이것을 부르짖기는 쉬웠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건설될 근대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모양은 어떠한가에 대한 대답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 대답을 모색하는 것이 대개 1920년 전후의 독립운동의 양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선진 여러나라의 예도 보고, 또 그것을 참고로 해서 크게 보아 2가지 모델이 1920년대를 전후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는 1919년의 3·1운동보다 2년 앞서 1917년, 대단히 후진성을 띠었던 러시아에서 레닌에 의한 이른바 10월혁명이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의 소비에트 러시아가 탄생했습니다. 이 모델에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찌면 이 레닌식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1925년 서울에서 「조선공산당」이란 당을 결성하였습니다.

국내에서의 조선공산당, 중국 연안으로 가서 중국공산당과 함께 독립운동한 사람들, 그 다음에는 만주에서 연해주로 넘어가서 소련에서 소련군과 함께 활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합쳐서 근본적으로 미래의 한국이라는 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국가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청사진 밑에서 독립운동을 해 왔습니다. 이것을 크게 봐서 독립운동의 좌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1919년의 3·1운동의 결과로 수립된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은 바로 미국이나 유럽을 모델로 한 이른바 자유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모델을 형성했습니다. 이것을 크게 보아서 독립운동의 우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45년에 일본이 전쟁에 져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는데 그때 만약 미국과 소련이 우리를 38°선으로 나누지 않았다면 우리 한국사람들 사이에서 대단히 격렬한 투쟁과 많은 피를 흘렸을지 모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정이 되어서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좌로부터 우까지 또는 우로부터 좌까지가 분포된 그런 정치체제를 형성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우는 남북으로 인위적으로 미군과 소련군이 진주함으로써 국토를 분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단이 간단히 끝난 분단이 아니고 미국과 소련이 냉전시대로 돌입함으로써 전세계적인 두 진영의 대결을 그대로 반영한 분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한국에서의 분단은 별안

간에 외국사람들이 나라를 두 조각을 내서 한쪽의 주민들이 양쪽으로 왕래를 못하는 그런 정도의 분단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독립운동기에서 부터 존재하던 좌우익과 남북의 분단이 겹쳐져서 북쪽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체제를 만든 곳이 되고, 우리 38선 이남에서는 대체로 자유민주주의의 모델을 가지고 근대국가를 형성한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단이라는 것은 단순한 국토분단이 아니고 국토분단에 곁들여서 대단히 심각한 이념적 분단, 정치적 분열이 제도화된 분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단순히 원상복귀적인 즉 공간적 차원에서 생각하는 통일이란 것은 대단히 성취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단순한 분단의 해결이 아니고, 국토분단과 더불어서 이념적·정치적 여러 측면에서의 대단히 복잡한 분단의 양상이기 때문에 그 해결책 역시 간단히 찾을 수 없는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1950년 북한이 무력으로 적화통일을 기도하는 원인이 되어 우리는 전쟁이라는 비참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 경험은 지금 말씀 드린 분단의 양상을 한층 더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남북간에 아주 심각한 군사적 대결의 양상을 가져 왔습니다. 따라서 그로부터 30여년간의 남북의 대결은 국토분단, 정치적 분단, 이념적 분단 등을 넘어서서 생사가 걸려있는, 즉 한쪽이 이기면 다른쪽은 죽어야 하는 그러한 사생결단의 군사적 대결의 양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의 분단 양상은 어느나라 보다도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그동안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우리 통일정책의 추진 과정은 여러분께서 대부분 잘 아시기 때문에 아주 개략적으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948년부터 시작되어 1960년까지 계속되는 제1공화국의 통일정책은 실지회복이었습니다. 즉 대한민국은 한반도 전체의 유일합법정부라고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유엔에서 승인된 원칙이었기 때문에, 남북을 통일하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북쪽의 땅을 회복하는 실지회복을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정책이었습니다.

즉 북한은 불법단체이다. 따라서 이 불법단체가 잠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실지를 회복해야겠다는 것이 제1공화국의 통일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개의 한국론을 받아 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란 것은 우리 대한민국 하나만이지 두 개의 한국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법단체인 북한과의 협상이란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불가론 또는 협상배제론이 기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통일이란 목표를 설명할 때는 유엔총회가 결의한 대로 남북한이 유엔감시하에 인구비례로 총선거를 한다면 그 총선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바로 통일된 나라다 하는, 『유엔감시하의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가 우리의 궁극적인 통일목표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북한에서는 인구비례란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북한은 그후 근래에 까지도 남북의 교섭과정에서 항상 1:1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지 인구비례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구로 하면 우리가 2:1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예외가 생긴 것은 올림픽 준비를 놓고 북한에서 공동주최를 주장하면서 IOC가 4개종목을 북한에서 주최해라,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2종목을 추가해 줄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김일성은 그래도 우리의 인구가 1/3인데 24경기 종목중에서 8개종목은 북한에 주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함으로써-이것이 스포츠면에서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처음으로 인구비례에 따른 조정을 시인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일입니다.

여하튼 원칙적으로 제1공화국의 통일방안은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4·19가 일어나고 제2공화국이 생겼습니다. 흔히 장면정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제2공화국, 길지않은 기간이었습시다만 그때의 남북정책 또는 통일정책도 그 골격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즉 대한민국이 유일합법정부고, 유엔감시하에 총선거에 의한 통일을 주장했는데, 변한 것이 있다면 두 가지 정도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북진통일론을 공식부인한 것입니다. 즉 1960년 8월 24일 외무장관 성명으로써 무력으로 우리가 북진통일하겠다는 것을 일단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의 장면총리의 연설을 통해서 「선경제건설 후통일」의 원칙을 밝혔습니다. 즉 우리가 통일을 향해 움직여야 하겠지만 통일이 당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고 우선 우리 스스로가 빈곤으로부터 탈피하는 경제건설을 앞세워야 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두 개의 정책, 즉 북진통일론의 부인과 「선경제건설 후통일」의 입장은 그 이후에도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4·19후에 탄생한 제2공화국에서는 지금과는 상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상당한 정도의 언론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가 부여되었습니다.

정치활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물결속에서 많은 이른바 혁신계 정당들이 남북협상을 주장하고 중립화 통일방안을 내세웠습니다.

또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판문점에서 남북학생들이 만나서 협상을 하자는 안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상론, 제1공화국에서 배척하고 금기시되었던 협상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오고 더구나 중립화 통일을 부르짖는 상황하에서 5·16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5·16군사정부가 이러한 혁신계 세력들이 내세웠던 중립화 통일안이라든가 협상안에 대한 하나의 반대로 내세운 것이 「반공이 국시다」라는 것이고 5·16군사정부는 반공제일주의를 다시 한번 확고하게 정립하게 됩니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하나의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5공화국 후반기에 국회나 정계에서 이른바 「국시논쟁」을 불러 일으키는 하나의 서장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3공화국에서 달라진 게 무엇이고 계승된 게 무엇이나 하면 반공을 국시로 한다는 제1공화국의 정책노선이 다시 부활되어 강조되었다는 점과 『경제건설을 앞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통일은 그 후에 이룩해도 되는 먼 훗날의 목표다』하는 제2공화국의 정책노선이 대단히 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1960년대에서 1970년대로 넘어가면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 변화는 국내적 변화도 있습니다만 국제적 여건의 변화에서 오는 큰 흐름의 변화를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1970년대 초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 이른바 테탕트가 진행되고 또 미국과 중공의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키신저에 의한 중공의 방문과 같은 과거에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돌발적인 사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1970년 8월 15일, 당시의 박정희대통령이 새로운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그것은 소위 남북한간의 선의의 체제경쟁을 제의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유엔의 북한참석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체제경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970년 8월 15일 박대통령의 선언을 통해 처음으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북한의 체제의 존립을 인정했다는 점에 그 중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 동안 우리가 유엔감시하의 총선거 방법을 주장해 왔으며 대한민국 자체가 유엔

의 결정에 의한 총선거에 의해서 성립되었고 그리고 유엔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문제를 대체로 국제적 차원 특히 유엔의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정책으로부터 궤도수정을 시도하였다는 점입니다. 즉 1970년의 「8·15 선언」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한국문제의 국제화로부터 한국문제의 국내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는 한국문제는 무작정 유엔에만 가져갈 것이 아니라 바로 당사자인 우리가 존재를 인정한 당사자인 북한체제와 당사자간의 협상이나 대화나 교섭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이른바 한국문제의 한국화(Koreanization of Korean question) 또는 분단문제의 한국화로 표현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만 1971년으로 들어가면서 남북적십자회담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1972년에는 이른바 남북공동성명-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7·4 공동성명」이란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북한정권을 대화나 협상의 실체로 인정하고 유엔을 통해서가 아니라 남북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서 한국문제를 해결하자는 새 방침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국내에서는 이른바 유신헌법에 의한 정치적 변동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해인 1973년 6월 23일 이른바 「6·23 선언」이라는 중대한 선언이 나가게 됩니다.

6·23 선언은 지금 말씀드린 몇 개의 정책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이론화한 것으로서, 먼저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을 반대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와도 문호를 개방하겠다 하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사회주의 국가라든가 또는 북한과 국교를 맺은 나라와는 우리가 관계를 맺지 않는 원칙을 지켜왔는데 이제는 그런 사상과 이념에 구애되지 않고 세계 모든 나라와 문호를 개방하겠다 하는 원칙을 천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명시하지는 않았습지만 사실상 평화와 통일이라는 두 개의 목적을 놓고 볼 때 평화가 앞서고 통일이 뒤따라오는 「선평화 후통일의 원칙」을 밝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통일을 무조건적으로 우선 통일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무조건적인 통일론과 같이 무책임한 통일론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무조건 통일하자는 사람은 지적으로 태만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면 복잡하고, 복잡한 생각은 싫으니까 무조건적 통일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으로서나 하나의 집단으로서 즉 국가로서 목표로 삼는 것이 단 한가지일 때는 무조건적 통일론을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2-3가지만 들더라도 전쟁하기는 싫고 평화는 유지해야겠다는 것이 국민들의 여망입니다. 그리고 통일도 하고 또 잘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3가지 가운데서 「평화」와 「통일」만 놓고 보면 우선 쉽게 표현하여서 「평화통일」을 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2-3가지 중의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우선 순위를 이야기하면 다들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좋은 것인데 이 중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라 하면 마치 그 중에서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 같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이야기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진지하게 이것을 국가의 목표로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순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미 15년 전에 발표한 「6·23 선언」은 어떤 의미에선 그로부터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전쟁을 통한 통일은 원치 않는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평화적으로만 해야 되겠다』하는 우리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차대전후 영토문제를 해결하는 강대국의 협상의 결과 또 그후의 정치적 정세의 결과를 말미암아서 세계에는 우리를 포함하여 네 개의 분단국이 나타났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고, 그 다음은 독일이고, 세 번째는 월남이고, 네 번째는 중국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사실 통일을 이룬 것은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월남입니다.

그 한 나라의 통일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무력에 의한 통일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대부분이 오늘날 원하는 것은 전쟁을 통한 통일은 원치 않는다고 우리 정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평화 후통일」이라는 것은 통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버리면서 통일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제발전의 문제, 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도 어떤 의미에서는 다 우리 국민이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국민이 못살면서 통일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또 통일이 대단히 중요한 목적이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 보면 당면문제를 잘 살아야 되겠다는 쪽으로 귀착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해나가는냐 하는 것이 통일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큰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남북대결이라는 상황 속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대결은 흔히 상징의 전쟁이라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가 선전전의 차원에서 어떤 상징을 내놓고 싸우는 그런 양태도 있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싸움에 있어서는 여러 개의 목표를 내세우는 것보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내세우는 것이 효과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주의 체제인 북한은 복잡하지 않게 『우리는 통일이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통일하겠다』는 식으로 하나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평화, 통일, 발전 이렇게 여러 개를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니까 여러 개를 내세우는 것이 상징조작의 면에서는 하나를 내세운 것보다는 간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목적의 다원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통일정책을 모색한다는 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6·23 선언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1974년 1월 우리가 「남북불가침협정」 체결을 제의하였고 평화통일의 3대 기본원칙-어떤 의미에선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는 평화정착, 문호개방, 통일의 3단계 통일방안을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1974년 이후 지난 10년간에 내세운 통일정책이라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목적의 다원성을 인정하면서 통일을 기능주의적인 통합이론에 입각해서 추진해 왔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계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가능한 데서부터 남북협력을 해나가자고 하는 단계론으로 우리의 통일정책이 일관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례로 1978년에 우리는 남북한 경제협력촉진을 위한 협의기구의 구성과 여러 번에 걸친 적십

자회담, 체육의 협력 등 여러 가지 안을 제안했었습니다.

80년대에 들어와서 제5공화국은 통일정책추진에 있어 괄목할만한 어떤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과거의 배경을 가지고 그대로 끌고 왔습니다만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에 역점을 두고 80년대의 제안들이 나가게 된 것은 특이할 만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981년 1월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 즉, 서울·평양을 상호방문하는 최고책임자회담을 제의했고 6월에는 거듭 이 제안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까지도 계속 되어서 며칠 전에 있었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다시 남북최고책임자간의 회담을 환영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1982년에는 이제까지 나와 있던 그런 통일정책이 상당한 정도 축적도 되고 또 변화도 되고 해서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다는 진단아래 이것을 종합해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이라는 비교적 체계있는 통일방안으로 집대성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우리 통일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사실은 가볍게 언급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다소의 문제는 있습니다.

우선 방안의 이름이 길어서 발음하기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내용을 너무 집대성하다 보니까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지적했 듯이 남북간의 상징의 대결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에서 주로 내놓는 「고려연방안」에 비해서 우리 안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6공화국이 앞으로 전개할 통일방안에는 그런 지적들이 충분히 감안된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아 물론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두 가지 방안이 합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민족화합부분, 이것은 기능적인 접근방법으로서 남북이 가능한 영역에서 즉, 이산가족이 다시 모인다는가, 경제적으로 서로 협력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민족의 화합을 먼저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민주통일부분 즉 민족화합의 바탕 위에서 통일을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것으로서 남북의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가 모여서 「민족통일협의회의」라는 것을 구성하고 그 「민족통일협의회의」에서 통일헌법을 만들고 그 통일헌법을 국민투표에 부쳐서 확정을 시키고 그 확정된 헌법에 의해서 총선거를 하고 그 선거에 의해서 정부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과거로부터 있었던 통일방안을 집대성해서 만든 부분과 민족화합 부분, 즉 기능적이고 점진적인 남북간의 접근을 시도하는 측면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안의 구체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1982년 1월 22일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이 나오고 며칠 뒤인 2월 1일에 「20개 시범실천사업」을 발표했습니다.

1984년 후반기에 들어서는 우리가 북한측의 수재물자를 받은 것을 계기로 남북적십자·경제회담 등 여러 가지 대화가 진행되었으며, 이런 상황아래에서 1985년에는 남북간에 고향방문단을 교환하는 등 약간의 진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6년에 들어와선 북측에서 이른바 「팀 스피리트 훈련」을 이유로 걸고 진행되어 오던 모든 회담을 중단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팀 스피리트 훈련」은 매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와서 별안간 이것을 근거로 회담을 중단한다는 것은 명분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북한체제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한편으로 그들 체제 자체를 변화하는 상황에 어떻게 적응시키느냐하는, 변화에 대한 적



응의 필요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국제경제 체제에 대해서 개방을 시도하고 나선 데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 북한도 그러한 현실적응의 필요를 느낀 나머지 이른바 「합영법」이란 법도 통과시키고 외자를 유치하는 등 체제를 바꾸어야 되겠다는 조짐을 다소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단히 심각한, 월남병에 걸려 있습니다. 월남병이라는 것은 분단되었던 나라 중에서 통일된 나라는 월남뿐인데, 월남에서는 공산당이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을 상대로 싸워서 이김으로써 통일이 되었으니 한반도에서 이와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월남에서 일어났던 사태를 한반도에서 반복해 보고 싶다는 하나의 환상적인 희망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이 그대로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양면작전으로 나올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때도 있어 우리측으로 본다면 예측불허의 행동을 취할 때도 있는 것이 북한의 실태라고 하겠습니다.

북한이 남북회담을 중단시킨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대체로 재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특히 작년 1987년도 한국내의 정세를 북한에서 볼 때는 우리 내부의 극심한 혼란으로 말미암아 혁명의 가능성이 고조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판단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놀랄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한국안에서도 체제자체가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 자기 듣기 좋은 보고만을 들은 평양의 지도자들이 한국에서의 정치적 불안이 대단히 높은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여 그 혁명적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놀랄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월남에서 있었던 사태와 같은 것을 반복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고조되면서 자연스럽게 남북의 협상, 남북대화는 뒷전으로 미룰 수밖에 없는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그것이 지금까지도 지속되어 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여러 가지 남북간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남북간의 접촉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접촉에 대한 기록을 다시 검토해보면 올림픽 공동주최에 대해서도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공동주최를 하자고 하면서도 그렇게 열성을 가지고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의 체제가 작년 말까지 상당한 변화로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서 한국정부측과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던간에 그런 사정을 넘어서서 지금 제6공화국이 출범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6공화국은 바로 국민들의 여망, 또 정부, 대통령의 의지, 국제정세 이런 것을 감안해서 대단히 긍정적인 통일정책을 펴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긍정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정책을 펴 나가겠다는 말로 환언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대결 즉, 우리의 생명이 걸려 있는 남북대결에 몰두한 나머지 사실상 여유를 가지고 북쪽을 대할 그런 자세를 갖지 못했던 경우도 허다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울에서 24회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것 바로 그 자체가 우리의 국력, 우리의 힘이 상당한 정도 축적되었다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북쪽을 대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한 여유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긍정적인 정책이 전개되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로 이러한 여유를 반영하는 것이 요즘 흔히 논의되는 북방정책이라고 할 수 있

졌습니다. 지금 우리와 사회주의 국가들 특히 우리 북쪽에 자리잡고 있는 두 개의 큰 나라 즉 소련과 중공과의 관계가 현저하게 호전되어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북방정책을 펴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중공과의 관계를 개선한다, 소련과의 관계를 개선한다는 것들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북방정책을 펴 나가는 것은 어디까지나 남북 관계를 호전시켜서 통일로 향해서 한 걸음 앞서 나가겠다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지, 통일 관계 즉 남북관계를 짓혀놓고 중공의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단선적인 목표 때문에 북방정책을 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강조점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으면 마치 우리 대기업이 중공의 시장을 빨리 개척해서, 무역량을 늘리기 위해서만 북방정책을 전개하는 것 같은 오해를 우리 국민사이에서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새 정부는 북방정책 따로, 통일정책을 따로하여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관계를 앞으로 몇 해 동안 결정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을 제일 목표로 삼고 상호 유기적으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통일을 실현시키자는 차원에서 북방정책을 펴나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제6공화국 통일정책의 기초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고 얘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은 단순한 국토의 재결합, 국토의 통일이 아니고, 남과 북이 달라진 두 체제를 어떻게 다시 연결을 시키느냐 하는 것이 과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족공동체라는 개념으로 그 바탕을 삼을 때만 가시적인 정책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5천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왔는데 그 살아온 주축을 이루는 것은 민족이라는 공동체라는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한국사회에 대한 해석, 특히 삼국시대에 대한 해석은 역사학자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사를 보는 관점에서 통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삼국시대에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있었지만 그것이 모두 우리 나라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그때에 세 개의 정치체제가 있었다라든가 우리가 하나의 민족공동체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우기 1910년부터 1945년 또는 1948년까지 우리 나라는 외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웠던 식민지 시대에도 우리 민족사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은 우리가 민족공동체로서의 존재를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그리고 21세기로 넘어가면서 추구하려는 것은 바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그 민족공동체가 하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기틀을 빨리 마련해야겠다고 하는데서 통일의 진로를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민족공동체의 내용은 하나의 사회공동체입니다.

즉 우리 이산가족의 결합문제, 자유왕래의 문제 등은 우리에게 직면한 중요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공동체의 문제는 우리가 다같이 잘 살아야 하겠다는 복지공동체란 뜻도 되겠습니다. 즉 우리민족을 구성하는 구성원이라면 그 사람이 신의주에 살든 또는 원산에 살든 목포에 살든 간에 다 잘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관할하는 정치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을 다 합쳐 가지고 민족공동체의 문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나간다면 현재의 존재하는 정치적 분단, 군사적 대결을 빨리 완화시키는 데 큰 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공동체의 육성작업을 게을리한다면 바로 정치적 분열과 군사적 대결로 말미암아 공동체 자체가 갈라지는 즉 한민족이 아니라 민족공동체 자체가 두 갈래가 나는 그야말로 5천년 역사상에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민족의 비극을 가져올 수 있다는 뜻에서 적극적으로 공동체형성의 과제에 모든 힘을 기울이려 하는 것이 제6공화국의 통일정책의 기본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풀이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그 내용이 다 확정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한지 오늘이 꼭 2개월인데 그 사이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조 위에서 새로운 정책, 새로운 전략,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지난 40년간의 우리의 정책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새 시대의 국민여망과 또한 국제적인 환경이 마련해주는 여러 가지 기회와 가능성을 다 감안해서 새 정책과 전략이 마련되고 있다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세기를 돌아해보면 사실 한민족으로서는 대단히 비참한 일세기였습니다.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으로부터 시작하여 나라는 이미 독립을 잃었고, 1945년부터 분단이 되었습니다. 눈을 크게 떠보면 세계 역사상에 현존하는 나라 중에서 제일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나라는 우리가 아니고 아마도 이스라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차 대전에만 나치스 등에 의해서 학살당한 인구가 6백만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인구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 시련을 겪은 나라는 일찍이 없었고 또 오늘날도 정말 사면초가로 아랍의 바다 속에서 하나의 고도로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제일 시련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쯤 가는 것이 우리 나라가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도 남북한 합쳐서 6천만 조금 넘습시다만 인구의 거의 다가 단 한번도 통일된 국가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1910년부터 태어난 사람들도 이제 78세니까 거의 우리 국민의 모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당시 태어난 분들은 독립된 우리 나라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식민지에서 태어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시다만 식민지 총독부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945년에 해방은 되었지만 분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번도 통일된 나라에서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1910년부터 오늘날까지 한번도 통일된 독립국가에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97%~98%를 이룬 나라는 지금 세계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가 20세기에 가장 시련을 많이 겪은 나라인데, 불과 2~3년 전에도 생각해 볼 수 없었던 무역의 흑자라던가 하는 놀랄만한 일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단순히 자축하기보다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앞으로 남은 11년 동안에 현재의 남북관계를 현저하게 개선을 시켜서 민족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적어도 20세기 처음부터 있었던 거의 1세기에 걸친 비참한 역사로부터 탈피해서 20세기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정돈해서 21세기에 넘겨줄 그런 보물을 20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같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라는 역사적 관점에서 제6공화국의 새 통일정책을 정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책의 정립과정에서 통일논의의 개방문제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과도기에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시련과 혼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통일정책 수행에 있어서의 국내적인 여러 가지 과제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980년대 주요 대북 제의 일지

일자 및 형식	제 의 내 용
1981.1.12 전두환 대통령 국정연설	<p>&lt;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 제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의 상호방문</li> <li>-민족적 신뢰회복의 결정적 계기 마련</li> <li>-전쟁재발방지의 획기적 계기 마련</li> <li>-남북대화의 무조건 재개를 통한 평화통일의 역사적 계기 마련</li> <li>○ 부담·조건없는 김일성의 서울방문 초청</li> <li>-서울체재기간중 일체의 신변안전보장</li> <li>-원하는 장소방문에 대한 모든 협조 제공</li> <li>○북한의 동일조건 초청경우, 북한방문 용의 표명</li> </ul>
1981.6.5 전두환 대통령 「평통」 제1차 전체회의 치사	<p>&lt;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 제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김일성주석」에게 아무런 부담과 조건없이 상호방문을 초청한 지난 1월 12일자 제의의 수락강조</li> <li>-북쪽에서 먼저 서울에 와도 좋고 본인이 먼저 평양에 가도 좋으며 그 선후 선택은 북한당국의 판단에 일임</li> <li>○ 북한측이 본인의 초청을 수락할 수 없고 본인을 북한으로 초청할 수없다면 남북한당국의 최고책임자가 다른 어떤 장소에서든지 직접 만나 의견교환</li> <li>-시기: 북한당국에 일임</li> <li>-장소: 판문점이나 제3국을 포함한 장소의 선택은 북한당국에 일임</li> <li>-협약내용: 북한당국이 제의했던 통일방안을 포함,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li> </ul>
1981.6.19 조상호 대한체육 회장겸 대한올림 픽 위원장 성명	<p>&lt;남북한 체육회담 제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 친선경기를 비롯한 체육교류 실시 및 국제경기의 단일팀 구성참가는 민족적 화합의 계기조성에 기여</li> <li>○ 1984년 제23회 올림픽대회 및 1982년 제9회 아시아경기를 비롯한 각종 국제경기에 단일팀 참가</li> <li>○ 남북 단일팀구성 관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체육인 대표회담 제의</li> <li>-일시: 빠른 시일내</li> <li>-장소: 서울이나 평양 또는 판문점</li> </ul>
1982.1.22 전두환 대통령 국정연설	<p>&lt;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천명&gt;</p> <p>[통일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자결원칙</li> <li>-통일의 주체는 특정 계층·집단이 아닌 겨레 전체</li> <li>○ 민주적 절차</li> <li>-겨레 전체의 자유의사를 반영</li> <li>○ 평화적 방법</li> <li>-무력이나 폭력방법 배제</li> </ul>

일자 및 형식	제 의 내 용
	<p>[통일미래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민주공화국 완성으로 민족·민주·자유·복지의 이상 추구</li> </ul> <p>[통일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통일협회의의 구성⇒통일헌법 기초</li> <li>○ 국민투표⇒통일헌법 확정</li> <li>○ 총선거 실시⇒통일국회, 정부 구성</li> </ul> <p>[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 체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호혜평등 원칙에 입각한 상호관계 유지</li> <li>2)분쟁문제의 대화·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li> <li>3)상대방 체제인정, 내정불간섭</li> <li>4)후진체제유지·군비경쟁지양 및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li> <li>5)상호교류·협력을 통한 사회개방 추진</li> <li>6)통일까지 각기 체결한 국제조약·협정 존중</li> <li>7)서울·평양에 상주연락대표부 설치</li> </ol>
<p>1982.2.1 손재식 국토통일 원 장관 대북성명</p>	<p>&lt;20개 시범실천사업 제의&gt;</p> <p>[사회개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서울-평양간 도로연결·개통</li> <li>2)이산가족간 우편교류·상봉 실현</li> <li>3)설악산·금강산 자유관광 공동지역 설정</li> <li>4)교포의 조국방문 공동주관, 관문점통과 자유방문</li> <li>5)인천 -진남포항 상호 시범개방</li> <li>6)모략방송중지 및 상대방 정규방송 자유청취 허용</li> <li>7)「86아시안게임」·「88올림픽」에 북한선수단 관문점통과 참가</li> <li>8)외국인 관문점 통과 자유왕래 보장</li> </ol> <p>[상호교류·협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9)공동어로구역 설정</li> <li>10)각계 인사간의 상호친선방문 실시</li> <li>11)쌍방기자 자유취재활동 보장</li> <li>12)민족사의 공동연구 추진</li> <li>13)체육친선교환경기 개최·국제경기 「단일팀」 구성 참가</li> <li>14)일용생산물 교역 실시</li> <li>15)자연자원 공동개발·공동이용</li> <li>16)기술자 교류, 상품전시회 교환개최</li> </ol> <p>[긴장완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비무장지대 공동경기장 시설마련, 이용</li> <li>18)비무장지대 자연생태계 공동학술조사</li> <li>19)비무장지대 군사시설 완전철거</li> <li>20)남북간 군비통제조치 협의, 군사책임자간의 직통전화 설치·운용</li> </ol>

일자 및 형식	제 의 내 용
1982.2.25 손재식 국토통일 원장관 대북성명	<남북한 고위대표회담 제의> ○ 대표단 구성: 각료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 9명으로 각각 구성 ○ 협의내용 -통일헌법을 마련할 「민족통일협의회의」 구성과 남북한관계의 정상화 실현을 위해 남북한당국 최고 책임자회담을 개최하는 문제 -북한측이 2.10제의한 회담에 관한 문제 -남북한간의 교류·협력, 사회개방과 긴장완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제반문제 등 ○일시·장소: 1982년 3월중 서울·평양 또는 판문점 ○ 우리측 대표단 명단 수석대표: 노태우(정무제2장관) 차석대표: 김상구(「평통」 사무차장) 대 표: 이영일(국회의원·민주정의당) 대 표: 김문석( " ·민주한국당) 대 표: 강기필( " ·한국국민당) 대 표: 백찬기( " ·민주사회당) 대 표: 이흥구(「평통」 자문위원) 대 표: 김태서(국정자문회의 전문위원) 대 표: 송한호(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장)
1983.1.18 전두환 대통령 국정연설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의 당면해결과제 4개항제시> ○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의 필요성 강조 ○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에서 논의할 당면해결 과제 4개항 제시 1)남북한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 조치 강구 2)「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과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방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함으로써 통일문제 해결의 토대마련 3)국제무대에서 남북한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민족역량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 강구 4)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하는 계기 마련
1983.2.1 손재식 국토통일원 장관 대북성명	<남북한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담 개최 제의> ○ 구성 -쌍방 당국 대표 -쌍방 정당·사회단체 대표 ○ 협의내용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 실현문제 -평화적 통일을 위해 남북한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 ○ 예비회담 제의 -대표구성: 각 당국 대표 2명, 정당 대표(민정당·민한당·국민당) 3명 -개최시기: 1983년 3월중 -개최장소: 판문점 또는 서울·평양

일자 및 형식	제 의 내 용
1984.1.11 손재식 국토통일원 장관 대북성명	<p>&lt;남북한 당사자간의 직접대화 촉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버마사건에 대한 공식 또는 비공식 시인·사과 및 관계자 처벌</li> <li>○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 내지 「남북한당국 각료급회담」 개최 촉구</li> <li>-남북한 사이의 긴장상태 해소와 군비경쟁 중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불가침선언」 문제도 이러한 남북대화에서 협의·해결함이 타당</li> <li>○ 한반도 분단과 한국동란에 직접·간접으로 책임있는 관계국들이 참가하는 회담 개최</li> <li>-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보장과 통일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환경 조성에도움 기대</li> </ul>
1984.1.17 전두환 대통령 국정연설	<p>&lt;폭력에 의하지 않는 민족통일 천명&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 수락촉구</li> <li>-전쟁방지를 위한 조치와 쌍방이 제기하는 통일방안 협의</li> <li>○ 폭력에 의하지 않는 민족통일의 성취</li> <li>-통일의 제1조는 평화, 여하한 경우에도 폭력배제</li> </ul>
1984.2.10 진의중 국무총리 대북서한	<p>&lt;남북한당사자간 직접대화 촉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버마사건에 대한 북한측의 납득할 만한 조치 이행</li> <li>○ 민족자결원칙에 의한 남북한 당사자간 대화 진행</li> <li>○ 남북 당사자간 대화를 순조롭게 진행시켜 가면서 한반도 분단과 한국동란에 직접·간접으로 책임이 있는 관계국회담 개최</li> <li>-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환경 조성</li> <li>○ 이상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한간 직접대화 호응 촉구</li> </ul>
1984.4.2 정주영 대한 체육회장 겸 대한올림픽위원 장 대북회신	<p>&lt;단일팀구성 및 체육교류 실시 위한 남북체육회담 제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체육회담 제의</li> <li>-일시: 1984년 4월 9일 오전 10시</li> <li>-장소: 관문점 「중감위」 회의실</li> <li>-대표구성: 남북한의 체육회 및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각 4명의 대표</li> <li>-회담의제</li> <li>△ 84 LA올림픽 대회, 86 아시아경기대회, 88 서울올림픽대회를 비롯한 국제체육경기대회에 참가할 남북한 단일팀 구성문제</li> <li>△ 남북 체육교류 실시문제</li> </ul>
1984.8.20 전두환 대통령 하계 기자회견	<p>&lt;남북한 교역·경제협력 실시 제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간에 교역과 경제협력 실시 제의</li> <li>○ 북한측의 동의시 북한 동포들의 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기술과 물자를 무상으로 제공 용의</li> <li>○ 우리 땅에서 열리는 「86 아시안게임」 과 「88 올림픽」 에는 단일팀으로출전하게 되기를 희망하며 그를 위한 남북체육회담 개최 기대</li> </ul>

일자 및 형식	제 의 내 용
1984.10.4 유장순 대한적십자 사 총재 대북서한	<p>&lt;남북적십자회담 조속재개 제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수재물자 교류가 이산가족들과 친척들의 재회를 위한 인도적 사업으로 발전되기를 기대</li> <li>○ 남북적십자간의 이산가족재회 실현을 위한 회담의 재개 희망</li> </ul> <p>-이달중 회담개최</p>
1984.10.12 신병현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대북서한	<p>&lt;남북경제회담 제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 당국의 경제분야 대표들과 민간경제단체 대표들이 허심탄회하게대화 진행</li> <li>○ 남북한 교역과 경제협력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쌍방 당국과 경제계 대표로 구성되는 남북한 경제협력기구 설치</li> </ul> <p>-대표단 구성: 정부의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한 경제당국 및 민간경제단체의 대표로 구성</p> <p>-일시·장소: 북측에 일임</p>
1985.1.9 전두환 대통령 국정연설	<p>&lt;상주연락대표부 설치 제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대화는 어떤 것이든 평화와 화합의 광장으로 활용</li> <li>○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의 결정적 계기 조성을 위하여 본인과 「김일성 주석」 과의 회담실현 촉구</li> <li>○ 남북한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관계를 개선하며 다각적인 대화와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에 연락대표부를 상설적으로설치할 것을 제의</li> </ul>
1985.6.1 이재형 국회의장 대북서한	<p>&lt;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 제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시점에서 남북입법기관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민족적 과업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통일헌법 제정문제의 협의</li> <li>○ 통일헌법제정을 위한 남북간의 협의기구 구성에 따른 제 문제와 기타 통일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토의하기 위해 남북국회회담 개최 환영</li> <li>○ 남북국회회담 개최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예비접촉 제의</li> </ul> <p>-대표단 구성: 쌍방 국회의원 각 5명</p> <p>-일시·장소: 7월중 관문점</p>
1985.6.5 전두환 대통령 「평통」 제3차 전체회의 개회사	<p>&lt;국제사회에서 민족자해행위 중지 촉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간의 모든 현안문제를 총괄해서 다루고 보다 책임있게 해결해 나가기 위한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li> <li>○ 국제사회에서 민족의 자존을 높이고 민족의 동질성과 상호신뢰 회복을위한 생산적인 노력을 전개</li> </ul> <p>-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먼저 민족자해적인 상호비방행위 즉각 중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에 북한의 참가를 희망하며 참가인원의 신변안전 및 모든 편의를 보장</li> </ul> <p>-북한의 남북한 체육회담 조속한 호응으로 양대제전의 단일팀 구성과 체육교류의 실현</p>



일자 및 형식	제 의 내 용
1985.10.21 노신영 국무총리 유엔창설 40주년 기념 총회 연설	<통일대화 관련 5개항 정책 천명> 1)대한민국은 유엔헌장의 목적과 제 원칙을 지지하고 평화와 선린을 대외정책의 기조로 견지 2)한반도문제는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간의 대화·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 3)대한민국은 이념·체제를 초월, 어느 나라와도 평화변영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나라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협력관계를 추구 4)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 평화에의 기여와 국제협력의 적극적 수행을 위해 유엔가입을 위한 노력 계속 5)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민족 스스로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모든 나라의 성원을 기대
1986.11.28 이규효 건설부장관 대북서한	<남북수자원당국회담 제의> ○ 북한측의 금강산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 남북수자원 관계당국간의 회담제의 -의제: 남북공유하천 개발·이용문제 협의·해결 및 북한측이 제기하는문제 -대표단 구성: 남북 쌍방의 장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각 7명의 대표 -일시 및 장소: 1986년 12월 10일 오전 10시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
1987.3.17 노신영 국무총리· 이기백 국방부장관 대북서한	<상호신뢰 바탕위에 남북총리회담 개최 제의> ○ 남북간 초보적·실질적 신뢰조성을 위해서 남북수자원회담을 지체없이개최하는 한편, 중단된 기존대화 무조건 재개 ○ 상호신뢰를 위한 최소한의 여건이 조성된 바탕 위에서 남북총리회담을개최, 쌍방이 제기하고 있는 남북간 관계개선과 긴장완화에 필요한 제반문제 포괄적 협의 -구체적인 회담날짜는 북측에 일임
1987.8.3 외무부 성명	<남북한 외무장관 회담 개최 제의> ○ 의제 -신뢰구축문제 △남북한 불가침협정 체결 △유엔 가입 및 교차승인문제 △기존대화의 재개·발전과 수자원문제 협의·해결 -긴장완화·평화정착문제 △군축을 포함한 제반문제
1987.9.17 최광수 외무부 장관, 제42차 유엔총회 참석 출국 기자회견	<유엔총회 기간중 남북외무장관 접촉용의 표명> ○ 금번 유엔총회기간을 이용, 유엔에서 북한측과 아무 전제조건없이 모든관심사 토의기회 기대 -남북 외무장관이 뉴욕 또는 서로 편리한 장소에서 직접 만날 용의 표명

일자 및 형식	제 의 내 용
1988.2.25 노태우 대통령 제13대 대통령 취임사	<p>&lt;평화통일과 민족재결합을 위한 실천의지 천명&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재결합을 위한 길이 보인다면 세계 어느 곳이든 개</li> <li>의치 않고 방문해 어느 누구와도 진지하게 대화할 용의가 있음</li> <li>○ 대화의 문은 언제나 어느 곳에나 열려있음</li> </ul>
1988.3.1 노태우 대통령 제 69주년 3.1절 기념사	<p>&lt;조국통일에 대한 집념과 북방정책 추진의지 표명&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국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만날 것이며 그것이 힘</li> <li>난하다 해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터 나갈 것임</li> <li>○ 북방의 대륙국가들과의 폭넓은 교류의 길을 트는 것은 통일을 향한 우리들</li> <li>의 전진에 한 관문을 여는 것이 될 것임</li> </ul>
1988.6.3 이현재 국무총리 대북서한	<p>&lt;남북고위 당국자회담 제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단 구성</li> <li>-각료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5명 내외</li> <li>○ 회담의제</li> <li>-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남북이 함께 참가하는 문제</li> <li>-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 등의</li> <li>인적 교류 실현문제</li> <li>-적십자, 경제, 국회회담 재개 주선문제</li> <li>-기타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li> <li>○ 회담일시 및 장소</li> <li>-6월중(1차 회담) 서울·평양 교환 개최</li> </ul>

# **남북대화 제45호**

(1988. 7. ~ 1988. 10)

# < 목 차 >

I. 민족 자존과 통일변영을 위한 「7.7 대통령 특별선언」 .....	3
1. 특별선언의 배경과 내용 .....	3
2. 특별선언의 의의 .....	6
3. 6개항 정책선언의 의미 .....	8
4. 국내외 주요반응 .....	12
5. 북한반응 .....	20
II. 「7.7대통령 특별선언」 구현을 위한 실천조치 .....	21
1. 「남북적십자 실무회의」 개최 제의 .....	21
2. 「남북교육당국회담」 제의 .....	28
3. 전향적 대북 외교시책의 선언 .....	34
4. 대북 비난방송 중지 .....	37
5. 남·월북작가의 해방전 문학작품 출판허용 .....	38
6. 북한 및 공산권 자료 공개 .....	39
III. 남북정상회담 개최 제의 .....	46
1. 제의 내용 .....	46
2. 제의의 의미 .....	48
3. 국내외 반응 .....	50
4. 북한 반응 .....	57
IV.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	59
1. 성립배경 .....	59
2. 남북 쌍방의 기본입장 .....	63
3. 회담진행 경과 .....	66
4. 중간결산 .....	79
5. 국내외 반응 .....	81

## I. 민족 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7.7 대통령 특별선언」

### 1. 특별선언의 배경과 내용

노태우대통령은 1988년 7월 7일 남북관계와 북방정책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룩해야겠다는 의지와 비전을 바탕으로 새 공화국 통일외교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번 선언은 국제적인 화해와 긴장완화 추세에서 비롯된 통일환경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새로운 발전이라는 여건의 성숙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자는데 기본적인 의의가 있다 하겠다.

노태우대통령은 4월 21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앞으로의 임기를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 나가는 시대로 삼겠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통일논의를 개방하고 공산권 및 북한 관계자료를 개방토록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노태우대통령은 지난 5월 28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야당총재들과의 회담시에도 『민족이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이룩한다는 입장에서 통일정책을 추구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선언은 이같은 정책기조 위에서 민족화해와 협력에 기여하는 각종 조치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강구해 나갈으로써 분단 40여년간 대결과 경쟁으로 이어져 온 남북한 관계를 과감히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구현한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온 국민의 단합된 힘과 강열한 의지로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아울러 민주화의 발전을 가속화시켜 왔으며, 그 결과 민족의 장래에 대한 확고한 자신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세계적인 화해분위기 속에서 우리 민족사상 최초이며 인류 최대의 대제전인 88 서울올림픽 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우리와 교류가 없었던 나라들과 국제협력의 통로를 넓힘으로써, 아시아·태평양의 주역국가로서의 국제적 신뢰와 지위향상에 따라 민족적 자긍심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같은 국민적 자신감과 자긍심은 조국통일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으로 확산되었으며, 통일정책 추진에 있어 새로운 인식과 발상의 전환에 대한 요청으로 나타났다.

이제 우리 민족은 오랜 반목과 민족자해의 늪에서 벗어나 화해와 협력의 밝은 시대를 함께 열어 나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를 경쟁이나 대결의 상대로 보아왔던 시각에서 탈피, 같은 민족으로서 협력하고 공동 번영해 나가는 길을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한편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서로 문화와 역사가 다른 민족간에도 개방과 교류의 새 물결이 넘쳐 흐르고 있으며,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추세에 있다.

더욱이 남북한 관계개선과 민족통일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미국과 소련이 화해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 우리와 외교관계가 없는 소련과 중국도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지원하는 입장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적인 화해와 협력의 힘찬 기운이 한반도 전체에 넘치게 함으로써 민족자존의 토양을 바탕으로 분단의 극복과 자주적 통일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역사적인 시점에 이르렀다.

이같은 견지에서 우리가 폐쇄·고립적인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 내어 책임있는 성원이 되도록 지원한다면 「잘 사는 나라 건설」을 지향하는 국제적 조류 속에서 민족역량의 낭비를 막고 한반도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특별선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친애하는 6천만 동포 여러분!

나는 오늘 온 겨레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새 공화국의 정책을 밝히려 합니다.

우리 민족이 남북분단의 고통을 겪어온지 반세기가 가까와 옵니다.

분단의 역사는 우리 민족에게 슬한 시련과 고난을 주었으며, 민족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남북분단의 장벽을 허물어 번영된 통일조국을 여는 길을 개척하는 것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 겨레 모두에게 맡겨진 민족사의 소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이한 이념과 체제로 분단된 남북은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루었으며, 남북으로 갈라진 겨레는 분단 그날부터 오늘까지 서로가 서로를 불신·비방하며 서로를 적대시하는 고통스런 분단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분단은 우리 민족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나 민족통합은 우리의 책임아래 우리의 자주적 역량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의 밝은 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민족전체의 복지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때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문화와 역사가 다른 민족 사이에도 과감한 개방과 교류의 새 물결이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전쟁의 위협과 대결의 긴장이 상존하고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야 할 역사적인 시점이라고 확신합니다.

동포 여러분,

우리가 아직 비극적인 분단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남과 북이 민족공동체라는 의식을 등진 채 서로를 대결의 상대로 여겨 적대 관계를 격화시켜 온 데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며 겨레의 힘과 슬기를 모아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면서 빛나는 역사와 문화전통을 창조해 왔습니다.

따라서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공동체로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번영된 통일조국을 실현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이 길이 곧 민족자존의 길이며 민족통합의 길입니다.

이제 남과 북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민족적 유대를 강화해 나갈 적극적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결의 관계를 지양해야 합니다.

북한이 책임있는 성원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그것이 북한사회의 개방과 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남북은 상호간에 서로의 위치를 인정하고 민족전체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친애하는 6천만 동포 여러분,

나는 오늘 자주·평화·민주·복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족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사회·문화·경제·정치공동체를 이룩함으로써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임을 약속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내외에 선언합니다.

1.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 등 남북 동포간의 상호 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해외동포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2. 남북적십자회담이 타결되기 이전이라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이산 가족들 간에 생사·주소확인, 서신왕래, 상호 방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주선·지원한다.
3. 남북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간 교역을 민족내부 교역으로 간주한다.
4. 남북 모든 동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비군사적 물자에 대해 우리 우방들이 북한과 교역을 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5. 남북간의 소모적인 경쟁·대결외교를 종결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발전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또한 남북 대표가 국제무대에서 자유롭게 만나 민족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희망한다.
6.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미국·일본 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협조할 용의가 있으며 또한 우리는 소련·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한다.

나는 이상과 같은 우리의 조치에 대해 북한측도 적극 호응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북한측이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 온다면 보다 전진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아울러 밝혀 둡니다.

나는 오늘의 이 선언이 통일을 향한 남북간의 관계발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6천만 우리 겨레 모두가 슬기와 힘을 모은다면, 이 세기가 가기 전에 남과 북은 하나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공동체로 통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는 머지 않아 하나의 나라로 통일하는 위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 2. 특별선언의 의의

이번 특별선언은 남북이 비록 체제를 달리하고 있으나 하나의 민족이라는 민족공동체 의식에서 출발, 북한 동포도 민족의 일원으로 포용하여 교류와 협력을 활발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 선언은 이제까지 고립·폐쇄적인 북한을 봉쇄해 온 소극적 정책을 지양, 북한 사회의 개방과 발전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통일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의 통일정책 전환을 의미한다.

이처럼 통일문제를 보는 시각과 인식에 큰 획을 그어놓은 「7.7 특별선언」은 대체로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의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북한에 대한 인식의 전환

이번 특별선언은 무엇보다 북한을 경쟁·대결·적대하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민족의 일부로 포용하여 상호 신뢰·화해·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대북한관에 있어서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고 하겠다.

남북한이 상호 단절과 불신 속에 민족자해 행위를 지속한다면 민족역량의 낭비는 물론 민족자존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이제 남과 북은 한 거래, 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민족공동체라는 의식을 조속히 회복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사실 남북한이 상호 불신, 비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조차 서로 헐뜯고 다투는데 골몰한다면 이는 우리의 발전수준, 성숙한 국민의식, 올림픽을 치른 국민의 자긍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번 선언의 근본취지는 하나의 민족적 공동체 아래 남과 북에 2개의 체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북한의 현실적 존재를 인정하고 상호 화해와 협력의 증진을 통해 민족통합을 지향해 나가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이 선언을 통해 우리는 남북한 관계를 독립된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이 될 때까지의 잠정적 관계로서 한 민족공동체안의 특수관계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남북간의 교류를 국가간의 교류가 아닌 민족내부의 교류으로 간주하고자 하는 점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민족통일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선언은 한 민족 안의 두 체제간에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적극적인 교류·개방·협력을 통해 사회·문화·경제부문에서 공동체로 통합해가며,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공동체로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하나의 나라로 통일을 실현한다는 통일이념을 담고 있다.

역사와 문화, 민족이 다른 나라들로 구성된 구주공동체(EC)의 경우에도 국경에 관계없이 사회·경제·문화와 교류 등에 있어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되고 있는 상태이며, 정치적 공동체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EC에 비하면 오랜 역사를 통해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 온 우리 민족간의 공동체 회복은 이보다 어려울 것이 없다.

우리 민족은 수천년의 역사를 통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룩하고, 그 속에서 함께 삶을 영위해 왔으며,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민족공동체로서의 일체감을 잃지 않고 민족본연의 모습을 지켜왔다.



우리 민족이 비록 상이한 이념과 체제로 인하여 남북으로 분단되었지만 민족공동체가 하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키 위한 민족의 뿌리는 여전히 살아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민족 본래의 참모습인 동시에 또한 지향해야 할 목표이기도 한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킴으로써 민족구성원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하루속히 열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민족적 유대를 강화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함께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간다는 「선의의 동반자 관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 통일·외교정책의 기조전환

이번 특별선언은 또한 북한을 내외로부터 고립시켜 결과적으로 북한 내부의 변화를 꾀한다는 정책으로부터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성원으로 참여하는데 협조함과 동시에 미·일 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개선까지도 지원하겠다는 적극적인 통일·외교정책으로의 전환을 뜻하고 있다.

북한에게 국제사회에 진출할 길을 열어주겠다는 이같은 적극적인 정책은 우리의 역량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북한의 내부적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통일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남북간의 지나친 경제적 격차나 세력불균형은 오히려 통일에 장애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북한 동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입장에 서야 한다.

남북한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북한 동포의 복지향상을 위해 그 발전을 돕겠다는 민족애를 발휘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정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해외 동포들의 자유로운 남북왕래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종래 정책에 대한 전환임과 동시에 고향방문, 친족상봉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폐쇄적인 북한사회의 개방을 발전적으로 촉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적극적인 북방정책으로 소련·중국 등 공산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현실적 입장에서,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을 막는 소극적 정책을 견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 하겠다.

우리의 우월한 국력과 국제적 지위에 비추어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더이상 위협적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북방외교 추진성과가 북한이 서방국가와 관계개선을 하는데 전제조건으로 될 필요는 없다.

한편 우방국이 북한과 비군사적 물자에 대한 교역을 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정책으로의 전환도 국제사회의 대북한관계에 있어 큰 변화를 내포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북한 내부의 개방과 변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이번 선언은 외교면에서 남북간의 소모적인 경쟁·대결외교를 종식시키면서 국제사회에서 민족의 공동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으며, 우리의 포용력이 두드러지게 돋보이는 대목이라 하겠다.

### 3. 6개항 정책선언의 의미

자주, 평화, 민주, 복지의 원칙에 입각한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 시대 추구

이번 선언은 우선 자주, 평화, 민주, 복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족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사회, 문화, 경제, 정치공동체를 이룩함으로써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기본정신을 밝히고 있다.

이번에 천명된 6개항의 정책 또한 이러한 기본정신의 토대 위에 추구되는 것이며, 북한측이 긍정적인 자세를 보일 때는 이같은 맥을 좇아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보다 더 전진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이번 특별선언이 추구하는 자주·평화·민주·복지원칙은 다음과 같다.

#### <자주원칙>

- 남북한 당사자에 의한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개방과 협력에 동참하면서 민족적 권익을 추구

#### <평화원칙>

- 남북한간의 평화 및 지역 평화를 동시 추구
- 휴전이후 지금까지의 상호 억지차원에서의 평화로부터 탈피,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바탕으로 통일 지향적인 남북관계를 수립하는 적극적·능동적 평화개념으로의 전환

#### <민주원칙>

- 민족성원 전체의 자유의사에 따라 민족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한 공동체 실현
- 특정계급이나 소수계층의 독점적 이익추구를 배제

#### <복지원칙>

-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인 남북의 주민은 물론 재외 동포까지 포함하는 민족복지의 향상을 추구
- 특히 북한 동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

남북 동포간의 적극적인 상호교류 추진 (선언 1항)

그 동안 반세기가 가까와 오도록 분단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남과 북이 하나의 뿌리를 지닌 민족공동체라는 의식을 확고히 발전시키지 못한 채 서로간에 불신을 누적시

켜 온데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간에 쌓인 불신을 씻고 민족통합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가 같은 민족으로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간 상호 이해와 민족적 유대감을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정부는 그간 남북간의 「고위당국자회담」 개최를 북한측에 제의하고 여기에서 남북간에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와 학생 등 각계 각층 인사의 인적교류 문제를 협의할 것을 북한측에 촉구한 바 있으며, 정부 당국의 교섭과 보장의 바탕 위에서 이같은 인적 교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혀온 바 있다.

이번 선언에서의 남북한의 인적 교류 추진 입장은 이같은 정부의 일련의 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변영은 한민족이라는 의식을 가진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고 변영을 누리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에 구성원이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그간 분단의 장기화에 따른 남북의 첨예한 대치상태는 해외 동포들 사이에서조차 상호 불신과 단절을 낳았고, 이로 말미암아 해외동포들의 북한방문의 길이 사실상 막혀 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재외국민은 200여만 명에 이르고 있고 소련·중국 등 공산권에 거주하는 교포가 22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어, 남북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 가는 우리로서는 같은 민족으로서 이들의 고통을 해소해 줄 책무가 있음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이미 조총련계 재일 교포들의 방한을 위해 사실상 문호를 개방한 바 있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해외 동포들이 남북을 자유로이 왕래하게 된다면 남북한간 불신을 해소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확인, 서신왕래, 상호방문을 적극 주선(선언 2항)

43년에 걸친 분단으로 인해 누구보다도 고통과 불행을 감수하고 있는 사람은 1천만에 이르는 이산 가족이며, 이들의 고통을 해소해주는 것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도 일차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정부는 1971년이래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한 대화를 통해 이산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1985년 가을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은 바로 그와 같은 노력의 성과이다.

그러나 북한측은 남북 쌍방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남북 이산가족간의 생사·주소확인, 서신왕래, 상호방문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십자회담의 재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번 선언은 이와 같은 남북간의 현실을 토대로 정부가 모든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주선해 나가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이산가족들의 남북 왕래 주선, 남북 면회소 설치 등 직·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남북 이산 가족간에 생사·주소확인, 서신 왕래, 상호방문 및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해 나갈 것이다.

### 남북간 교역 문호 개방(선언 3항)

남북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번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공동체를 회복·발전시킴으로써 민족 경제의 규모와 질을 한 차원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이미 남북간에는 수재물자 인도·인수 등을 통해 상부상조의 선례를 마련한 바 있으며, 다섯 차례의 남북 경제 회담을 통해 남북간의 물자교역과 경제협력 추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합의서를 채택할 단계에까지 진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남북한간 교역에 대한 문호개방 선언은 남북간의 관계를 독립된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인식하여 남북한의 교역 그 자체를 민족 내부교역으로 간주하고 있다는데 큰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 초 기자회견을 통해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남북한간 협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이번 선언은 그간 남북간의 경제회담에서의 진전과 이같은 남북간 협력추진 의지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으로 반입되는 북한항 선적물자에 대해서는 관세 형태의 세금을 일체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내포되고 있다.

### 우방국과 북한간의 비군사적 물자교역에 불반대(선언 4항)

그동안 남북한은 대결논리의 선상에서 국력 경쟁을 가속화해 왔으며, 이 결과 우리는 GNP 면에서 6:1의 대북한 격차를 벌여 놓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우방들이 북한과의 교역을 자제해 주기를 요청해 왔으며, 현재 북한과 우방과의 연간 교역량은 총5억불 내외에 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민족 공동체의 삶의 질을 전체적으로 한 단계 높이고 아울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만이 우리는 민족 번영과 통일의 여건을 성숙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라 하겠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 우방과 북한과의 교역이 북한 주민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면, 우리 정부는 이를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선언을 통해 표명된 입장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결과적으로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케 하고 개방을 촉진시킴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민족공동체를 이룩해 나가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 국제사회에서의 남북한간 자유접촉과 협력 희망(선언 5항)

현재 남북한은 국제무대에서도 치열한 경쟁 외교, 대결 외교를 추구함으로써 민족의 자존과 위신을 스스로 손상시키고 민족 이익을 넓혀 나가는데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

그동안 제3세계와 유엔 등 국제 기구에서의 상호 경쟁은 물론 국제적 입장의 강화를 위해 상대방을 비난하는 선전·선동을 가열화해 왔으며, 국제회의 석상에서마저도 서로 접촉을 회피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타민족에게까지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우리는 이제 국제적 선망과 찬사를 받는 세계 속의 한국으로서의 의연함과 성숙함으로 북한을 포용하고 협력의 대상으로 삼아 한민족의 공동이익을 극대화해 나가는데 외교의 중점을 둘 것이다.

따라서 유엔 및 비동맹 등 국제 무대에서 외교 대결을 지양하며,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및 이사

국 진출을 고무해 나가는 한편, 남북대표가 세계 어디서나 자유로이 만나 상호의견을 나누고 화해와 개방의 세계조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 북한과 우리 우방과의 관계개선 협조 용의(선언 6항)

우리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의 외적 환경조성을 위해 6공화국 출범이후 우리와 국교가 없는 대륙국가와 관계 개선을 위해 북방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그러한 북방정책 추진의 자신감과 함께 남북한간의 전반적 균형을 내다보고 북한의 미·일 등 우방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협조해 나설 수 있다는 전진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관계 당사국의 화해 움직임을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적극 활용하는 자주외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발판을 마련하자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이 긍정적 자세를 보여올 경우, 보다 전진적인 조치 강구 약속

이번 대통령 선언은 남북간의 단절과 대치의 현실을 극복하고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모든 조치를 과감하게 실천하겠다는 우리의 강렬한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우리의 조치에 대해 북한측도 적극 호응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만약 북한측이 이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 온다면 보다 전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는 우리 세대내에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의 새 시대를 기필코 열어 나가야겠다는 제6공화국의 전진적이고도 포용적인 통일 정책 추진 의지의 발로라 하겠다.

#### 4. 국내의 주요반응

이번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에 관한 대통령 특별선언」에 대해 국내 주요 언론들은 새 공화국의 통일 외교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서, 우리의 축적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남북 평화공존과 민족 통일을 위한 진일보한 대북한 정책』이라 평가하고, 북한측에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는 요지의 사실을 일제히 게재하였다.

특히 이번 선언은 북한을 더 이상 대결과 경쟁의 상대로 보지 않고 이념의 차원을 뛰어넘어 민족 공동체의 일부로 수용, 공동 번영을 추구하면서 궁극적으로 통일을 실현하려는 『새로운 통일 이념과 구체적인 정책』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금까지의 남북대결 시대를 청산하고 폐쇄된 북한 사회를 「개방」으로, 차단된 남북관계를 「교류」로, 대결로 치달아 온 상호관계를 「협력」으로 전환하여 「선의의 동반자」로 승화시키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능케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북한측에 대해서는 직접 남한의 「인민」들과 접촉하겠다는 비현실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버리고 스스로를 개방하고 보다 현실을 인정하는 자세로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는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여 우리의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제의에 성의있는 응답을 해주기를 촉구했다.

한편, 미·일 등 우방국 정부와 주요 해외 언론들은 이번 노태우 대통령 특별선언을 『건설적이고 전향적이며 유연한 제안』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계기로 남북한 및 관계국간의 대화가 촉진되어 『서울올림픽의 성공과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은 물론 아시아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했다.

특히 종전의 「대결하면서 대화」의 정책으로부터 「선의의 동반자와의 대화」로의 발상의 전환은 지금까지 『한국 대통령이 취한 대북 제의 중 가장 심도있는 것』으로서, 작년의 6.29선언의 뒤를 이은 『제2의 노태우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이 노대통령의 이 같은 새로운 태도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나 그들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국내반응

##### 개방, 교류, 협력의 남북관계

##### - 노 대통령의 「7·7 특별선언」 -

중앙일보(1988. 7. 7)

노태우 대통령의 「7·7 특별선언」은 제6공화정의 북방 정책 강령이다. 이것은 지금의 폐쇄된 북한현실을 「개방」으로, 차단된 남북 관계를 「교류」로, 대결로 치달아온 상호 관계를 「협력」으로 전환하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총 6개항의 선언내용은 정부·여당이 밝혀온 선거공약과 정책방향, 그리고 국민들 사이의 통일 논의에 표현된 사항들이다. 따라서 새로운 것은 별로 없다. 그러나 논의 단계의 내용을 정책으로 총정리하여 내외에 선언한다는 것은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7.7선언의 골자는 내외 동포의 인적교류를 위한 남북한 문호개방 이산가족 사업의 실천화 남

북 경제교역의 개방 우방의 대북 교역 방임 남북간의 외교협력 주변국의 남북한 교차관계 추구로 요약된다.

이같은 정책 선언은 국력 신장에서 오는 체제적인 자신감과 내부의 들끓는 통일외욕, 올림픽을 전후해서 호전되고 있는 국제정세의 흐름을 배경으로 하여 나올 수 있었다.

선언의 제1항 남북의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학자, 체육인, 학생의 교류와 해외 동포의 자유로운 남북왕래 허용은 사실상 관료와 군인을 제외한 모든 부문의 인적 교류다. 정부가 이처럼 교류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학생 등 목청 높은 그룹에 한정됐던 교류대상의 폭과 우선 순위에 신축성이 많아졌다.

제2항 이산가족의 생사·주소확인, 서신왕래, 상호방문 등은 적십자회담의 교착상태를 실천적으로 타개하자는 접근이다. 이산가족은 헤어진지 반세기가 가까와 온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가족의 생사확인이나 소식조차 못 듣고 사망해 가고 있다. 그 때문에 적십자 심인 사업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 이미 적십자 회담에서 합의돼 있는 범위 안에서 실천해 나가자는 것이다.

제3항 남북 교역개방은 경제회담과 관련된 문제로 남북통상의 조기실현 촉구다. 남북 직교역은 외방과의 무역에 비해 경제내적 실리와 민족공동체로서의 경제 외적 명분 등 부가가치가 크다. 선언은 남북통상을 민족내부교역으로 간주함으로써 다른 외국과의 교역처럼 이익 추구에만 몰두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것은 경제 교류를 통해 우리가 북의 실제적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된다.

제4항 남북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대한 희망과 우방의 대북 교역 방임은 제3항의 민족 내부의 교역효과를 국제경제부문으로 연장한 것이다. 이것은 GNP의 6배, 성장율 3배의 차이를 보이는 남북간의 경제격차를 메워보자는 민족공동체 공동번영에 대한 의지 표현이다.

우리가 비군사물자에 대한 대북 무역을 방해치 않음으로써 미국·일본·영국·서독·프랑스 등 우방들의 북한 진출은 활기를 띠 것이다. 그것은 북한의 경제 활성화와 함께 내부 변화의 외적 자극 요인이 될 수 있다.

제5항 남북 대결외교의 포기과 외교관의 상호접촉은 지금까지 남북이 펴온 상대방에 대한 봉쇄정책의 해제를 의미한다. 이제부터는 어떤 우방도 북한인사에 대한 비자 발급이나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국제 외교무대에서 남북한 외교관이 서로 외면하고 등을 돌리는 어색한 풍경도 사라지게 된다.

제6항은 교차관계의 추구다. 정부는 한때 시차승인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소련과 중국의 한국승인이 전제되면 미국과 일본이 먼저 북한을 승인한다 해도 방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동시 교차승인보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제 위에서 나온 양보다. 그러나 그 시차는 길어도 1~2년을 넘어서 안된다. 이제 북한은 그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보다 앞서 미국이나 일본 등 우리 우방과 공식외교관계를 설정할 수 있고 정부 승인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이 6개항 가운데 제1항의 해외 교포 자유왕래와 제4, 5, 6항은 북한과의 합의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항들이다. 1973년 우리 정부가 우방과 북한의 외교수립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6·23선언」(「할슈타인원칙」 포기선언)이후 북한의 수교국가 수가 두배로 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경제상의 「할슈타인원칙」 포기인 「7·7선언」이후 북한의 대외 경제는 눈부신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관계 보다 확대되고 활성화 할 것이다.

이번 「7·7선언」이 정치인 교류와 외교관 접촉을 포함하고 있지만 실질적 정치통합 내용은 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가통합의 중요 부문인 정치와 군사부문이 제외돼 있다. 이것은 비정치적인 기능주의 분야부터 단계적, 점진적으로 통합을 추진한다는 종래의 정부 기본방침을 고수한 것이다.

이제 불은 평양으로 갔다. 북한이 「7·7선언」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남북 관계는 결정된다. 그동안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표성을 부인하고 직접 남한의 「인민세력」과 접촉하겠다는 입장을 지속해 왔다. 북한이 당국자간의 접촉은 거부하면서 재야단체나 학생 세력과 만나고 미국과 회담을 갖겠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권위와 대한민국의 국가로서의 정통성을 부인한 것이다. 이같은 비현실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북한의 방침이 수정되지 않으면 남북 관계의 발전이나 통일 길은 멀어진다.

북한이 「하나의 코리아」 정책을 고수하고 이번 선언이 정치, 군사부문을 제외하고 있어 통일에의 급진적 접근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가공동체」는 양분돼 있다해도 「민족공동체」만은 단일성을 회복하고 유지해야 한다. 비록 민족은 하나이며 나뉘어질 수 없다해도 민족간의 교류가 인위적으로 차단되고 이질화가 계속되면 민족도 양분될 수밖에 없다.

「7·7선언」은 비국가 부문에 중점을 두어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국가통합」에 앞서 「민족통합」을 이뤄 나가려는데 그 정신을 두고 있다. 국가공동체의 단일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은 선택 가능한 차선의 방안이라 할 수 있다.

「7·7선언」은 정부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우리 각계 각층의 국민과 평양 당국, 그리고 우방과 중·소를 포함한 국제적인 협력이 동반돼야 한다. 이를 위해 더 큰 거래의 지혜와 노력이 발휘돼야 한다.

#### 민족 공동체의식의 확인

- 노태우 특별선언에 북한측이 대답할 차례다 -

동아일보(1988. 7. 7)

북한은 이제 적이 아니다. 대결하고 봉쇄·고립화할 상대가 아니다. 남북은 적대 관계 아닌 동반자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 북의 주민은 같은 민족이다. 우리와 더불어 잘 살아야 할 우리 민족의 일부이다. 남과 북의 민족 전체가 번영을 누려야 한다. 그리고 끝내는 합쳐져야 한다. 한 역사한 문화를 가졌던 한겨레로서 반세기에 가까운 분단의 아픔은 반드시 극복돼야 한다.

이러한 남북한 동반자관계와 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인한 것이 7일 발표된 노태우 특별선언이다. 새 공화국의 통일 외교 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정부는 이 특별선언으로 평화통일의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만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통일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서로의 선언은 서로가 불신없이 받아주어야 동반자 관계로 바뀐다.

이산가족찾기운동은 멀리 1971년 8월 12일 첫 남북적 회담의 주제였다. 다음해의 7·4공동성명은 사상·이념·제도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동단결을 도모, 자주적 평화적으로 통일을 실현하자고 선언했었다. 남북 사이에 물자교류를 포함한 문호개방, 경제협력도 이미 제안했다. 전체적으로 이번 특별선언의 기조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선언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그 선언의 주제, 실천적 의지, 그리고 실현가능성 면에서 그 어느 때에 비할 바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7·4공동성명이 그렇듯이 남북 모두가 진정한 통일의지가 있었다기 보다 정권적 차원에서 출발한 감이 없지 않았다. 결과적인 얘기지만 집권층 몇 사람이 자신들의 체제 강화를 위해 비밀접촉을 추진했다. 민족의 비원이 민족 부재상태에서 통치권자들의 권력놀음에 이용만 된 셈이다.

이번의 특별선언은 국민들의 통일운동이 그 촉진제였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 형식이 전과는 다르다. 뿐만 아니라 발표에 앞서 4개 정당 대표와 협의를 거쳤다. 통일외교 문제는 특정정파나 정권



의 전유물이 아니다. 초당적으로 국민합의를 거치는 절차가 보다 중요하다.

특별선언의 내용 면에서 실질적으로 보다 대담한 면을 엿보게 한다. 그것은 대내적인 자신감에서 비롯된다. 경제적인 절대 우위와 개방사회의 강점에 자신감을 보인 것이다. 과거 가장 취약점으로 여겼던 군부독재의 정통성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했다는 점도 자신감의 이유일 수 있다.

오히려 남북간의 개방과 교류는 북한내부의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시킬 수 있으며 그것으로 우리의 대내적 화합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계산도 했을 것이다.

국제적 상황변화도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소간의 신 대당트 분위기와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개혁과 개방, 중공의 사회주의 포기 등이 그것이다. 그들은 한국과의 실질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다. 북한의 미·일 관계 개선에 협조하겠다는 뜻은 반대로 한국의 대소, 대 중공 접근에 방해받지 않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대소·대중공 접근의 실리는 지금으로서 쉽게 헤아릴 수 없다.

특별선언의 핵심은 남북한간의 교역으로 민족내부교역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유럽」공동체의 형식을 빈 남북교류는 민족공동체로의 일보가 될 것이다. 국제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는 북한으로서는 호기심을 가질 만 하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다. 아직도 교조적 남반부 해방통일론 혁명론에 매달려 있는 북한은 남한처럼 주민 스스로 통일 논의를 제기할 기미조차 없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갈수록 북한 집권층은 더욱 자폐증이 심해질지 모른다. 손뼉도 마주쳐야 올린다. 북한의 응답이 없더라도 해외 교포의 남북한 자유왕래 등 몇 가지 일방적 조치를 발표하기는 했다. 그러나 본질적 남북 관계 개선과 통일은 북한의 응답이 필수적이다.

북한은 말로만 통일을 외치고 남쪽의 젊은이들을 선동하고 내부 혼란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대화의 첫걸음부터 마다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 대결시대의 청산

- 노 대통령의 7·7선언에 북한은 응답하라 -

경향신문(1988. 7. 7)

정부의 대북한 정책은 7일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관계와 통일외교 정책에 관한 특별선언」을 고비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노대통령은 이날 전국 TV 및 라디오 방송을 통해 행한 특별선언에서 남북간의 실질적인 관계 개선을 실천할 의지를 표명한 6개 항목의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남북 화해와 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구성과 비전을 담은 이 선언은 새 공화국의 통일·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우리의 축적된 자신감을 바탕으로 앞으로 남북한 관계를 규정하게 될 역사적인 문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개항에 함축된 정신은 남북간에 대결시대를 청산하고 「선의의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도록 제안했다는 점이다. 북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과 통일환경의 변화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장차 남북한 관계의 본질적 변화를 유도할 지침적인 내용을 이 선언문은 담고 있다.

북한을 대결과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민족공동체의 일부로, 그리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포용하고, 남북관계를 한 민족공동체 안의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규정한 것이 지난날의 대북선언과 다른 점이다. 두 체제간의 적극적인 개방과 협력을 통해 우선 가능한 경제·사회·문화부문의 교류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는 정치공동체 실현까지 기약하자는 이 접근방식은 6.23선언이

래 최대의 대북 정책 전환이자 변화로 평가된다.

특히 남북동포간 상호교류의 적극 추진과 해외 동포의 남북 자유왕래 이산가족의 서신왕래와 상호방문의 적극 주선 및 지원 남북 교역을 민족내부교역으로 간주 우방의 비군사적 물자 대북 교역 불반대 소모적인 대결외교의 종결 및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에의 적극 협력 북한과 미·일 등과의 관계개선에의 협력용의 중에서 제1항 해외 동포의 남북 자유왕래 및 제4, 5, 6 항은 북한과의 합의없이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점에서 남북 화해시대를 유도하는 매우 전향적인 정책 선회라 할 만하다. 뿐만 아니라 북한측이 긍정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 「보다 전진적인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는 여운마저 남긴 것은 이미 후속 조치까지 준비되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문제는 북한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하는데 있다. 선언 내용은 모두가 논리적인 설득력과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도 북한의 선택이 문제시되는 것은 그들의 국내사정에 의문점이 남기 때문이다. 배타적 유일 사상인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북한사회 특유의 체제적 특성과 한계, 그리고 교조적 이데올로기와 개방의 필요성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북한지도층이 남한 해방논리와 적화통일 노선을 아직 청산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노선언에 선뜻 호응해 올 것이냐 하는 의문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는 당장의 북한측 반응보다는 장기적인 사태추이와 그 귀결을 보다 중시하고자 한다. 아무튼 남북대화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스스로 부인하지 않는 이상 북한도 합의했던 7·4 공동성명의 전문내용 그대로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한국 측의 민족화해조치에 긍정적 반응과 상응한 구체적 조치를 제시하기 바라며, 동시에 제6공화국 출범 후 한국이취한 여타의 통일관계조치에도 그에 대응되는 진전된 변화의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해둔다.

남북한이 함께 번영하고 국제사회에서 민족전체의 이익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민족자존의 시대를 열자는데 대해 북한측이 성의있는 응답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정부에는 국가보안법 등 관계법령의 정비로써 이번 역사적 선언을 법적 차원에서 뒷받침할 뿐 아니라 여타 각 분야의 관련행정 차원에서도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해 마지 않는다.

## 분단 해소의 구체화

-노대통령 제의 북은 수락하라-

한국일보(1988.7.8)

통일이란 말처럼 우리를 설레게하고, 또 괴롭혀온 게 일찌기 있었던가. 길은 아직 멀지만 우리도 이제는 그 고통을 차츰 극복해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현실감을 노태우대통령의 「7·7특별선언」을 통해 느끼게 된다.

노대통령의 6개항 특별선언은 지금까지의 남북대결시대를 청산, 개방-교류-협력을 통해 선의의 동반자관계로 승화시키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능케 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이 선언은 북한을 더이상 대결과 경쟁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념의 차원을 뛰어넘어 민족공동체의 일부로 포용, 공동번영을 추구하면서 궁극적으로 통일을 실현하려는 새로운 통일이념과 구체적인 정책을 밝힌 것이다.

6개항의 선언에 담긴 내용은 선거공약, 정책방향 및 국민들의 통일논의 과정을 통해 이미 표현되어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선언에 담긴 의미는 어느 때에 비할 바가

아니다.

먼저 지금의 남북관계를 체제나 이념의 차원을 떠나 민족공동체안의 잠정적 관계로 규정하는 등 통일이념의 일대 발상전환을 꾀할 수 있다. 국가통합에 앞서 「한민족 두체제」간의 적극교류·개방·협력을 다짐함으로써 남북을 사회·문화·경제부문에서 공동체로 통합해 공동번영을 이뤄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공동체로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통일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열화 같은 통일염원이 이번 특별선언의 촉진제였고, 국민들의 뜻을 새 통일정책으로 수용한 형식 또한 민주적이었다는데도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이 같은 과정은 지금까지 남북이 거래의 열망을 정권이나 체제강화에 이용해 오면서 쌓여온 불신의 벽을 허물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 국제적인 여건도 우리의 통일기반조성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소간의 신데탕트기운과 소련과 중국의 개방·개혁운동은 우리의 공산권과의 관계개선을 가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올림픽개최를 통한 국위의 선양과 GNP 6배라는 대북자신감도 이번 특별선언을 가능케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뜻과 배경아래에서 나온 특별선언은 대담한 제의를 담고 있어 앞으로 남북관계에 큰 환경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선언 제1항에서 남북각계동포의 교류추진제외와 함께 해외동포의 자유로운 남북왕래 허용마저 제의했고, 제3항에서는 남북간의 교역을 민족내부교역으로 간주, 남북통상의 조속 실현을 유도하는 한편 공동번영의 길을 추구하려는 대담한 내용과 실현가능성을 함께 담고 있는 것이다.

선언 제4항 우방의 비군사물자 대북교역 방입제외로 앞으로 서방각국의 북한진출이 활기를 띠게 되고 그와 함께 북한내부 변화의 자극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선언 제5, 6항도 역시 우리의 일방적인 대북유화조치이다. 이제 북한은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우리보다 앞서 미·일등과 공식 외교관계를 가질 수가 있게 됐다.

다만 이번 선언은 국가통합에 앞서 선택가능한 차선책인 민족통합부터 이뤄나가려는데 그 정신이 있다. 이 때문에 국가통합의 주요요소인 정치와 군사부문이 제외되어있음도 사실이다.

문제는 북한이다. 북한도 이제는 직접 남한의 「인민」들과 접촉하겠다는 비현실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솔직한 제의에 응해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도 이번 선언의 실현을 뒷받침할 법개정 등 조치에 함께 내부적인 화합을 이룩, 통일달성에 국민들의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한다. 그리고 국제환경변화에 적응한 외교적 협력도 동시에 구해야 한다는 사실도 지적해 둔다.

#### 해외반응

「필립스.오클리」 미국무성 대변인(1988.7.7)

○미국은 노대통령의 건설적이고 전향적인 정책을 환영한다. 이에 대한 미국의 즉각적인 후속 조치 계획은 없다.

○한반도의 긴장완화, 북한의 테러억지 및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직접대화 촉진은 한미양국의 공통목표이다. 미국은 한국정부와 함께 상기 목적달성을 위한 추가방안 검토를 계속할 것이다.

○미국은 이번의 매우 긍정적인 이니셔티브에 북한이 건설적인 반응을 보이기를 희망한다.

「오부치」 일관방장관(1988.7.7)

○이번 노태우 대통령 특별선언은 대단히 건설적이고 유연한 제안으로 일본은 이를 지지하고 환영한다.

○이와 같은 제안을 받아 북한측이 동등한 유연성을 갖고 남북대화 교류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강하게 기대한다.

○이번 노태우 대통령 특별선언을 계기로 남북 및 관계국간의 대화가 촉진되어 오는 올림픽의 성공과 아울러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도록 간절히 희망한다.

「제프리.팔머」 뉴질랜드 수상대리(1988.7.7)

○노대통령의 6개항 선언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은 물론 아시아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뜻깊은 선언으로 뉴질랜드 정부는 이를 전폭 지지한다.

○노대통령의 이번 선언이 남북한간의 자유로운 교류와 균형발전을 촉진,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훌륭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산케이(1988.7.8)

○노대통령의 특별선언은 종래의 일방적인 평화공세와는 달리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고 북한이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북한사회의 개방과 발전을 촉진한다』는 기본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여론 및 야당의 주장도 대폭 받아들인 것으로서 높이 평가하는 바이다.

마이니치(1988.7.7~8)

○노대통령의 특별선언은 이제까지의 『대결 속의 대화』를 원칙으로 해왔던 것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북한을 『민족공동체로서 선의의 동반자』로 규정한 발상의 전환이다.

○더우기 「선언」의 특징은 북의 대응여부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긴장완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데 있다. 이러한 자세의 전환은 국제적인 신데탕트 조류에 따라 「냉전의 유산」을 청산하려는 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요미우리(1988.7.8)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선언은 새로운 긴장완화의 국제조류에서 소외된 감이 있는 한반도 정세의 타격을 도모하는 대담한 발상의 전환이다.

○이번 선언은 종래의 대결구도로부터 쌍방이 탈피해 국제정세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을 북한측에 새삼 호소하는 것이며, 그 구체적인 조치로서 북한과 미.일 등 서방측 제국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점이 대단히 주목된다.

L.A Times(1988.7.7)

○이 선언은 40년 이상 상호간에 제한된 대화를 해 오면서 악의에 찬 말장난만 하던 것과는 여

실히 다른 내용이다.

○북한은 노대통령의 이같은 새로운 태도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나 북한이 국제 사회에서 더욱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일 수는 없을 것이다.

Washington post(1988.7.10)

○한국이 북한의 고립을 타파하려는 이번의 조치는 국제관계발전 및 국내정국의 발전에 매우 합치하는 것이다. 미국의 올바른 역할은 한국에 대하여 더 이러한 길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취지와 자신감을 지속적으로 주는 일이다.

Le Monde(1988.7.7)

○금번 노태우 대통령의 대북제외는 그가 취임 후 추구해 온 개방정책의 맥락에서 파악해야 하며 이러한 노대통령의 이니셔티브는 동서간의 데탕트를 반영한 것으로 지금까지 한국 대통령이 취한 대북제외 중 가장 심도 깊은 것이다.

대공보(1988.7.9)

○평양이 이번 한국 제외에 어떤 입장을 취하든 노대통령의 화해제외는 한반도 긴장완화에 적극적인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노대통령 제외에 대해 남북한이 성의로써 국민을 위한 일념에서 협상을 통해 통상 및 운수 면에서 상호교류를 실현시킨다면 이는 종전 후 동북아지역의 주요사로 꼽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니 Kompas(1988.7.9)

○이번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노대통령의 특별선언을 북한이 수용, 한국이 북한과의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새로운 관계설정에 성공한다면 한국이 현재 추구하는 민주화와 경제번영은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

Suddeutsche Zeitung(1988.7.8)

○70년대초부터 한국은 남북한간의 대결과 상호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협상을 되풀이 제안해 왔다. 이번 특별선언은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과 북한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언사들을 피하려고 노력한데서 과거의 제안과 구별된다.

Indian Express(1988.7.9)

○과거 북한을 고립시키는 기본정책에 중지부를 찍고 이제는 보다 우호적인 대북접근을 선언하고 미국을 위시한 우방국들에게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들이는데 도와 줄 것을 촉구한 노대통령의 이번 선언은 북한과의 자유무역, 자유로운 인적교류 그리고 이를 통해 통일에의 길을 열자는 것으로, 아직 선언에 불과하지만 이는 중요한 발전이다.

## 5. 북한반응

북한측은 7월 1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을 통해 「대통령 특별선언」을 거부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 성명에서 북한은 「7.7선언」이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과 교차접촉안을 문구와 표현을 바꾸어 각색한 것에 불과하며, 검토할 가치도 없는 것이고, 하등 새로운 것도 없다』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긴장상태 해소를 위한 군축부터 실현되어야 한다고 종래의 「군사문제 우선해결」의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또한 북한은 남한측이 대화와 통일을 원한다면 「남북연석회의」에 호응하고 「8.15학생회담」의 실현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면서, 우리측의 교류제외와 교차접촉에 대해서도 단계론과 분단고착화 정책이라고 거부하였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요지는 다음과 같다.

### 성명요지

이른바 7.7특별선언은 이미 미국의 각본에 따라 선임자가 내놓았던 영구분열안인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과 교차접촉안을 문구와 표현을 바꾸어 각색한 낡은 문서의 변종에 불과한 것임.

남조선 당국자들의 특별선언은 무엇보다도 통일문제 해결에서 나서는 근본적이고도 원칙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음.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자면 나라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전쟁위험을 가시는 문제부터 해결하여야 함.

우리는 7.7특별선언이 두 개 조선을 위한 분열주의적 단계론으로 시작되고 단계론으로 관통되어 있으며 교차접촉으로 결속되고 있는 사실에 특별히 주목을 돌리지 않을 수 없음.

모든 사실은 미제가 남조선에 있고 그들의 식민지정책이 계속되는 한 남조선 당국자들이 두 개 조선정책서 벗어날 수 없고, 투철한 통일 의지도 가질 수 없으며, 똑똑한 통일정책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이 진심으로 대화와 통일을 원한다면 이제라도 우리의 남북연석회의 소집제안에 호응하여야 함.

이처럼 북한측이 「대통령 특별선언」에 대해 정권기관이나 당국차원이 아닌 노동당의 외곽단체에 불과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거부반응을 보인 것은 남북한당국간의 실질적 접촉과 회담을 기피하려는 태도로 보여진다.

아울러 북한측은 우리측의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제외와 교차접촉을 단계론과 분단고착화로 단정하고 「남북연석회의」소집 등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자기들 주장이 통일지향적이라는 인상을 대내외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선전과 함께 국내 통일논의의 개방에 편승하여 국론분열을 조장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II. 「7.7대통령 특별선언」 구현을 위한 실천조치

「7.7특별선언」은 남북한 관계와 북방정책에 새로운 전환을 이룩함으로써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민족통합과 번영을 실현시키려는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선언의 형식으로 표명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를 아무런 조건없이 과감하게 실천해 나갈으로써 「7.7특별선언」의 기본정신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그러한 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가 일방적으로 취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착실히 강구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선언내용 중에 북한측이 호응해 나와야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7.7특별선언」의 진의가 북한측에 전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 1. 「남북적십자 실무회의」 개최 제의

#### 가. 제의내용

김상협 대한적십자 총재는 7월 13일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손성필 위원장 앞으로 보낸 전화 통지문을 통해 중단된 「남북적십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거듭 촉구하면서, 그 이전이라도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적십자 실무회의」를 갖고 제2차 고향방문단 교환실현 등 실무협약만으로 가능한 4개항의 사업을 우선 추진하자고 제의하였다.

김총재는 동 전통문에서

▲이산가족의 생사·주소확인을 위한 신청서와 회보서의 상호교환

▲85년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교환시 상봉가족 및 쌍방 적십자를 통해 생존·거주지가 확인된 이산가족간 서신교환 주선

▲해외거주 이산가족들에게 생사·주소확인, 서신왕래, 가족상봉의 기회 알선

▲금년 중 제2차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 등 사업을 추진할 것을 북한측에 제안하고 이를 위해 남북적십자 실무회의를 7월 30일 내에 판문점에서 열자고 제의했다.

또한 김총재는 북한측 이산가족이 친족상봉을 위해 우리측 지역의 방문을 원할 경우 신변안전보장과 함께 제반편의를 제공할 것임을 북한측에 통보하였다.

아울러 대한적십자는 「7·7특별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이산가족문제의 우선 해결을 위해 각종 실천가능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김상협 대한적십자 총재의 대북전통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북한 적십자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성필 귀하

나는 1985년 12월 3일 제10차 남북적십자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된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제11차 본회담이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도 기억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남북적십자 쌍방은 70년대의 7차례 회담에 이어 80년대에 들어와 3차례의 회담을 가진 결과, 의제 5개항 사업토의에 적지 않은 진전을 보았을 뿐 아니라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상호교환 방문을 성사시킴으로써 이산가족 재회사업의 전망을 한층 밝게 해준 바 있습니다.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을 찾아주고 그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적십자인들의 당연한 책무이며,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고려할 때 이는 그 어떤 이유로도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인 것입니다.

더우기 제10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쌍방이 내놓은 제안을 비교해 볼 때 합의서 형식과 일부 내용상에 차이점이 있기는 하였으나 의제 5개항 사업실시를 위한 방법 등 기본문제에 의견 접근을 보였다는 점에서, 쌍방이 앞으로 한 두 차례 정도의 회담을 갖게 된다면 본회담이 완전히 타결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7월 7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해 남북간의 교류, 협력, 화해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남북적십자회담이 재개되기 이전이라도 남북이산가족들이 생사·주소 확인, 서신왕래, 상호방문을 적극 주선·지원하겠다고 한 것도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우선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중단된 남북적십자회담을 하루속히 개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나는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시급히 덜어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것을 귀하에게 정중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이산가족 당사자가 고령으로 인하여 생전에 자기 혈육의 소식을 알고자 할 때 그 소망을 이루어 주기 위해 이들이 귀족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친척의 생사여부와 거주지 확인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우리측은 이를 귀족에 전달할 것이며 귀족은 이를 접수해서 이에 대한 회신을 우리측에 보내주고, 귀족이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우리측에 보내올 경우 우리측도 이를 접수해서 우리측 지역내의 가족·친척을 찾아 그 소식을 귀족에 회신해 준다.

이를 위해 쌍방 적십자간의 판문점 상설연락사무소를 활용한다.

둘째, 지난 1985년 9월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시 혈육을 상봉한 이산가족들 사이에 서신을 교환해 주도록 한다.

아울러 쌍방 적십자간의 신청서와 회신 교환을 통해 생존과 거주지가 확인된 이산가족들 사이의 서신도 교환해 주도록 한다.

이 서신교환 업무는 판문점 상설연락사무소가 담당한다.

셋째, 해외에 거주하는 남북이산가족들에게 생사·주소 확인, 서신왕래 그리고 가족상봉의 기회를 알선해 주기 위해 필요하다면 국제적십자기구의 협조를 받아 이를 추진한다.

넷째, 올해 안에 제2차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을 교환할 것을 희망한다.

나는 이상과 같은 사업들은 본회담이 아닌 실무적인 협의만으로도 가능하리라는 점에서 남북적십자 실무회담을 7월 30일 이내에 귀족이 희망하는 날짜에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합니다.

또한 나는 귀족의 이산가족이 자기 혈육을 상봉하기 위하여 우리측 지역을 방문하기를 원할 경우 이들을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따듯이 맞이할 것이며 신변안전보장을 비롯한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임을 아울러 밝혀두는 바입니다.

귀하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1988년 7월 13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상협

나. 제의의 의의

그간의 남북적십자회담은 10차례의 본회담을 거치는 동안 남북쌍방이 내놓은 제안을 비교해 볼 때, 합의서 형식과 내용상에 일부 차이점이 있기는 하였으나 의제 5개항 사업실시를 위한 방법 등 기본문제에 의견접근을 보였다는 점에서, 좀 더 노력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막바지 단계에 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제10차 회담(서울)에서 5개항 의제의 일괄 타결과 자유왕래에 대하여 원칙적인 합의를 이룩하였으며 다만 합의서 작성의 일부 의견차이로 완전한 타결에는 이르지 못하였을 뿐이다.

의제 5개항 내용

- ①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
- ②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에 자유로운 방문과 자유로운 상봉을 실현하는 문제
- ③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의 자유로운 서신거래를 실시하는 문제
- ④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 문제
- ⑤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

또한 1985년 9월에는 제한된 인원과 지역에 국한되기는 하였으나, 남북 각기 151명(고향방문단 50명, 예술공연단 50명, 수행기자 및 기타 51명)의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이 분단 40년만에 처음으로 서울과 평양을 직접 방문하여 혈육을 상봉할 수 있었던 것은 남북적십자회담이 시작된 이래 최초로 이룩한 성과였다.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있어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바로 일천만이 넘는 남북이산가족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사업이며, 이는 인도적·동포애적 견지에서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이런 점에서 이번 김상협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대북제의도 「7·7대통령 특별선언」의 기본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며, 남북인적교류의 우선적 과제가 이산가족 문제임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실천가능한 조치를 취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의내용중 북측의 이산가족이 자기 혈육을 상봉하기 위해 우리측 지역의 방문을 원할 경우 신변안전 보장은 물론 모든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한 것은 남북간의 대치와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북측의 호응과는 관계없이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조치는 우리가 조건없이 먼저 취해 나간다는 포용적이며 전향적인 「7·7특별선언」의 입장을 다시 한번 구체화한 것으로서, 북한의 반응에 따라서는 사실상 남북간 자유왕래의 첫 발을 내딛는 발판

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북한측이 계속하여 본회담의 재개를 거부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회담의 재개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선 실무적인 협의만으로도 가능한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하루빨리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자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남북적십자 본회담이 이러한 실무회의로 대체되거나 그 중요성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며,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기본적인 성의만 있다면 우선 실무접촉으로 쉽게 합의될 수 있는 시범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교착상태의 남북관계에 타개의 실마리를 풀어 보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다. 남북이산가족찾기 신청 접수

김상협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8월 11일 1천만 남북이산가족찾기 운동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제의(1971.8.12) 17주년을 맞아 특별담화를 발표하였다.

동 담화문을 통해 김상협 총재는 북적측에 중단된 남북적십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대한적십자사는 북녘땅에 있는 가족·친척들의 생사와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이산가족찾기 신청서 접수사업을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기념일인 8월 12일부터 11월 12일까지 3개월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총재는 이번의 이산가족찾기 신청접수사업은 장차 남북적십자간의 합의에 따라 가족찾기사업이 전개될 것에 대비하여 북적측에 보낼 이산가족찾기 의뢰서를 미리 준비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김상협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담화내용 전문은 다음과 같다.

1971년 8월 12일 남북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회담개최 제의로 남북적십자회담이 시작됨으로써 남북으로 흩어져 사는 가족과 친척들은 혈육상봉의 기대에 설레었으며, 남북으로 갈라진 민족은 통일의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은 겨레가 남북적십자회담의 성공적인 진전을 한마음으로 기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족적 감격과 성원 속에 출발한 남북적십자 회담은 안타깝게도 17년이라는 긴 세월이 경과되는 오늘 이순간까지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채 중단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72년과 1973년에 걸쳐 서울과 평양을 번갈아가며 열렸던 본회담이 7차례를 끝으로 중단되어 오다가 남북적십자간의 수재물자 인도인수를 계기로 12년만인 1985년 5월 다시 재개되어 3차례의 회담을 가지는 동안 쌍방이 의제 5개항 사업실시를 위한 방법 등 기본문제에 의견접근을 보였으며,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이라는 획기적인 시범적 사업까지 착수한 마당에서 또다시 회담이 좌초되어 진전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아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남북으로 헤어져 사는 가족과 친척들의 생사와 주소를 확인하고 이들간의 자유로운 서신교환과 상봉 그리고 재결합을 주선하는 일은 하루속히 실천에 옮겨져야 하며 이러한 뜻에서 중단된 남북적십자회담은 지체없이 다시 열려야 합니다.

남북적십자회담의 시작과 함께 혈육상봉의 날을 손꼽아 헤아리던 연로한 이산가족들이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피맺힌 한을 풀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해 가고 있는 사실을 상기할 때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한시도 지체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오는 9월의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계기로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종과 국적, 체제와 이념을 초월하여 이 땅에 모여 전인류가 화합과 평화를 다지게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동포만이 분단의 장벽을 이유로 끊어진 혈맥을 잇지 못하고 상호간에 안부편지 한장 주고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오늘의 이 비정상적인 현실은 우리 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드높이기 위해서도 시급히 극복되어야 합니다.

본인은 지난 7월 13일 북한적십자회측에 대하여 남북적십자 본회담의 무조건 재개를 추구하고 본회담 타결 이전이라도 남북 이산가족들의 생사와 주소를 확인하여 서신교환을 주선하며 아울러 해외에 거주하는 남북이산가족들에게 생사·주소확인, 서신왕래, 가족상봉의 기회를 알선할 것과 올해안에 제2차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을 교환할 것을 제의하고 이 문제의 협의를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오늘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17주년이라는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본인은 멀지않은 장래에 남북적

십자회담이 다시 열려 남북이산가족들이 서신을 교환하며 서로 얼싸 안을 수 있는 바라고 또 바라던 그 기쁜 날이 반드시 오게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날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오늘부터 남북이산가족찾기 신청서를 접수하고자 합니다. 이번 남북이산가족찾기 신청서 접수사업은 장차 있을 남북적십자간의 합의에 따른 제반 업무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취해지는 것입니다. 국내외의 남북이산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이 사업에 적극 호응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러한 김상협 총재의 담화발표에 이어 대한적십자사는 본사 및 각시·도 지사에서 북한에 친족을 두고 있는 국민 혹은 해외동포들로부터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산가족찾기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 라. 북한 반응

북적 손성필 위원장은 7월 16일 전통문을 통해 『남북적십자회담이 남측의 반공대결정책과 전쟁소동으로 중단되었다』면서 『적십자회담의 재개를 가로막는 제반요인들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한적총재가 제기한 「남북적십자 실무회의 개최」 제의를 사실상 거부하였다.

북한측이 보낸 전통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전통문 요지

나는 귀하가 전화통지문에서 침예한 대결상태에 있는 현 남북관계와 인도주의 사업을 방해하는 귀측 당국의 비인도적 처사에 응당한 주의를 돌리지 않고 성급하게 적십자회담의 재개를 촉구하며 남북적십자 실무회의를 주장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함.

귀측이 이번에 남북적십자 실무회의를 주장한 것은 진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실한 입장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귀측이 이번에 제기한 고향방문단 성원들 사이의 서신거래는 그 진실성을 믿을 수 없게 하고 있음.

귀측이 이번에 남북적십자회담을 재개하는데서 나서는 선결 문제인 회담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관심을 돌릴 대신 명분도 서지 않고 해결할 권능도 없는 실무회의를 제기한 것은 실지에 있어서 적십자 본회담의 의의를 부정하고 그의 재개를 무한정 뒤로 미루려는 의도로 밖에 달리는 해석할 수 없음.

귀측이 돌연히 적절치 못한 시기에 합당치 못한 문제를 전화통지문으로 남발한 것은 진심으로 흠어진 가족·친척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순전히 당국의 7.7분열선언에 이용되어 가짜 인도주의로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의 통일기운을 무마하며, 내부의 정치적 혼란과 위기를 수습하는데 한몫하려는 불순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한 것임.

만일 귀측이 진실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다면 우리와 함께 모든 힘을 다하여 남북연석회의를 소집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임.

이처럼 북한측이 적십자회담 재개의 선결조건으로 남북연석회의 소집과 반공태세철폐, 군사문제 해결 등을 제기한 것은 인도적인 적십자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온 그들의 속성을 다시 한번 표출시킨 것이라고 하겠다.

북한은 과거 적십자회담을 하면서 남한의 반공태세철폐, 주한미군철수, 팀스피리트 훈련중지 등

적십자회담과는 관련이 없는 정치·군사문제를 앞세워 회담을 지연시키거나 또는 중단시켜 왔으며, 이번에도 우리측의 거듭된 대화재개 촉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와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음을 드러냈다.

## 2. 「남북교육당국회담」 제의

### 가. 제의내용

김영식 문교부장관은 7월 15일 북한 정무원 교육위원회 변영립 위원장에게 보내는 대북서한을 통해 남북학생교류를 위한 「남북교육당국회담」을 가능한 한 7월 30일 안에 판문점에서 개최하고 조국순례대행진 추진문제와 친선체육경기 교환개최문제, 그 밖에 학생교류추진과 관련된 문제들을 협의하자고 제의했다.

김 문교부장관은 조국순례단의 규모를 쌍방 각기 1,000명 정도로 하고, 우리측 학생들은 판문점에서 백두산으로, 북한측 학생들은 판문점에서 한라산으로 행진한 후 귀환하는 방식으로 하되, 올해안에 첫번 행진을 갖도록 하자고 제의했다. 또한 친선체육경기 교환개최는 우선 축구, 남녀 탁구, 남녀배구 등 구기종목을 택해 쌍방 각기 200명 정도로 선수단을 구성, 1차경기는 금년 10월 평양에서 그리고 2차경기는 내년 4월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아울러 제의했다.

이와 함께 이같은 시범사업이 진전되면 남북학생들간에 음악·미술·연주·무용 등 문화예술분야에서 공연 및 전시회의 교환개최와 금강산·경주 등 명승지와 민족사적지를 관광하는 「수학여행단」 교환 등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 제의는 남북한의 젊은 세대들에게 민족적 신뢰와 일체감을 회복시키고 다각적 인적교류의 확대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자는데 그 뜻이 있으며, 그동안 남북학생회담과 관련하여 제기된 학생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용한 것이다.

김영식 문교부장관의 대북서한 전문은 다음과 같다.

북한 정무원 교육위원회 위원장 변영립 귀하

남북이 서로 갈라진지 43년을 헤아리는 지금 우리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갈구하는 온 겨레의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더우기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넘어서서 화해와 공동번영을 추구해 나가는 세계사적 조류에서 볼 때 우리 겨레도 민족의 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맞게 우리가 평화와 통일의 새 지평을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활발히 추진하여 같은 민족으로서 맥을 이어온 민족공동체를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난날 우리는 수재물자의 인도·인수를 통해 상부상조의 선례를 남겼으며,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상호 교환방문을 성사시킴으로써 40년만에 처음으로 민간인사들이 남북을 왕래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선례와 경험은 소중한 싹으로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측은 지난 6월 3일 국무총리 서한을 통해 남북간에 인적교류를 실현하는 문제를 협의할 것을 귀측에 제의한 바 있으며, 이어서 6월 9일 통일원장관 성명을 통해 남북학생의 교류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바 있습니다.

우리는 귀측 또한 최근에 남북간의 다각적인 인적교류의 필요성을 인정해 왔으며 특히 학생교류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남북간에 대화가 중단되고 있는 현실에서 쌍방 학생들간의 교류는 그 자체로서 매우 뜻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교류를 실현시키는데 있어서도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

니다.

이에 나는 남북학생교류 추진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해 하루 빨리 남북교육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귀측에 정중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 회담에서는 이미 쌍방간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조국순례대행진」의 추진문제와 「친선체육경기」의 교환 개최문제, 그밖에 학생교류추진과 관련된 문제들을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국순례대행진」은 남북 각기 「조국순례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토록 하며, 자기측 지역만을 순례한 후 판문점에서 만나는 방식보다는 우리측 학생들은 판문점에서 백두산으로, 귀측 학생들은 판문점에서 한라산으로 행진한 후 귀환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순례단의 규모는 쌍방 각기 1,000명 정도로 하되 1985년 9월에 실시되었던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식을 적용하여 상호 동시적으로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조국순례대행진」의 시기와 일정은 남북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올해안에 첫 행진을 갖고 내년부터 연 4회 정도로 점차 회수를 늘려 나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친선체육경기 교환개최」는 남북 쌍방의 「대학스포츠위원회」가 주관토록 하며, 우선 축구·남녀탁구·남녀배구 등 구기종목을 택해 쌍방 각기 200명 정도로 선수단을 구성하되 점차 경기종목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친선체육경기의 교환개최는 봄·가을로 정례화시키고 1차 경기는 금년 10월 평양에서, 그리고 2차 경기는 내년 4월 서울에서 각각 4박5일 정도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학생교류사업이 진전되면 남북학생들간에 음악·미술·연주·무용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공연 및 전시회의 교환개최, 금강산·경주 등 명승지와 민족사적지를 관광하는 「수학여행단」 교환 등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학생교류를 원만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통행절차 및 각종 편의제공 등에 대한 쌍방 당국간의 합의와 신변안전보장 문제는 그간 남북간의 선례를 따른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남북학생교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교육당국간 회담이 빠른 시일내에 개최될 수 있기를 바라며, 가능한 한 7월 30일안에 귀측이 지정하는 날짜에 판문점에서 첫 회담이 열리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쌍방의 대표단은 차관(부부장)급을 수석대표로 하여 각기 5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나는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남북학생교류가 실현되면 우리 민족의 장래를 이끌어 갈 젊은 세대들에게 민족적 신뢰와 일체감을 회복시켜 줌과 아울러 앞으로 남북간에 다각적인 인적 교류를 확대 추진해 나가는데 발판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귀하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1988년 7월 15일

대한민국 문교부장관 김영식

나. 제의취지 및 배경

제의취지

남북간에 쌓인 불신과 오해의 장벽을 제거하고 상호 이해를 통해 민족화해를 이룩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한 각계 각층 인사의 활발한 교류가 관건이며, 노태우 대통령이 「7.7특별선언」에서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 등 남북동포간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제1항으로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따라서 이번 문교부장관의 「남북교육당국회담」 제의는 무엇보다도 화해와 협력이라는 대통령 특별선언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이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강한 실천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하겠다.

사실 그동안 반세기가 가까와오도록 분단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남과 북이 하나의 뿌리를 지닌 민족공동체라는 의식을 확고히 발전시키지 못한 채 서로간에 불신을 누적시켜온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와 같은 단절과 폐쇄상태에서는 남북한이 서로 상대방을 바르게 볼 수 없기 때문에 남북한이 자기 사회를 서로 개방하여 같은 민족으로서의 삶을 확인케 하고 상호 민족공동체의 일부로 인식하는 계기를 축적해 나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 남북간의 대화마저 중단되고 있는 현실에서 남북한이 일시에 다방면적인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 이번 「남북교육당국회담」 제의는 북한측이 긍정적 태도를 보여온 학생교류 문제를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이를 남북교류의 돌파구로 삼아 전반적인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특히 전쟁미경험세대인 남북의 학생들이 상대방 체제의 실상을 확인하고 비교, 체험함과 아울러 민족적 유대감을 증진시켜 나간다면 평화통일의 기반은 한층 공고해질 것이다.

이번 「조국순례대행진」의 시범사업 내용으로 학생들이 자기측 지역을 순례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 지역을 순례한 후 귀환하는 방식을 제의한 것도 바로 이같은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 제의배경

「남북교육당국회담」은 「6.10남북학생회담」이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들이 또 다시 무모한 「8.15남북학생회담」을 강행하기 위해 구체적 행동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시점에서 제의되었다.

당시 국민각계에서는 학생들이 신분에 맞지않는 의제로 북한이라는 일원주의체제와 교섭에 나서는 것은 분단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로서 북한의 대남전략에 이용당할 우려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학생들의 자제를 촉구하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었다.

북한측이 당국간의 모든 대화를 거부하면서 「남북학생회담」 주장에만 즉각적인 호응을 보이며 전 선전매체를 동원하여 우리 학생들의 정치적 투쟁을 고무·선동해 나선 점에서, 국민들은 4.19 당시 혼란기를 겨냥한 북한측의 학생회담 선동을 상기한 것이다.

학생들은 이산가족문제, 올림픽 공동개최문제와 함께 정치, 군사문제까지도 해결하겠다고 주장하였는데, 민족의 생존과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를 정부의 역할을 부정한 채 어느 집단이나 계층이 즉흥적 행동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였다.

정부는 국민적 지지와 합의에 기초하고 남북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는 대북제외나 접촉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 협조한다는 것을 일관된 입장으로 밝혀 왔다.

따라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청년·학생의 상호교류를 다각적인 인적 교류의 일환으로 적극 검토해 왔으며, 학생들의 통일 의지와 열정이 정부의 교섭과 보장하에 민족적 차원에 따라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것이다.

노태우대통령은 일부 학생들이 제기하고 있는 「남북학생회담」 문제와 관련하여 6월 8일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순수한 것이라면 정부도 이를 수용할 생각』이라고 밝히면서, 남북학생들의 국토종주행진과 친선체육대회 개최를 남북당국간 보장하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6월 9일 이홍구 국토통일원장관은 『북한당국이 남북학생교류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 남북고위당국자 회담을 열어 남북학생교류의 내용, 방법, 범위와 남북왕래절차, 신변안전보장, 각종 편의제공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남북학생교류를 속히 실현하기 위한 대북교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학생을 비롯한 각계와의 폭넓은 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문교부장관의 대북제언은 이같이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 가는 큰 흐름 안에서 학생들의 교류가 정부의 주선과 교섭하에 추진됨으로써 남북관계의 개선과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뜻이 있다.

#### 다. 북한반응

우리측이 남북직통전화를 통해 김영식 문교부장관의 대북서한을 7월 15일 전달하겠다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7월 14일 정무원 교육위원회 변영립 위원장 명의로 우리측의 서한접수를 거부하는 전화통지문을 보내왔다.

이 전화통지문에서 북한측은 우리 정부가 「남북학생회담」을 방해한다고 비난하고, 『뒤늦게 당국이 끼어들어 주선이니 뭐니하고 간섭할 조건이 없다』며 서한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나섰다.

한편 북한측은 7월 17일 또 다시 정무원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학생교류문제는 학생들 자신이 협의, 해결할 문제이지 당국이 개입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남북교육당국회담을 들고 나온 것은 학생교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8.15학생회담을 가로막고 정치적 위기를 수습하여 올림픽 단독개최를 강행하려는 데 있다』고 주장, 우리측의 『남북교육당국회담』 제의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북한정무원 대변인이 밝힌 성명요지는 다음과 같다.

#### 성 명 요 지

남조선측이 이번에 편지라는 데서 남북학생교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교육당국회담을 하자고 한 것은 아무런 타당성도 없으며 따라서 누구의 공감도 받을 수 없는 황당한 것임.

남북학생교류 문제는 남과 북의 학생들 자신의 문제로서 당사자들인 그들 스스로가 협의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결코 당국이 맡아 할 성격의 문제가 아님.

당국은 오직 학생들이 자기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도록 필요한 조건이나 보장해 주면 되는 것임.

적십자인들의 회담이나 국회의원들의 회담을 가로막아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회담만을 맡아 하려고 하는 억지주장은 누구에게도 통할 수 없음.

남북학생교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각종 편의제공과 신변안전 보장문제와 관련하여 말한다면 그 해결을 위해 당국이 구태여 따로 회담을 할 필요는 없음.

이와 같이 「남북교육 당국회담」 제의를 비난한 북한정무원 대변인의 성명에 대해 7월 20일 우리측 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우리의 제의는 학생들에게 서로 쌍방의 실체를 직접 보고, 체험하는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같은 민족간의 신뢰와 동질성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교육적인 배려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학생의 신분으로서 가장 순수하고 실현 가능한 내용의 교류를 제의한데 대해 북한측이 굳이 일부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학생회담을 고집하면서 8.15학생회담을 선동하고, 학생교류 문제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올림픽 개최를 반민족적이라고 비난하고 구속학생 석방을 들고 나오는 것은 북한측이 일부 과격학생들의 주장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학생교류보다는 우선 우리 정부와 학생들을 이간시키고 학생회담을 정치적 선동의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논평하였다.

이처럼 북한이 「남북교육당국회담」을 거부하면서 남북학생회담실현을 위한 우리측 일부 학생들이 투쟁을 선동한 것은 학생들의 남북학생회담 개최 강행과 이에 따른 정부의 대응봉쇄조치로 사회혼란을 조성하여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저지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하겠다.

북한은 남북학생회담을 둘러싼 학생들의 무모한 행동에 대해 그릇된 환상과 기대를 갖고 이후 학생들의 반정부 투쟁선동을 가일층 강화하였으며, 8월 15일 판문점 학생회담에서는 민주화 투쟁을 벌이다가 목숨을 잃은 학우들을 위한 추모제를 지내자고까지 주장한 바 있다.

이번 「남북교육당국회담」 제의를 포함한 정부의 전향적인 노력과 8월4일 국회 통일정책특별위원회 주관하의 「남북학생회담 관련 공청회」 개최 등 학생을 비롯한 각계와의 폭넓은 대화추진, 그리고 대북접촉 창구는 정부로 일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민적 여론에 의해 그같은 북한측의 기도는 봉쇄되었다.

### 3. 전향적 대북 외교시책의 선언

#### 가. 시책 내용

7월 16일 최광수 외무부장관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키며 민족공동체로서의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7.7대통령 특별선언」의 후속조치로 앞으로 정부가 실천해 나갈 관련 외교시책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외교시책 선언요지>

미국과 일본을 위시한 우리의 우방들이 자국의 법령과 정책에 따라 북한과 비군사적 물자를 교역하는데 반대하지 아니함.

비군사적 물자라 함은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의 규제대상이 아닌 일반상품 및 기술자료를 지칭함.

이와 같은 교역을 위하여 상담 등의 목적으로 우리 우방과 북한간의 민간인의 왕래에 반대하지 아니함.

상기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우리 우방이 북한에 민간 상사의 지사 또는 지점을 설치하는데 반대하지 아니함.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위치를 인정하면서 북한이 유엔헌장의 정신과 원칙에 따라 세계 평화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희망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함.

북한과 소모적 경쟁 대결외교를 지양하고, 북한이 비동맹 제3세계국가와 관계를 정상화하는데 반대하지 아니함.

모든 국제기구, 국제회의를 포함한 외교무대에서 남북한은 민족공동체로서 중상이나 비방 등 비생산적 논쟁을 지양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면서, 우리는 사실의 확인과 진실을 규명하는데 주안을 두고 의연히 대처할 것임.

북한이 유엔의 모든 산하기구와 전문기구, 정부간 지역협력 및 개발기구 등에 가입하는 것에 협력할 용의가 있음.

북한이 세계 어느 지역에서 개최되는 모든 문화, 예술, 학술, 스포츠 행사 등에 참가하는 것을 환영함.

남북대표가 함께 참가하는 모든 국제회의에서 상호접촉과 대화를 갖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함. 기타 문화, 예술, 학술 및 스포츠 행사에서도 남북간의 접촉과 대화를 위해 노력함.

남북의 공관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국가에서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남북 외교관간의 접촉과 대화를 추진함.

미국과 일본 등 우리의 우방이 북한과 문화, 예술, 학술,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민간교류를 갖는 것에 반대하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이에 협조할 용의가 있음. 미국과 일본의 외교관이 북한 외교관과 제3국이나 중립적 환경에서 접촉과 대화를 갖는 것을 반대하지 아니함.

또한 7월 19일 최광수 외무부장관은 전 세계에 살고 있는 450여만명의 해외동포들의 남북한 자유왕래를 위한 후속조치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 <외무부장관 발표요지>

해외에 생활근거를 둔 영주권소지자,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허가를 취득한 우리 나라 거주 여권 소지자에게 북한방문을 허용하며, 해외에 거주하는 북한국적 동포에게도 자유로운 모국방문을 보장함.

또한 외국 국적을 소지하고 자유세계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의 북한방문에 관하여는 국적국의 정책에 일임하고, 공산권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의 자유로운 모국방문을 보장함.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을 방문하는 해외동포들의 신변안전 보장에 관하여 남북한 관계당국간에 협의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함.

우리의 문호개방 조치와 관련하여 북한 당국도 해외동포들이 북한을 자유로이 방문할 수 있도록 상응한 개방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해외동포들은 남북한 간에 신변안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비추어 신변안전과 여행편의를 위하여 방문여행 사전 및 사후에 거주지 관할 우리 공관에 신고해 주기 바라며, 스스로의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당부함.

#### 나. 선언의 의의와 효과

이번의 외교시책 변화는 크게 보아 ▲국제외교무대에서의 남북한 관계개선과 ▲우리 우방과 북한과의 관계개선 ▲우리와 중국, 소련, 동구권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의 세 분야로 나눌 수 있으며, 균형된 교차교류, 접촉을 통해 남북공영과 한반도의 안정구조정착을 도모하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남북한의 현재 수교국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130개국, 북한이 99개국이며 남북동시 수교국도 69개국이나 되지만 남북한은 그 동안 상호간의 정통성 경쟁 등 지나친 대결외교로 말미암아 국제사회에서 민족자존의 훼손과 물심양면의 제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소모적인 대결외교를 지양하는 대신에 북한도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성원이 될 수 있도록 밀어줌으로써 올림픽을 치르는 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드높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미, 일 등 우방이 자국의 법령과 정책에 따라 북한과 비군사적 물자를 교역하는데 반대하지 않고 이를 위해 우방과 북한간에 상담 등의 목적으로 민간인이 왕래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미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한 북한과 교역의 길을 열게 되었다.

현재 미국은 북한과의 교역이 전무한 상태인데 미국 내에는 「적성국과의 통상법」과 「수출관리법」이 있어 대통령의 특별허가를 받아야만 북한과 예외적으로 교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번 우리 정부의 외교시책 선언으로 미국은 앞으로 대북한 제재조치를 완화하고 북한과 점진적인 관계개선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정부는 또 소모적 남북 외교대결의 주전장이었던 비동맹국가와의 관계에 있어 우리와 단독 수교하고 있는 나라들과 북한의 관계정상화까지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유연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선언은 또 『북한이 세계 어느 지역에서 개최되는 모든 문화, 예술, 학술, 스포츠 행사 등에 참가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함으로써 서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할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한편, 향후 국제행사에도 남북한이 함께 참가할 수 있는 여지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미·일 등과 스포츠 교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미·일 등 우방의 대북한 비정치교류에 협력할 용의를 밝힘으로써 신장된 국력

에서 비롯된 외교적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서방국가들이 북한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행사에 참석할 때도 남북한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었음은 물론이다.

또한 남북공관이 함께 설치돼 있는 국가에서 모든 기회를 이용, 외교관 접촉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국제회의나 공식파티, 행사 등에 있어서 민족의 공동이익 추구에 배치되지 않는 한 별도의 지시나 제한없이 상호 접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우리 우방과 북한의 외교관 접촉은 우선 「제3국이나 중립적 환경」에서의 접촉과 대화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접촉도 제동이 걸려온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미·일과의 관계개선에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며, 한편으로는 우리의 중·소 등 공산권과의 관계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한반도의 균형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미·일의 대북한 관계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 등 공산권 국가들은 우리와의 관계개선에서 걸림돌로 느끼는 북한측의 불만을 무마, 설득하기 위해 우리의 이같은 전진적 자세를 원용할 수 있게 됐으며, 우리 역시 이들 국가들에 대한 접근이 이로써 용이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외거주 동포들이 자유롭게 남북한을 왕래할 수 있도록 남북한 당국간의 협의를 촉구함과 동시에 해외동포들의 모국방문을 완전히 개방한 점은 우리의 신장된 국력에 따라 당연한 조치라 하겠으며, 중·소 등 공산권과의 관계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외무부에서 발표한 시책선언은 모두 우리측의 일방적 조치라는 점에서 「7.7 특별선언」의 정신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번 외교시책의 전환으로 민족공동체로서의 남북관계가 국제사회에서 가시화될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북한의 호응여하에 따라서는 그들 사회의 개방이 촉진되어 민족 전체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짐은 물론 한반도 주변정세를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로 바꿈으로써 통일의 문을 활짝 넓혀줄 것이다.

#### 4. 대북 비난방송 중지

정부는 남북이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향해 공존공영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는 「7.7 대통령 특별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7월 19일 0시를 기해 전방지역에서의 대북 비난방송을 전면 중단하는 한편, KBS사회교육방송을 통한 대북방송시에도 김일성, 김정일 부자 등 북한측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지양하기로 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동안 비난방송의 중지는 1972년에 발표된 「7.4 공동성명」 제2항 「신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상대방을 증상하지 않으며」라는 조문에 의거하여 1년 동안 실시된 바 있으나, 북한측의 일방적인 약속파기로 무산되어 버렸다.

이번 우리측의 일방적인 대북비방중지 조치는 「7.7 특별선언」에 따라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북한자료의 개방 및 재외교포들의 북한방문 등 대북접촉의 선행조건일 뿐만 아니라, 민족공동체를 지향하는 우리 민족이 계속 상호증상, 비방하는 차원에 머물게 된다면 대외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조치라 하겠다.

북한은 아직까지 「정치·군사문제의 선해결」을 주장하면서 대남 모략, 비방 방송을 계속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비방방송과 같은 대결과 적대관계의 유산들을 먼저 정리하고 청산하는 것이야말로 정치·군사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예비적·질차적 과정일 것이다.

이제 우리는 대북 비난방송 중지조치에서 더 나아가 「싸우지 말자」는 적극적인 평화메세지를 북한측에 전달하는 등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기 위한 조치들을 아무런 조건없이 착실히 구현해 나갈 것이다.

## 5. 남·월북작가의 해방전 문학작품 출판허용

문공부는 7월 19일 남·월북작가 또는 재북작가의 해방전 문학작품에 대해서 상업출판을 허용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번의 해금조치는 노태우 대통령이 「7.7 특별선언」에서 밝힌 「문화교류 개방원칙」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분단상황 극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표명한 또 하나의 이정표이다.

이로써 우리는 월북작가 120여명의 해방전 문학작품을 읽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문학이 전성기를 이루었던 1920년대 이후 해방까지의 문학사적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되었다.

이들 작품이 금지도서의 사슬에 묶인 것은 휴전 직후 1954년부터였으며, 이 당시 금지의 기준은 작품내용이 아니라, 작가의 소재에 있었다.

그동안 정부당국은 재북 예술인들의 작품해금에 따른 사상적 혼란을 우려하였으나, 우리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 등 내외여건의 성숙과 함께 「7.7 특별선언」의 기본정신을 문화적 차원에서 구현해 나간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과감히 개방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문학작품을 해금한데 이어 미술, 음악, 연극, 영화 등 다른 예술분야의 월북 또는 남북작가 작품들에 대한 공연 및 전시 등도 검토할 계획이며, 이러한 전향적인 조치들은 남북 상호간 문화교류를 통한 공동체 의식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6. 북한 및 공산권 자료 공개

정부대변인 정한모 문공부장관은 9월 3일 『7.7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른 대북문화개방정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북한 및 공산권 자료를 대폭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그동안 금기시 해 왔던 북한의 「로동신문」 등 「불온간행물」과 TV 및 비디오 등 영상자료가 일반에 공개 보도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자료공개조치는 대공산권 교류촉진 등에 다른 정보수요의 증대에 부응하고 북방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북한 및 공산권 실상에 대한 국민들이 올바른 인식을 통해 건전한 통일논의를 활성화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정부는 우선 북한 및 공산권의 특수자료에 관한 분류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북한 및 조총련등 반국가단체가 선전 목적으로 직접 발행한 1차자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북한 및 반국가 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하고, 공산주의 이념·체제·활동 등을 찬양하는 등의 국헌에 위배되는 내용

▲국민의 대공의식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제외한 일반공산권 자료를 전면 공개한 것이다.

또한 특수자료의 이용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주민등록증 소지 등 신분이 확실하고 열람목적이 타당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대출도 30일까지 허용하며 ▲특수자료의 복제 및 복사도 취급 기관장 또는 취급인가자의 요청이 있을 때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현재 북한의 노동신문을 소장하고 있는 국토통일원 및 대학도서관 등 특수자료 취급기관에서는 노동신문 등을 일반국민들에게도 열람할 수 있게 하며, 특히 북한의 영상자료는 국민들이 북한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범위내에서 수시로 공개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발간하는 자료중 국가안보 및 외교전략상의 기밀을 제외한 각종 북한 및 공산권 정세분석자료를 사회각계기관·단체 등에도 확대 배포하며, 북한 및 공산권 자료를 필요로 하는 국민은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북한 및 공산권 종합자료센터」를 국토통일원에 설치하고,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대공산권 통상에 필요한 자료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시·도 단위 자료 센터는 국·공립도서관을 지정하여 연차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며, 각종 공개된 자료는 시중서점에서 자유판매도 허용된다.

정부는 또한 신문사등 언론기관이 노동신문을 직접 보고, 북한을 찬양·고무할 목적이 아닌 경우 객관적으로 인용 보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김일성 부자의 사진도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진을 게재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 및 공산권 자료 공개에 관한 정부대변인의 발표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표내용 요지>

정부는 「7.7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른 대북 문화개방정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중국, 소련 등 공산권 국가와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우리의 특수한 안보

상황하에서 불가피하게 제한하여 오던 북한 및 공산권자료를 국민에게 대폭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음.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룩된 국력신장과 올림픽개최 국민으로서의 성숙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취해진 것임.

자료공개와 기본 방침은

▲ 북한 및 조총련 등 반국가 단체가 선전목적으로 발행한 자료 등 명백히 국헌에 위배되는 자료를 제외한 일반 공산권 자료는 모두 공개하며

▲ 북한의 노동신문과 영상자료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공개하여 북한사회의 실상을 폭넓게 알 수 있게 하고

▲ 일반공개에서 제외된 자료라 할지라도 학술연구 등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열람, 대출 등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겠으며

▲ 정부기관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북한 및 공산권 정보자료를 각계에 최대한 공급토록 함과 동시에, 이러한 자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자료센터의 설치운영도 추진함.

이와같은 조치는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 및 공산권의 실상을 올바르게 인식케 함으로써 건전한 통일논의를 활성화하는 한편, 남북한 체제와 이념의 비교연구에 도움을 주어 우리의 민족통일 역량을 배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또한 국제적으로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대공산권 교류에 필요한 각종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차원의 정보영역을 확대하게 될 것임.

국민들은 이번 정부의 공산권자료 공개조치를 의도적으로 악용하여 국민의식을 오도하거나 안보 질서를 파괴하려는 불순세력이 있더라도, 이에 현혹되지 말고 성숙된 국민의식을 발휘하여 정부의 개방의지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람.

관련보도내용

비난방송, 평화방송

-북도 비방방송 멈춰라-

조선일보(1988.7.12)

대북 비난방송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7.4성명 후에 한번 그랬지만 그후 북이 비방을 재개하자 우리도 다시 시작했다. 7.7선언이 선제적 평화주도의 일환이라면, 대북 비난방송도 선제적으로 중지함이 좋을 것이다.

북이 비방-모략 방송을 하는 데 우리가 왜 먼저 중지하느냐 하는 반문도 있을 수 있으나, 신사도를 우리가 먼저 시범하는 것이 더 큰 승리일 수도 있다. 비난 방송이란 한 마디로 욕설이요 홍보기요 악올리기인데, 진심으로 화해를 추구한다면 그런식의 막싸움은 이제 피차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북도 우리의 선례에 발맞추어 비방방송을 중지해야 옳다. 북이 중지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시 하지 않겠지만, 북이 조금이라도 공정성을 존중한다면 그 불필요한 욕설은 그만 두어야 한다.

이제부터 남-북간에는 정상적인 의미의 커뮤니케이션을 할지언정, 욕설싸움은 지양했으면 한다.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이야말로 지극히 필요한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사실과 진실에 바탕한 정보를 유통시켜야 할 것이다.

높다란 장벽을 둘러쳐서 주민들을 정보로부터 차단시키고, 그 백지상태에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비방 자료들만 주입시키던 지금까지의 냉전적 적대행위를 과감히 중지한다면, 남-북간에는 보다 이성적인 상호인식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가능해야만 대화도 되고 화해도 될 것이다.

우리측은 지금 분명히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북도 공연히 주민들에 대해 정보를 통제하고 왜곡시켜서 대남 적대인식을 고취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주입식 반한캠페인은 분단 이데올로기를 고착시키는 것이며, 통일이 아닌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다.

북측은 매사에 정치적-군사적 해결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체의 비정치-비군사 부문의 교류와 긴장완화에 반대하고 있는데, 비방방송 같은 주변적 사항을 먼저 완화하고 중지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군사적 해결에 이르는 하나의 예비적-절차적 과정임을 알아야 한다.

대북비난 캠페인의 중지와 함께 우리는 보다 본격적으로 평화추구의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 단순한 비난중지는 소극적 대책이며, 이를 계기로 북에 대해 적극적으로 「싸우지 말자」 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선제적으로 계속 보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내부에서 통일과 관련해 마치 이쪽만이 부정적 대결의식을 고취하고 있다는양 오해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도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이제 우리는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서 평화적 교류와 평화공존 그리고 평화통일의 주도권을 잡고서 계속 평화의 물결을 일으켜 북으로 보내야 한다. 그리하여 북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민주화의 창도역을 남한이 쥐고 있음을 내외에 널리 인식시켜야 하겠다. 통일논의에 있어 이제 우리는 수세가 아닌 공세로 나아가야 한다.

내 가족을 찾아내라

-통일전에라도 편지도 못하나-

조선일보(1988. 7. 14)

우리 정부와 일반 국민, 야권, 재야, 학생 그리고 북한과 주변 국가 등 모든 당사자들이 한번 철저하게 함께 따지고 넘어갈 일이 있다. 이산가족의 생사와 주소를 확인하고, 그들의 고향방문을 주선해주고 편지 왕래를 하게 해주는 것이 과연 분단고착 행위요, 통일기피 행위인가 하는 것이다.

일부 논자들은 군사문제와 통일 자체를 당장 어떻게 하자는 말이 없이 교류만 거론하는 것은 일종의 「통일 안하기」의 속임수라는 식으로 내리 짚기도 한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는 극단적으로는 통일이 될 때까지는 교류 따위는 아예 하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식의 논리까지 나올 기세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어불성설이다. 군사문제나 통일 자체에 관한 논의하고 교류의 추구하고는 각기 별개의 차원에서 함께 병행도 할 수 있고 선-후를 가려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군사 문제나 통일 자체라는 것은 교류에 비해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손쉬운 교류부터 터놓고 보는 것이 군사문제나 통일문제에도 결코 해될 것이 없다. 전세계 대도시들의 한복판에 나가 양팔을 들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교류라는 것이 긴장완화와 통일에 지장을 주는지 도움을 주는지를.

흔히 군사적 대치상태의 근본문제는 덮어 놓은채, 그까짓 교류만 거론하느냐고 일견 그럴듯한 말들을 하는데, 이것은 그러한 근본문제 접근을 위해 교류가 가져다 줄 엄청난 보조적 효과를 모르거나 모르는 척하는 억지에 불과하다.

왜 모르는 척하는가. 그것은 북이 「남조선 혁명」과 「체제 불개방」이란 잣밥에만 관심이 있고, 이산가족의 재회라는 인간적인 사항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은 공연히 「교류=분단고착」이란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혈육간의 생사확인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른바 혁명가라는 이름의 특별한 인간형의 사고방식이 대저 어떤 것인지 잘은 몰라도, 아무리 혁명 아니라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을 꾀한다 하더라도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주소확인 및 고향방문-가족상봉만은 꼭 성사시켜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그것을 성사시킨다 해서 북이 어떻게 나쁘게 된다고는 우리는 생각지 않는다. 왜 그렇게 고집불통이고 고지식하며 융통성이 없는가.

북이 이 문제에 호응하게끔 야권과 재야와 학생들도 북에 대해 크게 한마디 해주기 바란다.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정부가 제의한 것이라 도와주기가 싫다고 생각할리야 없겠지만, 이산가족의 교류는 전쟁의 차원을 넘어서 그야말로 꼭 성사시켜야 할 절실한 민족적 인도적 한풀이의 문제 아닌가. 이번에만은 정부 못지 않게 야권과 재야와 학생들이 한번 나서서 북의 태도변화를 촉구했으면 한다.

대학생들의 남북학생회담 제의에는 그토록 범석을 피우며 호응을 한 북이 만약 이쪽의 정부가 제의하는 교류에는 한사코 불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속이 뻘히 들여다 보이는 악의적인 행위라 할 것이다. 군사문제와 통일 자체는 그것대로 말하고 싶으면 계속 말하라.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교류를 못할 이유가 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백두·한라에 남북 학생들이 오간다면

서울신문(1988. 7. 16)

남북 학생 조국순례대행진과 친선체육경기 교환 등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한반도 분단사상 초유의 경사이며 가장 효과적인 결실을 가져올 수 있는 적절한 「실험」이 될 것이다. 남북학생 교류는 7.7 선언의 후속조치일 수도 있고 지금은 중단됐지만 한동안 이어져 오던 대화와 교류의 연장일 수도 있다. 적대적인 대결을 지양하고 동족으로서 공존동반하자는 마당에 남북간 장벽에는 어떤 형태로든 돌파구가 마련돼야 한다.

북한의 동포들은 이즈음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한번 상상의 나라를 떠돌아다니다. 북한의 정권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다. 청명한 어느 날 남한 학생들이 무리지어 백두산을 올라 천지 앞에 머리 숙인다. 이윽고 북녘의 산하와 평양을 거쳐 판문점에 대기한다. 같은 무렵의 북한의 학생들은 남향의 육로로, 뱃길로 한라산을 찾아 백록담에 무릎꿇고 남해를 건너고 서울로 들어서 판문점에

합류한다. 양쪽의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함께 이 험난한 국제경쟁시대에 살아남는 민족자존의 지혜와 통일번영의 결의를 새롭게 할 것이다. 얼마나 멋지고 신나는 한편의 드라마일까, 상상하기에 어렵지 않다.

체육경기 교환도 그러하다.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한 학생들이 번갈아 구기의 코트를 누빈다. 힘차고 단호하게 서로가 상대방의 닫힌 골문을 통일의 의지로 활짝 열어제치는 모습 또한 장쾌하기 이를데 없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모든 국민이 환호하는 가운데 남북적십자에 의한 이산가족 생사확인 문서가 오가고 편지왕래는 물론, 교향방문단·예술공연단이 오고 갈 준비도 진행될 수 있다. 이 모두가 분단 40여년만에 찾아온 민족의 멋진 한바탕 한풀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이같은 제의내용을 담은 서한의 접수조차 거부하고 있다. 미리 강조했듯이 학생 교류는 실질적 남북교류의 첫 실험이라는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학생교류가 실현된다면 그것은 앞으로 전개될 남북교류에 유익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며 교류의 문을 넓혀 평화통일의 터전을 공고히 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이번 우리 측의 제의는 지난번 학생들의 「6.10 회담」 주장의 경험을 토대로 대북 접촉창구와 관련한 학생들의 대화주장과 정부의 「창구일원화」 기조를 전향적이며 합리적으로 절충한 방안이기에 더욱 소중하다.

우리 대학생들의 남북학생회담 제의에는 그쪽 학생들을 시켜 그토록 법석을 피우며 호응을 한북이 이쪽 정부가 제의하는 실질교류에는 무조건 불응한다면 그 속셈은 뻔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번 7.7 선언에 대해서도 그들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시켜 거부했다. 그것이 분리주의안이며 분단을 고착시키고 군사문제는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거부 이유를 댔다. 또 며칠전 한적측의 대화재개 제의에도 거부반응을 보였다. 학생들이 오가고 이산가족의 생사와 주소를 확인하며 그들의 고향방문·편지왕래를 하게 해주는 것이 과연 분리주의·분단고착 행위인가, 아니면 진정한 통일을 위한 만남·화해의 행위인가는 아마 그들 자신이 더 잘 알 것이다. 찬성한다고 자존심이 상하고, 반대하고 힘의 우위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호응을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자 한다.

「월북작품」 잘 풀었다

한국일보(1988. 7. 21)

역사연구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편견과 선입관없이 객관적인 각도에서 사실을 조명하고 접근하는 일이다.

한 시대의 역사적인 상황과 사실을 편견이나 선입관에 의해 과대평가 하거나 과소평가하거나 아예 무시하여 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역사 왜곡의 출발이 되고 만다.

정부가 재북작가 1백20명의 전 작품을 해금한 것은 국토분단과 민족 이산의 엄청난 비극 속에서 무리하게 외면하려 했던 한 시대의 문화적인 상황을 새롭게 조명하고 잃어버렸던 문화사를 되찾으려는 새로운 시도라고 하겠다.

7·7 선언의 문화 예술분야 후속조치의 하나로 취해진 이번 해금으로 이제까지 사상과 이념의 깊은 그림자 속에 가리워져 있던 문화사가 양지로 옮겨 앉게 된 것이다.

이번에 해금된 월북작가의 작품은 신문화가 이 땅에 뿌리를 내려 난만하게 피어오르던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에 이르는 작품들로, 순수문학의 모더니즘작품에서 카프계열의 계급문학, 동반작가들의 경향과 작품 등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던 어두웠던 시절의 문화적인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작품들이다.

이들 작품이 금지도서인 사슬에 묶인 것은 동족상잔의 처절한 비극을 겪은 휴전직후의 1954

년이었으며, 이 당시 금지의 기준은 작품내용이 아니라 작가의 소재였다. 작가가 휴전선이북에 있고 재북의 이유가 남북이 아니라 월북으로 인정된 모든 작가의 모든 작품은 사슬에 묶였었다.

그 당시 금지의 기준의 편협했다던가 금지 그 자체가 무모했다고 규정하기에는 동족상잔으로 입은 상처가 너무도 처절하였으므로 오늘의 시점에서 가부를 따지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금지조치가 무시해서는 안될 한 시대의 문화상황을 그늘 속에 가둬 둠으로써 문화사의 바른 인식과 사실인식을 어렵게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에 1976년 이후 재북작가 작품의 해금문제가 문화 예술분야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으며 마침내 지난 3월 1차로 정지용·김기림의 작품이 해금되기에 이르더니 이제 전면적인 2차 해금을 맞았다.

2차 해금에서도 북한체제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홍명희, 이기영, 한설야, 조영출, 백인준 등 5명의 작품은 그대로 금지목록에 남겨 두었으나 문화예술을 사상이나 이념의 프리즘을 통해 파악하지 않는다는 대의명분으로 이번 해금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미해금 5명의 작품을 굳이 묶어 두어야 할 이유는 없다.

이번 해금이 굴절된 문화사의 복원에만 그치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민족동질성 확인을 위한 남북한간의 문화예술 교류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북의 자료공개도 촉구한다

-정부의 북한자료 공개방침에-

조선일보(1988. 9. 4)

그동안 일반 국민에게 「비공개」되었던 북한과 공산권 자료의 「공개」는 역사적이고 획기적 의미가 있다.

남북분단 이후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해서 전쟁을 치르고 또 지금까지도 휴전선을 사이에 둔 적대적 대립을 지속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에서 우리 정부가 상대방의 정치선전 도구인 당기관지 「로동신문」을 비롯한 북한과 공산권 자료를 일반에 공개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라고 할만하다. 이 같은 정부의 정책변화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특수한 안보상황을 감안할 때, 「위험한 도박」이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설명처럼 우리의 국력신장과 국민의 민주의식, 그리고 국제적 시각의 성숙은 분명하고 공산권과의 상호교류가 증대일로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뿐더러 통일논의의 활성화와 남북 접촉의 본격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과 공산권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도 제고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있다.

더욱이 대통령의 7·7 선언으로 대북문화개방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하며, 중국-소련 등 공산권 국가와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국제협력증대는 불가피한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 사회에는 정부가 아니라 우리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이 엄존하여 북의 선전선동을 비판없이 수용함으로써 사회안정을 파괴, 궁극적으로 체제전복을 꾀하려는 환상을 저버리지 않고 있다.

게다가 우리 사회는 남의 주장과 논리를 충분히 경청하지 않고 미리 예단된 편향된 의식과 관념에 따라 감정적으로 상대를 배척하는 습성도 미만하고 있다. 뚜렷한 현실인식과 냉철한 객관적 비판의식 없이 그럴듯한 선동-선전책략에 휘말려 부화뇌동하는 위험 또한 적지않은 것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정부의 이번 정책전환이 용기있는 결단이란 점은 인정하면서도 치밀하고 단계

적인 부작용 대응 노력도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번 조치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하나는 북한이나 공산권에 대해 잘 모르고서 이루어졌던 편향된 사고가 많이 개선되리란 기대다. 그동안 북한의 실상을 모르고서 막연히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이 김일성 1인 숭배체제의 허구성을 철저히 체감할 수 있게 되면 우리 체제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과 배척도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우리 정부의 북한 자료 「공개」 정책이 남북긴장완화와 교류증진 등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북의 남한 자료 공개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우리와 공산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은 점차 증대될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합쳐져야 할 한 민족으로서 북한이 남한과의 교류 증진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가 북의 당기관지 「로동신문」을 일반 국민에 공개하고 북한 TV영상마저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북이 남의 신문과 TV영상을 공개할 수 없다면 말이 안된다.

이미 분단국가인 동-서독 사이에선 TV-신문 잡지구독이 자유화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북이 남의 자료공개를 망설일 이유가 없으리라고 믿어진다.

그럴때 남과 북의 일반 주민들이 아무 장벽없이 또 선입관없이 상대방의 현실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되면 앞으로 올 통일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으리란 기대다.

정부의 역사적인 북한 자료 공개선언이 민족의 화합과 통일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Ⅲ. 남북정상회담 개최 제의

#### 1. 제의 내용

노태우 대통령은 제43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김일성 주석에게 6천만 동포의 염원에 따라 민족의 통합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안에 만나 회담할 것』을 제의하였다.

특히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의 지도자가 서로 만나 민족의 장래문제를 허심 탄회하게 논의하는데 있어 장소, 의제, 절차 그 어느 것도 장애요인이 될 수 없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이 『모든 문제를 푸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이라고 지적한데 이어, 『내외정세로 보나 우리의 민족적 현실로 보나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의 만남은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되었으며, 『나의 이러한 제의에 북한측이 호응해옴으로써 민족사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태우 대통령은 우리 국민 모두가 그동안 이룩한 성취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그리고 세계의 축복 속에 올림픽을 훌륭하게 치룬 민족의 드높아질 자존을 바탕으로, <민주·번영·통일의 시대>를 열어 나가자고 호소하였다.

광복절 경축사의 내용중 남북정상회담 관련부분은 다음과 같다.

.....

우리가 세계 모든 나라와 더불어 우호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갈 새 지평이 열리고 있습니다.

민족해방의 기쁨을 나눌 틈도 없이 우리에게 분단의 고통을 안겨다 주었고, 그 이후 동족상잔의 처참한 전쟁을 이 땅 위에 치루게 했던 동서냉전체제의 세계질서에도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간의 관계에도, 또한 이들 국가와 우리와의 사이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개방과 협력의 물결이 넘쳐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드높아진 우리의 민주역량과 민족자존을 바탕으로 내외 정세를 자주적으로 개척하여 민족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것입니다.

.....

친애하는 내외 동포 여러분.

오늘 나는 남북의 모든 동포들에게 변영된 통일조국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해 대화합의 시대를 다 함께 열어 나갈 것을 호소합니다.

이제 남과 북은 대결과 전쟁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만이 분단의 고통과 시련에서 벗어나 민족의 진정한 진보와 통일을 가져온다는 신념을 실천할 때입니다.

지난 7월 7일 나는 남과 북이 이제는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민족공동체로서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40년이 넘는 같은 민족간의 분단장벽은 이제 개방과 교류, 협력으로 허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루빨리 통일의 여건을 성숙시켜 평화적 통일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남북한 당국의 최고책임자가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를 푸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입니다.

내외 정세로 보나 우리의 민족적 현실로 보나 그와 같은 만남은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광복 43주년을 맞아 북한의 김일성주석에게 6천만 동포의 염원에 따라 민족의 통합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안에 나와 만나 회담할 것을 제의합니다.

남북의 지도자가 서로 만나 민족의 장래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데 있어 장소, 의제, 절차, 그 어느 것도 장애요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나의 제의에 북한측이 호응해 옴으로써 민족사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되기를 충심으로 희망합니다.

6천만 내외 동포 여러분.

건국 40년을 맞는 이제, 우리 모두 그동안 이룩한 위대한 성취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그리고 세계의 축복 속에 올림픽을 훌륭하게 치룬 민족의 드높아질 자존을 바탕으로, <민주·번영·통일의 시대>를 흔들림 없이 열어갑시다.

이 길은 약소민족으로 나라를 잃었던 서러움 속에 우리들 선열들이 온갖 고초 속에 꿈결에도 소망해온 조국을 오늘의 우리 세대가 실현하는 새로운 광복의 길입니다.

번영된 통일조국을 이룩하는 것만이 우리 민족사의 진정한 정통성을 되찾아 미완의 광복을 오늘에 완성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자주역량으로 한낱 세계의 주변 국가로서 타율의 분단을 감수했던 고난의 역사를 이제는 청산합시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세기에는 세계사의 중심에 서서 인류와 평화와 복지를 위해 당당한 역할을 다할 자랑스러운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 갑시다.

## 2. 제의의 의미

### 「민주·변영·통일의 새 시대」 개막을 위한 구체적 포석

노태우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가 분쟁지역에서 「평화를 기약하는 땅」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드높아진 국민적 자신감과 아울러 개방과 협력의 물결이 넘치는 세계 질서에 발맞춰 우리도 민족통합에의 본격적인 준비를 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이미 5년간의 임기를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을 열어가는 시대』로 삼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평화통일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족적 여망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번 남북한 정상회담 제의는 이같은 전반적인 민족사의 새로운 흐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 이 는 한편, 통일을 향한 확고한 디딤돌을 다져 나가려는 노태우 대통령의 의지와 약속을 구체화한 장기적 포석인 셈이다.

이미 노태우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이전부터 남북한 문제 해결의 한 방법으로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강력하게 제기해 왔다.

1987년 9월 당시 민정당 총재로서 미국을 방문한 노태우 대통령은 내셔널 프레스클럽 기자회견(1987. 9. 15)에서 『남북한 최고책임자의 서울·평양 교환방문이 실현되도록 힘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한 바 있으며, 민정당의 대통령 선거 공약사항에서도 이를 재확인했다.

또한 제13대 대통령 취임사(1988. 2. 25)에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재결합을 위한 길이 보인다면 세계 어느 곳이든 개의하지 않고 방문해 어느 누구와도 진지하게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서 3·1절 기념사(1988.3.1)에서도 『우리가 문을 연 민족자존의 시대는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을 향해 전진하는 시대이다. 조국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만날 것이며, 그것이 아무리 험난하다 해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터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통령 취임 후 첫번째 가진 기자회견(1988.4.21)에서도 노태우 대통령은 『통일이라고 하면 국민들중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긍정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통일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시기가 앞으로 닥쳐오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해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일관성 있게 강조해 왔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제 전반적인 통일환경은 남북정상회담의 실천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또 민족의 자존과 성숙은 그와 같은 만남이 지체없이 이루어질 것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제의가 이같은 가능성과 당위성을 바탕으로 민족통합의 새 시대를 과감히 열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긴 것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제의와는 그 성격과 지향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 「7·7 특별선언」 기본정신의 선도적 구현

노태우 대통령은 「7·7 특별선언」을 통해 남북이 상호불신과 대결의 관계를 과감히 청산하고

하나의 민족이라는 민족공동체 의식아래 민족 전체의 번영을 함께 추구해 나갈 것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측은 인식과 정책의 일대전환을 모색해 나가는 우리의 전향적 자세와 진정한 동포애에 아직은 호응해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7·7 특별선언」의 기본정신을 구현하는 후속 실천조치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이행해 나감과 동시에, 우리의 이러한 진의가 북한측에 전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제의를 통해 노태우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의 호칭을 사용한 것도 과거와 같이 막연한 의례적 필요성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민족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선의의 동반자」관계로서 북한을 인식하는 데에서 비롯 되었다고 하겠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제의는 민족화합과 통일번영의 시대를 정상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면 화해와 협력이라는 「7·7 특별선언」의 기본정신을 북한측에 정확히 전달할 수 있으며, 북한이 민족공동체 형성에 동참해 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남북한 관계개선의 획기적 전기 마련

남과 북이 40여 년간 대립과 반목의 관계를 지속해 온 점을 감안한다면, 무엇보다도 다방면에 걸쳐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간 상호신뢰를 증진하고 민족적 유대감을 회복·발전시키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남북정상이 아무런 부담이나 조건없이 서로 만나 민족의 장래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한다면 쌍방간의 오해와 불신감이 제거될 것은 물론이고 상호교류와 협력에의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여러 분야의 생산적 대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그간의 남북대화 과정에서 경험했듯이 남북간에는 실무급 수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음도 사실이며, 이러한 문제들이 남북관계 개선에 결정적 장애요소가 되고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문제는 시급한 당면과제로서,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쌍방 당국의 최고책임자의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하며,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중대하고 복잡한 문제일수록 정상들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역사적 사례가 증명해주고 있다.

특히 회담형식과 의제문제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최근의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을 비롯한 여러 채널의 남북대화 진행상황과 비교해 볼 때, 남북정상회담은 장소·의제·절차 등 제반문제가 장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남북간의 현안문제를 일괄 타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불가침문제, 상호군비축소와 같은 상호이해가 상충되는 고도의 정치적 문제까지도 협의될 수 있으며 민족의 장래문제를 풀어나가는 쌍방의 최대공약수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3. 국내의 반응

국내언론들은 노태우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김일성주석」과 회담하자고 제의한 데 대해서, 그 배경과 성격에 있어 『기존제의와는 의미를 크게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81년의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 제의가 남북상호간의 불신해소에 주안점이 주어진 데 비해 『이번 제의는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겠다는 7·7선언의 기본정신을 토대로 민족공동체 회복을 통해 통일의 길을 개척하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실 남북문제와 관련한 그동안의 각종 제의를 검토해 볼 때 그 실현가능성보다는 대내외 선전에 치우친 감이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태우대통령의 이날 제의의 배경에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실현가능성과 추진의지가 깔려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고 하겠다.

또한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중대하고 복잡한 문제일수록 정상들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능률적이고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노태우대통령이 북한측에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한 것은 현 남북관계 상황에 비추어 보아 당연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노태우대통령이 그동안 민정당 총재로서 국정에 관여해 온 이래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첫 공식제의했다는 사실은 상당한 의미를 가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측에 실현 가능성 계속 탐색

-올림픽후 국제환경변화대응... 국내 정정이 변수-

조선일보(1988. 8. 16)

노태우대통령의 15일 북한 「김일성주석」과의 회담제의는 일견 종전의 남북최고책임자회담 제의와 별 다를 게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의 서울-평양상호방문 제의는 81년 1월 12일 전두환전대통령에 의해 제기된 바 있고, 같은 해 6월 5일 전대통령은 『언제, 어디서든,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을 논의하자』고 북측에 거듭 제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물론 「장소-의제-형식」에 구애받음이 없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소-의제-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안에 남북최고책임자회담을 개최하자는 노대통령의 이날 제의는 외형상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기존 제의의 반복 천명에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대통령의 이날 제의는 그 성격과 배경에 있어 기존 제의와는 의미를 크게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남북관계의 상황과 「남」과 「북」 각각의 입장 및 위상, 그리고 한반도 주변여건 모두가 81년 제의 당시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남북문제와 관련한 그동안의 남과 북의 제의는 각각 그 실현가능성보다는 대내외 「선전전」에 보다 큰 비중과 목적이 두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북은 김일성 1인체제 및 김정일세습기반구축 등을 위해, 그리고 우리도 국내정권안보적 차원에 더 비중을 뒀 남북관계를 활용하려 했던 과거 행태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87년 당시 전전대통령의 남북최고

책임자회담 제의의 배경 또한 이같은 선전적-일방적 대북 제의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 듯하다.

그러나 노대통령의 이날 제의의 배경에는 어느 때보다 높은 실현 가능성과 추진 의지가 깔려 있다는 점에 유의, 그 배면을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먼저 오늘의 남북관계의 「내면」은 과거의 그것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노대통령 스스로도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지난해 KAL기 피격사건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간의 직접대화창구만은 끊어짐 없이 지금도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대통령의 이날 제의는 과거의 상당수 사례가 보여주는 일방적 선전적차원의 제의와는 달리, 「보이지 않는 내면」 즉 「상호성」을 더 지니고 있다고 이들은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노대통령의 입을 통해 나오는 남북정상회담은 공허한 독백의 차원이 아니라, 그 「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식확인되고 있지는 않으나, 노대통령은 남북간의 비밀 접촉창구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계속 타진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 이들의 진단이다. 실제 노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중 지상과업을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민족문제의 발전적 해결』로 설정, 이의 실현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올림픽 이후에는 정부의 모든 노력을 이 문제에 집중, 본격추진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그동안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만 해오던 노대통령이 올림픽을 한 달 앞둔 이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첫 공식제의했다는 사실은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분석이다. 올림픽이후 전개될 남북문제의 본격논의에 대비, 그 공식 징검다리를 놓는 사전포석이 바로 이날 제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관계자들은 노대통령의 이날 제의에 대해 북한측은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 분명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대통령 등장이후 한 때 내면적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던 북측의 태도가 4·26총선이후 우리의 정국이 여소야대의 불안정한 모습으로 바뀌고, 학생들의 급진 통일논의로 사회적 혼란현상이 가중되자, 또다시 달라지고 있다는 점등을 그 이유로 꼽고 있다. 그러나 정부관계자들은 서울올림픽이후 이같은 북한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림픽이후 더욱 달라질 수밖에 없는 남북의 위상, 대중·소를 비롯한 우리 북방외교의 실질성과 확대, 고르바초프이후 미-소 관계의 유화적 변화등 내-외 여건이 북측의 노선재검토를 불가피하게 만들 것이라는 얘기들이다.

다만 우리의 국내 정정불안여부가 단 하나의 변수로 남아 있다는 것이 정부측의 지적이다. 국내 정정이 불안한 상황에서 남북대화에 응할 경우 「노정권의 안정」에만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판단아래 북측은 남북대화를 외면할 것이며, 그같은 패턴을 그동안 북측이 계속 노출시켜 온 게 사실이다. 남쪽의 정정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대화」보다는 대남교란 분열책동 쪽으로 치달아 왔던게 북측이 보여온 전략이었던 것이다.

노대통령이 이날 경축사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다』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측면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런만큼 노대통령이 이날 체제 및 법질서 파괴행위 불용의지를 강조한 것도 「올림픽 안전」만을 겨냥한 단순한 차원으로 보아 넘겨서는 안될 것 같다. 오히려 올림픽의 안전도 안전이지만, 안정속의 민주발전이라는 국내적 대명제와 함께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민족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우리 국내의 체제 파괴 행위는 더 더욱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강한 의지가 깔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 정부는 올림픽이후 국내정치개혁과 병행하여 어느 때보다 강도높은 용공

-좌경세력 발본작업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적절한 시기」에 획기적인 대북정책을 국민과 북한앞에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정상회담 제의에의 기대

한국경제신문(1988. 8. 16)

(1)

광복절43돌을 맞아 노태우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제의한 남북한 정상회담은 이번만은 꼭 성사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또한번 안겨주었다. 해방이 그대로 남북분단으로 이어져 또다른 민족적 비극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여 남북이 하나가 되는 것이 최대의 민족적 과제이며 진정한 광복인 셈이다. 현실적으로도 지금 통일문제를 둘러싸고 중구난방으로 논란이 거듭되어 오히려 혼란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므로 이를 정돈하여 남북화해를 이루는 방법으로 정상회담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구하게 된다.

말하자면 무언가 돌파구가 열렸으면 하는 것이 국민모두의 소망이며 노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남북한 최고책임자로서 해방 43년만에 처음으로 만나게 되면 무언가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다는 희망이다.

남북한간에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체제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2차대전후에 6.25전쟁을 비롯하여 세계의 많은 분쟁들이 거의가 체제와 관련된 갈등이었다. 남북한간에는 매우 어렵고 고도로 민감한 문제들이 다원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역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문제 해결의 첩경일 수밖에 없다.

1970년 3월 19일 서독 브란트수상의 동독방문과 같은 해 5월 21일 슈토프 동독수상의 서독방문이 양국간 기본조약체결과 관계정상화의 초석을 놓은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977년 11월 사다트 이집트대통령의 이스라엘방문과 12월 베긴 이스라엘 수상의 이집트 방문이 평화조약 체결의 길을 닦은 일도 있다. 최근에 고르바초프의 워싱턴 방문과 레이건의 모스크바 방문으로 동서태양트의 기반을 구축한 일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중대하고 복잡한 문제일수록 정상들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능률적이고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인 셈이다. 과묵한 타인지는 몰라도 그와같은 문제가 학생회담이나 특정집단만의 타협으로 해결된 예는 없다고 생각된다. 통일문제의 논의는 각계각층에서 활발하게 전개하되 대북접촉의 창구만은 정부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도 이런 곳에 있다고 본다. 정부란 국민과 유리되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총체적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실천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은 바로 정부의 최고책임자끼리의 만남이므로 총체적 의견을 바탕으로 결단성 있게 협상할 수 있으며 약속의 실현이 보장되어 상호신뢰를 쌓아갈 수 있게 된다.

남북최고책임자회담 제의는 그동안에도 수차례 있었던 일로 하등 새로울 건 없다. 다만 남북국회연석회의와 학생회담문제 등 통일논의가 어느 때보다도 분분할 때이며 「7.7선언」으로 대북적대시정책을 전환한 시점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2)

「7.7선언」은 각계 인사의 남북교류, 이산가족상봉, 남북교역개방, 대외경쟁과 대결외교종식, 우방의 대북교역 용인, 북한과 우방간의 관계개선 협조 등 6개항이다. 이것은 남북분단이후 고수해

은 대결정책에서 벗어나 민족공동체를 확인하고 상호번영함으로써 통일을 앞당기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민족분열주의 책동이라고 일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종래의 당국최고책임자회담 제의에도 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주한미군철수, 정치·군사회담 등을 내세워 반대로 일관해왔다. 이번 정상회담 제의에 북한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속단할 수 없지만 「7.7선언」을 구체화하는 것이 민족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길임을 자각하고 전진적 자세를 보이기를 기대한다. 우리가 대결정책을 버렸듯이 그들도 이제는 적화통일정책이나 섀도 파지않고 우물물을 마시려는 발상은 제발 단념했으면 하는 것이다. 남북한정상이 만나 신뢰를 확인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다.

수령을 만들어 놓고 상대방이 거기에 빠져 허덕이기를 기다리는 식의 체제싸움은 이제 버릴 때이다. 그런데 북한이 스스로 만든 수령에 빠져있는 것이 문제이다. 한계에 이른 경제적 낙후, 자유 없는 독재, 주민생활 궁핍화, 극도의 폐쇄성, 이런 것들이 수령인 것이다. 거기에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소련으로부터의 자유화 물결을 막기 어려워 마치 남북으로 포위되어 있는 형국이다. 만일 북한의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고 또한 개방적이라면 남북대화는 보다 더 용이할 수 있다.

또다른 문제는 한국은 그들보다 더 깊은 수령에 빠져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점이다. 이점은 그들에게 유일한 위안이며 남북대화가 급할 게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요소이다. 거리는 최루탄과 화염병으로 매일같이 난장판을 이루고, 각계각층에선 불만의 소리가 고조되고, 정부와 국회는 여소야대로 대립하고 있는 점등을 수령에 빠진 것으로 간주할 지 모른다. 그리하여 남한에서 자기들 편이 급속히 팽창되고 있다는 착각으로 대화를 늦출수록 유리한 국면이 전개된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 내부를 감히 넘볼 수 없도록 민주화를 정착시키고 저들의 개방과 경제발전을 돕는 길을 강구하여 궁극적으로는 남한에도 못사는 체제를 덮어씌우려는 적화전략을 포기케 하는 것이 남북 화해의 첫걸음이다. 우리사회가 폭력이 난무하고 분열만 일삼는다면 남북화해를 가로막고 북한측의 적화유혹만 증폭시킬 뿐이다. 남북한 최고책임자회담을 제의하면서 일부 좌경폭력세력의 법질서 파괴 등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천명한 데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지 모른다.

우리의 내부가 자유가 만끽되면서 질서도 튼튼히 자리잡게 돼야 각종 남북대화도 순조로울 것이다. 난파위기의 선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남북한 모두가 난파선이 안돼야만 합류할 수 있다.

정상회담이 꼭 성사되어 그런 문제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김일성의 진의

-남북정상 평양회담제의-

중앙일보(1988. 9. 9)

북한의 주석 김일성은 노태우대통령의 평양방문을 「조건부」로 환영했다.

보도에 나타난 「조건」을 갖추려 보면 먼저 ①남한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②남북한이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 다음 ③북한의 통일방안인 「고려민주연방제」를 남한이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액면대로 받아들일 순 없다.

김일성 발언은 북한의 정권수립 40주년 기념일인 「9·9절」행사의 전야제 연설에서 나왔다. 지금 북한은 서울올림픽에서 맞서 평양에 세계의 공산국과 제3세계의 친북한국가 대표들을 대규모

로 초청하여 자축행사를 벌이고 있다. 그 리셉션에서 김일성은 평양이 한반도의 중심이고 자기가 한민족의 최고 영도자라고 과시하기 위해 그런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는 먼저 김일성발언의 진의를 파악해야 한다. 진의파악은 두가지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 하나는 김일성이 진심으로 통일문제를 노태우대통령과 논의하고 싶어 하는가 하는 것이다. 다음은 그의 전제조건이 절대적인가, 아니면 수정가능한 것인가다. 만약 김일성이 조건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면 그의 발언은 성실성이 없는 하나의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지금 주변환경은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케 하고 있다. 북한의 두 동맹대국인 소련과 중공이 국제적인 개방과 협력의 노선을 걷고 있다. 그런 원칙은 우리에게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다. 중소의 올림픽참가와 그 동안의 대한외교발언들이 이 사실을 입증한다.

이제 북한은 스스로의 자세수정이 필요하다. 올림픽 불참도 자연스럽지 못할 뿐 아니라 반정부적인 우리 운동권 학생들을 상대로 문제를 풀어보려는 것도 가소로운 일이다. 더구나 올림픽이후 전개될 새로운 개방과 협력의 흐름을 북한이 외면해선 안된다.

이번 김일성발언이 이처럼 변동하는 정세에 적응키 위해 나왔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김일성 제의가 우리 남한동포의 지지를 받으려면 「고려 연방제」 통일방안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듯한 태도부터 고쳐야 한다. 북한의 통일방안인 고려연방제에는 남한 4천만 거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남한에서 반공관계법의 폐지, 공산활동 합법화, 연공정권 수립, 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 등 5가지 전제조건은 남한의 정치체제의 해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한, 남북 두 체제의 공존은 불가피하다. 그것은 두 체제가 각기 주권을 갖는 독립체제가 황적으로 결합하는 「국가연합」(confederation)에 이어 제한된 주권을 갖는 국가의 결합인 「연방국가」(federation)의 단계를 거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연방의 형태는 여러 가지여서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가 최선은 아니다. 그 형태는 어디까지나 남북 거래가 토론과 합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이지 북한이 특정형태를 강요할 성질이 못된다.

김일성은 잡다한 전제조건을 철회하고 조건없이 노태우 대통령과 만나야 한다. 정상회담은 하찮은 과정을 뛰어넘어 기본문제들을 일괄타결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

김일성은 북한을 40년간 통치해 왔다는 점에서도 우리는 한반도에 실재하는 지도자중의 한사람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참된 민족의 영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외국사절 앞에서의 제스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남북정상회담에 임해야 한다. 그 회담은 조건없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 가능한가

한국일보(1988. 9. 10)

통일문제접근을 위한 우리측의 남북한정상회담 제의에 대해서 지금까지 반대 또는 침묵을 지켜오던 북한의 김일성이 비록 까다롭고 비현실적인 전제조건을 붙이기는 했지만 정상회담에 용의를 표명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또한 우리 정부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굳게 닫힌 북한 문을 열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에서 김일성의 회담용의 표명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 검토하기로 한 것은 지극히 타당한 처사이다.

국토분단이후 43년간 남과 북이 내놓은 통일관계 제의는 거의가 민족의 염원을 해결하겠다는 뜻보다는 서로 상대방 비방과 허점노리기, 그리고 선전목적에 치우쳤던 점이 적지 않았다.

노태우대통령의 「7·7대북한특별선언」은 이같이 경직되고 불성실한 통일논의 태도를 탈피, 북



한을 적이 아닌 공존공영의 민족공동체로 인식하겠다는 자세 전환이었던만큼 북측의 회담용의를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이 밝힌 남북최고위급회담(정상회담)은 겉으로는 노태우대통령의 7·7선언과 언제 어디서든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정상회담을 갖자는 「8·15제의」에 대한 뒤늦은 반응으로 보여진다. 하나 우리는 왜 이 시점에서 그가 회담용의를 표명했느냐하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온세계가 경제발전과 함께 올림픽 개최로 한국에 집중하는 시선과 관심을 둔화시키는 한편 경제파탄과 부자세습 등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남북한 문제체기로 호도하려는 기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6공화국 출범 후 점차 뜨거워지는 한국학생과 일부국민의 통일에 대한 열기에 호응하고 올림픽후 본격화될 남북문제에 대비, 북한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다는 인식을 주려는 의도이며 나아가 7·7선언을 인정, 지지하는 소련과 중국의 개방 등 체제완화 압력에 대한 제스처로도 풀이된다.

북한의 의도와 속셈이 어떻든간에 통일문제 논의를 위해 남북한 정상회담을 가질 용의를 표명한 것은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남북관계에 있어 하나의 발전적인 자세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위 북한정권 창립 40주년기념식 하루전에 행한 김일성 연설문을 자세히 보면 통일논의에 대한 그들의 기본원칙이나 남쪽에 대한 자세가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김은 미국을 겨냥,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내걸어 미국과 북한간의 3자회담과 평화협정체결을 되풀이했고 한국에 대해서는 외세 배격, 통일을 위해 불가침선언 채택, 주한미군 철수, 단계적인 군축 실현, 그리고 그들의 소위 고려연방제 논의와 실시를 고리로 제기한 것이다.

우리는 김일성의 정상회담용의 표명을 일응 평가하지만 북한이 6천만 한민족의 염원인 조국의 통일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남북의 최고당국자가 하루속히 대좌하는데 동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들이 끝내 전제조건을 고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통일을 저해하고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주게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우리정부는 북한내부에 그만큼 어려움이 많고 국내외적으로 숏한 도전과 시련 속에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7·7선언과 8·15제의의 정신에 입각, 어떻게하든지 정상회담이 성사되도록 보다 넓은 안목과 자세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 남북정상회담의 허실

-북은 조건없이 대화에 나오라-

동아일보(1988. 9. 11)

남북정상회담은 과연 이뤄질 것인가.

북한의 김일성이 북한정권수립기념일인 이른바 「9·9절」에 즈음한 연설에서 전제조건을 붙이면서 노태우대통령이 평양에 온다면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지난 8·15광복절에 노대통령이 남북의 정상이 의제와 장소 시기에 관계없이 만나자는 제의에 대한 간접적인 응답으로 보인다. 그것은 우리측이 오래전부터 제의해온 남북최고위회담에 관해 북한측이 김자신의 입을 통해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듯하다.

더우기 김의 이번 연설에는 종래 북한측이 거의 언급치않던 「남북공존」이란 표현이 있고 정상회담의 의제와 장소를 제시함으로써 나름대로 구체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은 전제조건에서도 과거 상투적으로 주장해온 반공정권의 퇴진, 용공활동의 합법화 그리고 사회민주화 등을 거론하지 않았다. 김일성나름으로는 종전에 비해 전향적 제의를 담은 것으로 보

이게 애쓴 흔적이 보인다.

그렇다고 대남전략의 본질적 변화를 보인 것 같지는 않다. 고려연방제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과 미국간의 평화협정체결, 이에 따른 미군철수와 남북한불가침선언을 채택하자는 전제를 달고 있다. 그가 새로 제시한 남북위원회도 따지고보면 미군철수와 불가침선언을 다루기 위한 기구일뿐 과거의 남북조절위처럼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 상호 불신제거방안을 다루는 기구와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학생회담의 추진과 함께 여전히 남한내의 분열책동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한국정부가 비등하고 있는 통일논의를 수용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으므로 노정권이 굴욕적으로라도 평양을 찾아올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계산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렇게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거나 실패했을 경우 남한의 혁명세력을 부추길 수 있다고도 생각할 것이다.

게다가 김일성으로서는 올림픽불참에 따른 국제적인 비난과 고립감에서 벗어나고 남북대화단절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킬 필요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북한내부의 경제정책실패에 대한 불신을 외부로 돌리는 돌파구가 필요했었는지 모른다.

북한측이 서방측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 절박성에서 이같은 제의가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아무튼 김일성은 남북정상회담을 다목적으로 제의한 것으로 분석되나 우리측으로서는 신중하고 유연하게 대처해야겠다.

북한의 전략이 있는만큼 이쪽의 전략이 없을 수 없다.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그쪽의 조건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회담을 갖겠다는 것은 대화의 원칙을 무시한 억지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을 포함한, 여러 쟁점을 만나서 얘기해 볼 수 있도록 우리 나름으로 유도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우리측의 국내외 상황도 그렇게 불리하지만은 않다. 김일성의 전제조건에서도 사라졌지만 국내 정치의 민주화가 상대의 표적을 잃게 했다. 올림픽을 개최할만큼 경제력과 자신감도 향상됐다.

당장은 아니지만 미군이 시간을 두고 철수한다 해도 그에 상응할만큼 우리의 자위력도 향상되고 있다. 소련과 중공과의 관계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상황은 한국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런면에서 정부는 과거의 정태적 사고에서 대응하지 않기를 바란다. 노대통령이 중간평가에 연결지어 정권적 차원에서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북도 일체조건을 달지말고 「협상」과 「대화」의 자세로 나와야 한다.

#### 4. 북한 반응

북한측은 그들의 정권수립 기념일인 「9·9절」을 하루 앞둔 9월 8일 경축보고대회를 하는 자리에서 김일성이 남북정상회담에 관해 직접 언급하는 반응을 보였다.

우리측의 남북정상회담제의에 대해 계속 침묵을 지키던 김일성 자신이 직접 처음으로 공식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연설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김일성 자신이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공식반응을 보이며 「남북공존」이라는 표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회담』에서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통일국가의 연방정부를 세우거나 그 실현을 위한 <평화통일위원회>같은 것을 창설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평양을 방문하는데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식의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있음이 주목된다.

특히 김일성은 이번 연설을 통해 『조선반도에서 평화의 담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과 북 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여야 하며, 남조선에서 미국군대와 핵무기를 철거시키고 남과 북이 무력을 단계적으로 대폭 줄여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종전의 군사문제 우선해결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처럼 김일성은 고려연방제를 단일의제로 하고 주한미군철수, 남북불가침선언 채택 등을 전제조건으로 한 남북정상회담을 밝히고 있기는 하나, 노태우 대통령이 먼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했고 의제·장소·절차 등을 굳이 따지지 않기로 한 이상, 우리 정부는 김일성의 이번 반응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

김일성의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발언요지는 다음과 같다.

#### 발언요지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중국적인 방도는 바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립하는 것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민족공동의 요구와 이익을 기본으로 하고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통일국가의 가장 합리적 형태임.

우리 나라의 남과 북이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우지 않고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거나 압도당하지 않는 공존의 원칙에서 그 제도를 뜯어고치고 두 자치정부를 연합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하여야 함.

오늘 남조선 인민들은 반파쇼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반미자주화를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민족해방의 올바른 궤도를 따라 나가고 있음.

조선반도에서 평화의 담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미국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과 북 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여야 하며 남조선에서 미국군대와 핵무기를 철거시키고 남과 북이 무력을 단계적으로 대폭 줄여야 함.

남북대화에서는 통일을 위한 근본문제부터 풀어야 함.

통일의 근본전제를 마련하기 위한 정치·군사문제를 회피하고 부차적인 문제를 전면에 들고 나온 것은 내외여론을 기만하고 시간을 끌며 통일을 방해하려는 분열주의적 책동으로서 규탄되어야 함.

남과 북의 최고위급회담에 대하여 말하자면 이것은 일찌기 우리가 발기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명백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무엇보다도 남과 북이 그 누구의 구속이나 보증도 받지 않는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남과 북의 두 제도를 그대로 두는 조건에서 통일국가의 연방정부를 세우거나 그 실현을 위한 「평화통일위원회」를 창설하는 문제가 협의되고 해결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는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우리를 만나러 평양에 찾아오는데 대해서 환영할 것임.

그러나 이러한 근본문제를 독자적으로 협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권능도 없이 나라를 두 개 조선으로 영구히 분열시키기 위한 문제나 논의하려 한다면 누구도 만나러 올 필요가 없음.

문제는 남북최고위급회담이 실현되어 진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건을 성숙시키는데 있으며, 그러자면 남조선당국자들이 외세의존에서 벗어나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전민족적 운동에 합류해 나서야 함.

이번 김일성의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발언은 정권수립 40주년 기념일을 맞아 초청한 외빈앞에서 그들의 평화애호 이미지를 부각시킬 필요성과 북한당국에 대한 중·소의 회담종용 압력을 완화하는 한편, 서울올림픽에 쏠리고 있는 국제적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림과 함께 경제적 곤란에 따른 국내의 불만요인을 외부로 표출시키고, 북한주장에 동조하는 우리 국내 일부세력을 부추기는 등 다방면적인 선전효과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우리측의 「7·7 대통령 특별선언」이 자유우방 뿐만 아니라 중·소·동구권으로부터도 호응을 받는 데다가, 한국과 헝가리의 대사급 상주대표부 개설 합의(9.13)등에 따른 국제적인 유·무형의 압력을 벗어나려는 역제의라고 할 수도 있다.

사실 김일성이 비록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연방제 통일방안만을 협의하자는 한계를 설정하기는 하였으나, 김일성 자신이 직접 남북정상회담 문제를 언급한 것은 최초의 일이기 때문에 내외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에 따라 이흥구 국토통일원장관은 9월 10일 김일성의 남북정상회담 언급과 관련하여 논평을 발표, 『지난 8·15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에서 통일로 향한 남북관계개선의 획기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한데 대해 금번 북한의 최고책임자가 직접 반응을 보여온 것을 주목한다』고 말하고, 『북한측이 정상회담 실현의 조건으로 그들이 종래 주장해 온 일련의 전제조건을 되풀이 한 것은 유감스러우나 일단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측면에 유의하면서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의 실현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IV.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 1. 성립배경

이번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은 김재순 국회의장이 우리 국회를 대표하여 7월 9일 제142회 임시 국회 제20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서울올림픽대회에의 북한참가 촉구결의문」을 담은 서한을 7월 18일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양형섭 의장에게 전달한데서 비롯되었다.

동 결의문의 내용전문은 다음과 같다.

##### 서울올림픽대회에의 북한참가 촉구결의문

대한민국 국회는 전인류의 축제인 제24회 올림픽대회가 161개 국가의 열렬한 지지와 적극적 참가리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와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정착을 갈구하고 희망하는 세계각국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이 역사적 대제전을 민족적 숙원인 통일의 실현이 눈앞에 다가선다는 확고한 신념하에, 서울올림픽대회를 기필코 성공시켜야 한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하면서 북한측의 성의와 호의적 참가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1988년 9월 17일 개최되는 역사적 서울올림픽대회에 북한 선수들이 대거 참가할 것을 희망하면서, 북한당국은 숭고한 올림픽 정신과 취지에 입각하여 또 나아가 민족적 대화해의 기폭제가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 자세로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당국이 온 세계가 남북한의 태도와 관계를 주시하고 있음을 유념하여 서울올림픽대회가 한민족의 동질성과 우수성을 만방에 과시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행사로 승화되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선수들과 동포들이 서울올림픽대회 기간을 중심으로 상당기간동안 남북간을 자유로이 왕래하면서 남한의 어디든지 방문할 수 있는 보장하에 분단의 장벽을 헐어버리는 기회로 이용해 줄 것을 희망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한이 서울올림픽대회를 시발로 계속하여 각계각층 그리고 각분야에 걸친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겨레의 궁극적 소원인 통일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상호간 긍정적이고 전향적 자세로 최대한 노력할 것을 진지하게 제의한다.

1988년 7월 9일

대한민국 국회

이에 대해 북한측은 7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양형섭 의장 명의로 8월중 제1차 「남북국회연석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하는 대남편지와 함께 「남북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초안을 동봉해 왔다.

북한측의 서한요지는 다음과 같다.

서한 요지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교류나 교역을 하여도 남북간은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언제 가도 화목한 민족공동체로 될 수 없음.

남북연석회의가 긴장완화를 위한 합리적인 협상마당으로 생각하지만 동 회의가 소집되기 이전이라도 우리측이 제의한 바 있는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토의할 것을 예견한 남북국회회담이 가장 적절한 회담이 된다고 봄.

남북국회회담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예비접촉을 거침이 없이 우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남측 국회의원들의 연석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 [토의내용]

남과 북의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문제

남측이 제기하는 긴장상태완화 및 평화보장에 유익한 문제

#### [운영방식]

쌍방 국회의장들이 공동의장

평양개최시는 최고인민회의 의장, 서울개최시는 남측 국회의장이 사회

회의에서의 토론은 상정된 문제에 대하여 모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진행

의결방법은 북측 대의원수를 남측 국회의원수와 대등하게 하고 투표·거수방법을 배합,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 [장소·시기]

평양과 서울에서 순번제 개최

8월중 제1차회의를 평양에서 개최

국회연석회의 소집은 남북의 각당·각과·각계각층간의 다각적인 접촉과 대화의 길을 열어 놓게 될 것이며, 중단된 적십자회담·경제회담을 재개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임.

#### [남북불가침 공동선언 초안]

- ①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불사용, 무력으로 상대방 불침해
- ②완전한 통일시까지 상호 의견상이와 분쟁문제들을 대화·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
- ③상대방에 대한 외국의 침략이나 무장간섭행위에 불가담·비협조
- ④불가침의 경계선은 1953.7.27 군사휴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으로 함.
- ⑤상호 무력의 단계적 축소 및 이와 병행하여 외군·핵무기의 단계적 철거
- ⑥현 비무장지대를 완충지대로 하며, 중립국감시군을 두어 무력 분쟁방지
- ⑦남북불가침선언은 각기 타국과 체결한 조약·협정에 제약받지 않음.

아울러 7월 26일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양형섭 의장은 김재순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대남 서한을 통해 「남북국회연석회의」에서 서울올림픽에의 북한 초청문제와 올림픽 공동주최안을 긴급의제로서 동시에 토의하자고 제의해왔다.

이러한 북한측의 제의에 대해 김재순국회의장은 8월 1일 대북서한을 통해 「남북국회회담」을 8월 중에 성사시키기 위한 준비접촉을 갖자고 제의하였다.

동 서한에서 김재순 의장은 준비접촉을 위해 15명의 우리측 국회의원들을 8월 둘째주중

(8.8-13) 북한측이 원하는 일시에 판문점으로 내보내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의 대북서한 전문은 다음과 같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양형섭 귀하

본인은 북한선수들의 서울올림픽 참가를 촉구한 7월 18일자 본인의 서한 및 이에 대한 귀하의 7월 26일자 서한과 남북국회회담에 관한 7월 20일자 귀하의 서한에 유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귀하에게 제의합니다. 빠른 시일안에 귀하로부터 긍정적인 회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인은 귀하가 7월 20일자 서한에서 언급하고 있는 남북국회회담을 8월중에 성사시키기 위한 준비접촉을 위하여 15명의 우리측 국회의원들을 8월 둘째주중 귀측이 원하는 일시에 판문점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안에 귀측이 원하는 일시를 알려주기 바라며 아울러 귀측도 같은 수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을 그 일시에 판문점으로 보내주기 바랍니다.

1988년 8월 1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김재순

이처럼 우리측이 남북국회회담 실현에 적극적인 호응을 나타내 보이자, 북한측은 8월 9일 제3차 서한을 통해 3-5명의 국회의원을 대표로 「남북국회연석회의」 준비를 위한 실무접촉을 8월 17일 11시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갖자고 제의해 왔다.

북측 제3차 서한요지

남측이 말하는 「남북국회회담」이 제한된 몇사람의 대표회담을 염두에 둔 것이며 다른 정당·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을 배제하는 것이라면 우리로서는 그것을 현실에 부합되는 적중한 회담방식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의제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남측이 언급이 없는 사실로 보아 우리측이 두 차례의 편지에서 제기한 의제문제에 대하여 특별히 의견이 없는 것으로 밖에 달리는 해석할 수 없다고 간주함.

우리는 국회연석회의를 소집하려는 일념으로부터 남측이 남북국회들 사이에 회담을 가지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한 사실에 유의하고 다음과 같이 남측과의 연석회의 준비를 위한 상봉에 나가려고 함.

일 시 : 1988년 8월 17일 오전11시

장 소 :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

대표수 : 3-5명의 국회의원

의제

▲남북국회연석회의 제1차 회의를 평양 또는 서울에서 8월 26일부터 4박 5일간 개최할데 대한 문제

▲이와 관련한 실무절차(연석회의 장소, 일시, 관문점 통과절차, 신변안전, 편의보장 등) 문제

실무절차 문제를 토의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며 단 한번의 상봉으로도 가능하다고 인정함.

우리측은 8월 12일 대북서한을 통해 회담날짜를 8월 19일로 수정 제의함과 동시에 이어서 8월 17일 대북전통문을 통해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에 파견할 남측 명단을 북측에 통보하였고, 북한측도 8월 18일 대남통지문을 통해 북측 대표단 명단을 통보해 오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지난 1985년 9월 제2차 「국회회담 예비접촉」 이후 2년 11개월만에 남북국회간의 공식적인 대좌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 준비접촉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측
수석대표	박준규(민주정의당)	전금철(조선노동당)
대 표	이한동(민주정의당)	안병수(조선노동당)
대 표	김봉호(평화민주당)	리동철(조선노동당)
대 표	박관용(통일민주당)	리주웅(조선사회민주당)
대 표	김용환(신민주공화당)	박문찬(천도교청우당)



## 2. 남북 쌍방의 기본입장

### 가. 우리측

남북 쌍방의 국회가 쌍방 주민의 의사를 수검하고 대변한다는 대의정치의 차원에서 남북한의 현안문제와 민족장래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며, 쌍방 국회가 당국간에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한다면 통일문제 해결을 앞당기는 전기로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국회회담은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특히 우리측은 노태우 대통령이 지난 7월 7일 발표한 특별선언의 기본정신을 살려 지난 40여년간 경제·대결·적대관계로 이어져 온 남북한 관계를 과감히 청산하고, 북한과도 「선의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지금까지 막혀 있는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기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러한 기본입장과 아울러 인류의 대제전인 서울올림픽대회에 북한측이 참가함으로써 민족화해와 통일의 전기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가급적 북한측 주장을 수용하고 양보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우리측은 국회사담을 반드시 성공시킴으로써 겨레앞에 희망을 주어야 한다는 신념에서 쌍방의 입장을 공히 반영하면서 최대공약수를 찾아보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였으며, 생산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각종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유연하고 신축성있게 대처했다.

특히 제24차 서울올림픽대회의 최종엔트리 마감이 9월 2일로 박두하였고, 문화올림픽이 시작된데다 각국의 선수·임원들이 속속 방한하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시기적인 절박성을 고려하여, 올림픽 문제만을 단일의제로 하여 8월 29일 평양에서 제1차 남북국회사담을 갖자고 제의하기까지도 하였다.

### 나. 북한측

북한측이 남북국회연석회의를 제의하고 준비접촉에 호응해 나선 것은 주변정세 특히 중·소의 남북대화 재개 촉구에 부응하는 한편, 우리 내부정세와 관련하여 4당체제하의 우리 국회가 대북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탐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하겠다.

아울러 「불가침선언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함으로써 국내외에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부각시킴과 함께 남한내의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지하고 그들의 올림픽 불참명분을 확보하려는데 기본목표를 두었다고 하겠다.

그간 북한측이 우리측에 보낸 3차례의 서한과 준비접촉 과정에서 나타난 주장을 중심으로 남북국회사담에 대한 북한측의 입장을 살펴본다면, 회담형식에 있어서 우리측 국회의원과 북한측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연석회의를 주장하면서도 정당·사회단체대표, 각계인사를 쌍방 각기 50명씩 참여시키자고 주장함으로써 그들이 종래 주장해 온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고수하려는 경색된 태도를 나타내 보였다.

제4차접촉에서 일응 정당·사회단체 대표 등의 참가는 유보하는 듯이 수정 제의해 왔지만, 이 문제를 본회담에서 다루자고 함으로써 그들이 노리는 형태의 연석회의 방식을 사실상 고수했다.

특히 북한측은 제3차 서한에서 『귀측이 말하는 남북국회사담이 제한된 몇사람의 대표회담을 염두에 둔 것이며, 다른 정당·단체대표들과 각계인사들을 배제하는 것이라면 현실에 부합되는 적중한 회담방식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비난하였다.

더군다나 제2차 준비접촉에서는 남북의 국회의원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참가하는 회의가 「최소한의 연석회의」라고 주장함으로써 우리측의 「국회대표회담」에 대해 강한 반대를 나타내 보였다.

그런데 북한측이 1948년이래 주장해 오고 있는 선례에 비추어 볼 때, 연석회의방식은 남북한간의 수다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박수를 치고 만세를 불러 전체의사를 결정하자는 다중집회 형식이라 하겠다.

지난 1985년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에서도 북한측은 남북국회회담 형식을 연석회의 형식과 대표회의(쌍무적 회담) 형식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연석회의는 북한대표 100명 정도가 우리 국회 본 회의에 연석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처럼 북측이 제기하는 연석회의는 기본적으로 연공통일전선을 겨냥하여 종래부터 주장해 온 「남북정치협상회의」(1973.4), 「대민족회의」(1973.6), 「남북정치인 연합회의」(1982.2) 등의 군중집회방식에 불과한 것이며, 우리측의 통일논의와 관련된 국론분열과 정치·사회적 혼란을 조성하기 위한 위장평화공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측은 국민의 여론을 대표하고 있는 쌍방 국회간의 쌍무적 회담의 개최는 외면한 채, 자기들의 목소리만을 흉내내는 좌경 친북세력들이 참가한 다중집회를 통해 다수결 방식으로 그들 의도를 관철시키자는 기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측은 이번 준비접촉의 의제논의 과정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올림픽 문제보다는 「남북 불가침선언」의 채택에 중점을 둬으로써 기본적으로 그들이 초점을 두고 있는 「군사문제 우선 해결」 원칙을 고수하였다.

특히 북한측은 의제문제와 관련, 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협력문제는 남북연석회의가 열려 불가침공동선언문제와 올림픽문제가 토의될 경우에 한하여 논의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다.

또한 북한측은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초안」을 통해 외국 군대 및 핵무기의 철수, 군비축소의 관철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측이 불가침협정의 체결권한은 쌍방의 정부당국에 있음을 상기시키고 남북정부당국간에 「불가침협정체결을 권고하는 문제」로 하자고 제의한데 대해서도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북한측이 당국간에 「불가침협정」이 체결되는 것은 반대하면서도 국회연석회의를 통해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국회 현실을 최대한 이용하여 국회와 정부당국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한편, 주한미군철수 등의 정치선동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북한측이 과거 관례와는 달리 공개회의만을 고집한 데에서도 그 의도가 잘 드러나고 있다.

북한측은 「남북국회연석회의」를 제의함과 동시에 「중대한 평화제안」이라는 미명하에 7월21일 미국측에 「미·북한간 국회회담」을 제의했는데, 이는 그들이 노리고 있는 남·북한, 미·북한간 2원적 회담방식의 「3자회담」을 실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구실로 주한미군 및 핵무기를 철수시키려는데 주된 목표를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측이 미의회에 「미·북한간 국회회담」을 제의한 서한의 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미·북한 국회회담 제의요지

[토의의제]

-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데서 쌍방 국회가 협력할 수 있는 대책적 문제

- 조·미관계를 개선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서 상호 관심사로 되는 제반문제

[대표단]

- 부의장급을 단장으로 하여 7-9명 정도

[실무접촉]

- 필요시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성원들로 회담준비관련 실무접촉

[장소]

- 평양 또는 뉴욕, 제3국도 무방

[일시]

- 빠르면 빠를수록 좋음

### 3. 회담진행 경과

#### 가. 제1차 준비접촉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제1차 준비접촉은 쌍방 각기 5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1988년 8월 19일(금)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45분까지 판문점 북측지역내에 있는 「통일각」에서 공개리에 진행되었다.

북측 전금철 단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그들이 그동안 우리측에 보낸 서한속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되풀이 강조한 데 이어, 남북국회회담의 형식을 정당·사회단체 대표, 각계인사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로, 의제는 「①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문제 ②제24차 올림픽문제와 그 밖에 긴장상태의 완화를 비롯한 남측이 제기하는 문제」로 하자고 제의하면서 북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남북국회연석회의 소집 및 운영과 관련한 합의서 초안」을 제시, 이를 문항별로 토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북한측 기조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북측 기조발언 요지

북과 남은 의연히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방대한 무력이 팽팽하게 맞서 있으며, 매우 불안정한 오늘의 정세는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전쟁의 불길이 터질 수 있는 극히 위험한 한계선에 이르고 있음.

이제 한달 정도로 눈앞에 다가온 올림픽 경기문제도 분열된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한 스포츠 문제가 아니라 통일의 전도와 관련되는 심각한 정치문제로서 시급히 민족공동의 이익과 통일의 염원에 맞게 해결되어야 함.

실로 불가침문제나 올림픽문제는 통일도상에 나서는 초미의 민족중대사이며 일순의 유예도 허용치 않는 긴절한 과제라고 말할 수 있겠음.

거래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엄혹한 시각에 북과 남의 정치인들은 대결과 긴장과 무력충돌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화해와 신뢰,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출발을 해야 할 것임.

남북국회연석회의에서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되고 올림픽문제가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해결되면 그것은 의심할 바 없이 민족적 화해와 단합, 평화통일을 위한 획기적인 국면을 열어놓게 되리라고 생각함.

우리는 이미 주고 받은 편지들과 정당들의 정책발표를 통하여 남북국회회담의 형식 등에 대하여 원칙상 상통한 입장과 견해의 일치로 보았다고 인정하고 있음.

이런 조건에서 오늘의 상봉에서 협의·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제1차 남북국회연석회의 소집과 그 운영을 위한 실무절차상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음.

제1차 남북국회연석회의 소집을 위한 실무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의 8월 9일부 편지에서 기본적으로 다 밝힌 바 있음.

그러므로 나는 오늘의 상봉에서는 제1차 남북국회연석회의 소집과 그 운영과 관련한 합의서 초안을 내놓고 협의를 진행하였으면 함.

<남북국회연석회의 소집 및 운영과 관련한 합의서(초안)>

1. 연석회의 의제

연석회의 의제는 남북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문제, 제24차 올림픽 경기대회 문제로 하며 그밖에 나라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남측이 제기하는 문제도 의제로 함.

2. 연석회의 장소

연석회의는 평양과 서울에서 번갈아 하며 제1차 연석회의는 평양에서 개최함.

3. 참가대상과 인원

연석회의에는 쌍방 국회의원 전원과 쌍방에서 각각 국회의원이 없는 정당, 단체들의 대표와 각 계인사 50명씩 참가함.

4. 제1차 연석회의 날짜 및 회의기간

제1차 연석회의는 1988년 8월 26일에 하며, 회의기간은 4박5일로 함.

5. 판문점 군사분계선 통과절차

①쌍방은 각각 연석회의에 참가할 국회의원들과 다른 정당·단체 대표 및 각계인사들, 수원 및 기자들의 성명, 성별, 직위를 밝히고 사진이 첨가된 명단을 매차 상대측 지역에 들어오기 3일전에 상대측에 넘겨 줌.

②연석회의와 관련하여 상대측 지역에 가는 인원들은 자기측 국회나 국회의장이 발급한 신임장 또는 신분증명서를 휴대함.

③쌍방 인원들의 군사분계선 통과지점은 판문점 군사분계선 상에 있는 인원접수측의 관할 건물로 함.

④쌍방 왕래자들은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선 때부터 자기측 지역에 돌아올 때까지 상대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름.

6. 신변안전보장

①쌍방은 상대측 인원들이 자기측 지역에 체류하는 기간 그들의 신변안전과 불가침권을 책임적으로 보장함.

②신변안전과 불가침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기관은 공식성명을 발표하고 성명 문본을 상대측에 넘겨줌.

7. 편의보장

연석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에 체류하는 인원들의 교통 및 통신 수단과 숙식을 비롯한 일체 편의는 주최측에서 보장함.

8. 국회연석회의 운영절차

①연석회의는 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비공개로도 할 수 있음.

②연석회의 참가자들에 대한 자격심사는 쌍방에서 각각 3명으로 구성되는 공동자격심사위원회

에서 함.

③연석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쌍방에서 각각 5명으로 구성되는 공동운영위원회를 조직함.

④회의집행은 남과북의 국회의장들을 공동의장으로하여 평양에서 회의를 할 때는 북측이, 서울에서 회의를 할 때는 남측이 담당함.

⑤의정에 대한 보고 또는 의안은 남과 북에서 각각 제기할 수 있으며, 쌍방 국회에 망라된 정당 별로도 제기할 수 있음.

⑥토론은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모든 회의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하되 토론자수는 남과 북에서 동수로 함.

⑦토의된 의안에 대한 가결은 거수 또는 투표의 방법으로 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함.

⑧의결에 참가하는 국회의원수는 남과 북에서 동수로 하며 회의 의장은 표결에 참가하지 않음.

⑨표결결과를 계산하기 위하여 남과 북에서 각각 5명씩으로 공동계산위원회를 구성함.

9. 회의기록은 녹음과 녹화, 속기 등 각기 편리한대로 하며 회의 주최측은 상대측에 필요한 녹음 증계선을 보장함.

10. 이밖에 제기되는 문제들은 회의개막전에 쌍방실무자들 사이에서 협의 결정함.

이어서 우리측의 박준규 수석대표는 기초발언을 통해 그간 남북왕래서한의 문구를 구체적으로 열거, 제시하면서 본회담의 형식·의제·대표단 구성·본회담 일자 및 장소·실무절차문제 등의 체계적인 토의를 주장하였다.

우리측 수석대표의 기초발언문은 다음과 같다.

#### <우리측 기초발언>

최고인민회의 대표여러분!

나는 오늘 남과 북의 국회의원들이 오랜만에 자리를 함께 하여 새롭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대표여러분에게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대표단 이름으로 뜨거운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남북정치인들의 오늘 이 만남은 지난 1985년 9월 25일 남북국회회담 제2차 예비접촉 이후 처음으로서 실로 우리 모두가 깊은 감회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귀측도 아시다시피 올해는 우리 조국이 광복된지 마흔세돌이 되며, 남과 북의 정부가 수립된지도 마흔돌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민족은 온갖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면서 정신적·물질적 성장을 이룩하여 마침내는 민족자존을 굳건히 세우며 평화통일로 매진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단절과 대결의 비정상적이고 불행한 상태를 아직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개혁과 개방의 국제적 추세 속에서 민족문제에 대한 새로운 발상과 인식의 대전환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정치인들이 자리를 함께 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대화를 갖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늦기전에 남북간에 누적된 상호불신의 대결과 그러한 상호불신의 관계를 과감히 청산하고 같은 피를 나눈 하나의 동포라는 민족공동체 의식아래 민족전체의 화해와 단합, 번영과 통일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표여러분!

그동안의 남북관계 상황을 되돌아 볼 때, 나는 오늘 우리들의 이 만남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쌍방이 다 함께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잘 참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을 해 온 결실로 우리가 만났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전 인류의 평화와 우정이 담긴 제전인 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가 이 땅에서 열리게 된 역사적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기고 이것을 남북화해와 통일축진의 유리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확신 아래에서 지난 7월9일 귀측 선수들의 올림픽대회 참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 이를 귀측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측은 귀측이 보내 온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도 국회내의 각 정당대표들이 한데 모여서 진지한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귀측의 주장내용에 몇가지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남북의 정치인들이 만나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 그 자체가 지금의 막혀있는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여는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귀측의 제의에 기꺼이 호응한 것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새로 시작되는 남북국회회담에서 민족의 당면과제와 장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개선·해결해 나가는데 응분의 역할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무엇보다 쌍방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대변하는 입장에서 서 있기 때문에 쌍방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이를 구현시키는 방향에서 남북국회회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온 겨레는 세계적 개방화 추세와 더불어 남북간에도 서로 문을 열고 교류·협력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민족번영과 평화통일로 나아갈 것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겨레의 염원과 기대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고 남북국회회담이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또한 쌍방은 모두가 국회의원 또는 대의원이라고 하는 본분에 알맞도록 남북국회회담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북 사이에는 국회의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정부당국이 해야 할 일이 있으며 각 사회단체와 개인이 할 수 있는 또 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운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신중히 검토하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간 남북국회간의 편지를 통해 서로가 다같이 남북국회회담 개최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 것을 크게 기쁘게 마음에 두었습니다. 오늘 이 접촉에서는 남북국회회담의 형식, 대표단 구성, 의제, 회담운영, 회담일시 및 장소, 그리고 기타 실무절차문제를 협의·결정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 나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민족과 역사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과 책임을 통감하고 남북국회회담을 반드시 성공시킴으로써 겨레앞에 희망을 안겨주어야 한다는 신념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 측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남북국회회담의 형식은 대표회담으로 한다.

둘째, 남북국회회담의 대표단은 쌍방 각기 20명의 대표와 40명의 지원인원 및 50명의 취재기자로 구성하며, 수석대표는 의장이 지명하는 중진의원으로 한다.

셋째, 남북국회회담의 의제는 다음의 다섯가지로 한다.

- ①북측 선수들의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참가 문제
- ②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문제
- ③남북당국간의 불가침협정체결을 권고하는 문제
- ④남북적십자회담, 남북경제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문제
- ⑤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권고하는 문제

네째, 남북국회회담의 합의사항은 공동합의문으로 채택하여 발표한다. 회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쌍방 5명의 대표로 간사회의, 귀측에서 말하는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다섯째, 제1차 남북국회회담은 8월중 평양에서, 제2차 회담은 10월중 서울에서 개최한다.

여섯째, 상대측지역 체류기간은 3박4일로 한다.

일곱째, 남북왕래절차, 신변안전보장, 관문점 통과절차, 체류 및 회담일정, 표지, 장비 및 소지품, 교통·통신 및 연락, 회담장시설, 회의기록, 회의공개여부, 회담진행방식, 회담장의 활동, 각종편의제공 및 기타 제반 실무절차문제 등에 대해서는 과거 남북왕래의 선례를 준용하되 이에 따른 구체적 문제는 쌍방에서 실무대표 1명씩을 선정, 협의·결정토록 한다.

나는 이상과 같은 우리측 제안이 남북국회회담을 원만히 운영·타결되기를 바라는 내외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귀측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측 제안내용에 대한 몇가지 추가설명의 말씀을 드리기를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남북국회회담의 형식에 관해 우리로서는 대표회담이 합리적이고 적합한 회담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회담은 우선 회담운영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985년의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시에 쌍방간에 이미 합의를 보았던 회담형식이며 또한 그동안 남북간에 있었던 모든 회담들도 쌍무회담으로 진행되어온 선례와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남북국회회담은 이미 쌍방이 합의한 사항을 많은 인원이 모여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올림픽참가를 비롯하여 남북간에 존재하는 수다한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양측이 진지한 태도로 협의·타협하는 모임이며, 이를 위하여 대표회담의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우리로서는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귀측이 편지를 통해 제기한 남북국회회담에 정당·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 인사들을 참가시키는 문제에 관해서는 국회회담의 성격상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5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쌍방 주민의 대표인 동시에 각 정당의 대표인 만큼 여기에 정당·사회단체 대표 및 개별인사를 별도로 참석시킬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국회는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유일한 대의기관입니다.

이러한 국회간의 회담에 더 무슨 정당이나 단체의 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다음은 의제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측이 귀측 선수들의 올림픽대회 참가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제안한 것은 지난 7월9일 우리측 국회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서울올림픽대회가 민족적 화해와 협력의 일대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인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는 올림픽사상 최대 규모인 161개국의 회원국들이 참가하여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인류화해의 대제전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개막일을 일개월도 남겨놓지 않은 지금까지 같은 민족인 귀측 선수단이 아직 참가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측은 귀측 선수단의 올림픽대회 참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성의를 기울여 온 바 있으며, 「로잔느」 남북체육회담에서는 몇 개 경기종목의 북한지역 개최 방안까지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볼 때, 서울올림픽대회의 최종 엔트리 마감일이 9월2일로 박두해 있고 문화올림픽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이러한 방안마저도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 쌍방이 제24회 올림픽대회를 계기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귀측 선수들이 우리측 선수들과 함께 서울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데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만일 그 밖에 무슨 방도가 있는지 제안해 주시면 우리는 기꺼이 들을 용의가 있습니다.

조국의 분단현실이란 아픔에 시달리는 우리 민족이 올림픽마저 서울과 평양으로 나누어 버린다면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기회에 남북이 서울에 모여 함께 올림픽을 통일로 향한 민족의 제전으로 만들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선수들이 개폐회식 입장시 오륜기를 앞세우고 각기 자기측 국기를 들고 함께 대열을 이루면서 행진하게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민족의 일체성을 만방에 과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측은 올림픽 개막직전까지 귀측에 올림픽참가의 문호를 개방해 놓을 것이며, 귀측이 참가의사를 밝혀올 경우 동포애로 따뜻하게 환영하고 대회 전기간을 통해 최대한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측은 귀측 선수단의 올림픽참가에 대비하여 선수단 입장 및 시상시에 필요한 귀측의 국기와 국가는 물론 귀측 선수단 및 기자들을 위한 숙소를 선수촌, 기자촌 및 호텔 등에 확보해 놓는 등 모든 준비를 다해 놓고 있습니다.

남북국회회담에서 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은 민족동질성 회복과 공동번영의 차원에서는 물론 남북간의 긴장의 근원이 되고 있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절실한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남북 사이에 뿌리깊은 불신과 오해가 있고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우리 민족이 평화롭게 살 수 없으며 평화통일의 길을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은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긴장을 해소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며 사회·문화·경제분야에서 공동체를 형성, 민족적 유대감을 강화함으로써 통일의 기틀을 굳건히 다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남북간에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들의 교류가 적극 추진되어야 하며, 해외동포들의 남북 자유왕래를 위한 문호가 개방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계적 규모로 벌어지고 있는 발전경쟁속에서 우리 민족이 선진민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

고 남북 모든 동포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교역과 경제협력을 통해 상부상조하면서 통일로 나아가는 길을 개척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사회제도가 다른 나라 사이에도 경제협력은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자 무역대표부들을 두고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남과 북도 서울·평양에 무역대표부를 설치하고 민족내부의 경제협력 시대를 열어나가야 하는 바, 우리 국회가 정부당국에 권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중단된 남북경제회담의 재개에 응당 관심을 돌려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국회의원들이 중단된 적십자회담의 재개를 촉구하는데도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이산가족의 재회를 바라는 겨레의 여망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일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혈육상봉의 날을 손꼽아 헤아리던 연로한 이산가족들이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피맺힌 한을 풀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해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은 한시도 국회의원으로서는 지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나라사이에도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데 유독 우리 동포만이 분단의 장벽을 이유로 끊어진 혈맥을 잇지 못하고 상호간에 안부편지 한 장 주고 받을 수 없는 오늘의 이 비극적인 상황은 시급히 우리 손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의 재개를 우리 국회의원들이 적극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남북국회회담 의제로서 남북당국간의 불가침협정체결을 권고하는 문제를 제안한 것은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신뢰조성과 함께 긴장완화와 전쟁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하자는데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선언보다는 협정이 더 법적구속력이 강합니다. 협정이 더 안심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귀측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14년전인 1974년부터 남북당국간의 불가침협정체결을 제의해 왔습니다.

긴장완화와 전쟁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귀측당국에게 협력을 촉구해 왔습니다.

1974년 1월 18일의 남북불가침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제의, 1976년 5월 13일 외무부장관의 남북불가침협정 체결 제의, 1982년 1월 22일의 남북한 기본관계 잠정협정체결 제의, 동년 2월 1일의 20개 시범실천사업 제의, 1987년 8월 3일의 남북외무장관회담 개최 및 남북불가침협정 체결문제 토의 제의 등이 그 사례들이며 금년 들어서 보다 주목할 것은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10일 제3차 유엔 군축특별총회에서 적대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남북불가침협정의 체결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지난 7월 20일 귀측 최고인민회의가 우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남북당국 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여야 할 필요성과 절박성을 인정』한 데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국회회담에서 남북불가침에 관한 필요성과 의의를 확인하고 진지한 토의를 거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들을 쌍방 당국에 맡겨 협정을 체결토록 촉구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귀측의 의향에도 맞고 쌍방 국회의 권능과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불가침협정체결 문제를 포함하여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현안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이 조속히 개최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북의 정상이 아무런 전제나 조건없이 서로 만나 현안문제와 민족의 장래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한다면 남북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의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남북의 정상은, 남북 두 최고당국자는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회담을 개최해야 할 민족적인 의무를 민족앞에 지고 있습니다.

대표여러분!

이제 온 겨레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남북국회회담이 빨리 실현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쌍방대표들의 노력과 협력 여하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입장에 서서 상호 이해와 호양의 정신을 발휘하여 우리에게 부흥된 책임과 사명을 다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이 준비접촉의 성과가 국회회담의 조속한 성사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상과 같은 우리측의 입장에 대해 귀측의 긍정적인 이해성 있는 호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쌍방 수석대표들의 기초발언을 보면, 제1차 남북국회회담을 8월중 평양에서 개최한다는 데는 일치하고 있으나, 회담형식문제와 의제문제 등에 있어서는 중대한 입장차이를 드러내었다.

북측은 남북간에 교환한 편지에서 쌍방이 국회회담의 형식을 연석회의로 하는데 의견일치를 본 것처럼 일방적으로 단정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한 기초위에서 국회회담의 운영과 절차문제만을 다루자고 했다.

우리측은 지난 8월 12일 북측에 보낸 편지에서 쌍방이 국회간 회담을 가지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몇가지 문제에 의견 차이가 있음을 환기시키면서, 쌍방간에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 회담의 형식, 의제, 대표단구성, 회담일시 및 장소 그리고 기타 실무절차문제를 준비접촉에서 협의·해결할 것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결국 우리측의 주장대로 쌍방은 본회담의 형식과 의제를 중심으로 토의를 계속함으로써 당초 예비접촉 자체를 거부했던 북한측 논리를 스스로 부정할 셈이 되었다.

그러나 쌍방은 서로의 기본입장을 개진하는 데만 그침으로써 아무런 진전이 없이 제1차 접촉을 끝내고 말았다.

본회담의 형식에 있어서 우리측은 북측이 제기한 정당·사회단체 대표, 각계인사들의 참가문제는 국회회담의 성격상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의제토의의 효율성과 생산적인 결과의 창출, 대의정치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대표회담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의제에 있어서도 우리측은 북측이 제기한 남북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문제는 국회의 성격상 쌍방 당국에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북한측은 그간의 대남서한과 이번 「합의서 초안」에서 제시한 연석회의와 불가침선언 공동발표의 선에서 촌보의 양보를 하지 않았다.

우리측은 남북국회회담에서 해결해야 할 의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으로 보아 8월 20일 오전 11시에 제2차 준비접촉을 속개하자고 제의하였으며, 북한측도 이에 동의하였다.

## 나. 제2차 준비접촉

제2차 준비접촉은 1988년 8월 20일 (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5분까지 판문점 우리측 지역 내에 있는 「평화의 집」에서 진행되었다.

2차 접촉에서는 쌍방간에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는 남북국회회담의 형식과 의제문제에 관해 집중적인 논의를 하였다.

우리측은 첫발언을 통해 북한측의 주장까지도 대승적으로 수용하여 회담형식·의제에 대한 절충안을 제시하였다.

회담의 형식에 관해 우리측은 남북간에 존재하는 수다하고 복잡한 문제를 심도있게 토의하고 실질적으로 협의·해결하기 위해 대의정치의 기본원리에 부합되는 대표회담으로 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남북국회대표회담이 개최되어 쌍방간에 합의사항이 생산되면 각기 자기측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수도 있고 또한 필요하다면 우리측 국회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합동회의」를 열어 합의사항을 재확인하는 의식을 할 수도 있다는 의견까지 제시했다.

또한 회담의제에 대해서 우리측은 북한측의 주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제시했다.

### ① 제24회 올림픽경기대회 문제

②남북간 인적·물적교류와 협력 문제

③남북불가침 문제

④남북적십자회담, 남북경제회담 재개 문제

⑤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

우리측의 새로운 의제안은 우리측 주장뿐만 아니라 북측 의견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서 특히 불가침과 관련하여 「남북불가침문제」로 하자는 것은 쌍방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는 데 그 참뜻이 있었다고 하겠다.

특히 우리측은 올림픽 문제가 남북국회회담에서 쌍방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초미의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남북국회회담이 이달안에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지적하였다.

이에 반해 북한측은 우리측이 제시한 절충안에 대해 『전혀 문제해결 방도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서 경직된 입장을 보였으며, 불가침 공동선언문제와 올림픽 문제가 초미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국회연석회의에서 이 문제를 동시에 토의하자는 1차접촉에서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 했다.

회담형식에서 북한측은 남측의 국회의원과 북측의 대의원을 모두 합한 954명 전원이 참석하는 남북연석회의가 「최소한의 연석회의」라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남북국회연석회의에 정당·사회단체·개별인사를 참석시킬 것도 계속 요구했다.

의제문제에서 북한측은 회담이 끝날 무렵 ①불가침공동선언, ②제24회 올림픽문제(우리측이 초청하는 문제와 공동주최문제), ③남북간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문제로 하자고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교류·협력문제는 남북연석회의가 열려 불가침문제와 올림픽문제가 토의될 경우에 한해서 논의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다.

우리측은 불가침과 관련한 의제를 「불가침협정체결과 불가침공동선언 문제의 건」으로 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북한측은 우리측이 주장해 온 불가침협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이것마저 거부했다.

우리측은 올림픽 개막식이 박두한 만큼 「제24회 올림픽문제」만이라도 시급히 협의·해결하기 위한 「남북국회회담」을 8월 29일 평양에서 개최하여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자는 긴급제의를 했으나 북측은 이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면서 연석회의 개최주장만을 고집함으로써 쌍방은 어떠한 합의점도 찾지 못하였다.

북측은 회담도중에 돌연 『KBS의 회담결렬에 대한 보도문제』(TV녹화장면)를 트집잡아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가 하면, 준비접촉 자체를 결렬상태로까지 이끌어 가다가 마지막에야 제3차 준비접촉에 동의하였다.

제3차 준비접촉은 8월 22일(월) 오전 11시에 판문점 북측 지역내에 있는 통일각에서 개최기로 합의하였다.

#### 다. 제3차 준비접촉

제3차 준비접촉은 1988년 8월 22일(월) 오전11시부터 오후 1시 25분까지 판문점 북측 지역내에 있는 「통일각」에서 진행되었다.

제3차 접촉에서도 남북 쌍방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회담의 형식과 의제문제에 대해서 의견점

근을 이루지 못했다.

북측은 1·2차 접촉시와는 달리 「연석회의」의 선전에 치중하는 회의운영의 양태를 보임과 함께 우리측의 올림픽 문제 제기를 견제하려고 하였다.

우리측은 회담형식에 있어서 지난 제2차 접촉에서의 절충안에 대해 회담에서 실질적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효율성과 북한측이 내놓은 연석회의 주장까지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서 회담형식에 관한 견해차이를 좁히려는 우리측의 성의 표시였음을 강조했다.

또한 의제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제2차 접촉에서 두차례에 걸쳐 북측에 의제 조정안을 제시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는 의제에 대한 견해차이에서 오는 난관을 타개하고, 이번 준비접촉을 하루속히 매듭지으려는 취지에서였음을 지적하고 남북국회회담이 이달 안에 열려서

①제24회 올림픽경기대회 문제

②남북 적십자회담, 남북 경제회담 재개문제를 포함한 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문제

③남북불가침 문제

④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

등 당면과제들이 폭넓게 협의·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우리측이 긴급제의로서 제24회 올림픽문제만이라도 시급히 협의·해결하기 위한 남북국회회담을 8월 29일 평양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한 것은 불과 며칠 후로 다가온 제24회 서울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이 함께 참가함으로써 민족화합의 일대 진기를 마련하려는데 그 참뜻이 있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 북한측은 회담형식을 남북연석회의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였으며, 회담 의제에 있어서도 불가침과 관련한 의제는 우리측이 조정·제시한 「불가침문제」나 「불가침협정체결과 불가침공동선언문제」로 하는데 동의할 수 없으며 우리측이 제의한 「불가침협정체결을 권고하는 문제」는 철회하고 북측이 주장해 온 「불가침공동선언 채택」만을 의제로 해야한다고 고집했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하기 위해 8월중에 남북국회회담을 개최하자는 우리측의 긴급제에 대해 북한측은 이번 접촉이 올림픽 문제와 불가침문제를 다같이 묶어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북측은 우리측의 올림픽문제를 긴급의제로 하는 국회회담개최 제의가 불가침공동선언문제를 퇴색시킬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의제문제 토의는 가급적 회피한 채, 「연석회의」에 대한 선전위주로 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사실상 올림픽대회 이전의 국회회담 본회담 성사에는 뜻이 없음을 나타내 보였다.

다음 접촉일자에 대해 우리측은 시기적으로 올림픽 문제의 논의를 더이상 뒤로 미룰 수 없다는 현실론과 공개회의가 선전위주로 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쌍방 수석대표간 단독접촉을 먼저 가진후 제반문제점을 결정하자고 제의했다.

우리측의 단독접촉 제의에 대해 북한측은 『돌아가서 연락하겠다』고 말하고 서둘러 회의를 끝냈다.

#### 라. 쌍방 수석대표간 단독접촉

우리측이 제3차 접촉시 쌍방 수석대표간의 단독접촉을 제기한데 대하여 북측은 당일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가 다음날인 8월 23일 10시 20분경 전화통지문을 통해 8월 23일 11시에 비공개로 만날 것을 통보해 왔다.

그러나 북측은 접촉시각을 불과 40여분 남기고 만날 것을 알려 왔을 뿐만 아니라, 비공개회의를 하자고 하면서도 기록요원 1명과 안내실무요원 2명의 동행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북측 제의가 시간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쌍방 수석대표간의 접촉일자를 8월 24일 오전 11시로 하며, 각기 1명의 수행원을 동석하도록 하자고 수정제의를 하였다.

쌍방간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쌍방 수석대표간의 접촉을 1988년 8월 24일 오전 11시 판문점 우리측 지역에 있는 「평화의 집」에서 갖는데 합의하였다.

박준규 우리측 수석대표와 북측 전금철 단장간의 단독접촉은 1988년 8월 24일 (수) 오전11시부터 12시 55분까지 기록을 위한 인원 각 1명만을 동석시킨 채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북한의 올림픽 참가문제에 대한 진의를 탐색하였으나 북측은 「연석회의」 준비사업을 하는 것이 자기들의 기본입장이라는 점을 들어 우리측의 조정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북측은 5-6명이 앉는 대표회담이 진부하므로 전체회의를 하자고 하면서도, 「연석회의」에서 소위원회를 통한 협의를 거침으로써 만장일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시사함과 동시에 제4차 준비접촉시 「회담형식」 문제에 대해 연구해 나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측은 제4차 준비접촉을 8월 25일 「평화의 집」에서 갖자고 제의하였다.

이에대해 우리측은 쌍방 수석대표간의 단독접촉이 별다른 성과가 없다고 판단, 제4차 준비접촉을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전화통지문을 통해 8월 26일 「평화의 집」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 마. 제4차 준비접촉

제4차 준비접촉은 1988년 8월 26일 (금) 오전11시부터 오후2시 10분까지 판문점 우리측 지역내에 있는 「평화의 집」에서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올림픽 문제가 초미의 과제라는데 쌍방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올림픽문제를 긴급의제로 한 남북국회회담을 8월 29일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재강조함으로써 4차접촉에서 올림픽문제에 대해서 마무리지을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회담형식」과 관련, 「연석회의」를 「합동회의」로 바꾸고, 국회의원이 아닌 정당·단체·개별인사의 참가문제는 본회담에서 협의한다는 조건에서 보류한다는 것을 수정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남북의 국회의원 954명 전원이 참가하고 다수결로 의결한다는 전제가 살아있는 종전의 다중집회식 연석회의를 고수하였다.

불가침문제에 있어서도 북측은 그들이 제의한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만을 의제로 해야 하며, 올림픽문제도 불가침문제와 함께 묶어서 토의해야 한다는 그간의 주장을 되풀이하는데 그쳤다.

우리측은 서울올림픽 최종 엔트리마감일을 불과 1주일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선수단의 서울올림픽에의 참가문제를 남북국회회담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촉구하였으나, 북측은 올림픽문제를 남북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합동회의에서 다수결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측은 북측의 입장이 사실상 올림픽 문제를 8월중에 해결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제5

차접촉은 올림픽이후 10월초에 재개할 것을 제의하였다.

아울러 북한측이 올림픽 문제를 긴급의제로 하는 남북국회회담을 8월 29일 평양에서 개최하자는 우리측 제의에 동의해 올 경우에는 내일이라도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측은 올림픽 문제의 해결은 외면한 채 제5차 접촉을 10월 13일에 재개할 것을 제의했으며, 우리측이 이를 수락함에 따라 제5차 접촉은 10월 13일 관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기로 합의하였다.



#### 4. 중간결산

남북의 정치인이 모처럼만에 대좌한 이번 4차례의 준비접촉에서 우리측 대표단은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국회 본회담을 기필코 성사시키기 위해 성의있고 진지한 자세로 임했다.

특히 우리측 대표단은 회담과정에서 남북간 쟁점이 되고 있는 회담형식과 의제문제에 있어서 북한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세차례의 절충안과 한차례의 긴급제의를 내는 등 본회담 성사를 위해 최대한 양보하였으며, 의견의 차이를 좁히기위해 신축성있게 대처했다.

우리측은 회담형식에 있어서 남북간에 존재하는 복잡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심도있게 토의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에 부합되는 대표회담으로 할 것을 거듭 주장해 왔으나, 대표회담의 성격만 유지되면 그 명칭을 「남북국회회담」으로 표현해도 좋다고 하였으며, 남북국회회담에서 제반문제들이 타결·합의되면 남북국회의원 전원이 모여 이를 만장일치로 확인하는 「합동회의」도 개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회담의제에 있어서, 1차접촉에서와 같이 「협정」과 「선언」, 「권고」와 「위임」, 「촉구」등 어휘문제로 시간을 끄는 것은 준비 접촉의 성격과 임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본회담의 조속한 성사를 위해 쌍방 의견을 포괄하는 절충적 의제안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우리측은 우리측 제안인 「남북당국간의 불가침협정 체결을 권고하는 문제」와 북측 제안인 「남북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문제」를 포괄하여 「남북불가침문제」로 제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올림픽문제는 다른 의제와 달리 시급을 요하며, 8월을 넘기면 더이상의 토의가 무의미해진다는 시간적 절박성을 고려, 우선 남북의 대표들이 의견의 일치를 본 제24회 올림픽문제를 우선 협의·해결하기 위해 8월 29일 평양에서 남북국회회담을 갖자고 긴급제의하기도 했다.

사실 우리 국회가 북한선수단의 서울올림픽 참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북한측에 전달한 것도 서울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함께 참가함으로써 민족자존과 공동체 의식을 최대한 발양해야 하겠다는 겨레의 여망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이와같이 우리측은 국회회담을 반드시 성사시킴으로써 온 겨레에 희망을 주어야 한다는 결의로 이번 접촉에 임하였으며, 쌍방의 입장을 공히 반영하는 최대공약수를 찾아 가능한 한 양보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우리의 진의와 이번 준비접촉에 쏠린 내외의 관심을 무시한 채 남북국회회담의 성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으며, 회담형식 및 의제와 관련하여 첫날 기초발언내용에서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당초의 입장을 더욱 경화시키는 자세를 보였다.

회담형식에 있어서 북한측은 「연석회의」만을 계속 고수하였으며, 제4차 접촉에서는 연석회의의 명칭을 「합동회의」로 변형한 대신에 남북한 국회의원 총 954명 전원이 참석하여 다수결로 결정하자고 주장함으로써 그 본질의 틀을 완강히 고집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또한 북측은 의제문제에 있어서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문제」를 양보할 수 없는 한계선으로 설정하고, 그들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7개항의 불가침선언 초안이 공동선언의 기본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우리측의 일방적인 양보만을 강요함으로써 결국은 4차례의 준비접촉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2차준비접촉시에는 마치 양보나 하는 듯이 「남북간에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실현하는 문제」를 의제로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그들이 제시한 두개의 의제안을 우리측이 수락

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초 북한측은 7월 26일자 2차 대남편지에서 올림픽문제를 긴급의제로 토의할 것을 제의했으며, 이번 준비접촉시에도 「초미의 민족중대사」나 「한시도 미룰 수 없다」나 하는 등 말로는 그 시급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올림픽문제만 나오면 논의자체를 기피했으며, 4차 접촉에서도 참가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기조차 하였다.

더우기 남북간의 복잡한 문제는 쌍방이 진지한 태도로 협의 타협해서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쌍무회담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 쌍무회담을 거부하고 쌍방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다중회의에서 다수결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였다.

사실 북측이 다수결을 말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쌍방이 각기 다른 헌법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도 않으며, 쌍방 주민의사를 반영하는 진정한 다수결방식을 채택하자면 인구비례원칙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

아울러 북한측이 불가침문제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이 없는 정당이나 사회단체 대표, 개별인사를 참여시키자는 것은 우리측 대표의 적절한 표현처럼 『환상을 버리지 않은』 데 기인하고 있다.

북한측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 주한미군철수와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주장하고 있는 현상에 기대를 갖고 국회의원이 아닌 인사들을 국회회담에 참가시켜 다수결 원칙을 이용, 우리측 의사에 상반되는 결정을 채택하려고 유도한 셈이다.

오랜기간 불신과 단절을 지속해 온 남북관계의 현실에 비추어 볼때 불가침문제는 선언에 그쳐서는 실효성이 없으며, 구체적인 제도적 실천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남북한의 국회는 불가침에 관한 필요성과 의의를 확인하고 상호 진지한 토의를 거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들은 쌍방 당국에 맡겨 협정을 체결토록 촉구하는 것이 기능에 부합된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의 이같은 비타협적 태도로 인하여 준비접촉 자체가 교착상태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측은 「선언」이나 「협정」이라는 용어를 유보시키고 「남북불가침문제」로 조정안을 내었던 것이다. 여하튼 이번 준비접촉이 4차례나 지속되었으나 북한측의 소극적·회피적 자세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끝났다. 그러나 일단 남북간 대화의 문을 열어두었다는 사실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우리는 북한측이 태도를 바꾸어 생산성있는 대화의 장에 나옴으로써 「남북교류·협력시대」의 선의의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한 남북한간의 여러 현안문제를 남북의 정치인들이 시간을 두고 협의를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5. 국내의 반응

국내 주요 언론들은 2년 8개월만에 재개된 4차례에 걸친 남북국회 회담 준비접촉에서 『한국측은 의제에 있어 신축성을 보여 처음의 입장에서 후퇴하는 등 양보』가 있었으나 『북한측은 회담 형식에서의 연석회의, 의제에서의 불가침 선언을 고집』함으로써 회담이 진전되지 못하고 결국 5차 준비접촉은 올림픽 이후인 10월로 넘기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특히 북한측이 1985년에 이미 합의한 「국회대표회담형식」을 외면하고 『국회·정당·사회단체 등이 참가하는 연석회의가 민족적인 대표성과 회의의 능률을 보장한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며, 불가침 공동선언 주장 역시 『외세배격, 주한 미군철수, 핵무기의 철거, 한미방위조약의 휴지화를 통한 한국의 국방력의 무력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은 남한에서 정부교체가 있을 때마다 새 정부의 의도나 체제의 강도를 떠보기 위해 회담에 나오곤 했다고 전제, 『북한측이 이번 회담에 응해 온 것은 올림픽 불참의 명분을 얻고 국회 회담을 무산시켜 그 결렬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으며, 『1988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국회의 4당 체제를 분열시키고 학생 및 재야와 정부간의 대립을 조장하는 등 대화자제 마저도 통일전선 전략의 일환으로 보려는 등 회담에 임하는 그들의 자세와 입장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세계 주요언론들은 남북국회회담의 결렬을 예상하면서도 『회담진행 자체를 환영』하는 입장이었으며, 특히 『북한측이 국회회담에 호응해 나선 것은 여소야대 현상등 한국내의 달라진 정치환경을 시험해 보는 한편, 올림픽 불참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저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측이 불가침 선언과 연석회의에 집착해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결과적으로 『북한의 올림픽 참가가 거의 절망적』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올림픽 이후 남북간의 대화진전을 기대하면서도 『북한이 불가침 문제를 잇슈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국내반응

#### 국회회담과 북의 의도

- 통일전선 전략엔 안속는다-

조선일보(1988. 8. 11)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은 곧 열릴 것이지만, 우리측으로서는 북이 말하는 「연석회의」나 정당 사회 단체의 참석이니 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대체 「연속회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군중집회다. 1948년에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때 남쪽에서는 김구·김규식씨등 여러 인사들이 참석했었는데, 막상 현장에 당도해 보니 그것은 「남북협상」이 아니라 공산당 각본대로 연출되는 일대 쇼에 불과했다.

공산주의자들과 용공파가 등단하여 장광설의 연설을 하고, 거기에 요란한 박수를 보내고, 북쪽에 유리한 결의문 같은 것을 채택하여 선전효과를 한껏 내려는 것이었다.

지금 북측이 남-북국회 「연석회의」를 주장하는 속셈은 바로 그런 쇼를 또한번 연출하겠다는 것임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측 국회의원과들 각당이 북의 그런 술수에 말려들

리아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측으로서는 북의 그런 「트로이의 목마」 같은 공작을 엄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북이 굳이 국회 밖의 사회단체들을 참석시키자고 우기는 까닭도 다른 데 있지 않다. 한국내의 반체제파를 끼워넣자는 속셈이다. 그리하여 북쪽은 일사불란하게 나오는데, 남쪽에서는 여야와 체제-반체제가 서로 의견이 엇갈려 싸우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우리의 여야는 내정상으로는 서로 다투어도 대북자세에 있어서는 공동의 대처를 할 것임을 우리는 믿는다. 그리고 이런 믿음에 대해 여야는 확고한 대북 공동 보조로써 보답해야 마땅하다. 사회단체의 경우는,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말로서 일축하면 그만이다. 도대체 그 많은 사회단체중 어느 것을 골라야 한단 말이며, 일일이 다 참석시키자면 요식업 단체에서 꽃꽂이 단체에 이르기까지 한도 끝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한 정치체의 대표적인 대의 기구로서는 국회 밖엔 없는 것이다.

국회회담의 의제를 북이 자기 마음대로 올림픽 공동개최나 불가침 선언 채택이니 하고 못박은 것도 지극히 일방적이며, 「성근」 치 못한 태도라 할 것이다. 서울 올림픽은 소련 중국 동구 여러 나라들이 서방국가들과 함께 이미 적법하고 합당하며 확정적인 세계적 행사로 기정사실화하여 이제 불과 30여일 앞으로 다가와 있는데, 지금의 시점에서 올림픽과 관련해 도대체 무얼 어떻게 하자는 소리인가. 북으로서는 그저 선수단을 이끌고 서울에 있는 올림픽 선수촌에 입소만 하면 될 일이다.

「불가침」은 국회간의 「선언」으로 하기보다는 당국간의 「조약」으로 하자는 것이 우리 측의 오래전의 제의였다. 그런데 그것은 줄곧 외면하다가, 왜 이제와서 국회 「연석회의」에서 「선언」으로 하자고 하는가. 아마도 그렇게 한 다음 미군철수 요구하며, 남쪽 정부와 미국을 몰아 세울 전략을 짠 모양인데, 우리는 그런 적화혁명 촉진 방향으로는 결단코 말려들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북은 참다운 공존적 평화구조의 도입을 위해 좀 더 「성근」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국회회담을 남한의 국가성을 무시하는 통일전선 전략으로 악용할 생각은 버려야 한다.

「연석회의」 함정 없나

한국일보(1988. 8. 11)

우리는 국회회담 제의와 관련, 26일의 본회담에 앞서 17일 판문점에서 준비회담을 갖자고 수정한 북한측 회신을 일용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회신에 담긴 북측의 의도와 계산이 심상치 않음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더우기 북한은 국회회담을 불과 4일 앞으로 박두한 남북학생회담의 추이와 연결시키고 있어 우리로서는 다각적인 경계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어쨌든 국회가 이를 수락, 대표단을 파견키로 결정함에 따라 국회회담은 예비회담이나 2년반 만에 성사될 전망이다.

그러나 북측의 회신전체를 볼 때 국회회담에 임하는 그들의 기본전략이 조금도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회의성격과 명칭을 우리측의 「국회회담」이 아닌 「국회연석회의」를 내세우고 있는 점이다. 국회대표에다 이른바 제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그들의 「연석회의」는 공산주의 특유의 군중대회식 회의로 일찌기 6. 25 전 김구·김규식선생이 참석해 이용당한 바 있던 회의를 시작으로 금년초 김일성이 신년사에서 제기하기까지 북측의 변함없는 기본주장인 것이다. 북한은 이런 연석회의가 성사될 경우 이른바 남북불가침 공동선언을 채택, 대한민국 각계의 의사임을 내세워 미국에 대해 3자회담과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철수의 명분으로 삼자할지 모른다. 둘째 판문각에서의 준비회담에 동의하면서 이를 단 한번으로 못박은 것은 우리측

의 예비회담 주장을 수락한 듯한 인상을 주면서 실제로는 본회담으로 직결시키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할 것이다.

세째 시간이 없으므로 준비가 완료된 평양에서 1차회담을 갖자는 것도 환영식과 개폐회식등을 통해 어떤 형태이든 군중대회식의 효과를 올리겠다는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다 예비회담일자를 남북학생회담 이틀후인 17일로 잡은 것도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국회회담을 무산시킬 수 있는 탈출구로 활용할 뜻이 있음을 엿볼수 있다 즉 학생회담이 6·10 1차회담 시도때처럼 원천봉쇄로 이뤄지지 못했을 때 이를 대남공격의 호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북한측은 예비접촉 과정에서도 자신들이 의도한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가 되지 않을 때 언제든지 본회담을 보이콧할 여지는 다분히 예상된다.

이러한 그들의 전략은 모든 남북대화의 공식창구인 한국정부를 기피, 한국의 각정당 사회단체와의 대화를 구실로 한국의 내부교란을 획책하려는 구도를 풀이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북한측이 7·7선언 이후 한국이 제기한 적십자회담, 이산가족재회추진 상호방문등의 모든 회담을 외면하고 유독 학생들의 반정부-민주화운동을 부추겨 학생운동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소이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런 우려가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북한 회신과 관련, 남북의 국회를 대표한 정치인들이 긴장 완화와 통일의 기반구축을 위해 무릎을 맞대고 진지한 회담을 하루속히 이루도록 기대해 보는 것이다.

북한측은 종래와 같은 대남전략을 버리고 온 민족이 열망하는 통일의 기초를 마련하는 국회회담에 보다 실질적이고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주도록 바란다.

남북국회회담이 할 일

조선일보 (1988. 8. 20)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준비회담이 19일 오전, 2년 11개월만에 판문점에서 어렵사리 재개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모처럼 열린 첫날의 접촉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뜨거운 것이었다. 물론 첫술에 배가 부를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그동안 들끓던 통일논의가 남북접촉을 통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실현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뜨거운 기대였다.

하지만 첫날의 접촉은 역시 예상했던대로 혼쾌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길게는 해방후 43년 동안, 짧게는 모든 남북접촉이 완전히 중단된지 2년 8개월동안 생긴 남북간의 정치·사회적 의식, 상황에 대한 인식과 시각의 골은 절벽과 절벽사이의 골짜기 만큼이나 깊이 파이고 말았다.

19일의 첫접촉에서는 본회담의 성격규정에서부터 심한 이견의 골짜기를 노정시켰다. 우리는 각각 20명의 국회대표(북쪽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로 구성된 남북국회대표회담을 제의했고, 북쪽은 남북국회의원 전원과 남북의 제정당·사회단체대표 각50명씩을 참석시키자는 것이었다.

박준규 수석대표는 기조연설에서 「남북국회회담은 이미 쌍방이 합의한 사항을 많은 인원이 모여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수많은 문제들을 협의타협하는 모임」이라고 했다. 그는 또 「국회는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유일한 대의기관」이라고도 했다.

아무리 체제가 달라도 북측이 이말을 못알아 들을 리는 없다. 다만 북측이 국회회담을 어떻게 성격짓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 그 성패는 좌우된다고 보여진다. 즉 국회회담을 만약 군중대회처럼 만들어 타일방에 대한 인민재판식 규탄의 장으로 꾸밀 생각이 있다면 처음부터 성공하기는 글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만약 차분히 앉아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차근차근 풀기위한, 그럼으로써 40여년간 깊게 파인 골을 다소라도 메워나갈 태세라면 우리는 국회

회담에 성공에의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

자그마치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걸쳐 단절된 그 깊고 험한 골짜기를 갑자기 성급하게 메우려고 한다면 그런 무모한 시도자체가 깊은 나락으로 굴러 떨어져 영영 묻히고 말 위험마저 있다. 그것은 또다른 재앙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 꼴이다.

따라서 남북국회회담은 그들이 다룰 문제가 아무리 화급한 것일지라도, 졸속을 피하고 신중을 기하여 한가지씩 착실히 다져가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남북국회회담이 지금 당장 풀어야 할 문제는 한달도 안남긴 올림픽에의 북한참가이다. 우리측은 회담의 성격·내용·의제등에 관해 자세하고도 합리적인 7개항의 제의를 했고, 예비접촉은 20일 속개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서 남북대표들은 문제의 완급을 가릴 필요가 있다. 우리 측의 7개항 제의에 대한 북측의 견해는 얼마든지 달리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시간을 두고 협의를 거쳐 타결하면 된다. 다만 올림픽은 앞으로 불과 4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북측은 물론 「분단의 영속화」라는 불참명분을 이 제와서 번복하기가 거북할지 모른다. 하지만 서울올림픽에 북한동포가 참가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하나임을 만방에 과시할 절호의 기회인 것을 왜 모르는가. 오늘 속개되는 회담에서는 이것 하나만이라도 합의해주길 천지신명께 기원한다.

쉽지 않은 남북국회 회담

한국일보(1988. 8. 20)

2년 11개월만에 다시 마주한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준비접촉이 양측의 기본입장 개진과 이를 바탕으로 회담성격과 의제조정에 대한 현격한 의견차만 확인한 채 20일 다시 모이기로 한 것은 국회회담의 성사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이번 준비접촉이 내외의 깊은 관심을 모은 것은 남북대화의 실마리가 다시 잡힐지도 모르며 또 불과 한달안으로 다가온 서울올림픽대회, 그리고 6공화국 들어와 고조된 한국내의 통일 열기에 대한 북측의 정확한 자세와 반응을 측정,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첫번째 준비접촉에서 밝혀진 북한의 주장은 그들이 겨냥하는 정치회담의 진짜 속셈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순수한 통일논의와 함께 대화와 교류의 촉진을 갈망하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한마디로 통일문제에 대한 북한의 기본전략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를 풀기위한 국회회담에 대해서도 그들의 자세와 입장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날 우리측이 기초 연설을 통해 국회회담을 위해 제시한 7개 항목은 국민의사를 바탕으로 여야 4당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내용들이다.

회담형식을 쌍방이 20명씩 참가하는 대표회담으로 하고 북한의 올림픽 참가, 불가침 협정체결, 남북정상회담개최, 적십자·경제회담 재개의 권고문제 등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상호불신과 오해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며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라 할 것이다.

여기에 북측이 회담 형식에 있어 한국 국회의원 전원(2백 99명)과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6백 55명) 및 국회의원이 없는 정당·단체들의 대표, 각계인사 50여명씩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제시한 것을 보면 국회회담 성공에 대한 그들의 성의와 진심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북한이 연석회의에서 「토론은 자유로이 하되 표결에 참가하는 의원은 양측 동수로 할 수 있다」고 꼬리를 달았지만 1천여명이나 참석하는 군중대회식 집회에서 43년간이나 분단된 남북한을 한데 잇는 참된 통일문제를 어떻게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겠는가. 대규모 연석회의는 지난 1985년 예비접촉때 북한도 그 문제점을 인정, 국회대표회담으로 합의까지 했던 점을 분명히 상

기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대규모 연석회의 방식을 새삼 고집한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예비회담을 보이콧, 한국측에 결렬책임을 전가시키려는 계산도 생각하게 한다.

예비접촉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 되었던 의제중 불가침 관계에 대한 북한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제관계상 조약이나 협정체결은 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상식이다.

때문에 우리측이 실질적인 적대관계 종식과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정부당국에 불가침 협정체결을 권고하고자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에 북한측이 「공동선언발표」를 완강히 주장한 것은 한국정부를 기피한채 불가침 선언이 마치 남북주민 전체의 의사인 것으로 미국측에 제시, 결국은 그들이 노리는 3자회담-주한미군 철수를 촉진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43년간 분단의 골이 깊이 패인 남북한의 통일을 위한 회담과 대화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7. 7선언」을 통해 북한을 공존공영의 민족공동체로 인식할 것을 선언한 만큼 우리는 더욱 더 최대한의 인내와 아량으로 북한을 대해야 할 것이다.

북한도 세계적 화해 흐름을 감안, 더이상 국제적 고립과 폐쇄의 자세를 떨쳐 버리고 그야말로 보다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모처럼 이어진 남북대화의 실마리가 끊겨서는 안된다.

## 북의 벽만 실감

- 진전없이 결렬된 남북회담 접촉-

경향신문 (1988. 8. 23)

남북국회회담은 끝내 무산되는가. 2년 11개월 만에 어렵게 재개된 남북대화가 양측의 깊은 이견의 골만 확인한채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이번에는 어떤 진전이 있으려나 막연한 기대감에 부풀었던 국민에게 또다시 큰 실망만을 안겨주었다.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세차례의 준비접촉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은 북한측에 애초부터 이 회담의 성사여지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국회회담을 하자면서 남북의 정당당 및 사회단체 대표까지 모두 참석하는 군중집회 형식의 「연석회의」를 갖자고 수미일관 고집한 것으로도 입증된다.

또한 당장 시급한 올림픽 참가문제를 다루자는 우리측 권고에 불가침 공동선언문제부터 다루자고 고집한 것은 국회회담에 임하는 북한측의 진짜 속셈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이같은 북한측 태도는 국회회담은 간판으로만 내걸고 궁극적으로 군중집회식의 정치선동극을 벌여 우리 내부의 국론 분열과 사회혼란을 불러일으키고 박두한 올림픽마저 훼방놓으려는 의도로 밖에 달리 헤아릴 길이 없다.

올림픽 공동개최 주장만 해도 그것이 시간적으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북한측이 모를 리 없을 텐데도 굳이 이를 연석회의의 의제로 들고 나온 것은 대사를 망치게 하려는 술책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세차례의 준비접촉에서 우리측은 모처럼 재개된 남북대화를 깨지 않기 위해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양보하면서 대화를 성사시키고자 노력한 흔적을 보였다. 북한측이 시종일관 대화의 실질적 효과가 의심되는 연석회의를 고집했을 때 우리측은 대표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라면 남북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합동회의도 열 수 있다는 유연성을 보였다.

이는 표면만 「합동회의」지 결국 북한측이 주장한 연석회의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볼 때 우리측으로선 크게 양보를 보인 셈이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문제만해도 그것을 다루기 위한 회담을 갖

자는 우리측의 진심어린 제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이를 끝내 외면해 버렸다.

이렇게 따져볼 때 이번 준비접촉에 임했던 북한측의 비타협적 자세는 그들이 국회회담을 처음부터 열 의사가 있어서 회담장에 나온 것이 아님을 짐작케 하기에 충분하다. 회담결렬을 막기 위해 막후접촉까지 제의했으나 이것마저 묵살해 버려 기약 없이 철수하게 된 것이다.

결국 북한측은 이번 준비접촉을 통해 올림픽 불참구실을 찾아 보려했거나 국회회담을 무산시키고 나서 그 결렬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려는 의도를 깔고 나왔음을 읽기에 어렵지 않다. 「불가침 공동선언」 역시 우리 정부가 제의한 남북한불가침 협정은 마다하고 연석회의에서 이를 선언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북한측이 과연 남북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의 의지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화」 자체마저도 통일전선전략의 일환으로 보려는 북한측의 전술전략이 변하지 않는 한 남북대화의 진전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견해다. 따라서 예나 지금이나 남북대화가 성공을 거두려면 북한측에서 통일전선 전략과 같은 대남정책을 깨끗이 포기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족공동체 의식으로 발상을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북한측이 진정으로 남북국회회담을 바란다면 지금이라도 우리측이 크게 양보한 정당하고도 합리적인 의제들을 그대로 받아 들여 모처럼 이어진 남북대화의 실마리를 무산시켜선 안될 것이다.

겨레 기대 저버린 북한

- 남북 의회회담의 정회 -

중앙일보 (1988. 8. 23)

겨레의 기대속에 연 3일간 계속되던 남북의회회담 준비접촉이 아무런 진전없이 정회상태에 들어갔다.

한국측은 의제에서 신축성을 보여 처음의 입장에서 후퇴하는 등 양보가 있었음에도 북한측은 회담형식에서의 연석회의, 의제에서의 불가침 선언을 고집, 당초의 입장을 고수했다.

북한은 처음부터 예비회담을 하루만 하자고 주장했고, 첫날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회담을 유회시킬 의도였다. 그러나 한국측이 다음날 속개하자고 제의하여 사흘간 계속될 수 있었다. 회기가 정체상태에 빠지자 우리측은 양측 대표단장간의 비밀 단독회담을 가져 타결하려 시도했으나 북측이 끝내 응하지 않아 오늘에 이르렀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태도에서는 평양측의 변화나 성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보려는 생각보다는 과거처럼 공작과 선전을 위해 회담을 이용하려는 의도를 노출시켰을 뿐이다.

남한에서 정부교체가 있을 때마다 북한은 새 정부의 의도나 체제의 강도를 떠보기 위해 회담에 나오곤 했었다. 더구나 이번에는 올림픽을 앞둔 데다 우리 국회가 4당체제로 다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학생과 재야가 정부와는 대립되고, 평양측 주장에 가까운 목소리를 내는 등 분열된 모습을 보여 북한이 더욱 호기심을 가지고 이번 회담에 응한듯 하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 임한 우리 국회대표단은 4당의원으로 구성됐으면서도 일관된 체계하에 하나의 목소리를 보여주어 북한을 당혹케 했다. 다양성 가운데서도 통일과 조화를 보여준 개방사회의 강점을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다.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 운동권이나 재야측에서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북한이 기대한



우리 사회의 분열과 모순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북한은 바로 이점을 주의깊게 보아야 한다. 우리 사회가 그들이 기대하는 만큼 취약하거나 위험한 상태는 아니다. 요행을 꿈꿔서도 안된다. 만약 그런 전제 위에서 대남정책을 편다면 아무런 성과가 없다.

이제 북한은 보다 진솔하고 합리적인 자세로 나와야 한다. 1천명의 다중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어떤 대화와 합의를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공산당식 회의란 당의 간부가 짜놓은 시나리오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 나가 당이 마련해준 원고를 읽으면 참석자들이 「정중히 경청하고 열렬히 박수 치는 행사」일 뿐이다. 북한식 연석회의는 바로 그같은 방식으로 남북 의회회담을 하자는 것 아닌가.

불가침 선언을 하자고 주장하나 그 내용은 한미 방위조약 폐기, 주한미군 철수, 핵무기 철거 등 우리의 안보구조를 파괴하는 것들이다.

이제 공은 평양으로 갔다. 지금 양측의 기본입장은 모두 제시됐다. 이제는 대표단장이 마주앉아 마지막 타격을 시도함으로써 예비회담의 임무를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측은 우리가 제의한 이 대표단장 단독회담에 응해서 솔직하고 깊은 얘기도 서로 나누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의회회담만은 성사시켜야 한다. 그것이 올림픽 공동참여를 포함하여 다른 분야의 대화에 이르기까지 남북관계를 전반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새로운 실마리가 되기 때문이다.

#### 남북회담의 지혜

-저들의 개방화를 도와주는 마음가짐으로-

동아일보 (1988. 8. 25)

근 3년만에 어렵게 열렸던 세차례의 남북접촉이 또 싱겁게 끝나나 했더니 우여곡절끝에 4차 회담으로 이어지게 됐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1971년 남북적십자 회담 이래 갖가지 남북접촉의 통상례가 우리의 뜨거운 숙망과는 달리 그 결과가 흐지부지 용두사미화했던 전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남북접촉은 해보기도 전에 결과에 대해 미리 회의해 버리는 국민들도 많이 있고 그럴수록 이를 주관하는 정부당국이나 정치권의 인내와 지혜가 수반돼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회담 예비접촉에 온 국민들과 함께 우리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3년전의 남북 접촉때에 비해서 안팎으로 남북대화와의 여망과 분위기가 고조되고 성숙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으로는 6·29이후 우리의 민주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아져 있고 밖으로는 미·소·중·일의 화해와 공존의 분위기가 성숙되어 남북화해에 대한 묵시적 눈길을 보내고 있는 마당이다. 북한도 이러한 안팎여건에 힘입어 이제까지의 허세와 독단을 버리고 뭔가 새로운 자세를 보여줄 것을 기대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백년하청의 폐쇄와 독선의 늪에서 헤어날 수 못하고 있는 실정을 확인하는 비애를 우리에게 안겨주었을 뿐이다.

그들의 주장인 소위 연석회의는 남북한의 국회의원·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정당 사회단체대표 등 1천여명이 참석해야 하는 일종의 균중집회성격이다. 이것이 민족적인 대표성과 회의의 능률을 보장한다는 억지주장은 우리가 40여년간 들어온 생떼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불가침공동선언주장의 속셈역시 외세배격, 주한미군철수, 핵무기의 단계적 철거, 그리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휴지화를 통한 우리 한국의 국방력의 무력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이번 회담에 응해온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고있는 조야간의 뜨거운 통일논의를 여러 가닥으로 어지럽게 흩어 놓자는 속셈과 이를 여소 야대의 정국의 불씨로 박아 넣음으로써 올림픽을 앞둔 우리사회의 불안요인을 키워 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저들의 속셈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비접촉을 통한 남북 국회회담을 성취코자 하는 이유는 우리사회의 통일 열망을 어떻게 하든지 정치적으로 수렴해야 한다는 당위와 함께 북한도 언제까지나 저들의 주장을 고집할 수 없는 내외의 압력에 직면하리라는 기대에 근거한 것이다. 저들의 최대동맹국인 소련이나 중국이 개방화 국제화의 물결을 타고 있고 한국과의 정치 경제적인 교류를 넓혀가고 있는 마당에 북한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세계와 담을 쌓고 사는 「우물안 개구리」로 남을 수는 없는 일이다.

4차예비접촉에 임하는 우리 대표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저들이 아무리 귀머거리에 벽창호라해도 인내와 지혜로 이에 대처해 달라는 것이다. 서독이 동독을 상대로 경제도 도와주고 동독의 국제활동도 도와주는 아량이 우리에게겐 타산지식이 된다. 궁극적으로 우리도 북한의 국제화 개방화의 후견인이 돼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이번 남북접촉의 실마리를 잃지 않고 국회회담도 성취하고 더 큰 남북회담의 길로 인도하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에 다함께 유의하자.

#### 해외반응

Washington Post (1988. 8. 18)

○ 북한이 정부와 야당이 허약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남한에 정치적 분열을 야기시키고 예측된 회담실패에 대한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서울정부를 당혹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회담을 승락한 것임.

C.B.S (1988. 8. 19)

○ 북한측이 올림픽을 포기하고 관심을 판데로 돌리기 위해 남북국회연석회의를주선하고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음.

L.A Times(1988.8.20)

○ 북한이 국회회담에 호응해 나온 것은 회담을 결렬시켜 북한의 서울 올림픽 보이코트를 정당화시키려는 저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됨.

N.Y.T.(1988.8.21)

○ 한국은 28일 후로 다가온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문제를 다룰 특별회담을 갖자고 제의했으나 북한은 참가에는 뜻이 없는 듯했고 광범위한 의제를 다룰 대규모 회의를 고집함.

아사히신문(1988.8.23)

○ 의제와 형식에 대해 쌍방의 의견이 엇갈려 예비회담은 실질적으로 중단되었으며, 이로써 북한의 올림픽 참가문제는 거의 절망적이 되었음.

○ 중단된 대화가 올림픽 뒤에 재개될 때 서로의 흥정을 연출하면서 다양한 대화의 막이 열릴 것으로 기대함.

○ 예비회담의 급진적 전개는 한편으로는 남북관계의 미묘한 변화를 보였으나, 북한의 관심이 체제유지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왕래를 수반하는 남북교류에는 신중한 편임.

AFP(1988.8.24)

○ 남북한 국회연석회의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측의 주요 목적중의 하나는 불가침선언에 대한 한국 야당의 지지를 얻어내는 일임.

AFP, Reuter, UPI, AP(1988.8.26)

○ 북한이 금번 회담으로 서울올림픽에 불참함은 확실해졌으며, 불참의 명분을 찾은 것 같음.

○ 북한이 남북국회회담을 제의하는 것만으로도 큰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며, 그 목적이란 바로 소련과 중공과 같은 북한의 밀접한 공산맹방들을 포함한 161개국에 참가하는 서울올림픽에 불참하는 구실을 찾는 것임.

Reuter, AP(1988.8.26)

○ 전금철 북측단장은 올림픽이후 개최되는 제5차회담에서는 남북국회 불가침선언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라고 말했음.

L.A Times(1988.8.20)

○ 북한이 국회회담에 호응해 나온 것은 회담을 결렬시켜 북한의 서울 올림픽 보이코트를 정당화시키려는 저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됨.

N.Y.T.(1988.8.21)

○ 한국은 28일 후로 다가온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문제를 다룰 특별회담을 갖자고 제의했으나 북한은 참가에는 뜻이 없는 듯했고 광범위한 의제를 다룰 대규모 회의를 고집함.

아사히신문(1988.8.23)

○ 의제와 형식에 대해 쌍방의 의견이 엇갈려 예비회담은 실질적으로 중단되었으며, 이로써 북한의 올림픽 참가문제는 거의 절망적이 되었음.

○ 중단된 대화가 올림픽 뒤에 재개될 때 서로의 흥정을 연출하면서 다양한 대화의 막이 열릴 것으로 기대함.

○ 예비회담의 급진적 전개는 한편으로는 남북관계의 미묘한 변화를 보였으나, 북한의 관심이 체제유지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왕래를 수반하는 남북교류에는 신중한 편임.

AFP(1988.8.24)

○ 남북한 국회연석회의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측의 주요 목적중의 하나는 불가침선언에 대한 한국 야당의 지지를 얻어내는 일임.

AFP, Reuter, UPI, AP(1988.8.26)

○ 북한이 금번 회담으로 서울올림픽에 불참함은 확실해졌으며, 불참의 명분을 찾는 것 같음.

○ 북한이 남북국회회담을 제의하는 것만으로도 큰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며, 그 목적이란 바로 소련과 중공과 같은 북한의 밀접한 공산맹방들을 포함한 161개국에 참가하는 서울올림픽에 불참하는 구실을 찾는 것임.

Reuter, AP(1988.8.26)

○ 전금철 북측단장은 올림픽이후 개최되는 제5차회담에서는 남북국회 불가침선언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라고 말했음.